연구보고 RR 2015-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15

연구책임자
임 소 현(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강 영 혜(한국교육개발원)
김 흥 주(한국교육개발원)
조 옥 경(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안 영 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10차 조사가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국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교육 일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조사주기에 따라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제시하는 시계열적 조사 연구이며, 이에 더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들어 교육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이 이슈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0차 조사인 올해는 1-9차 조사와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되 여론조사의 목적과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의 실상과 교육에 대한 여론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0차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특히, 조사에 직접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들과 여론조사기관에 감사드리고, 조사도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신 본원과 교육부 등 정책당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여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이 연구를 맡아 끝까지 수고해주신 연구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전한다.

2015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윤종혁**

연구요약

1. 조사 목적

올해로 10차 조사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0차 조사의 구체적인 세부 조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1-9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 추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273,07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인구 구성 비율에 비례하도록 표집하였다(95%의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표집오차 ±2.19%p). 일부 직접조사가 병행되었던 8-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와 다르게 2015년 10차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 방법만으로 1회 실시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27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약 5주간이었다.

설문 문항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고교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53개 문항(기존 41개, 신규 12개)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조사 데이터는 교차분석과 분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고, Ⅲ장의 조사 결과 및 분석에서 문항별로 전체와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및 백분율의 변동 추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조사·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관련하여 국민들 다수는 중앙정부가 필수교육과정의 결정과 같은 교육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 실제에 적용할 교육정책의 수립과 학생들의 표준학습 성취기준은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며,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학교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둘째, 초·중등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으므로(평균 3점 미만), 학교급별로 학부모들의 불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육기능과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체제로의 전환과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높지 않았으나, 8-9차 조사보다는 다소 향상되었다. 교사에게 당장 요구되는 능력도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능력을, 중학교에서는 학습지도능력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능력을 1순위로 꼽았다.

넷째, 교육과정에서 현재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한국사와 사회를 꼽았으며,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을 1순위로 꼽아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으며,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의 개발 및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IT 기기 중독성과 학업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인성 및 도덕성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다소 긍정적인 것은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수준이 이전 8-9차 조사 결과보다는 개선되었으며, 인성교육의 일차적 책임소재와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정에서 찾는 의견이 높아 가정의 협력과 지원이 없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인성수준의 향상과 학교폭력의 완화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학생의 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학부모를 1순위로 꼽았으며, 사교육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보다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을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학진학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당락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고교 평준화와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일부 고등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적을 기초로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높았으나, 학부모 집단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높았다.

여덟째,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 수능성적을 1순위로 꼽았고, 대학 진학 경쟁의 전망에서는 입시경쟁은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고학력자들이 입시경쟁은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곧 대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별로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연령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과 중산층 이하의 학생을 합친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학교급별로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교육복지 부문의 교육재정 투자 요구에 대해 초·중학교는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국민들은 무상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단계와 수요자 부담인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재정 투자처를 달리 보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계속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부문에서 국가재원의 우선 투자처로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여유 재정을 교육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데 사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대학들이 인재 양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교육행위도 전반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교육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타나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 번째, 현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 중 국민들은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확대, 인성교육 활성화, 자유학기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의 직선제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제도를 선택하여 혼란을 주기 보다는 직선제를 유지하고 대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9시 등교 정책도 찬성의견이 높아 획일적 반대보다는 선택적 도입을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 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열세 번째, 국민들의 교육관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이 높았고,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았다. 또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자녀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보고 있어 국민들의 자녀교육관도 매우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학벌에 대한 국민 의식은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 제언

본 조사 결과와 이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당국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이양의 기조를 유지해 가야 한다.

둘째,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학교 나름의 특성을 살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급별 수요의 차이는 교원양성기관 및 현직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 학교교육은 주요 교과위주의 점수경쟁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초 자질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종합계획’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책임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그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입학전형에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회적 비용의 적정화라는 과제를 공유하면서 수능위주의 선발, 학생부 위주의 선발이라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여유 재정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평가 등에서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 중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는 정책들은 보다 강화 혹은 지속적인 시행을 전략화해 나가야 한다.

아홉째, 뿌리 깊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key words :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목 차

Ⅰ. 서 론 /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조사 내용 ····· 5
3. 조사 방법 ····· 8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 15

1. 1-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17
2.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부문 ····· 23
3.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 ····· 26
4. 기타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사례 ····· 29
5. 교육현안 주제 분석 ····· 34
6. 10차 조사도구 개발 ····· 36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 39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 41
2. 교사 ····· 53
3. 교육과정 운영 ····· 58
4. 학생 생활 ····· 63
5. 고교 정책 및 대입 ····· 82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90
7. 대학교육 ····· 99

8. 교육현안 ····· 107

9. 교육관 ····· 112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123

1. 요약 및 시사점 ····· 125

2. 정책 제언 ····· 138

참고문헌 ····· 149

Abstract ····· 151

부 록 ····· 157

부록 1 1-10차 설문 문항별 분류 ····· 159

부록 2 2015년 조사 도구 ····· 169

부록 3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 185

부록 4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 219

부록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 303

표 목 차

〈표 Ⅰ-1〉 10차 조사 설계 ····· 5
〈표 Ⅰ-2〉 차수별 총 문항 수 및 영역 ····· 6
〈표 Ⅰ-3〉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현황 ····· 9
〈표 Ⅰ-4〉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구성비 ····· 10
〈표 Ⅰ-5〉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 11
〈표 Ⅰ-6〉 조사내용 ····· 12
〈표 Ⅰ-7〉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 12
〈표 Ⅱ-1〉 1-9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조사 개요 ····· 17
〈표 Ⅱ-2〉 6-9차 조사까지의 조사내용 비교 ····· 21
〈표 Ⅱ-3〉 통계청 사회조사 표본 설계 ····· 24
〈표 Ⅱ-4〉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부문 조사 항목 ····· 25
〈표 Ⅱ-5〉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 연도별 조사내용 ····· 26
〈표 Ⅱ-6〉 기타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사례 ····· 31
〈표 Ⅱ-7〉 기타 교육 관련 여론조사 국외 사례 ····· 32
〈표 Ⅱ-8〉 국정과제 관련 교육현안 주제 ····· 34
〈표 Ⅱ-9〉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포함 교육현안 주제 ····· 35
〈표 Ⅱ-10〉 10차 조사도구 조사영역 및 내용 ····· 37
〈표 Ⅲ-1〉 교육행정의 권한(2015) ····· 42
〈표 Ⅲ-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15) ····· 45
〈표 Ⅲ-3〉 초·중·고등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47
〈표 Ⅲ-4〉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 49
〈표 Ⅲ-5〉 좋은 고등학교 기준(2015) ····· 51
〈표 Ⅲ-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15) ····· 52
〈표 Ⅲ-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 54
〈표 Ⅲ-8〉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 56
〈표 Ⅲ-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2015) ····· 57
〈표 Ⅲ-10〉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15) ····· 59
〈표 Ⅲ-1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 61
〈표 Ⅲ-12〉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2015) ····· 65
〈표 Ⅲ-13〉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 67
〈표 Ⅲ-14〉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2015) ····· 69
〈표 Ⅲ-15〉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2015) ····· 70

〈표 Ⅲ-16〉 학교폭력 완화 노력(2013-2015) ····· 71
〈표 Ⅲ-17〉 학교폭력의 원인(2012-2015) ····· 72
〈표 Ⅲ-18〉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 74
〈표 Ⅲ-19〉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2-2015) ····· 75
〈표 Ⅲ-2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2012-2015) ····· 76
〈표 Ⅲ-21〉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2011-2015) ····· 77
〈표 Ⅲ-22〉 사교육의 근본 원인(2015) ····· 78
〈표 Ⅲ-23〉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1-2015) ····· 80
〈표 Ⅲ-24〉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2015) ····· 81
〈표 Ⅲ-2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3
〈표 Ⅲ-2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4
〈표 Ⅲ-27〉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5
〈표 Ⅲ-2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5) ····· 87
〈표 Ⅲ-29〉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5) ····· 89
〈표 Ⅲ-30〉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2015) ····· 91
〈표 Ⅲ-31〉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0-2015) ····· 92
〈표 Ⅲ-32〉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2014-2015) ····· 95
〈표 Ⅲ-33〉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 96
〈표 Ⅲ-34〉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2012-2015) ····· 97
〈표 Ⅲ-35〉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2015) ····· 98
〈표 Ⅲ-36〉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 ····· 100
〈표 Ⅲ-37〉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 101
〈표 Ⅲ-38〉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2015) ····· 102
〈표 Ⅲ-39〉 대학재정의 투명성(2015) ····· 103
〈표 Ⅲ-40〉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06, 2008, 2010, 2015) ····· 104
〈표 Ⅲ-41〉 지방대학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2013, 2015) ····· 105
〈표 Ⅲ-42〉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 되어야 할 지표(2015) ····· 106
〈표 Ⅲ-43〉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2015) ····· 108
〈표 Ⅲ-44〉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2015) ····· 109
〈표 Ⅲ-45〉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2013-2015) ····· 110
〈표 Ⅲ-46〉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2015) ····· 111
〈표 Ⅲ-4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1999, 2001, 2015) ····· 113
〈표 Ⅲ-4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2015) ····· 114
〈표 Ⅲ-49〉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5) ····· 115
〈표 Ⅲ-50〉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 117
〈표 Ⅲ-51〉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5) ····· 118
〈표 Ⅲ-52〉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5) ····· 119
〈표 Ⅲ-53〉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15) ····· 121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및 할당 추출 ····· 9
[그림 Ⅰ-2] 지역 층화 방법 ····· 9
[그림 Ⅲ-1] 교육행정의 권한 -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2015) ····· 43
[그림 Ⅲ-2] 교육행정의 권한 –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2015) ····· 43
[그림 Ⅲ-3] 교육행정의 권한 – 학생의 기초 학력 성취 보장(2015) ····· 43
[그림 Ⅲ-4] 교육행정의 권한 –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2015) ····· 43
[그림 Ⅲ-5]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전체) (2006-2015) ····· 45
[그림 Ⅲ-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2006-2015) ····· 45
[그림 Ⅲ-7]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15) ····· 47
[그림 Ⅲ-8] 초등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 50
[그림 Ⅲ-9] 중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 50
[그림 Ⅲ-10] 고등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 50
[그림 Ⅲ-11] 대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 50
[그림 Ⅲ-12] 좋은 고등학교 기준(2015) ····· 51
[그림 Ⅲ-13] 자녀의 조기유학(2015) ····· 52
[그림 Ⅲ-14]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06-2015) ····· 52
[그림 Ⅲ-15]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전체)(2011-2015) ····· 54
[그림 Ⅲ-16]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1-2015) ····· 54
[그림 Ⅲ-17]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 56
[그림 Ⅲ-18] 중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 56
[그림 Ⅲ-19] 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 56
[그림 Ⅲ-20]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2008, 2010, 2015) ····· 57
[그림 Ⅲ-2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 60
[그림 Ⅲ-2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 60
[그림 Ⅲ-2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 60
[그림 Ⅲ-24]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 62
[그림 Ⅲ-25] 중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 62
[그림 Ⅲ-26]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 62
[그림 Ⅲ-27] IT 관련 기기 중독(전체)(2008-2015) ····· 65
[그림 Ⅲ-28] IT 관련 기기 중독(2008-2015) ····· 66
[그림 Ⅲ-29] 학생의 스트레스(전체)(2012-2015) ····· 67

[그림 Ⅲ-30] 학생의 스트레스(2012-2015) ····· 67
[그림 Ⅲ-31] 학생의 인성·도덕성(전체)(2012-2015) ····· 69
[그림 Ⅲ-32] 학생의 인성·도덕성(2012-2015) ····· 69
[그림 Ⅲ-33]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2015) ····· 70
[그림 Ⅲ-34] 학교폭력 완화 노력(전체)(2006-2015) ····· 71
[그림 Ⅲ-35] 학교폭력 완화 노력(2006-2015) ····· 71
[그림 Ⅲ-36] 학교폭력의 원인(2015) ····· 73
[그림 Ⅲ-37]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 74
[그림 Ⅲ-38]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5) ····· 75
[그림 Ⅲ-39]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1-2015) ····· 75
[그림 Ⅲ-4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2008-2015) ····· 76
[그림 Ⅲ-41]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2015) ····· 77
[그림 Ⅲ-42] 사교육의 근본 원인(2015) ····· 78
[그림 Ⅲ-43] EBS 수능 연계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2015) ····· 81
[그림 Ⅲ-44]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3
[그림 Ⅲ-4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1999-2015) ····· 83
[그림 Ⅲ-4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4
[그림 Ⅲ-47]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0-2015) ····· 84
[그림 Ⅲ-48]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2015) ····· 85
[그림 Ⅲ-49]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5) ····· 87
[그림 Ⅲ-50]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5) ····· 89
[그림 Ⅲ-51]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1-2015) ····· 89
[그림 Ⅲ-52]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2015) ····· 91
[그림 Ⅲ-53]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 93
[그림 Ⅲ-54]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 93
[그림 Ⅲ-55]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 93
[그림 Ⅲ-56]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2012-2015) ····· 96
[그림 Ⅲ-57]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2014-2015) ····· 97
[그림 Ⅲ-58]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2015) ····· 98
[그림 Ⅲ-59]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전체, 2006-2015) ····· 100
[그림 Ⅲ-60]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06-2015) ····· 100
[그림 Ⅲ-61]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 101
[그림 Ⅲ-62]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전체)(2006-2015) ····· 102
[그림 Ⅲ-63] 대학재정의 투명성(전체) (2011-2015) ····· 103
[그림 Ⅲ-64]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06, 2008, 2010, 2015) ····· 104
[그림 Ⅲ-65] 지방대학 우선 지원(전체) (2013, 2015) ····· 105
[그림 Ⅲ-66]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 되어야 할 지표(2015) ····· 106

[그림 Ⅲ-67]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1순위)(2015) ····· 108
[그림 Ⅲ-68]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1+2+3순위)(2015) ····· 109
[그림 Ⅲ-69]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2015) ····· 109
[그림 Ⅲ-70]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2013-2015) ····· 110
[그림 Ⅲ-71]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2015) ····· 111
[그림 Ⅲ-72]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1999, 2001, 2015) ····· 113
[그림 Ⅲ-73]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전체)(2011-2015) ····· 114
[그림 Ⅲ-74]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 116
[그림 Ⅲ-7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 117
[그림 Ⅲ-76]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1-2015) ····· 118
[그림 Ⅲ-77]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5) ····· 120
[그림 Ⅲ-78]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08, 2010, 2015) ····· 121

KEDI

PART I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내용
3. 조사 방법

I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올해로 10차 조사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1999년에 교육과 관련한 현안 정책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5차 조사인 2010년까지 격년을 원칙으로 실시하였으나(2003년, 2005년 미실시),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과 관련한 현안이 이슈화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의 교육 일반에 대한 내용을 고정문항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조사주기에 따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시계열적 조사 연구이며,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교육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그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해 국민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개발되고 집행되는 것에 정부 정책의 목적이 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현영섭, 2008; 김형주 외, 2009; 김정민 외, 2014).

이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와 유사한 조사 사례인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와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회조사' 실시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PDK/Gallup Poll은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교육 관련 주요 문제나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

다 교육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려줌으로써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회조사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통계청, 2014).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변화 추이를 보는 데에 유용하지만,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과 관련한 조사를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교육여론조사로서의 내용적 체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기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의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주기적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여론조사(KEDI POLL)도 상기 조사 사례들과 같이 그 결과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조사 목적은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조사대상, 그리고 방법이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0차 조사의 구체적인 세부 조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1-9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 추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조사 내용

가. 1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 조사 설계

1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교육여론조사로서의 일관성,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8-9차 조사에서의 연 2회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10차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횟수의 연 1회 조정을 검토하여 조사 시기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없애고, 체계적인 조사 문항 검토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 문항의 경우 문항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되, 고정문항과 유동문항(현안문항)의 7:3 비중은 유지하였다. 본 10차 조사에서는 직접조사 없이 100%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화면 구성 등 보완사항을 검토하였다.

〈표 Ⅰ-1〉 10차 조사 설계

구분	10차 조사
조사 목적	•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 • 최근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조사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표집 인원	2,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 문항	기존(41문항), 신규(12문항) ※ 현안문항 30% 이내 포함 원칙 준수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시기	2015. 7. 27.(월) ~ 2015. 8. 28.(금)

나. 10차 조사도구 개발

10차 조사도구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정문항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1-9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차 조사에 포함할 고정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이후 유동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10차 조사를 위한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9차 조사에 포함된 '교육에 대한 태도' 문항 또한 일부 포함하였다([부록 1] 1-10차 설문 문항별 분류, [부록 2] KEDI POLL 2015 설문조사지, [부록 3]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참조).

〈표 Ⅰ-2〉 차수별 총 문항 수 및 영역

차수	총 문항	영역	
1차 (1999)	32문항	① 학교교육만족도 ③ 학교선택 ⑤ 학교평가 ⑦ 교육재정 ⑨ 학생체벌 ⑪ 학생비행 ⑬ 사회교육	② 21세기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④ 입시제도 ⑥ 학교평가 정책 ⑧ 과외교육 ⑩ 교원 ⑫ 교육개혁 평가 ⑭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실태
2차 (2001)	32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③ 고등교육 정책 ⑤ 정보화교육 정책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④ 평생교육 정책
3차 (2006)	39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③ 고등교육 ⑤ 교육관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④ 평생교육
4차 (2008)	41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③ 고등교육 정책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
5차 (2010)	59문항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③ 고등교육 정책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
6차 (2011)	42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③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⑤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④ 교육정책 ⑥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7차 (2012)	49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④ 학생의 학습 ⑥ 교육복지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8차 (2013)	60문항 (1차 조사: 52문항, 2차 조사: 8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⑨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 ⑪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④ 학생의 학습 ⑥ 교육복지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⑫ 교육 정책 관련 가치관
9차 (2014)	61문항 (1차 조사: 46문항, 2차 조사: 15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③ 학생의 정서와 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⑦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⑨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④ 교육의 내용과 방식 ⑥ 교육복지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주요 교육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포함)
10차	53문항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③ 학생 생활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⑦ 대학교육 ⑨ 교육관	② 교사 ④ 교육과정 운영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⑧ 교육현안

다. 1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5) 조사 내용

1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한국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 및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1-10차)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최근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을 분석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응답자 특성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였다([부록 5] 교육현안별 언론 분석 참조). 국내 주요 6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에 게재된 칼럼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여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 대한 확인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3 조사 방법

가. 문헌 분석

○ 조사 내용(고정문항, 교육정책 현안 주제 문항) 설계를 위해 관련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고정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1-9차(1999-2014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보고서, 2014년 및 2015년 PDK/Gallup Poll 보고서, 2013년 및 2014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관련 연구물의 조사 영역 및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 교육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2014년 및 2015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8개월간의 언론 기사를 분석하였다.

나.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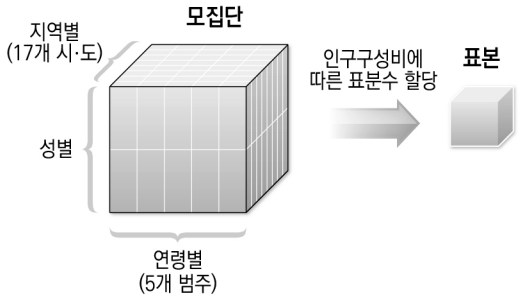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TNA)을 실시하였다([부록 5]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참조).

○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6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의 인쇄신문에 게재(2014. 10. 1 - 2015. 7. 31)된 칼럼(기고, 사설, 시론, 기자의 눈 등 포함)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정책 관련 주요어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 방법을 활용하여 유목화하고 주요어 간 의미 관계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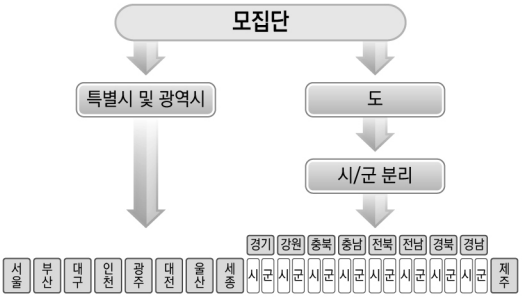
다. 설문 조사(온라인 조사)

○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행정자치부 2015년 6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남녀 총 39,273,07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표집하였다(95%의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표집오차 ±2.19%p).
- 표집 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추출하였고([그림 Ⅰ-1] 참조), 지역 층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를 1차 분류한 후 '도'의 경우 '시/군'으로 2차 분리하였다. 이때,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군 지역이 없이 시 지역으로만 구성하였다([그림 Ⅰ-2] 참조).



[그림 Ⅰ-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및 할당 추출



* 제주도는 군 지역이 없이 시 지역만으로 구성

[그림 Ⅰ-2] 지역 층화 방법

〈표 Ⅰ-3〉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		만19 – 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 – 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793,680	791,007	849,944	841,104	860,019	860,984	775,448	816,925	671,740	745,830	3,950,831	4,055,850	8,006,681
부산		265,007	237,272	254,578	244,026	285,176	288,475	301,581	321,464	276,251	307,401	1,382,593	1,398,638	2,781,231
대구		198,412	163,646	174,522	173,149	218,011	224,625	205,436	211,055	160,042	186,608	956,423	959,083	1,915,506
인천		229,142	211,369	235,243	222,369	262,239	256,793	247,643	239,732	164,009	176,412	1,138,276	1,106,675	2,244,951
광주		115,496	107,099	112,895	112,024	129,927	130,901	105,647	108,571	81,561	93,914	545,526	552,509	1,098,035
대전		123,651	110,033	117,185	115,794	134,523	134,415	118,645	119,210	86,472	94,469	580,476	573,921	1,154,397
울산		97,650	76,985	94,822	86,542	107,635	106,868	102,505	95,793	63,552	63,953	466,164	430,141	896,305
세종		11,429	10,700	16,593	17,454	17,605	14,975	12,333	11,043	9,667	10,775	67,627	64,947	132,574
경기	시	923,563	849,947	988,243	961,336	1,153,492	1,120,010	969,218	915,102	643,882	706,996	4,678,398	4,553,391	9,231,789
	군	14,065	10,542	12,059	11,047	17,088	14,511	20,619	19,078	21,075	22,399	84,906	77,577	162,483
강원	시	79,758	68,620	73,328	71,750	97,712	93,215	94,309	94,268	78,111	89,392	423,218	417,245	840,463
	군	35,655	20,757	25,503	20,844	33,868	27,238	41,454	37,348	41,090	44,504	177,570	150,691	328,261
충북	시	92,751	79,006	88,317	84,007	102,684	100,470	94,094	91,657	70,402	78,581	448,248	433,721	881,969
	군	25,508	19,754	25,151	20,971	33,884	27,268	38,140	33,650	37,387	40,982	160,070	142,625	302,695
충남	시	117,248	103,542	134,919	119,083	142,607	127,254	123,837	113,484	97,234	107,812	615,845	571,175	1,187,020
	군	26,686	20,723	24,412	20,163	34,355	27,900	40,794	38,778	47,372	54,091	173,619	161,655	335,274
전북	시	110,674	97,826	102,872	97,448	130,502	124,469	119,415	117,643	107,210	122,096	570,673	559,482	1,130,155
	군	19,149	16,001	19,216	16,115	27,324	20,032	29,650	26,146	34,702	40,959	130,041	119,253	249,294
전남	시	77,316	65,978	73,750	68,261	93,205	85,714	85,240	80,835	70,832	78,303	400,343	379,091	779,434
	군	46,291	39,249	45,489	37,958	66,911	48,937	73,912	64,564	87,489	105,251	320,092	295,959	616,051

행정구역		만19 – 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 – 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북	시	159,206	128,504	151,633	140,519	182,781	172,760	180,549	175,889	154,880	175,997	829,049	793,669	1,622,718
	군	31,812	25,242	31,718	26,249	42,989	33,096	50,248	45,737	56,854	65,962	213,621	196,286	409,907
경남	시	213,363	176,446	224,274	209,644	261,531	251,774	233,431	225,124	167,658	185,777	1,100,257	1,048,765	2,149,022
	군	27,794	21,496	25,433	21,816	39,015	30,733	45,279	42,148	50,656	62,336	188,177	178,529	366,706
제주		42,450	38,340	43,482	41,644	57,437	52,375	47,917	45,349	38,464	42,694	229,750	220,402	450,152
합계		3,877,756	3,490,084	3,945,581	3,781,317	4,532,520	4,375,792	4,157,344	4,090,593	3,318,592	3,703,494	19,831,793	19,441,280	39,273,073

*통계 자료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6월 기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표 Ⅰ-4〉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인구 구성비

(단위: %)

행정구역		만19 – 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 – 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3	2.01	2.16	2.14	2.19	2.19	1.97	2.08	1.71	1.90	10.06	10.32	20.38
부산		0.67	0.6	0.65	0.62	0.73	0.73	0.77	0.82	0.7	0.78	3.52	3.55	7.07
대구		0.51	0.42	0.44	0.44	0.56	0.57	0.52	0.54	0.41	0.48	2.44	2.45	4.89
인천		0.58	0.54	0.6	0.57	0.67	0.65	0.63	0.61	0.42	0.45	2.90	2.82	5.72
광주		0.29	0.27	0.29	0.29	0.33	0.33	0.27	0.28	0.21	0.24	1.39	1.41	2.8
대전		0.31	0.28	0.30	0.29	0.34	0.34	0.30	0.30	0.22	0.24	1.47	1.45	2.92
울산		0.25	0.20	0.24	0.22	0.27	0.27	0.26	0.24	0.16	0.16	1.18	1.09	2.27
세종		0.03	0.03	0.04	0.04	0.04	0.04	0.03	0.03	0.02	0.03	0.16	0.17	0.33
경기	시	2.35	2.16	2.52	2.45	2.94	2.85	2.47	2.33	1.64	1.80	11.92	11.59	23.51
	군	0.04	0.03	0.03	0.03	0.04	0.04	0.05	0.05	0.05	0.06	0.21	0.21	0.42
강원	시	0.20	0.17	0.19	0.18	0.25	0.24	0.24	0.24	0.2	0.23	1.08	1.06	2.14
	군	0.09	0.05	0.06	0.05	0.09	0.07	0.11	0.10	0.10	0.11	0.45	0.38	0.83
충북	시	0.24	0.20	0.22	0.21	0.26	0.26	0.24	0.23	0.18	0.20	1.14	1.1	2.24
	군	0.06	0.05	0.06	0.05	0.09	0.07	0.10	0.09	0.10	0.10	0.41	0.36	0.77
충남	시	0.30	0.26	0.34	0.30	0.36	0.32	0.32	0.29	0.25	0.27	1.57	1.44	3.01
	군	0.07	0.05	0.06	0.05	0.09	0.07	0.10	0.10	0.12	0.14	0.44	0.41	0.85
전북	시	0.28	0.25	0.26	0.25	0.33	0.32	0.30	0.30	0.27	0.31	1.44	1.43	2.87
	군	0.05	0.04	0.05	0.04	0.07	0.05	0.08	0.07	0.09	0.10	0.34	0.3	0.64
전남	시	0.20	0.17	0.19	0.17	0.24	0.22	0.22	0.21	0.18	0.20	1.03	0.97	2.00
	군	0.12	0.10	0.12	0.10	0.17	0.12	0.19	0.16	0.22	0.27	0.82	0.75	1.57
경북	시	0.41	0.33	0.39	0.36	0.47	0.44	0.46	0.45	0.39	0.45	2.12	2.03	4.15
	군	0.08	0.06	0.08	0.07	0.11	0.08	0.13	0.12	0.14	0.17	0.54	0.50	1.04

행정구역		만19 – 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 – 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남	시	0.54	0.45	0.57	0.53	0.67	0.64	0.59	0.57	0.43	0.47	2.80	2.66	5.46
	군	0.07	0.05	0.06	0.06	0.10	0.08	0.12	0.11	0.13	0.16	0.48	0.46	0.94
제주		0.11	0.10	0.11	0.11	0.15	0.13	0.12	0.12	0.10	0.11	0.59	0.57	1.16
합계		9.87	8.89	10.05	9.63	11.54	11.14	10.59	10.42	8.45	9.43	50.5	49.51	100.00

〈표 Ⅰ-5〉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단위: 명)

행정구역		만19 – 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 – 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41	40	43	43	44	44	40	42	34	38	202	207	409
부산		14	12	13	12	15	15	15	16	14	16	71	71	142
대구		10	8	9	9	11	11	10	11	8	10	48	49	97
인천		12	11	12	11	13	13	13	12	8	9	58	56	114
광주		6	5	6	6	7	7	5	6	4	5	28	29	57
대전		6	6	6	6	7	7	6	6	4	5	29	30	59
울산		5	4	5	4	5	5	5	5	3	3	23	21	44
세종		1	1	1	1	1	1	1	1	1	1	5	5	10
경기	시	47	43	50	49	59	57	49	47	32	36	237	232	469
	군	1	1	1	1	1	1	1	1	1	1	5	5	10
강원	시	4	4	4	4	5	5	5	5	4	5	22	23	45
	군	2	1	1	1	2	1	2	2	2	2	9	7	16
충북	시	5	4	5	4	5	5	5	5	4	4	24	22	46
	군	1	1	1	1	2	1	2	2	2	2	8	7	15
충남	시	6	5	7	6	7	6	6	6	5	6	31	29	60
	군	1	1	1	1	2	1	2	2	2	3	8	8	16
전북	시	6	5	5	5	7	6	6	6	5	6	29	28	57
	군	1	1	1	1	1	1	2	1	2	2	7	6	13
전남	시	4	3	4	3	5	4	4	4	4	4	21	18	39
	군	2	2	2	2	3	2	4	3	4	5	15	14	29
경북	시	8	7	8	7	9	9	9	9	8	9	42	41	83
	군	2	1	2	1	2	2	3	2	3	3	12	9	21
경남	시	11	9	11	11	13	13	12	11	9	9	56	53	109
	군	1	1	1	1	2	2	2	2	3	3	9	9	18
제주		2	2	2	2	3	3	2	2	2	2	11	11	22
합계		199	178	201	192	231	222	211	209	168	189	1,010	990	2,000

* 세종시의 경우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최소 1명씩 임의할당

○ 조사 내용

– 1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조사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개인 배경,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교육현안에 관한 유동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문항과 유동문항의 비율은 7대 3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표 Ⅰ-6〉과 같다.

〈표 Ⅰ-6〉 조사 내용

개인 배경	• 성별 • 거주지역 • 연령 • 혼인상태 • 자녀의 수(영·유아, 유/초/중/고, 대학/대학원, 직장인/기타 구분) • 교육수준 • 맞벌이 여부 •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 • 직업
고정문항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내용
유동문항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표 Ⅰ-7〉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구분		응답자	
		사례 수(단위: 명)	비율(단위: %)
성	남	1,009	50.5
	여	991	49.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08	20.4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26.3
	중소도시(시)	919	46.0
	읍·면(군)지역	147	7.4
연령	만19–29세	374	18.7
	만30대	412	20.6
	만40대	462	23.1
	만50대	413	20.7
	만60–75세	339	17.0
혼인상태	기혼	1,311	65.6
	미혼	648	32.4
	기타	41	2.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67.4
	자녀 없음	652	32.6
자녀 수	1명	405	30
	2명	764	56.7
	3명	136	10.1

구분		응답자	
		사례 수(단위: 명)	비율(단위: %)
	4명 이상	43	3.2
자녀 취학분류**	초등 미만	317	23.5
	초등학교	264	19.6
	중학교	176	13.1
	고등학교	195	14.5
	대학교	286	21.2
	대학원	61	4.5
	직장인	467	34.6
	기타	207	15.4
학력	고교 졸업 이하	34	1.7
	전문대 졸업	517	25.9
	대학교 졸업	1,236	61.8
	대학원 졸업	213	1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2	39.3
	맞벌이 아님	820	60.7
한 달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0	13.0
	200-400만원 미만	665	33.3
	400-600만원 미만	660	33.0
	600만원 이상	415	20.8
직업군별	관리자	232	1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4.3
	사무 종사자	381	19.1
	서비스 종사자	61	3.1
	판매 종사자	73	3.7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5	0.8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58	2.9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7	1.4
	단순노무 종사자	73	3.7
	군인	5	0.3
	기타	789	39.5
전체		2,000	100.0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포함
**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 응답함에 따라 사례 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1,348명보다 많고 비율도 100% 초과

○ 조사 용역

- 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 POOL을 학보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하였다.
- 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업체 선정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 결과 분석

- 교차 및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문항별로 전체와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및 백분율의 변동 추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부록 4]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참조).

라. KEDI POLL 자문단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및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영역 설정 및 문항 검토를 위해 교육정책 전문가(교육부 관계자 포함) 및 조사연구 전문가, 선행연구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또한, 교육정책연구본부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내 연구위원을 활용하여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였다.

PART II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1-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2.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부문
3.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
4. 기타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사례
5. 교육현안 주제 분석
6. 10차 조사도구 개발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1-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1999년 최초 시행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2003년, 2005년을 제외한 2010년까지는 2년 주기로, 2011년부터는 1년 주기 조사로 실시되어 올해 10차 조사가 진행되는 계속연구이다. 조사 시행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2013년도부터 조사대상 상한이 만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되었고, 개별 면접조사에서 온라인 기반 조사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온라인 조사로 조사실시가 용이해 짐에 따라 8-9차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나, 동일한 해에 시행된 1-2차 조사의 시기 간 기한이 짧아 여론 변동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촉박한 일정으로 대표성 있는 표집추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올해의 10차 조사에서는 연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1-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1〉 1-9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조사 개요

조사차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및 방법
1차 (1999)	교육개혁 정책 중간 점검을 위한 국민들의 평가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27,876,061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년 11월 기준)의 0.0055%인 1,541명 표집. 1가구당 1인 조사. 다단계 표집(시도의 구·군-3개 동·면)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0.38%	1999.10.4.-10.20,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2차 (2001)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주고,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0,685,984명 중 0.0041%인 1,267명, 다단계 층화 무선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75%p	2001.7.21.-8.20,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3차 (2006)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1,227,188명 중 0.0038%인 1,200명 (통계청 2005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1]), 시·도별 인구비례 표집, 다단계 무선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83%p	2006.9.15.-10.15,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조사차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시기 및 방법
4차 (2008)	초·중등·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여론과 인식 변화, 국민들의 교육관 변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자료 수집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32,948,751명 중 0.0036%인 1,2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83%p	2008.8.25.–9.19,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5차 (2010)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33,408,173명 중 0.0045%인 1,5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53%p	2010.6.14.–7.23, 조사원 가구 방문 조사
6차 (2011)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4,127,262명 중 0.0044%인 1,5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53%p	2011.9.5.–10.5, 조사원 개별 면접조사
7차 (2012)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4,401,486명 중 0.0052%인 1,8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31%p	2012.6.11.–7.13, 조사원 개별 면접조사
8차 (2013)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8,561,083명 중 0.0052%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3.10월 초(1차 조사), 11월 중순(2차 조사), 온라인조사
9차 (2014)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38,866,520명 중 0.0051%인 2,000명 표집,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19%p	2014.7.22-8.27(1차 조사), 11.14-11.24(2차 조사), 온라인조사

1-9차의 조사내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도 1차 조사는 ① 학교교육 만족도, ② 21세기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③ 학교선택, ④ 입시제도, ⑤ 학교평가, ⑥ 학교평가 정책, ⑦ 교육재정, ⑧ 과외교육, ⑨ 학생체벌, ⑩ 교원, ⑪ 학생비행, ⑫ 교육개혁 평가, ⑬ 사회교육, ⑭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실태 영역에 관한 3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일반적 연구보고서 형태가 아닌 자료집 형태로 출간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차별화하였다(남궁지영 외, 2012).

2001년도 2차 조사는 조사 영역을 1차 조사의 14개 영역에서 5개 영역(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평생교육 정책, ⑤ 정보화 교육 정책)으로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전회에 비해 사립 중·고등학교의 선발권 부여, 컴퓨터 보유 및 활용실태, 학교 수익사업 찬반, 학교 등록금 인상 또는 증세 부담 의사,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등 문항이 제외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재정, 대학평가, 학부제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새로운 문항을 개발

1) 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지역별 모집단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제작된 조사구를 표집하는 방식이므로 표집오차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되어 있음(김일혁 외, 2006년, 13쪽). 이때부터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하여 총 32문항이 조사도구에 포함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표집 방법이 개선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사 절차 등이 여전히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연간 추이 분석 제약 등의 한계가 있었다(남궁지영 외, 2012).

2년 주기로 실시 된 이전 조사에 따라 2003년도에 3차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조사 당시의 예산, 조사 결과에 대한 원내·외 인식 차이 등의 이유로 조사가 지속되지 못하였다가 2006년에 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6년도 3차 조사에서는 정보화 교육 정책이 교육관 영역으로 대체되어 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④ 평생교육, ⑤ 교육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39문항 중 자립형사립고 허용 여부, 학부제 찬반 의견, 정보화 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등에 관한 문항이 제외되고, 학교 및 교사 역할 수행 평가, 학교평가 시행 주기,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자녀교육 실패의 의미 등에 관한 문항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3차 조사의 주요 성과로는 표집방법 및 조사 절차가 표준화되어 이후 교육여론조사 추이 분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남궁지영 외, 2012). 또한, 결과산출물에 있어 1차 조사에서 활용한 잡지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2차 조사의 일반 연구보고서 형식 모두를 활용하였다. 이는 교육정책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연구보고서로서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2008년도 4차 조사에서는 평생교육 영역이 제외 된 총 4개 영역(① 초·중등교육 일반, ② 초·중등교육 정책, ③ 고등교육 정책, ④ 교육관)으로 구성되었다. 총 41문항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별 본고사, 대학별 논술고사, 고교 등급제,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 문항이 제외되고,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직 개방,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등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4차 조사의 주요 성과로는 3차 조사 이후 교육 전반에 대한 태도 및 교육관에 관한 고정문항이 안정화됨에 따라 그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해져 실제 교육정책 추진 및 시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2010년도 5차 조사에서는 4차 조사와 동일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는 4차 조사 대비 18문항이 증가된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등에 관한 문항이 제외되고, 고교 학점제 도입, 대학등록금문제, 입학사정관제 등 유동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59문항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0년 조사 결과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교육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남궁지영 외, 2012).

2011년도 6차 조사부터는 교육현안 관련 문항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여론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남궁지영 외, 2012). 이때

새롭게 정비된 조사도구에는 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④ 교육정책, ⑤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⑥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총 6개 영역이 포함되었다. 문항 수는 총 42문항으로 5차 조사대비 17문항이 감소하였는데 교육비리, 고교 학점제, 교장 공모제 등에 관한 문항이 제외되고, 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교육행정의 권한),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교사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도 등 문항이 개발되었다. 2012년도부터는 국민들의 교육태도에 관한 보다 정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 개발한 문항을 기반으로 30% 이내에서 신규문항을 개발한 조사도구를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2011년도부터 2년 주기 조사에서 1년 주기 조사로 변화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피드백 자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2년도 7차 조사는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이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생의 학습으로 분리되고 고교 및 대학입시, 교육복지가 추가되어 8개 영역(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입시, ⑥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으로 변경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에 관한 문항이 신설되었고, 그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교육의 국가 기여 정도 등에 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문항 수는 총 49문항으로 6차 조사 대비 7문항 증가하였으며, 기존 문항 42문항, 신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차 조사의 주요 성과로는 조사 결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2013년도 8차 조사와 2014년도 9차 조사는 연 2회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총 문항 수가 증가하였다. 2013년도 8차 조사는 2012년의 8개 영역에 정부 정책들에 대한 관심 및 동의도와 가치관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여 총 12개 영역(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생의 학습, ⑤ 고교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 운영과 대학 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⑨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성과에 대한 견해, 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⑪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⑫ 교육 정책 관련 가치관)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도 8차 조사의 총 문항 수는 60문항으로, 1차 조사 52문항, 2차 조사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교육감 직선제, 지방대학 우선 지원 정책,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 등이 있다. 8차 조사의 주요 성과는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해로써, 이전 정부에 대한 교육정책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모두 수합했다는 점이다(김정민 외, 2014).

2014년도 9차 조사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관심 및 동의도와 가치관을 한 영역으로 묶어 총 9개

영역(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②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③ 학생의 정서와 생활, ④ 교육의 내용과 방식, ⑤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⑥ 교육복지, ⑦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⑧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⑨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으로 변경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확대 정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문항이, 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문항이 개발되었다. 또한, 2014 PDK/갤럽조사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관련 문항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4년도 9차 조사의 총 문항 수는 61문항으로 1차 조사 46문항, 2차 조사 15문항으로 시행되었다.

6-9차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Ⅱ-2〉와 같으며, 1-10차 조사의 연도별 문항 비교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Ⅱ-2〉 6-9차 조사까지의 조사내용 비교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2011년	7차 2012년	8차 2013년	9차 2014년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	○	○	○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	○	○	○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	○	○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	○	○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		●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교육 정책	○	○	○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	○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교사에 대한 신뢰도	●	○	○	○
	교사 월급 결정 기준	●	○	○	
	학업성적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	○	○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	○	○	○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	○	○	○
	학업·경쟁 스트레스 정도		●	○	○
	학교 폭력의 원인		●	○	○
	정부 및 학교의 학교 폭력 해소 노력	○	○	○	○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	○	○	○
학생의 학습	학생의 성공 척도	●	○	○	
	학생의 학습수준 (성적) 결정 요인	●	○	○	○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	○	○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2011년	7차 2012년	8차 2013년	9차 2014년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	○	○	○	○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의사	●	○	○	○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	○	○	○
	영어 공교육 시기	○	○	○	○
고교 및 대학 입시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	○	○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 효과	●	○	○	
	대학 입시 중요 반영 항목	●	○	○	○
교육복지	무상급식 지원 범위	○	○	○	○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	○	○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찬반의견		●	○	○
	국가재원투자 우선순위 (유아, 고교, 대학)		●	○	○
대학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	○	○	○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	○	○	○
	대학 재정의 투명성	●	○	○	○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	○	
	자녀대학 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	○	○	○
	자녀대학 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	○	○	○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	○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	○	○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	○	○	○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의견	●	○	○	○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	○	○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	○	○	○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	○	○	○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	○	○	○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	○	○
	시·도교육감 직선제 존폐			●	○
	정부의 지방대학 우선 지원 정책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	○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중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 정책의 시급함 정도			●	

(○: 기존문항, ●: 신규문항)

조사항목	조사내용	6차 2011년	7차 2012년	8차 2013년	9차 2014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	
	교육정책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			●	
	교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효과				●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초등학교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인지 여부,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
	자녀 성장에 대한 바람				●
	가정교육 역점 사항				●
	교육현안 이해도와 동의 정도				●

* 출처 : 남궁지영·우명숙(2011), 남궁지영·김창환·우명숙(2012), 이강주·양승실·차성현(2013), 김정민·김일혁·양승실·이선호(2014)의 보고서 내용을 재구성.

2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부문

통계청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및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통계청, 2014). 1977년 최초 실시 이후 3차례의 체제 개편을 통해 조사 부문 및 주기가 정비되었다. 조사 부문의 경우 최초 6개 부문에서 현재 10개 부문(① 가족, ② 소득과 소비, ③ 노동, ④ 교육, ⑤ 보건, ⑥ 환경, ⑦ 복지, ⑧ 문화와 여가, ⑨ 안전, ⑩ 사회참여)으로 변화되었으며,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성별, 중·고등학교 재학/대학재학 이상의 집단 또는 연도에 따라 %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회지표』로 수록·공표하였으며, 1996년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등을 통해 자체 공표를 실시하고 매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2014년 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30일, 총 16일 간 진행되었으며, 전국 17,664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 층화 및 분류 지표에 따른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표 Ⅱ-3〉 참조).

〈표 Ⅱ-3〉 통계청 사회조사 표본 설계

표본 추출	1. 표본추출틀 작성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집단가구를 제외한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만 대상 • 경상표본, 외부 승인통계 및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 조사구 제외	⇒	2. 층화 및 분류지표 •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도의 동부, 읍면부 등 모두 25개 지역으로 층화 • 조사구별 주택유형, 농가비율, 유배우 비율, 1인 가구 비율, 60세 이상 인구비율 등 분류	⇒	3. 표본 추출 • 지역별 층화 및 분류 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MOS)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 이용하여 추출 • 표본 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랜덤으로 최초 가구를 설정하여 연속하여 12가구 조사하는 방법
추정 방법	• 가중치 설정 • 추정값: 표본가중평균 • 분산추정식: 선형화(Taylor series) 방법				

* 출처 : 통계청(2014), pp 14-17 재구성.

2014년 조사 부문은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이었으며, 교육의 경우 2012년도 조사 항목과 동일하게 35개 항목(기본사항 1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Ⅱ-4〉와 같으며, 주요 결과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최초 실시 된 '소질과 적성 개발영역'외 모든 하위 영역(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전공,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2012년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만족도가 증가한 영역은 교육방법(8%p 증가)이었고, 가장 미미한 증가는 전공(0.4%p 증가)에 대한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 및 목적 항목에서 대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61.9%)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61.6%)와 비슷하였다.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으로는 가족의 도움이 6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67.8% 보다 4.8%p 감소한 수치이다. 교육기회의 충족도는 50.2%로 2012년도 보다 3.2%p 증가하였고, 미충족도는 49.8%로 3.2%p 감소하였다.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5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항목에서는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36.9%로, 2012년 대비 1.4%p 감소하였다. 학교효과의 경우 모든 하위 항목(지식 기술의 습득, 인격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에서 2012년도 보다 효과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높았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가장 큰 증가는 인격형성 부분으로 2.3%p 증가하였다.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항목(30세 이상)에서는 부모가 자녀 학교운영에 참여한다(26.7%) 보다 참여하지 않는다(59.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 대비 참여율은 1.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부문 조사 항목

조사부문	조사 항목	
기본사항 (14개)	•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 교육정도 • 주관적 만족감 •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 산업 • 직업	• 종사상 지위 • 거처의 종류 • 점유형태 •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 • 가구소득
교육 (21개 항목) *2012년도와 동일항목	• 학생 여부 • 재학생 여부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 대학생 여부 •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 교육 기회의 충족도 •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학교 교육의 효과 • 학생 자녀 유무 •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 자녀의 유학에 대한 견해 • 자녀 유학 단계 • 자녀 유학 이유 • 교육비에 대한 인식 • 교육비 부담 요인

* 출처 : 통계청(2014), pp17-18 재구성.

3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조사(The Phi Delta Kappa/Gallup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는 교육연구단체 파이 델타 카파와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해 1969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이다. 이 조사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미국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도별로 공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남궁지영·우명숙, 2011). 조사방법은 2014년도까지 임의전화걸기(Random-digit-dial, RDD)에 의한 전화조사만 실시되었으나 2015년도부터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었다. 전화조사 대상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갤럽 패널 중 18세 이상 가구 전화번호 등록 거주자이며, 인구 특성을 반영한 전국단위 표집으로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1명을 추출하였다(2014년, 2015년 동일). 온라인 조사의 경우 미국 전역에 있는 갤럽 패널(Gallup Panel) 3,4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에는 미국 교육 전반에 관한 국민의 태도를 살펴보는 고정문항과 현재 이슈화 되는 교육문제를 다룬 유동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5년간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제시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 연도별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2회 2010년	43회 2011년	44회 2012년	45회 2013년	46회 2014년	47회 2015년
교육의 질	학교 평가(A, B, C, D, F)	○	○	○	○	○	○
	교원 평가		○				
	교장 및 교육행정가 평가		○				
	학교위원회 평가		○				
	학부모 평가		○				
	학교의 각종평가	○	○	○	○	○	○
	학교가 직면한 문제	○	○	○	○	○	○
학교 운영	학교 통제(교사 파업 등)				○		
	학생 등록 감소				○		
	조기교육(국가의 미취학 아동 지원)				○		
	교과외 활동·스포츠				○		
	학생 문제			○	○		
	학교 수업시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2회 2010년	43회 2011년	44회 2012년	45회 2013년	46회 2014년	47회 2015년
학교 교육 이해	지역학교: 교육 공간 부족			○		○		
	매체 보도				○			
학교 선택	차터 스쿨	차터스쿨 정책 찬반	○	○	○	○	○	○
		설립 권한					○	
		온라인 차터스쿨				○		
	공립·사립	사립학교에 공공재원 지원		○	○	○	○	○
		사립학교 선택 이유		○	○	○	○	○
	학교 선택 찬반							○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
도시 학교	도시학교의 발전				○			
	도시학교 발전을 위한 증세				○			
교육 과정 · 교수	배워야할 내용	변화한 사회 반영					○	
		직업 기술 강조					○	
		공통교과과정			○	○	○	○
	고등학교 3학생의 학업 생산성						○	
	정부 영향						○	
	졸업요건 대체방안			○				
	교육과정 만족도						○	○
기술	IT 교육			○				
	컴퓨터에 대한 투자			○				
	컴퓨터 활용			○				
학생 평가	대안적 평가						○	
	학생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	○
	각각의 학생평가에 대한 지지 정도						○	○
학업 성취 격차	축소 노력	높은 기준 설정의 효과성			○			
		중요성 인식			○			
재정 지원	재정지원의 평등성		○		○			
고등 교육	대학교육의 중요성		○				○	
	등록금 지불여부		○	○	○	○	○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이유		○					
	자녀의 대학 진학 희망 여부		○					
국가 목표	계획된 국가 교육정책의 중요 정도					○		

영역	조사내용	연도별 조사내용					
		42회 2010년	43회 2011년	44회 2012년	45회 2013년	46회 2014년	47회 2015년
정부 정책	정부인사 평가	○	○	○	○	○	○
	국가 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			
	기타 국가주도 교육 정책		○				
	정당			○			○
	선거: 교육재정 지원 지지하는 정당			○			
	경제 활성화 법 중 교육 지원 부분	○					
낙오 학생 방지법 (NCLB)	찬반 의견	○					
	교육발전에 도움 여부	○					
	낙오학생방지법에 대한 친숙도				○		
교원	좋은 교사 유치 및 보유	○	○				
	단체 교섭		○				
	능력 있는 교사 유치	○	○				
	원하는 교사 특징	○		○			
	교사 자격		○			○	
	교사 선임권		○				
	교사 보상/급여	○	○				○
	교원 평가	○		○	○	○	
	교사 및 교장에 대한 신임	○	○	○	○	○	
	교원 종신 재직권						○
	교사·행정가의 책무성	○	○			○	
부모	공립학교의 부모 통제 정도			○			
	자녀 교육비						○
학생	학업	○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취학 전 백신접종						○
취약 계층	이주 학생			○	○	○	
	군인 자녀		○				

* 출처 : The 42th PDK/Gallup Poll(2010), The 43th PDK/Gallup Poll(2011), The 44th PDK/Gallup Poll(2012), The 45th PDK/Gallup Poll(2013), The 46th PDK/Gallup Poll(2014), The 47th PDK/Gallup Poll(2015) 재구성.

2014년 실시된 제46회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미국 핵심 공통 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에 대해 미국 국민의 60%가 반대하였으며, 그 주요 이유로 교사의 수업 자율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표준화된 시험을 활용한 학생평가의 경우 5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PISA 또는 TIMMS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 비교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4%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의 가장 큰 문제로는 재정 지원 부족이 3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립학교에 대한 평가는 2013년 대비 3%p 하락한 50%만이 긍정적인 점수(A 또는 B)를 주었다. 차터스쿨에 대한 찬성 입장은 70%로 높았는데, 차터스쿨이 일반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견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교육 변화와 관련하여 학교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58%로 과반 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3%로 2010년 75%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수능과 유사한 ACT 또는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의 중요성은 68%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은 49%로 2013년도 대비 5%p 증가하였다.

2015년 제47회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표준화된 학업성취도평가 참여여부에 대한 부모의 권한에 대해 41%가 찬성, 44%는 반대, 16%가 응답 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미국 핵심 공통 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2%의 응답보류를 제외하고 24%가 찬성, 54% 반대로 반대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미국 국민 중 64%는 찬성하여 반대 2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공립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A+B)이 51%로 나타났다. 취학 전 학생의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에서는 찬성이 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교육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8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1%가 그렇다, 32%가 그렇지 않다, 17%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특정 학위를 통해 교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73%가 찬성하였고, 17% 반대, 11%가 응답보류로 나타났다.

4 기타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사례

가. 국내

일부 시·도나 교원단체 또는 여론조사기관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특정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2012)'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에 의한 전화면접방식(CATI)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는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도, 개별 사업별 시민 인지도, 교육지원사업의 수혜 현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경기도 또한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경기 교육정책 설문조사(2013)'를 실시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체적인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경기교육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ARS 여론조사(2014)'는 고교 평준화 정책, 무상급식, 혁신학교와 같은 특정 교육정책에 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민 모든 연령대로 유효 표본은 총 665명이었으며, 임의전화걸기(RDD)에 의한 전화면접방식(CATI)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에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2013)'을 실시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이며, 임의전화걸기(RDD)에 의한 전화면접방식(CATI)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으로는 선행교육 금지법 찬반 의견,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내 학원 등 선행교육 홍보 규제 찬반 의견, 선행교육 홍보 규제를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의 예상 효과, 선행교육의 원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교육관련 사회여론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들이다(〈표Ⅱ-6〉 참조). '우리나라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조사(2013)'와 '대학입시에 대한 여론조사(2013)'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에 의한 전화면접방식(CATI)을 적용하였다. 전자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의견, 선행학습금지법,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후자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찬반, 대학정원 감축방식, 자녀 상위권대학을 위한 고액과외, 자녀의 대입 실패 시 재수 희망 여부에 관한 문항 등을 포함하였다.

〈표 Ⅱ-6〉 기타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사례

항목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2012)	경기 교육정책 설문조사(2013)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ARS 여론조사 (20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2013)	우리나라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 조사 (2013)	대학입시에 대한 여론조사 (2013)
주최 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재정경제위원회 (김재명의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조사 목적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 향후 관련 수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고교평준화정책,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정책에 관한 서울시민 의견 수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우리나라 사회여론 파악을 위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	우리나라 사회여론 파악을 위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도 • 교육지원 개별 사업에 대한 시민인지도 및 선호도 • 교육지원 사업의 수혜 현황 및 건의사항	•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구체적인 경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 경기교육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의견 •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 선행교육금지법 찬반 의견 •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내 학원 등 선행교육 홍보 규제 찬반 의견 • 선행교육 홍보 규제를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의 효과 예상 • 선행 교육의 원인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의견 조사 •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 •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	•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찬반 의견 • 대학정원 감축 방식 의견 조사 • 자녀 상위권 대학을 위한 고액 과외 희망 여부 • 자녀의 대입 실패 시 재수 희망 여부
조사 대상	서울시민 만19세 이상 남녀	경기도 거주 학생, 학부모, 경기도 근무 교원	서울시민 모든 연령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RDD[2)] CATI[3)]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	RDD CATI	RDD CATI	RDD CATI	RDD CATI
유효 표본	총 1,000명	학생: 12,224명, 학부모: 15,494명, 교직원: 15,138명	총 665명	총 1,000명	총 1,210명	총 1,214명
표집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학생 ± 0.9%, 학부모 ± 0.8%, 교직원 ± 0.8%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8%p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8%p

* 출처 : 서울특별시청(2012), 경기도청(2013), 서울특별시의회(2014),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20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a(20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b(2013) 재구성.

2)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3)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나. 국외

주기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정책 또는 교육태도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는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먼저, 독일의 포커스(2011)에 따르면, 독일 학부모 1,256명을 대상으로 교육열과 교육목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6%는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육열에 관한 조사에서는 사회계층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ABCD 평등교육, 학생 평가제도 개혁, 시간표 개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 평가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약 13%의 국민만이 현재의 학생 평가제도가 너무 엄격하다고 응답하며 개혁에 찬성하였고, 34%는 별로 엄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표 개혁의 경우, 지난 11월 여론조사결과 대비 3%p 하락한 약 32%의 국민이 새로운 시간표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바깔로레아 제도는 93%의 국민이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그 중 50%는 현재 방식보다는 재정비 한 새로운 형식의 바깔로레아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Weca Education, 2014). 핀란드는 학생체벌에 관한 헬싱긴사노맛(2012)의 자체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핀란드 학교에서 허용되는 교육벌이 학생 혼자 앉아서 반성의 시간을 갖거나 서면으로 된 경고장 발급, 유기 정학 등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일본의 요미우리(2014)는 전 국민 중 1,522명을 대상으로 학제, 의무교육 실시 연령, 고교 의무교육 찬반의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6·3·3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다수를 이루었고, 의무교육 개시 연령 또한 현행대로 6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료로 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44%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들의 보도 출처, 여론 조사 기관, 조사 대상, 조사 주제, 그리고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표 Ⅱ-7〉 기타 교육 관련 여론조사 국외 사례

구분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보도 출처	포커스 (2011.10.11)	Weka Education (2014.07.07.)	헬싱긴사노맛 (2012.01.27.)	요미우리 (2014.02.10.)
여론 조사 기관	알렌바흐	BVA Opinion (일간지 Le Parisien의 의뢰)	자체조사	자체조사

구분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조사 대상	독일 학부모 대상 1,256명 참여	전 국민 대상 1,057명 참여	–	전 국민 대상 1,522명 참여
조사 주제	교육열과 교육목표에 관한 의견	ABCD 평등교육, 학생 평가제도 개혁, 시간표 개혁	학생체벌	학제, 의무교육, 고등학교에 관한 의견
주요 결과	**우수한 교육** • 우수한 교육 위해 폭 넓은 지식 필요: 76% • 대부분의 학부모가 음악, 철학, 종교는 큰 의미 없다 응답 **교육열** •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르며 대부분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졸업수준은 아비투어이며 다음으로 미텔 라이페 23% (Mittlere Reife: 10학년 실업학교 졸업수준), 기초학교 졸업 3% • 사회계층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자녀의 아비투어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함	**학생 평가제도 개혁** • 현재 학생평가 너무 엄격하여 개혁 찬성: 약 13% •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으므로 개혁 반대: 34% **시간표 개혁** • 새로운 시간표에 찬성: 32% **평등교육** • 평등교육 찬성: 61% • 찬성 응답자 44%는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 **바깔로레아 제도** • 제도 유지 찬성: 93% • 찬성 응답자 중 50%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재정비하여 새로운 형식의 바깔로레아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학생체벌 강화 요구** • 찬성: 77% (현재 핀란드 학교에서 허용된 가장 큰 교육벌은 학생 혼자 앉아서 반성의 시간을 갖거나 서면으로 된 경고장 발급, 유기 정학 정도임.) • 학생들에게 일정량의 육체적 노동으로 벌을 주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6·3·3제** • 유지해야 한다: 63% • 전국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20% • 지역별로 제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 **의무교육 개시 연령** • 현행대로 6세부터 시작한다 : 66% • 5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16% • 5살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1년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 13% **고등학교 의무교육** • 의무교육으로 하여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 44%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프랑스: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낮아(2011.07.28.), 독일: 독일 부모의 교육열과 교육목표에 관한 연구결과(2011.10.31.), 핀란드: 학교체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2012.02.13.). 일본: 학제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2014.02.24.)) 재구성.

5 교육현안 주제 분석

교육현안 주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핵심개혁과제·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교육정책 관련 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주제들을 중심으로 고정문항의 수정·보완 및 선택지 개발, 신규문항 개발에 활용하였다. 국정과제 관련 교육현안 주제를 정리하면 총 37개 과제로 다음 〈표 Ⅱ-8〉과 같으며,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정리한 교육현안 주제는 27개로 다음 〈표 Ⅱ-9〉와 같다.

〈표 Ⅱ-8〉 국정과제 관련 교육현안 주제

국정과제 번호		교육현안 주제
31. 교육비 부담 경감	1	사교육비 경감 추진
	2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3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4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64. 무상교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5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6	유보통합 추진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8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자유학기제 포함)
	9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마련
	10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혁
	11	학교체육 활성화
	12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69. 대학입시 간소화	13	대입전형 간소화 * 대학입시 간소화 내 다른 세부과제(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대입전형 3년 예고제) 추진상황 현장 모니터링 통합 실시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4	고등교육 재정확대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5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편
	16	성과평가 및 대학 정보공시 강화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7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18	교원평가제도 개선
7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9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20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입 및 확대
	21	특수분야 전문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22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23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24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번호		교육현안 주제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집중 육성	25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
	26	전문대학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27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28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29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30	학교반경 200m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추진
	31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
	32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33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34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35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사업)
	36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140. 직역연금 개혁	37	직역연금(사학연금) 재정재계산 실시, 개선방안 도출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5).

〈표 Ⅱ-9〉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포함 교육현안 주제

번호	과제명
1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기반 마련
2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추진
3	교직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 개선
4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재구조화 추진 * PRIME 사업 등
5	지방대학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6	(전문)대학의 기능을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으로 확장 * 계약학과 활성화 및 질 관리 등
7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8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전념 여건 지원
9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질 개선
10	대학교육혁신 인프라 구축(대학도서관 진흥법 등)
11	인문학 기초연구 지원 강화 및 외연 확대
12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R&D 평가 개선
13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14	창업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
15	대학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강화

번호	과제명
16	교육분야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관련 종합관리 * 유치원~대학시설 관리까지 전 분야 포함
17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18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강화
19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
20	탈북학생 조기적응 지원 확대
21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22	위기학생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 복귀 지원
23	농어촌 학생에 양질의 학습환경 제공
24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25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원아모집 방식, 설립기준 개선 등)
26	유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27	학교 회계직원 처우 및 인력관리 운영체계 개선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5).

6 10차 조사도구 개발

가. 설문 초안 선정 및 개발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성·지속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문헌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문항을 선정·개발하였다.

10차 조사에서는 지난 9차(2014년) 조사의 9개 영역을 일부 수정하여 유지하되, 문항은 최종 50-55개 문항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문항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PDK/갤럽 조사 사례처럼 문항 개발 과정으로 먼저, 1-9차 문항 전면 검토 후 선행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정문항을 선정하였고, 국정과제 등 최근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서의 현안을 중심으로 신규문항을 개발하였다.

나. 원내 전문가 및 교육정책 담당자 검토 실시

원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5.12-5.20),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문항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2015.5.21-5.27).

다. 최종 선정된 10차 조사도구 내용(9개 영역, 53개 문항)

최종 선정된 10차 조사도구는 9개 영역, 총 53개 문항(기존 41개, 신규 12개)으로 선정·개발하였다([부록 1] 1-10차 설문 문항별 분류, [부록 2] KEDI POLL 2015 설문조사지, [부록 3]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참조). 상세한 조사도구 영역 및 내용은 다음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10차 조사도구 조사영역 및 내용

영역	번호	조사내용	이전 조사 차수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 공교육과 정부 역할 - 학교교육의 질	1	교육행정의 권한	6, 7, 8, 9
	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3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6, 7, 8, 9
	4	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1, 2, 5, 6, 7, 8, 9
	5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신규
	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3, 4, 5, 6, 7, 8, 9
교사	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6, 7, 8, 9
	8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9
	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4, 5
교육과정 운영	10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1, 2, 3, 4, 5, 6, 7. 8, 9
	1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1, 2, 3, 4, 5, 6, 7. 8, 9
학생 생활 - 학생의 삶과 건강 - 학습성과 - 사교육	12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4, 5, 6, 7, 8, 9
	13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7, 8, 9
	14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7, 8, 9
	15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신규
	16	학교폭력 완화 노력	3, 4, 5, 6, 7, 8, 9
	17	학교폭력의 원인	7, 8, 9
	18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신규
	19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	6, 7, 8, 9
	2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	3, 4, 5, 6, 7, 8, 9
	21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	6, 7, 8, 9
	22	사교육의 근본 원인	신규
	23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6, 7, 8
	24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신규
고교 정책 및 대입 - 고교 진학 및 유형 - 대학입시	2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1, 2, 3, 4, 5, 6, 8, 9
	2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5, 6, 7, 8, 9
	27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신규
	2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6, 7, 8, 9
	29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6, 7, 8, 9

영역	번호	조사내용	이전 조사 차수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교육복지 -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30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신규
	31	무상급식 지원 범위	5, 6, 7, 8, 9
	32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5, 6, 7, 8, 9
	33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7, 8, 9
	34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7, 8, 9
	35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신규
대학교육	36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37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신규
	38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3, 4, 5, 6, 7, 8, 9
	39	대학 재정의 투명성	6, 7, 8, 9
	40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3, 4, 5
	41	지방대학의 우선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8
	42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신규
교육현안	43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	9
	44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신규
	45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8, 9
	46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신규
교육관	4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1, 2
	4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6, 7, 8, 9
	49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6, 7, 8, 9
	50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6, 7, 8, 9
	51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6, 7, 8, 9
	52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6, 7, 8, 9
	53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3, 4, 5

* 10차 조사도구 문항은 [부록 2] 참조

PART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2. 교사
3. 교육과정 운영
4. 학생 생활
5. 고교 정책 및 대입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7. 대학교육
8. 교육현안
9. 교육관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요약

- 교육행정 권한은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마련'은 시·도교육청 교육감(각 45.6%, 46.2%)이,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은 교장(46.0%)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부장관(48.7%)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초·중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는 과반수가 미(보통이다, 50.6%)라고 응답하였고(평균 2.73),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교(3.05), 중학교(2.75), 고등학교(2.47) 순임.
- 학교가 '수(매우 잘 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 초·중학교는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초 37.7%, 중 36.1%), 고등학교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6.6%)을 가장 많이 선택함.
- 학교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은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초 31.4%, 중 35.0%), 고등학교는 교원의 질적 수준(30.8%), 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31.7%)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라는 의견(56.5%)이 가장 높고,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7.0%)와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3.6%)라는 의견은 낮음.
- 자녀의 초·중등학교 유학에 대해 보낼 생각이 없다(41.4%)와 보낼 생각이 있다(40.4%)는 의견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가. 공교육과 정부역할

1) 교육행정의 권한

〈질문〉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①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②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③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④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감(45.6%), 교육부장관(41.5%), 단위학교 교장(6.7%), 잘 모르겠다(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시·도교육청 교육감(48.7%), 교육부장관(40.8%), 단위학교 교장(6.3%), 잘 모르겠다(4.2%)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감(46.2%), 단위학교 교장(28.7%), 교육부장관(20.2%), 잘 모르겠다(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시·도교육청 교육감(45.9%), 단위학교 교장(31.9%), 교육부장관(19.8%),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단위학교 교장(46.0%), 시·도교육청 교육감(31.9%), 교육부장관(17.4%), 잘 모르겠다(4.8%)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단위학교 교장(50.7%), 시·도교육청 교육감(30.5%), 교육부장관(15.4%), 잘 모르겠다(3.4%)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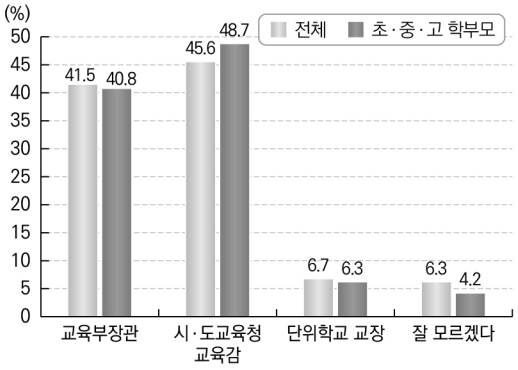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부장관(48.7%), 시·도교육청 교육감(33.1%), 단위학교 교장(13.5%), 잘 모르겠다(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교육부장관(38.8%) 보다 시·도교육청 교육감(39.2%)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위학교 교장(18.2%), 잘 모르겠다(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교육의 기본방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되 구체적인 실천 사안일수록 교육청, 단위학교로 결정권이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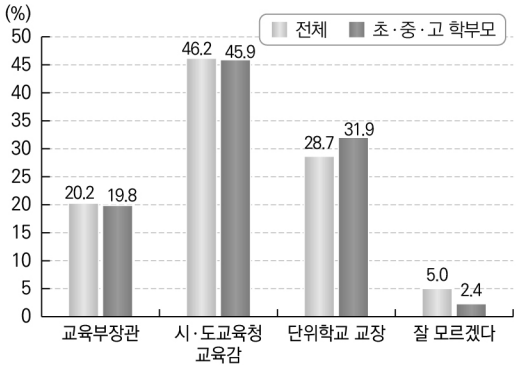
〈표 Ⅲ-1〉 교육행정의 권한(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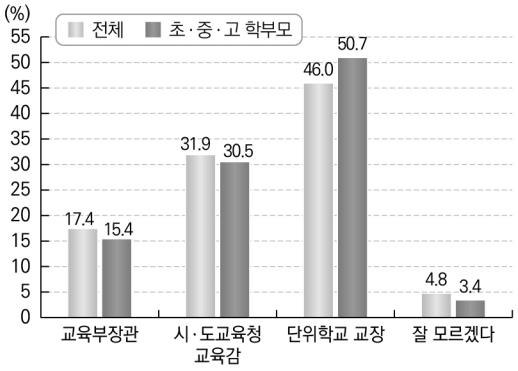
교육행정의 권한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육부장관	830 (41.5)	202 (40.8)	404 (20.2)	98 (19.8)	347 (17.4)	76 (15.4)	**973 (48.7)**	192 (38.8)
시·도교육청 교육감	**911 (45.6)**	**241 (48.7)**	**924 (46.2)**	**227 (45.9)**	638 (31.9)	151 (30.5)	661 (33.1)	**194 (39.2)**
단위학교 교장	134 (6.7)	31 (6.3)	573 (28.7)	158 (31.9)	**919 (46.0)**	**251 (50.7)**	269 (13.5)	90 (18.2)
잘 모르겠다	125 (6.3)	21 (4.2)	99 (5.0)	12 (2.4)	96 (4.8)	17 (3.4)	97 (4.9)	19 (3.8)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4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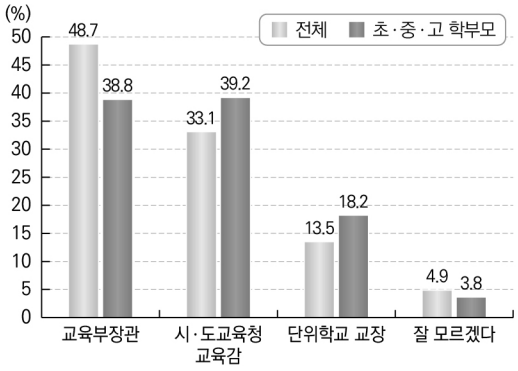
[그림 Ⅲ-1] 교육행정의 권한 -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2015)



[그림 Ⅲ-2] 교육행정의 권한 -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2015)



[그림 Ⅲ-3] 교육행정의 권한 -
학생의 기초 학력 성취 보장(2015)



[그림 Ⅲ-4] 교육행정의 권한 -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2015)

나. 학교교육의 질

1)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수+우) 14.8%, 보통이다(미) 50.6%, 잘 못하고 있다(양+가) 34.7%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수+우) 13.5%, 보통이다(미) 50.5%, 잘 못하고 있다(양+가) 36.0%로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평균점수의 경우 전체집단은 2.73(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집단은 2.69(5점 만점)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각각에 대한 평가 결과는 먼저,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수+우) 30.5%, 보통이다(미) 46.0%, 잘 못하고 있다(양+가) 23.6%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평균 3.05). 초등학교에 대한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수+우) 32.3%, 보통이다(미) 44.4%, 잘 못하고 있다(양+가) 23.2%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중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수+우) 17.5%, 보통이다(미) 46.2%, 잘 못하고 있다(양+가) 36.4%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평균 2.75),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수+우) 16.0%, 보통이다(미) 45.9%, 잘 못하고 있다(양+가) 38.2%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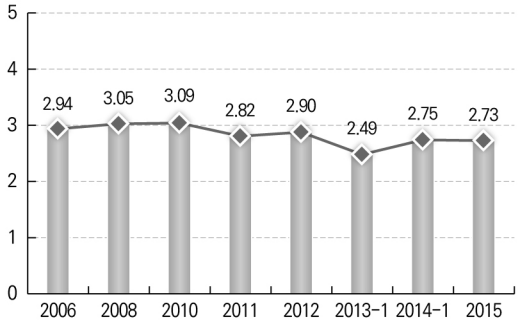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수+우) 12.5%, 보통이다(미) 36.0%, 잘 못하고 있다(양+가) 51.6%로, 초·중학교와는 달리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47).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수+우) 11.5%, 보통이다(미) 33.9%, 잘 못하고 있다(양+가) 54.5%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1차 조사(2006년)부터 이번 10차 조사까지 실시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보통이다(미)라는 응답비율이 높아(평균 2.5-3.1/5점 만점)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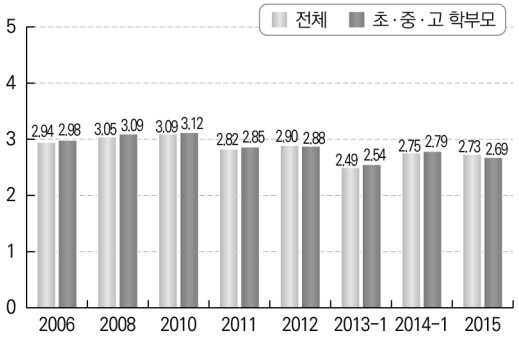
〈표 Ⅲ-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15)

(단위 : 명(%))

초·중·고교 전반 평가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전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중·고 전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수 (매우 잘하고 있다)	9 (0.5)	59 (3.0)	16 (0.8)	19 (1.0)	2 (0.4)	16 (3.2)	3 (0.6)	4 (0.8)
우 (잘하고 있다)	286 (14.3)	550 (27.5)	333 (16.7)	230 (11.5)	65 (13.1)	144 (29.1)	76 (15.4)	53 (10.7)
미 (보통이다)	**1,011 (50.6)**	**919 (46.0)**	**924 (46.2)**	719 (36.0)	**250 (50.5)**	**220 (44.4)**	**227 (45.9)**	168 (33.9)
양 (못하고 있다)	545 (27.3)	374 (18.7)	592 (29.6)	**732 (36.6)**	136 (27.5)	89 (18.0)	155 (31.3)	**187 (37.8)**
가 (전혀 못하고 있다)	149 (7.5)	98 (4.9)	135 (6.8)	300 (15.0)	42 (8.5)	26 (5.3)	34 (6.9)	83 (16.8)
계(%)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495 (100.0)	495 (100.0)	495 (100.0)	495 (100.0)
평균 (표준편차)	2.73 (0.812)	3.05 (0.880)	2.75 (0.839)	2.47 (0.915)	2.69 (0.818)	3.07 (0.898)	2.72 (0.828)	2.41 (0.917)



[그림 Ⅲ-5]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전체) (2006-2015)



[그림 Ⅲ-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2006-2015)

2)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질문〉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국민들로부터 초등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37.7%),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26.6%),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18.2%),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9.7%),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7.9%), 기타(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집단 또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32.9%),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27.9%),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0.4%),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1.7%),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7.1%), 기타(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로부터 중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36.1%),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8%),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6.7%),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5.3%),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4.0%), 기타(0.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 학부모 집단의 경우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0.9%)이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29.5%)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8.6%),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7.8%),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3.0%),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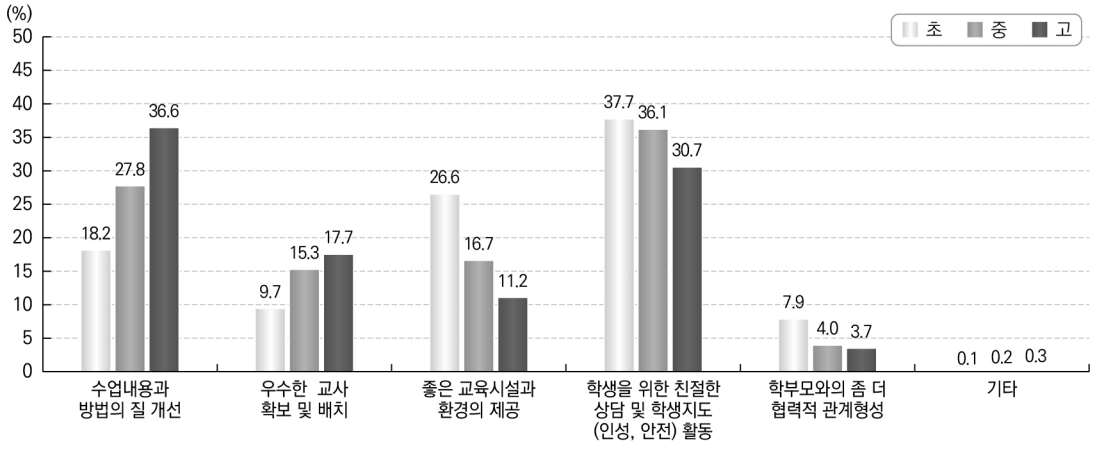
국민들로부터 고등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6.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30.7%),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7.7%),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1.2%),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3.7%),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집단 또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7.6%),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26.9%),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20.0%),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2.1%),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3.4%), 기타(0.0%) 순으로 전체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9차(2011-2014년) 조사까지는 초·중·고등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차 조사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초·중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을, 고등학교는 지난 조사들과 유사하게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초·중·고등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단위 : 명(%))

학교 발전 과제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363 (18.2)	**555 (27.8)**	**732 (36.6)**	101 (20.4)	**153 (30.9)**	**186 (37.6)**	**932 (46.6)**	**921 (46.1)**	**681 (37.8)**	**690 (46.0)**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193 (9.7)	306 (15.3)	353 (17.7)	58 (11.7)	88 (17.8)	99 (20.0)	301 (15.1)	263 (13.2)	**495 (27.5)**	**444 (29.6)**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532 (26.6)**	334 (16.7)	224 (11.2)	**138 (27.9)**	92 (18.6)	60 (12.1)	239 (12.0)	279 (14.0)	211 (11.7)	225 (15.0)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753 (37.7)**	**721 (36.1)**	**613 (30.7)**	**163 (32.9)**	**146 (29.5)**	**133 (26.9)**	**464 (23.2)**	**475 (23.8)**	366 (20.3)	109 (7.3)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157 (7.9)	80 (4.0)	73 (3.7)	35 (7.1)	15 (3.0)	17 (3.4)	56 (2.8)	54 (2.7)	42 (2.3)	27 (1.8)
기타	2 (0.1)	4 (0.2)	5 (0.3)	0 (0.0)	1 (0.2)	0 (0.0)	8 (0.4)	8 (0.4)	4 (0.2)	4 (0.3)
잘 모르겠다	–	–	–	–	–	–	–	–	1 (0.1)	1 (0.1)
계(%)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495 (100.0)	495 (100.0)	495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2015)

3)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질문〉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1.4%), 통학거리(23.9%), 지역 환경 및 여건(19.1%), 교원의 질적 수준(13.7%), 학교시설(8.5%), 상급학교 진학실적(1.5%), 학교명성이나 전통(0.9%), 교육비(0.6%), 졸업생의 취업실적(0.5%),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 집단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8.3%), 통학거리(21.2%), 교원의 질적 수준(16.3%), 지역 환경 및 여건(14.4%), 학교시설(7.2%), 학교명성이나 전통(0.8%), 상급학교 진학실적(0.8%), 졸업생의 취업실적(0.8%), 교육비(0.4%), 기타(0.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닐 중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5.0%), 교원의 질적 수준(25.7%), 지역 환경 및 여건(14.9%), 통학거리(9.0%), 상급학교 진학실적(6.5%), 학교시설(6.1%), 학교명성이나 전통(1.6%), 교육비(0.7%), 졸업생의 취업실적(0.6%),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7.5%), 교원의 질적 수준(31.8%), 지역 환경 및 여건(13.6%), 통학거리(6.8%), 상급학교 진학실적(6.3%), 학교시설(3.4%), 학교명성이나 전통(0.6%), 교육비(0.0%), 졸업생의 취업실적(0.0%),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다닐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30.8%),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6.6%), 상급학교 진학실적(17.7%), 지역 환경 및 여건(6.3%), 통학거리(5.7%), 학교명성이나 전통(4.6%), 학교시설(3.7%), 졸업생의 취업실적(3.5%), 교육비(1.1%),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부모 집단의 경우는 교원의 질적 수준(34.9%),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6.2%), 상급학교 진학실적(18.5%), 학교명성이나 전통(5.1%), 통학거리(4.6%), 지역 환경 및 여건(4.1%), 학교시설(3.1%), 교육비(2.1%), 졸업생의 취업실적(1.5%), 기타(0.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닐 대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졸업생의 취업실적(31.7%), 교육프로그램의 특성(18.8%), 학교명성이나 전통(16.3%), 교원의 질적 수준(13.3%), 교육비(5.6%), 지역 환경 및 여건(4.6%), 학교시설(3.6%), 통학거리(3.5%), 상급학교 진학실적(2.2%), 기타(0.6%)로 나타났다. 대학교 학부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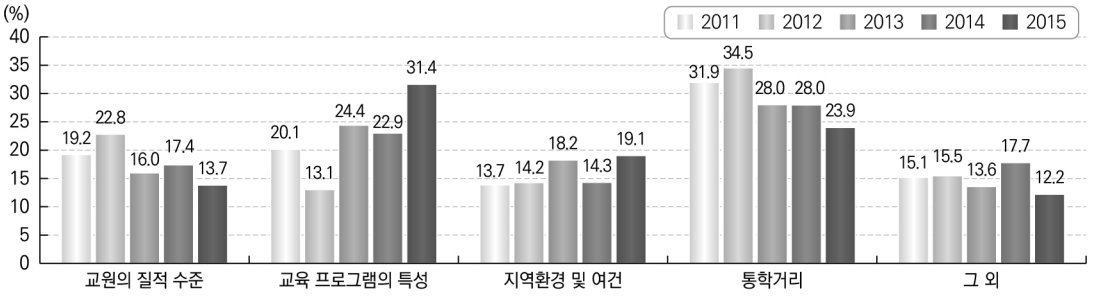
경우도 졸업생의 취업실적(39.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명성이나 전통(18.9%), 교육프로그램의 특성(18.2%), 교원의 질적 수준(11.2%), 교육비(4.5%), 학교시설(3.8%), 지역 환경 및 여건(1.7%), 상급학교 진학실적(1.4%), 통학거리(0.7%),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닐 학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 6-9차(2011-2014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중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고등학교는 교원의 질적 수준, 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10차 조사에서 초등학교는 1순위가 통학거리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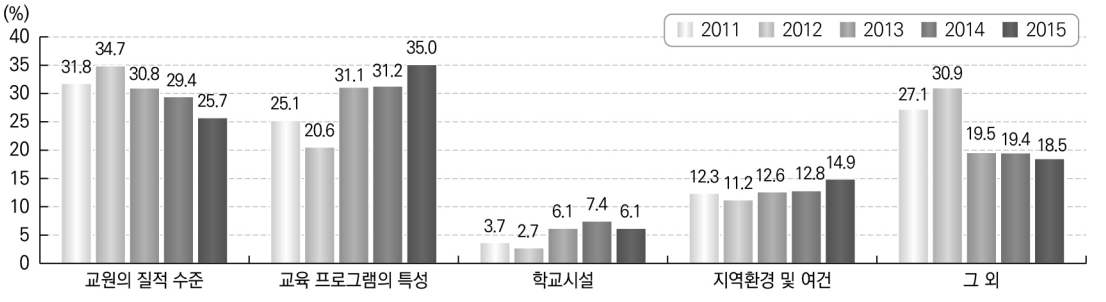
〈표 Ⅲ-4〉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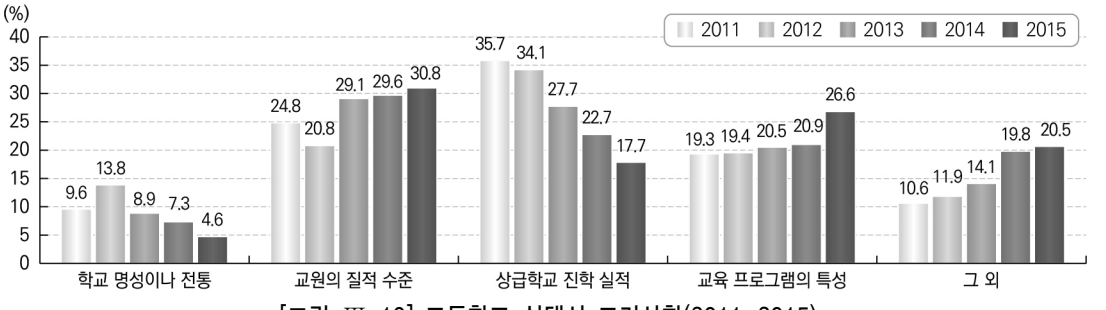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학교 명성이나 전통	18 (0.9)	2 (0.8)	32 (1.6)	1 (0.6)	92 (4.6)	10 (5.1)	326 (16.3)	54 (18.9)
교원의 질적 수준	274 (13.7)	43 (16.3)	**513 (25.7)**	**56 (31.8)**	**615 (30.8)**	**68 (34.9)**	265 (13.3)	32 (11.2)
상급학교 진학 실적	29 (1.5)	2 (0.8)	130 (6.5)	11 (6.3)	354 (17.7)	36 (18.5)	43 (2.2)	4 (1.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628 (31.4)**	**101 (38.3)**	**700 (35.0)**	**66 (37.5)**	**531 (26.6)**	**51 (26.2)**	**376 (18.8)**	**52 (18.2)**
학교시설	169 (8.5)	19 (7.2)	122 (6.1)	6 (3.4)	74 (3.7)	6 (3.1)	71 (3.6)	11 (3.8)
지역 환경 및 여건	381 (19.1)	38 (14.4)	297 (14.9)	24 (13.6)	126 (6.3)	8 (4.1)	92 (4.6)	5 (1.7)
통학거리	**477 (23.9)**	**56 (21.2)**	179 (9.0)	12 (6.8)	113 (5.7)	9 (4.6)	69 (3.5)	2 (0.7)
졸업생의 취업실적	9 (0.5)	2 (0.8)	12 (0.6)	0 (0.0)	70 (3.5)	3 (1.5)	**634 (31.7)**	**112 (39.2)**
교육비	12 (0.6)	1 (0.4)	13 (0.7)	0 (0.0)	22 (1.1)	4 (2.1)	112 (5.6)	13 (4.5)
기타	3 (0.2)	0 (0.0)	2 (0.1)	0 (0.0)	3 (0.2)	0 (0.0)	12 (0.6)	1 (0.3)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176 (100.0)	2,000 (100.0)	195 (100.0)	2,000 (100.0)	2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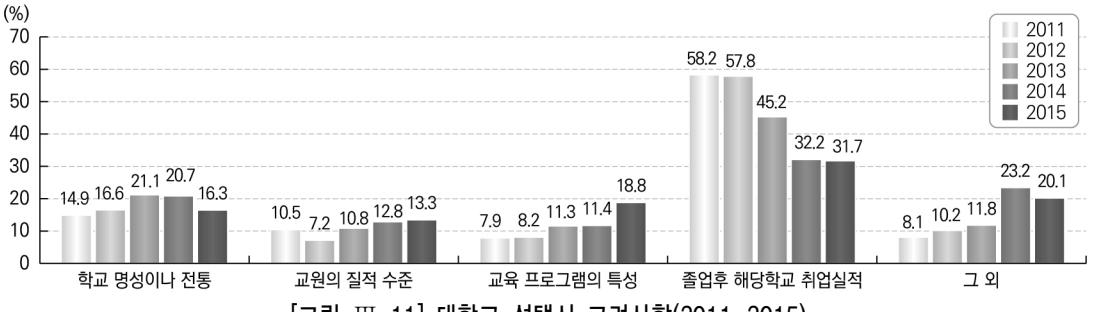
[그림 Ⅲ-8] 초등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그림 Ⅲ-9] 중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그림 Ⅲ-10] 고등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그림 Ⅲ-11] 대학교 선택시 고려사항(2011-2015)

4)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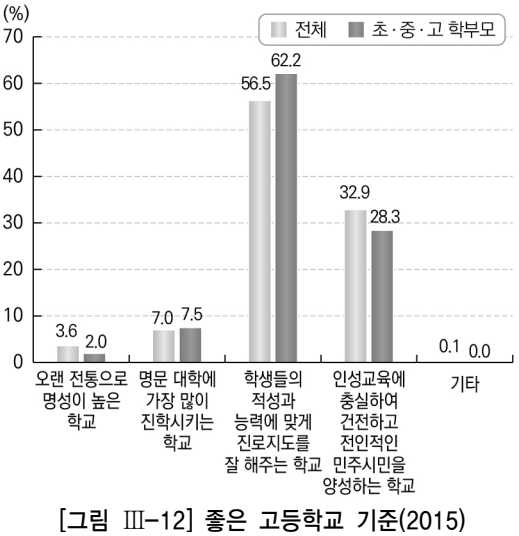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56.5%),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32.9%),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7.0%),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3.6%), 기타(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집단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62.2%),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28.3%),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7.5%),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2.0%), 기타(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좋은 고등학교 기준(2015)

(단위 : 명(%))

좋은 고등학교 기준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	71 (3.6)	10 (2.0)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	140 (7.0)	37 (7.5)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	**1,130 (56.5)**	**308 (62.2)**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657 (32.9)	140 (28.3)
기타	2 (0.1)	0 (0.0)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12] 좋은 고등학교 기준(2015)

5)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질문〉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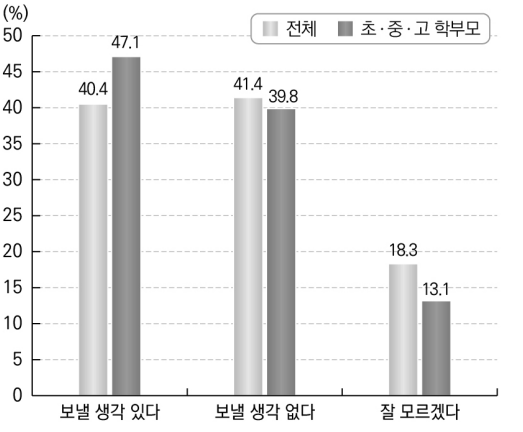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41.4%)는 의견이 보낼 생각이 있다(40.4%)는 의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잘 모르겠다 18.3%). 초·중·고 학부모 집단은 보낼 생각이 있다 47.1%, 보낼 생각이 없다 39.8%, 잘 모르겠다 13.1%를 나타내었다.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은 3-10차(2006-2015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7차(2011-2012년) 조사에서만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의 비율이 비슷한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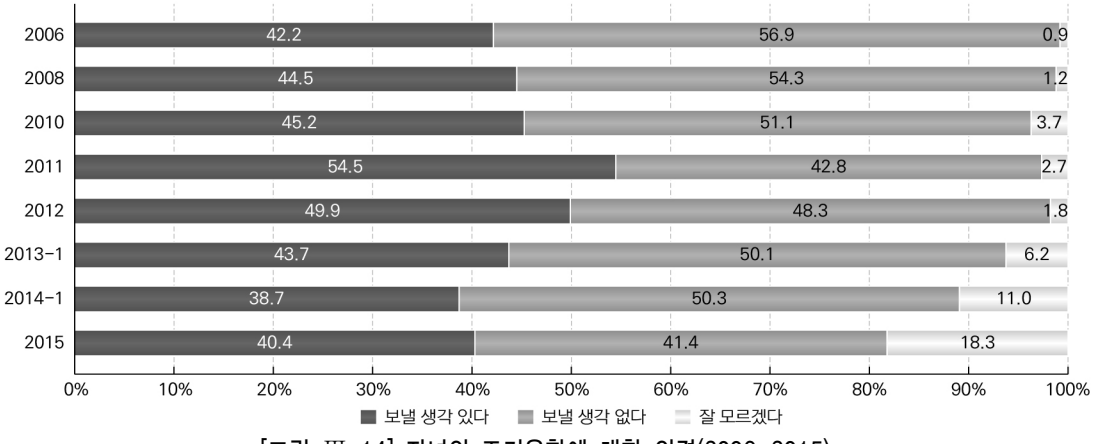
〈표 Ⅲ-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조기 유학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보낼 생각 있다	807 (40.4)	**233 (47.1)**
보낼 생각 없다	**828 (41.4)**	197 (39.8)
잘 모르겠다	365 (18.3)	65 (13.1)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13] 자녀의 조기유학(2015)



[그림 Ⅲ-14]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06-2015)

2 교사

요약

- 초·중등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과반수가 보통(50.6%)이라고 응답하였고,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포함)는 28.2%,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 포함)는 21.3%로 나타남(평균 2.91로, 8-9차 2.65, 2.72보다 다소 상승).
- 교사의 우선 필요 능력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지도 능력(47.7%), 중학교 교사는 학습지도 능력(38.2%), 고등학교 교사는 진로지도 능력(47.6%)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 찬성 55.8%, 반대 27.9%로 찬성의견이 높음.

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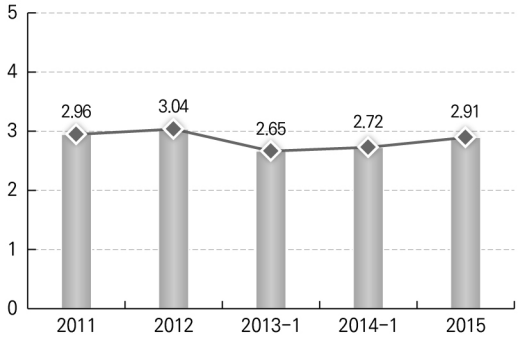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가 21.3%, 보통이라는 의견이 50.6%, 신뢰하지 못한다(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가 28.2%로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평균 2.91/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집단의 경우도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23.6%, 보통이다 46.9%, 신뢰하지 못 한다(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9.5%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균 2.9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이번 조사와 동일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한 8-9차(2013-2014년)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8차 2.65 → 9차 2.72 → 10차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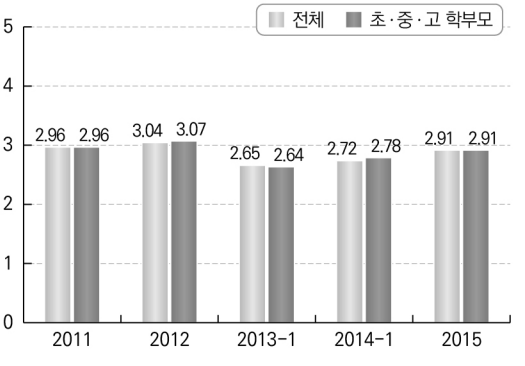
〈표 Ⅲ-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단위 : 명(%))

교사에 대한 신뢰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신뢰한다	33 (1.7)	6 (1.2)
신뢰한다	392 (19.6)	111 (22.4)
보통이다	**1,012 (50.6)**	**232 (46.9)**
신뢰하지 못한다	478 (23.9)	122 (24.6)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85 (4.3)	24 (4.8)
계(%)	2,000 (100.0)	495 (100.0)
평균(표준편차)	2.91 (0.813)	2.91 (0.840)



[그림 Ⅲ-15]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전체)(2011-2015)



[그림 Ⅲ-16]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1-2015)

2)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활지도 능력(47.7%),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23.1%), 학습지도 능력(12.6%), 진로지도 능력(8.3%), 학급경영 능력(7.9%), 기타(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생활지도 능력(43.6%),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20.4%), 학습지도 능력(15.4%), 학급경영 능력(10.9%), 진로지도 능력(9.5%),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생활지도 능력(39.4%),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22.3%), 학습지도 능력(15.5%), 학급경영 능력(10.2%), 진로지도 능력(12.1%),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습지도 능력(38.2%), 생활지도 능력(29.7%), 진로지도 능력(14.3%), 학급경영 능력(9.8%),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7.7%),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학습지도 능력(40.0%), 생활지도 능력(27.9%), 진로지도 능력(14.5%), 학급경영 능력(11.1%),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6.1%), 기타(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학습지도 능력(44.9%), 생활지도 능력(25.6%), 진로지도 능력(13.6%), 학급경영 능력(8.5%),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6.8%), 기타(0.6%)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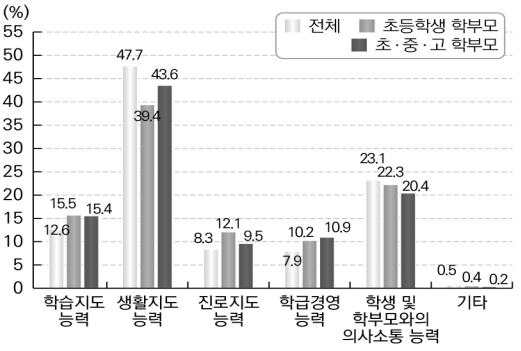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진로지도 능력(47.6%), 학습지도 능력(27.9%), 생활지도 능력(10.7%), 학급경영 능력(7.1%),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6.5%),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진로지도 능력(47.1%), 학습지도 능력(27.9%), 생활지도 능력(8.9%), 학급경영 능력(8.9%),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6.9%), 기타(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진로지도 능력(47.2%), 학습지도 능력(30.8%), 학급경영 능력(8.2%), 생활지도 능력(7.7%),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6.2%), 기타(0.0%) 순으로 응답하였다.

9차 조사인 2014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습지도 능력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지만 10차 조사에서는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별화되는 가운데 생활지도 능력과 진로지도 능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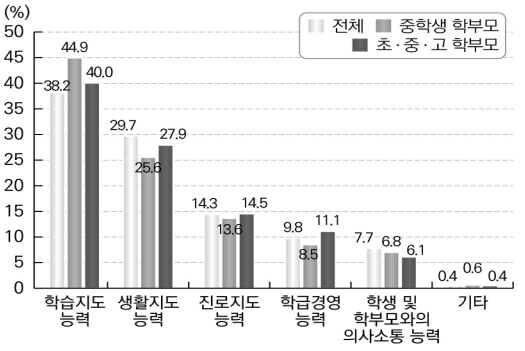
〈표 Ⅲ-8〉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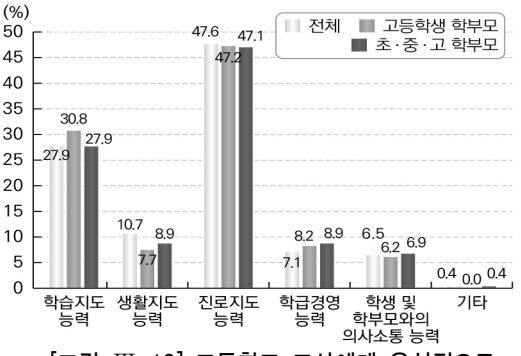
교사의 능력	2015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학습지도 능력	252 (12.6)	41 (15.5)	76 (15.4)	**763 (38.2)**	**79 (44.9)**	**198 (40.0)**	558 (27.9)	60 (30.8)	138 (27.9)	**894 (44.7)**
생활지도 능력	**954 (47.7)**	**104 (39.4)**	**216 (43.6)**	594 (29.7)	45 (25.6)	138 (27.9)	213 (10.7)	15 (7.7)	44 (8.9)	362 (18.1)
진로지도 능력	166 (8.3)	32 (12.1)	47 (9.5)	286 (14.3)	24 (13.6)	72 (14.5)	**951 (47.6)**	**92 (47.2)**	**233 (47.1)**	100 (5.0)
학급경영 능력	157 (7.9)	27 (10.2)	54 (10.9)	195 (9.8)	15 (8.5)	55 (11.1)	141 (7.1)	16 (8.2)	44 (8.9)	-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462 (23.1)	59 (22.3)	101 (20.4)	154 (7.7)	12 (6.8)	30 (6.1)	130 (6.5)	12 (6.2)	34 (6.9)	630 (31.5)
기타	9 (0.5)	1 (0.4)	1 (0.2)	8 (0.4)	1 (0.6)	2 (0.4)	7 (0.4)	0 (0.0)	2 (0.4)	14 (0.7)
계(%)	2,000 (100.0)	264 (100.0)	495 (100.0)	2,000 (100.0)	176 (100.0)	495 (100.0)	2,000 (100.0)	195 (100.0)	495 (100.0)	2,000 (100.0)



[그림 Ⅲ-17]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그림 Ⅲ-18] 중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그림 Ⅲ-19] 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5)

3)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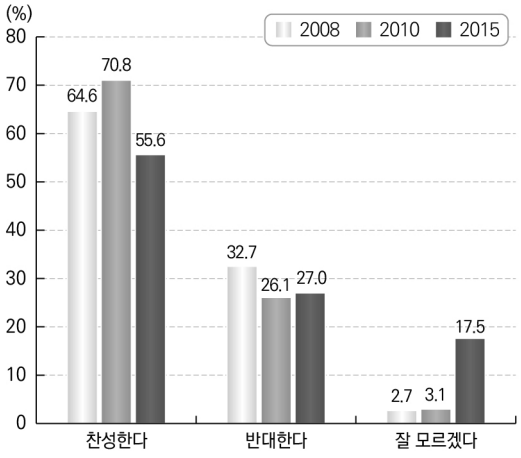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55.6%)는 의견이 반대한다(27.0%)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17.5%).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찬성한다 55.8%, 반대한다 27.9%, 잘 모르겠다 16.4%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지난 4-5차(2008, 2010년) 조사에서도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교직 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

〈표 Ⅲ-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교직 일부 개방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111 (55.6)	276 (55.8)
반대한다	540 (27.0)	138 (27.9)
잘 모르겠다	349 (17.5)	81 (16.4)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20]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2008, 2010, 2015)

3 교육과정 운영

요약

-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로 초등학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20.7%),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국사(각각 29.4%, 28.3%)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음. 이에 비해 각 학교급별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한국사(각각 20.1%, 22.7%), 고등학교에서는 영어(19.0%)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초·중학교는 인성교육(초 35.2%, 중 40.8%), 고등학교는 진로교육(28.2%)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다음 순위로 초·중학교는 민주시민교육(초 23.6%, 중 16.3%), 창의성교육(초 18.3%, 중 8.8%), 고등학교는 인성교육(22.5%), 민주시민교육(13.3%) 순임.

1)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역사/도덕 포함)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사(17.7%), 체육(14.0%), 국어(13.3%), 교양(11.6%), 예술(8.6%), 영어(6.1%), 과학(3.1%), 수학(2.2%), 한문(1.8%), 제2외국어(0.8%), 기술·가정(0.4%)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한국사(20.1%), 사회(16.3%), 체육(15.9%), 국어(12.1%), 예술(9.8%), 교양(8.3%), 영어(7.6%), 수학(3.4%), 과학(3.4%), 한문(1.9%), 제2외국어(1.1%), 기술·가정(0.0%)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사(29.4%), 사회(19.6%), 영어(10.4%), 교양(10.1%), 수학(6.7%), 체육(6.5%), 과학(4.4%), 국어(4.2%), 예술(3.3%), 한문(2.3%), 제2외국어(2.3%), 기술·가정(1.1%)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한국사(22.7%), 영어(16.5%), 수학(12.5%), 교양(11.4%), 사회(10.8%), 체육(7.4%), 국어(6.8%), 제2외국어(3.4%), 한문(2.8%), 예술(1.1%), 과학(4.0%), 기술·가정(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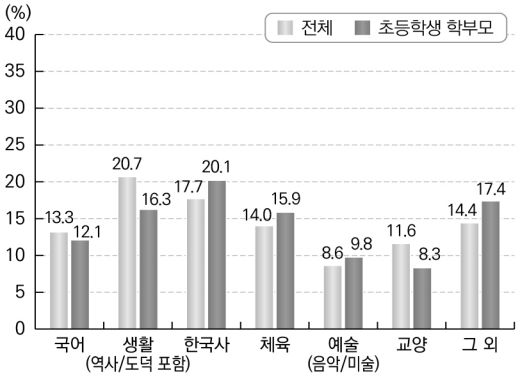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사(28.3%), 영어(15.4%), 사회(14.4%), 교양(9.5%), 수학(6.7%), 체육(5.6%), 제2외국어(5.4%), 과

학(5.1%), 국어(3.9%), 예술(3.0%), 한문(1.5%), 기술·가정(1.5%)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영어(19.0%), 한국사(16.4%), 수학(13.8%), 교양(12.3%), 사회(11.8%), 제2외국어(6.2%), 체육(5.6%), 국어(5.1%), 과학(4.6%), 예술(2.6%), 기술·가정(1.5%), 한문(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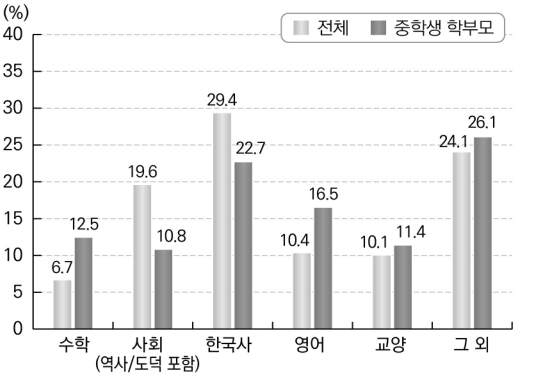
〈표 Ⅲ-10〉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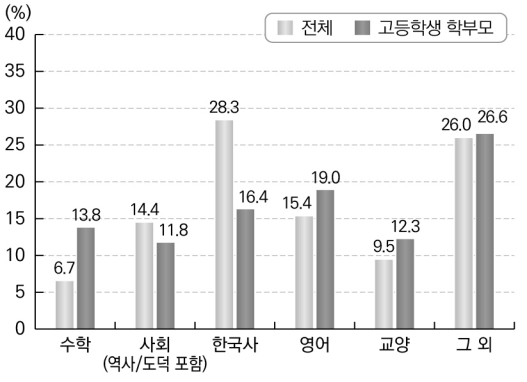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국어	266 (13.3)	32 (12.1)	83 (4.2)	12 (6.8)	77 (3.9)	10 (5.1)
수학	44 (2.2)	9 (3.4)	133 (6.7)	22 (12.5)	133 (6.7)	27 (13.8)
사회 (역사/도덕 포함)	**414 (20.7)**	43 (16.3)	391 (19.6)	19 (10.8)	288 (14.4)	23 (11.8)
한국사	354 (17.7)	**53 (20.1)**	**588 (29.4)**	**40 (22.7)**	**566 (28.3)**	32 (16.4)
과학	62 (3.1)	9 (3.4)	87 (4.4)	7 (4.0)	101 (5.1)	9 (4.6)
영어	121 (6.1)	20 (7.6)	208 (10.4)	29 (16.5)	308 (15.4)	**37 (19.0)**
제2외국어	16 (0.8)	3 (1.1)	45 (2.3)	6 (3.4)	107 (5.4)	12 (6.2)
체육	279 (14.0)	42 (15.9)	129 (6.5)	13 (7.4)	111 (5.6)	11 (5.6)
예술 (음악/미술)	171 (8.6)	26 (9.8)	66 (3.3)	2 (1.1)	60 (3.0)	5 (2.6)
기술·가정	7 (0.4)	0 (0.0)	22 (1.1)	1 (0.6)	29 (1.5)	3 (1.5)
한문	35 (1.8)	5 (1.9)	46 (2.3)	5 (2.8)	30 (1.5)	2 (1.0)
교양	231 (11.6)	22 (8.3)	202 (10.1)	20 (11.4)	190 (9.5)	24 (12.3)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20 (11.4)	2,000 (100.0)	195 (100.0)



[그림 Ⅲ-2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그림 Ⅲ-2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그림 Ⅲ-2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2015)

2)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할 교육**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35.2%), 민주시민교육(23.6%), 창의성교육(18.3%), 성교육(6.3%), 특기·적성 교육(6.1%), 안전교육(5.8%), 환경교육(2.0%), 진로교육(1.9%), 다문화교육(0.8%), 통일교육(0.3%)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인성교육(37.1%), 창의성교육(18.2%), 민주시민교육(17.8%), 성교육(8.3%), 특기·적성 교육(8.0%), 안전교육(4.5%), 진로교육(2.7%), 환경교육(2.3%), 다문화교육(1.1%), 통일교육(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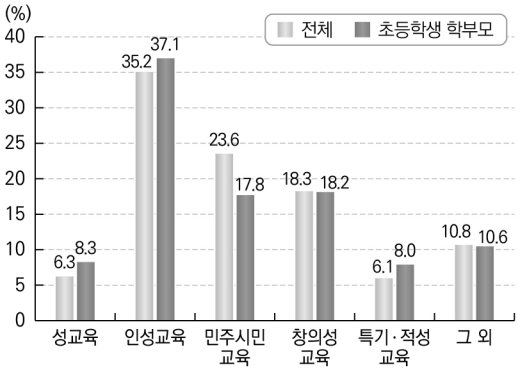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40.8%), 민주시민교육(16.3%), 성교육(12.0%), 창의성교육(8.8%), 진로교육(3.9%), 환경교육(2.2%), 안전교육(1.6%), 다문화교육(0.6%), 통일교육(0.4%)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인성교육(43.8%), 특기·적성 교육(14.2%), 민주시민교육(12.5%), 성교육(9.7%), 창의성교육(8.5%), 진로교육(8.0%), 환경교육(0.6%), 안전교육(1.7%), 다문화교육(0.6%), 통일교육(0.6%)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진로교육(28.2%), 인성교육(22.5%), 특기·적성 교육(17.2%), 민주시민교육(13.3%), 성교육(7.6%), 창의성교육(6.6%), 환경교육(2.1%), 안전교육(1.5%), 다문화교육(0.6%), 통일교육(0.7%)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진로교육(31.3%), 특기·적성 교육(20.5%), 인성교육(19.5%), 민주시민교육(12.3%), 성교육(6.7%), 창의성교육(4.1%), 안전교육(2.6%), 환경교육(1.0%), 다문화교육(1.0%), 통일교육(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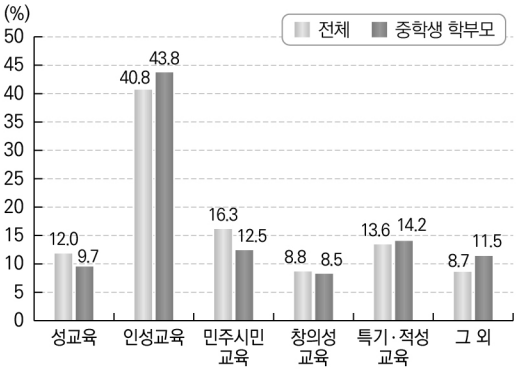
〈표 Ⅲ-1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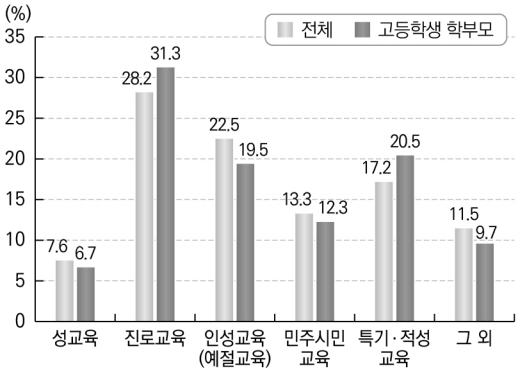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할 교육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환경교육	39 (2.0)	6 (2.3)	44 (2.2)	1 (0.6)	42 (2.1)	2 (1.0)
성교육	125 (6.3)	22 (8.3)	240 (12.0)	17 (9.7)	152 (7.6)	13 (6.7)
통일교육	5 (0.3)	0 (0.0)	7 (0.4)	1 (0.6)	13 (0.7)	2 (1.0)
진로교육	37 (1.9)	7 (2.7)	78 (3.9)	14 (8.0)	**563 (28.2)**	**61 (31.3)**
인성교육(예절교육)	**704 (35.2)**	**98 (37.1)**	**816 (40.8)**	**77 (43.8)**	449 (22.5)	38 (19.5)
민주시민교육	472 (23.6)	47 (17.8)	326 (16.3)	22 (12.5)	266 (13.3)	24 (12.3)
다문화교육	15 (0.8)	3 (1.1)	11 (0.6)	1 (0.6)	11 (0.6)	2 (1.0)
창의성교육	365 (18.3)	48 (18.2)	175 (8.8)	15 (8.5)	132 (6.6)	8 (4.1)
안전교육	116 (5.8)	12 (4.5)	32 (1.6)	3 (1.7)	29 (1.5)	5 (2.6)
특기·적성교육	122 (6.1)	21 (8.0)	271 (13.6)	25 (14.2)	343 (17.2)	40 (20.5)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176 (100.0)	2,000 (100.0)	195 (100.0)



[그림 Ⅲ-24]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그림 Ⅲ-25] 중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그림 Ⅲ-26]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5)

4 학생 생활

요약

- 초·중등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중독성은 높다고 봄(평균 4.21, 높다+매우 높다 85.3%). 학교급별로는 중학교(평균 4.29, 87.5%), 고등학교(평균 4.23, 84.1%), 초등학교(평균 4.03, 7.2%) 순임.
- 학업, 경쟁으로 인한 초·중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도 높다고 봄(평균 4.09, 높다+매우 높다 83.5%).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평균 4.54, 91.7%), 중학교(평균 4.09, 84.0%), 초등학교(평균 3.63, 56.5%) 순임.
- 초·중등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대체로 낮다는 의견이 높으나(평균 2.46, 낮다+매우 낮다 51.5%). 이전 조사 결과(8차 2.05, 9차 2.23)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평균 2.67, 보통 43.3%), 중학교(평균 2.31, 낮다+매우 낮다 60.9%), 고등학교(평균 2.28, 낮다+매우 낮다 60.8%) 순임.
-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대다수가 가정(83.5%)에 있다고 응답함.
- 학교폭력은 대체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으나(평균 2.36, 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0.5%), 이전 조사 결과(8차 2.14, 9차 2.24)에 비해 다소 상승함.
-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정교육의 부재(36.7%), 대중매체의 폭력성(19.2%),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17.5%) 순임.
- 학칙 제·개정 시 가장 우선 반영되어야 할 의견은 학생(41.6%), 교사(30.5%), 학부모(20.8%), 교장·교감(5.4%) 순임.
- 학생 훈육을 위한 교육벌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며(80.7%),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높음(찬성 50.4%, 반대 38.0%).
-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학부모(37.6%), 교사(31.9%), 친구(27.3%) 순이며,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19.1%)과 학부모의 교육관(12.2%) 보다는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68.6%)에 있다고 응답함.
-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EBS 수능 연계(22.9%), 방과후 학교 운영(14.7%), 대입전형 간소화(14.4%),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 도입(14.0%) 등의 순이며, 선행학습 금지 정책(8.5%),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5.2%),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5.1%),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3.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

가. 학생의 삶과 건강

1)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질문〉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중독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5.7%, 보통이라는 의견이 12.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8%를 나타내었다(평균 4.21/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5.3%, 보통이라는 의견이 12.9%, 낮다(낮다+매우 낮다)가 1.8%를 나타내었다.

초등학교 학생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중독성 정도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77.2%, 보통이라는 의견이 20.4%,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5%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74.2%, 보통이라는 의견이 21.2%,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4.5%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76.8%, 보통이라는 의견이 20.2%,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3.0%를 나타내었다.

중학교 학생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중독성 정도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7.5%, 보통이라는 의견이 10.8%,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8%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90.9%, 보통이라는 의견이 8.0%,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1%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8.1%, 보통이라는 의견이 9.1%, 낮다(낮다+ 매우 낮다)는 의견이 2.8%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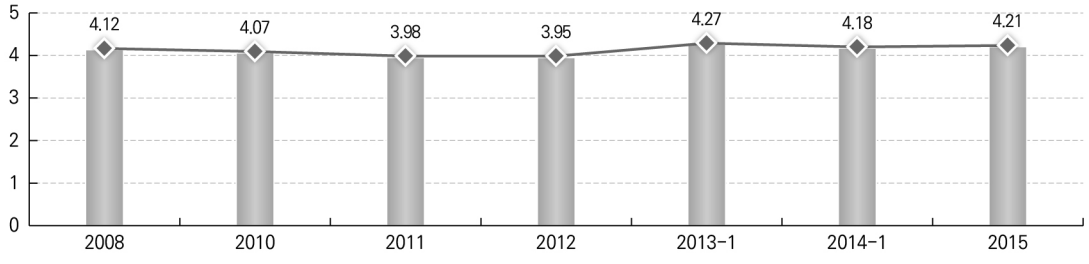
고등학교 학생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중독성 정도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4.1%, 보통이라는 의견이 13.9%,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1%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0.5%, 보통이라는 의견이 16.9%,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6%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1.0%, 보통이라는 의견이 16.6%,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4%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중독성 정도에 대해 처음 조사를 실시한 4차(2008년) 조사부터 10차 조사까지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5-4.27/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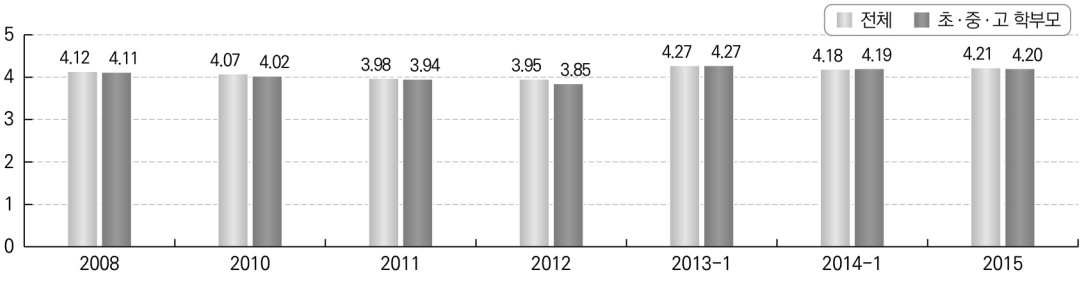
〈표 Ⅲ-12〉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2015)

(단위 : 명(%))

IT 관련 기기 중독성	2015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매우 높다	748 (37.4)	180 (36.4)	563 (28.2)	65 (24.6)	135 (27.3)	869 (43.5)	77 (43.8)	**219 (44.2)**	831 (41.6)	**85 (43.6)**	**207 (41.8)**
높다	**966 (48.3)**	**242 (48.9)**	**979 (49.0)**	**131 (49.6)**	**245 (49.5)**	**880 (44.0)**	**83 (47.2)**	217 (43.8)	**850 (42.5)**	72 (36.9)	194 (39.2)
보통이다	250 (12.5)	64 (12.9)	408 (20.4)	56 (21.2)	100 (20.2)	215 (10.8)	14 (8.0)	45 (9.1)	277 (13.9)	33 (16.9)	82 (16.6)
낮다	34 (1.7)	9 (1.8)	47 (2.4)	12 (4.5)	15 (3.0)	33 (1.7)	2 (1.1)	13 (2.6)	38 (1.9)	4 (2.1)	11 (2.2)
매우 낮다	2 (0.1)	0 (0.0)	3 (0.2)	0 (0.0)	0 (0.0)	3 (0.2)	0 (0.0)	1 (0.2)	4 (0.2)	1 (0.5)	1 (0.2)
잘 모르겠다	-	-	-	-	-	-	-	-	-	-	-
계(%)	2,000 (100)	495 (100.0)	2,000 (100)	264 (100.0)	495 (100.0)	2,000 (100)	176 (100.0)	495 (100.0)	2,000 (100.0)	195 (100.0)	495 (100.0)
평균 (표준편차)	4.21 (0.730)	4.20 (0.726)	4.03 (0.770)	3.94 (0.800)	4.01 (0.773)	4.29 (0.733)	4.34 (0.673)	4.29 (0.756)	4.23 (0.770)	4.21 (0.832)	4.20 (0.807)



[그림 Ⅲ-27] IT 관련 기기 중독(전체)(2008-2015)



[그림 Ⅲ-28] IT 관련 기기 중독(2008-2015)

2)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질문〉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집단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3.5%, 보통이라는 의견이 15.3%,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2%를 나타내었다(평균 4.09/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2.4%, 보통이라는 의견이 16.4%,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2%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이 느끼는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전체 집단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56.5%, 보통이라는 의견이 37.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6.1%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53.8%, 보통이라는 의견이 41.7%,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4.5%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53.5%, 보통이라는 의견이 40.8%,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5.7%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이 느끼는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전체 집단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4.0%, 보통이라는 의견이 13.9%,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1%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8.1%, 보통이라는 의견이 10.2%,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7%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6.1%, 보통이라는 의견이 11.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4%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이 느끼는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전체 집단의 경우 높다(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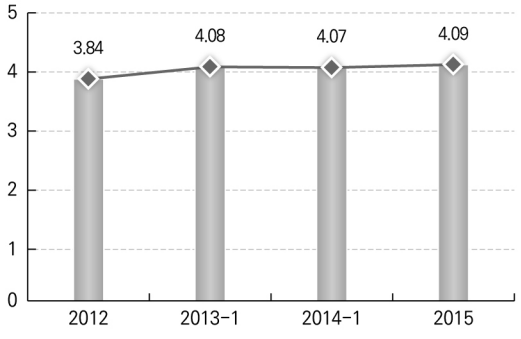
높다+높다)는 의견이 91.7%, 보통이라는 의견이 7.0%,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3%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92.8%, 보통이라는 의견이 5.6%,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1.5%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90.5%, 보통이라는 의견이 6.7%, 낮다(낮다+ 매우 낮다)는 의견이 2.8%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7-10차(2012-2015년) 조사에서 꾸준히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4-4.09/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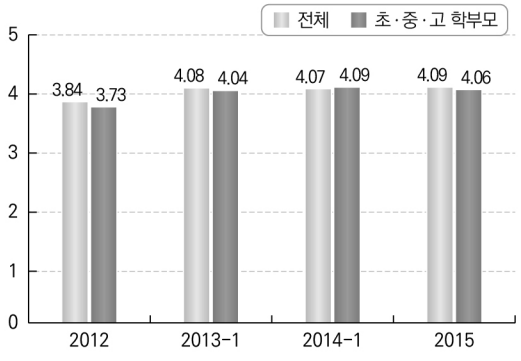
〈표 Ⅲ-13〉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 명(%))

학업·경쟁 스트레스	2015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매우 높다	544 (27.2)	125 (25.3)	269 (13.5)	32 (12.1)	68 (13.7)	545 (27.3)	62 (35.2)	146 (29.5)	**1,282 (64.1)**	**143 (73.3)**	**332 (67.1)**
높다	**1,126 (56.3)**	**283 (57.2)**	**860 (43.0)**	**110 (41.7)**	197 (39.8)	**1,135 (56.8)**	**93 (52.8)**	**280 (56.6)**	552 (27.6)	38 (19.5)	116 (23.4)
보통이다	306 (15.3)	81 (16.4)	749 (37.5)	**110 (41.7)**	**202 (40.8)**	278 (13.9)	18 (10.2)	57 (11.5)	140 (7.0)	11 (5.6)	33 (6.7)
낮다	22 (1.1)	5 (1.0)	112 (5.6)	10 (3.8)	26 (5.3)	41 (2.1)	3 (1.7)	11 (2.2)	25 (1.3)	2 (1.0)	13 (2.6)
매우 낮다	2 (0.1)	1 (0.2)	10 (0.5)	2 (0.8)	2 (0.4)	1 (0.1)	0 (0.0)	1 (0.2)	1 (0.1)	1 (0.5)	1 (0.2)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64 (100.0)	495 (100.0)	2,000 (100.0)	176 (100.0)	495 (100.0)	2,000 (100.0)	195 (100.0)	495 (100.0)
평균 (표준편차)	4.09 (0.685)	4.06 (0.687)	3.63 (0.802)	3.61 (0.778)	3.61 (0.802)	4.09 (0.700)	4.22 (0.692)	4.13 (0.708)	4.54 (0.685)	4.64 (0.684)	4.55 (0.751)



[그림 Ⅲ-29] 학생의 스트레스(전체)(2012-2015)



[그림 Ⅲ-30] 학생의 스트레스(2012-2015)

3)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질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7.9%, 보통이라는 의견이 40.7%,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51.5%를 나타내었다(평균 2,46/5점 만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10.5%, 보통이라는 의견이 45.1%, 낮다(낮다+ 매우 낮다)는 의견이 44.4%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16.1%, 보통이라는 의견이 43.3%,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40.7%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26.1%, 보통이라는 의견이 46.6%,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24.3%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20.0%, 보통이라는 의견이 45.7%,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32.4%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7.7%, 보통이라는 의견이 31.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60.9%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13.5%, 보통이라는 의견이 41.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45.5%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11.1%, 보통이라는 의견이 33.9%, 낮다(낮다+ 매우 낮다)는 의견이 54.9%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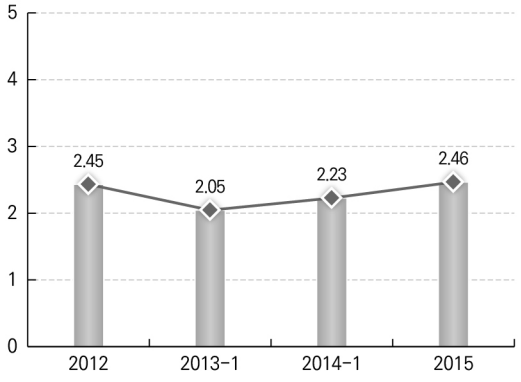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7%, 보통이라는 의견이 30.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60.8%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2%, 보통이라는 의견이 32.8%,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59.0%이었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매우 높다 +높다)는 의견이 11.1%, 보통이라는 의견이 33.5%,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55.4%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7-10차(2012-2015년) 조사에서 낮다(낮다+매우 낮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가운데 평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 8차 2.05 → 9차 2.23 → 10차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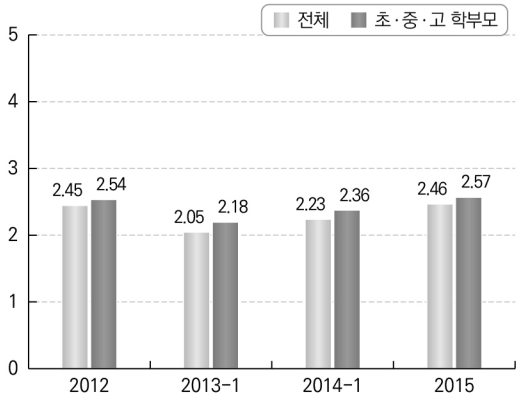
〈표 Ⅲ-14〉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2015)

(단위 : 명(%))

인성·도덕성 수준	2015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매우 높다	14 (0.7)	4 (0.8)	32 (1.6)	12 (4.5)	17 (3.4)	27 (1.4)	4 (2.3)	9 (1.8)	19 (1.0)	2 (1.0)	6 (1.2)
높다	143 (7.2)	48 (9.7)	289 (14.5)	57 (21.6)	82 (16.6)	126 (6.3)	19 (10.8)	46 (9.3)	155 (7.8)	14 (7.2)	49 (9.9)
보통이다	**813 (40.7)**	**223 (45.1)**	**866 (43.3)**	**123 (46.6)**	**226 (45.7)**	629 (31.5)	**73 (41.5)**	168 (33.9)	610 (30.5)	64 (32.8)	166 (33.5)
낮다	810 (40.5)	171 (34.5)	619 (31.0)	61 (23.1)	125 (25.3)	**885 (44.3)**	51 (29.0)	**183 (37.0)**	**814 (40.7)**	**71 (36.4)**	**180 (36.4)**
매우 낮다	220 (11.0)	49 (9.9)	194 (9.7)	11 (4.2)	45 (9.1)	333 (16.7)	29 (16.5)	89 (18.0)	402 (20.1)	44 (22.6)	94 (19.0)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64 (100.0)	495 (100.0)	2,000 (100.0)	176 (100.0)	495 (100.0)	2,000 (100.0)	195 (100.0)	495 (100.0)
평균 (표준편차)	2.46 (0.81)	2.57 (0.83)	2.67 (0.89)	2.99 (0.89)	2.80 (0.94)	2.31 (0.87)	2.53 (0.97)	2.40 (0.95)	2.29 (0.95)	2.28 (0.93)	2.38 (0.94)



[그림 Ⅲ-31] 학생의 인성·도덕성(전체)(2012-2015)



[그림 Ⅲ-32] 학생의 인성·도덕성(2012-2015)

4)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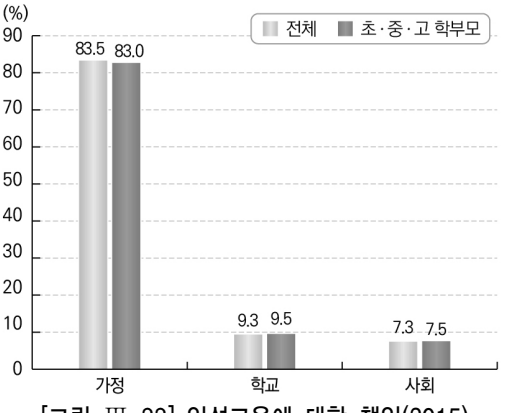
〈질문〉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10차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다.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가정(83.5%), 학교(9.3%), 사회(7.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또한 가정(83.0%), 학교(9.5%), 사회(7.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5〉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2015)

(단위 : 명(%))

인성교육의 책임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가정	1,670 (83.5)	411 (83.0)
학교	185 (9.3)	47 (9.5)
사회	145 (7.3)	37 (7.5)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33]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2015)

5) 학교폭력 완화 노력

〈질문〉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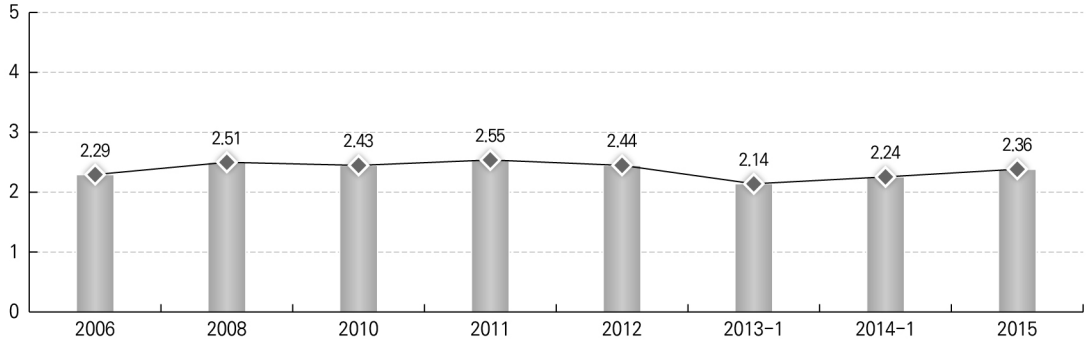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12.0%, 보통이다 27.6%,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0.5%를 나타내었다(평균 2.36/5점 만점). 이처럼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은 학교폭력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14.5%, 보통이다 32.5%,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52.9%를 나타내었지만, 전체집단보다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3차(2006년) 조사부터 학교폭력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온라인 조사인 8-9차 조사 결과에 비해 이번 10차 조사 결과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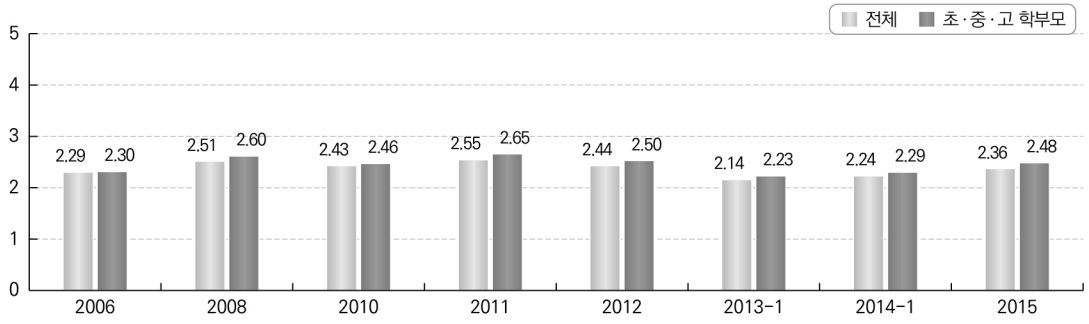
〈표 Ⅲ-16〉 학교폭력 완화 노력(2013-2015)

(단위 : 명(%))

학교폭력 완화 노력	2015		2014		2013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그렇다	30 (1.5)	5 (1.0)	17 (0.9)	3 (0.6)	8 (0.4)	0 (0.0)
그렇다	209 (10.5)	67 (13.5)	167 (8.4)	49 (9.2)	155 (7.8)	56 (11.2)
보통이다	552 (27.6)	161 (32.5)	483 (24.2)	151 (28.4)	396 (19.8)	100 (19.9)
그렇지 못하다	**878 (43.9)**	**189 (38.2)**	**884 (44.2)**	**220 (41.4)**	**982 (49.1)**	**248 (49.4)**
전혀 그렇지 못하다	331 (16.6)	73 (14.7)	401 (20.1)	106 (19.9)	445 (22.3)	98 (19.5)
잘 모르겠다	–	–	48 (2.4)	3 (0.6)	14 (0.7)	0 (0.0)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532 (100.0)	2,000 (100.0)	502 (100.0)
평균(표준편차)	**2.36 (0.928)**	2.48 (0.937)	**2.24 (0.904)**	2.29 (0.909)	**2.14 (0.867)**	2.23 (0.889)



[그림 Ⅲ-34] 학교폭력 완화 노력(전체)(2006-2015)



[그림 Ⅲ-35] 학교폭력 완화 노력(2006-2015)

6) 학교폭력의 원인

〈질문〉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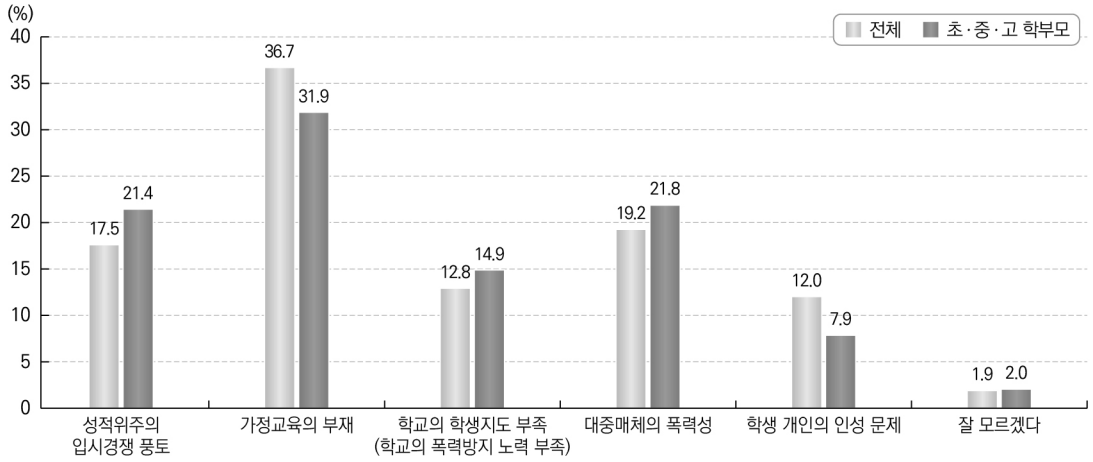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36.7%), 대중매체의 폭력성(19.2%),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17.5%),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12.8%),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12.0%), 잘 모르겠다(1.9%)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가정교육의 부재(31.9%), 대중매체의 폭력성(21.8%),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21.4%),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14.9%),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7.9%), 잘 모르겠다(2.0%) 순으로 나타났다.

7-8차(2012-2013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던 데 비해 지난해부터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제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Ⅲ-17〉 학교폭력의 원인(2012-2015)

(단위 : 명(%))

학교폭력의 원인	2015		2014	2013	2012
	전체	초·중·고 학부모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349 (17.5)	106 (21.4)	228 (11.4)	225 (11.3)	139 (7.7)
가정교육의 부재	**733 (36.7)**	**158 (31.9)**	**691 (34.6)**	625 (31.3)	438 (24.3)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256 (12.8)	74 (14.9)	437 (21.9)	392 (19.6)	425 (23.6)
대중매체의 폭력성	384 (19.2)	108 (21.8)	488 (24.4)	**641 (32.1)**	**676 (37.6)**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240 (12.0)	39 (7.9)	110 (5.5)	104 (5.2)	121 (6.7)
잘 모르겠다	38 (1.9)	10 (2.0)	46 (2.3)	13 (0.7)	1 (0.1)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그림 Ⅲ-36] 학교폭력의 원인(2015)

7)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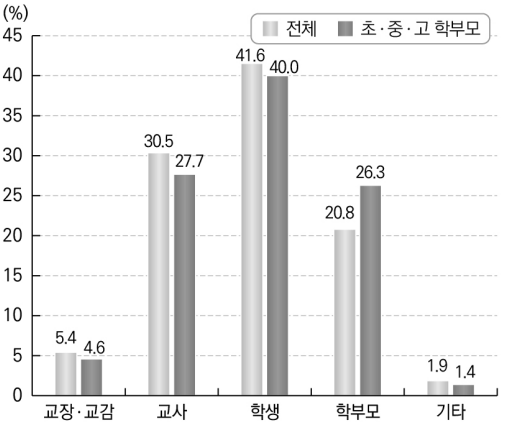
〈질문〉 초·중·고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10차 조사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 41.6%, 교사 30.5%, 학부모 20.8%, 교장·교감 5.4%, 기타 1.9% 순으로 학생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학생(40.0%), 교사(27.7%), 학부모(26.3%), 교장·교감(4.6%),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단위 : 명(%))

학칙 제·개정 시 우선 주체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장·교감	108 (5.4)	23 (4.6)
교사	609 (30.5)	137 (27.7)
학생	**831 (41.6)**	**198 (40.0)**
학부모	415 (20.8)	130 (26.3)
기타	37 (1.9)	7 (1.4)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37]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8)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훈육을 위해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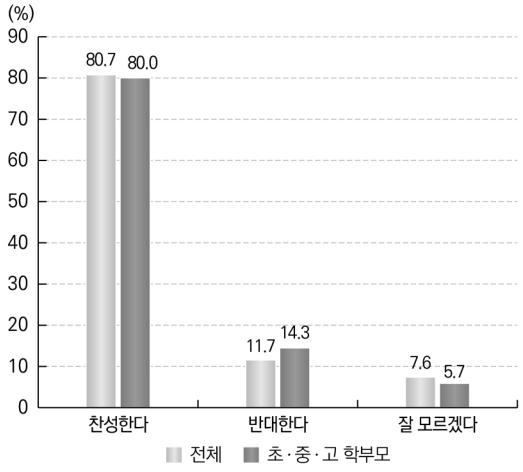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훈육을 위해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80.7%, 반대한다 11.7%, 잘 모르겠다 7.6%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한다 80.0%, 반대한다 14.3%, 잘 모르겠다 5.7%를 나타내었다.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은 6차(2011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체벌을 대체하는 훈육수단으로 교육벌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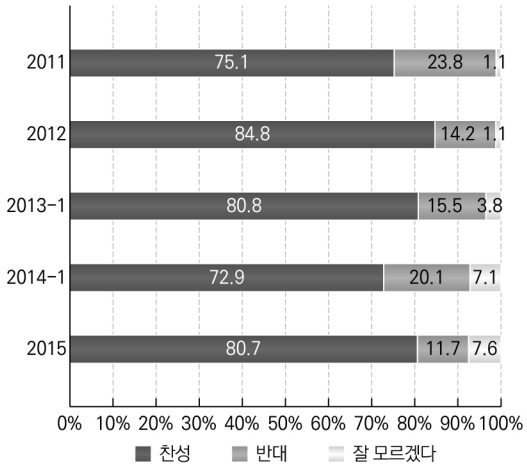
〈표 Ⅲ-19〉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2-2015)

(단위 : 명(%))

교육벌	2015		2014	2013	2012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614 (80.7)**	**396 (80.0)**	**1,615 (80.8)**	**1,526 (84.8)**	**1,127 (75.1)**
반대한다	234 (11.7)	71 (14.3)	310 (15.5)	255 (14.2)	357 (23.8)
잘 모르겠다	152 (7.6)	28 (5.7)	75 (3.8)	19 (1.1)	16 (1.1)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38]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5)



[그림 Ⅲ-39] 교육벌에 대한 찬반의견(2011-2015)

나. 학생의 학업활동

1)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학생의 성적에 따라 교과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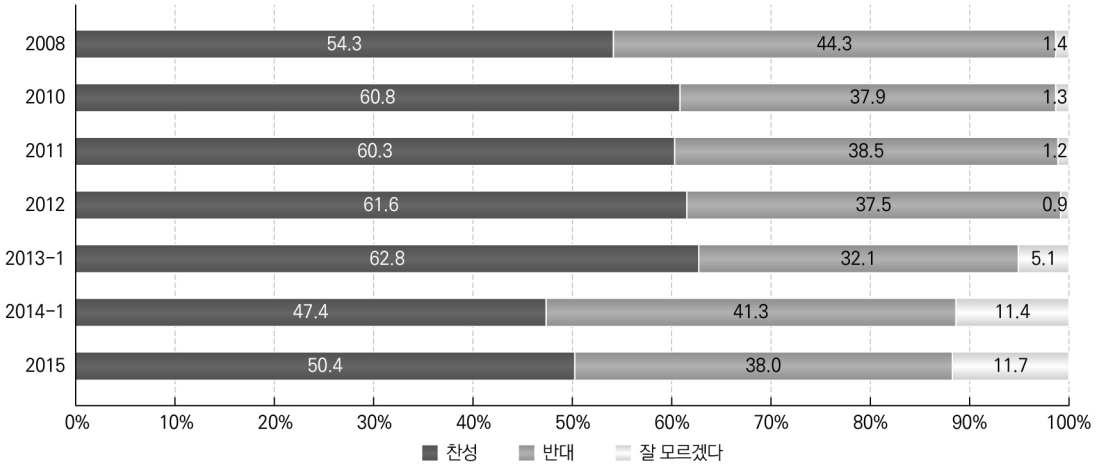
학생의 성적에 따라 교과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50.4%, 반대한다 38.0%, 잘 모르겠다 11.7%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한다 49.3%, 반대한다 39.4%, 잘 모르겠다 11.3%를 나타내었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은 4차(20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9-10차 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2012-2015)

(단위 : 명(%))

수준별 수업	2015		2014	2013	2012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007 (50.4)	244 (49.3)	948 (47.4)	1,256 (62.8)	1,109 (61.6)
반대한다	759 (38.0)	195 (39.4)	825 (41.3)	642 (32.1)	675 (37.5)
잘 모르겠다	234 (11.7)	56 (11.3)	227 (11.4)	102 (5.1)	16 (0.9)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그림 Ⅲ-4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2008-2015)

2)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

〈질문〉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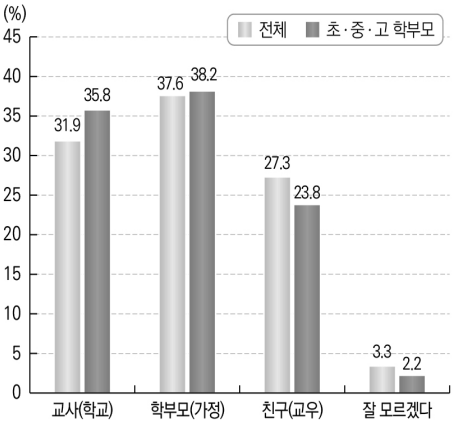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부모 37.6%, 교사 31.9%, 친구 27.3%, 잘 모르겠다 3.3%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 경우도 학부모(38.2%), 교사(35.8%), 친구(23.8%), 잘 모르겠다(2.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6차(2011년) 조사에서만 교사(학교)라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7차(2012) 조사 이후 학부모(가정)라는 응답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2011-2015)

(단위 : 명(%))

학업성취 영향 요인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사 (학교)	638 (31.9)	177 (35.8)	887 (44.4)	695 (34.8)	878 (48.8)	**813 (54.2)**
학부모 (가정)	**751 (37.6)**	**189 (38.2)**	**997 (49.9)**	**1,228 (61.4)**	**897 (49.8)**	638 (42.5)
친구 (교우)	545 (27.3)	118 (23.8)	-	-	-	-
잘 모르겠다	66 (3.3)	11 (2.2)	116 (5.8)	77 (3.9)	25 (1.4)	49 (3.3)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41]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2015)

다. 사교육

1) 사교육의 근본 원인

〈질문〉 다음 중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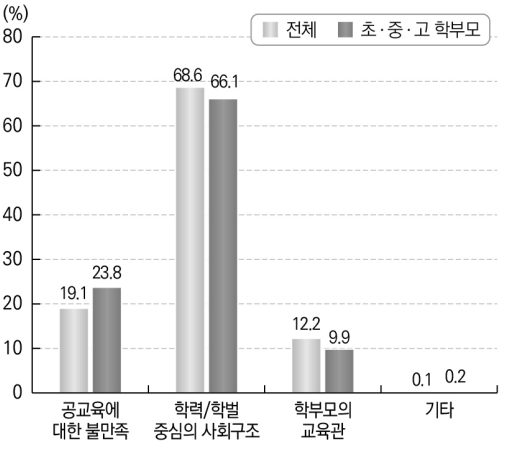
이 문항은 10차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물어본 문항이다.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68.6%),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19.1%), 학부모의 교육관(12.2%), 기타(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66.1%),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23.8%), 학부모의 교육관(9.9%),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결과로 볼 때 일반국민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해소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2〉 사교육의 근본 원인(2015)

(단위 : 명(%))

사교육의 근본 원인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382 (19.1)	118 (23.8)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1,372 (68.6)**	**327 (66.1)**
학부모의 교육관	244 (12.2)	49 (9.9)
기타	2 (0.1)	1 (0.2)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42] 사교육의 근본 원인(2015)

2)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질문〉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EBS 수능 연계(22.9%), 방과후 학교 운영(14.7%), 대입전형 간소화(14.4%),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 도입(14.0%),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9.6%), 선행학습 금지 정책(8.5%),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5.2%),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5.1%),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3.5%),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EBS 수능 연계(22.8%), 방과후 학교 운영(16.8%), 대입전형 간소화(13.3%),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 도입(12.3%), 선행학습 금지 정책(10.7%),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7.7%),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6.3%),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5.7%),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2.2%), 기타(2.2%) 순으로 나타났다.

6-8차(2011-2013년) 조사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꼽은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2순위로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을 꼽았는데 10차 조사에서는 EBS 수능 연계를 1순위로 꼽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표 Ⅲ-23〉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1-2015)

(단위 : 명(%))

사교육비 경감 정책	2015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방과후 학교 운영	293 (14.7)	83 (16.8)	515 (25.8)	598 (33.2)	468 (31.2)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192 (9.6)	38 (7.7)	438 (21.9)	548 (30.4)	467 (31.1)
EBS 수능 연계(70% 이상)	458 (22.9)	113 (22.8)	-	-	-
교원능력개발 평가도입	-	-	175 (8.8)	155 (8.6)	177 (11.8)
선행학습 금지 정책	169 (8.5)	53 (10.7)	-	-	-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104 (5.2)	28 (5.7)	84 (4.2)	110 (6.1)	59 (3.9)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	101 (5.1)	31 (6.3)	136 (6.8)	122 (6.8)	106 (7.1)
(특목고 및 자율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 도입	279 (14.0)	61 (12.3)	132 (6.6)	69 (3.8)	55 (3.7)
대입전형 간소화	287 (14.4)	66 (13.3)	-	-	-
대학입학사정 전형방식 도입	-	-	75 (3.8)	61 (3.4)	33 (2.2)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	-	-	428 (21.4)	131 (7.3)	132 (8.8)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69 (3.5)	11 (2.2)	-	-	-
기타	48 (2.4)	11 (2.2)	17 (0.9)	6 (0.3)	2 (0.1)
모름/무응답	-	-	0 (0.0)	0 (0.0)	1 (0.1)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3)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질문〉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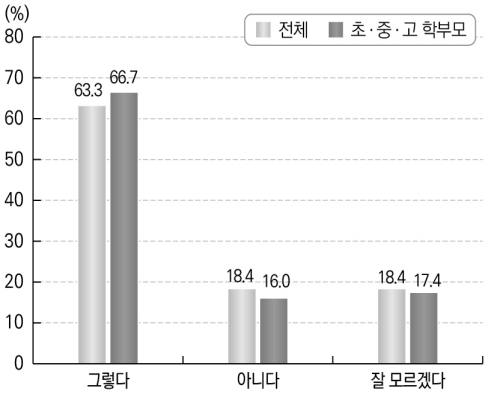
이 문항은 10차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다.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다 63.3%, 그렇지 않다 18.4%, 잘 모르겠다 18.4%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그렇다 66.7%, 그렇지 않다 16.0%, 잘 모르겠다 17.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에서 1순위로 이 정책이 선택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교육방송', '수능', '연계정책', '사교육비', '정부', '지역' 등의 단어가 연결중심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방송(EBS)과의 연계정책을 통한 수능 문제의 출제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부록 5] 참조).

〈표 Ⅲ-24〉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EBS 수능 연계 정책 유지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그렇다	1,265 (63.3)	330 (66.7)
아니다	368 (18.4)	79 (16.0)
잘 모르겠다	367 (18.4)	86 (17.4)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43] EBS 수능 연계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2015)

5 고교 정책 및 대입

요약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의 비율이 높으며(찬성 62.6%, 반대 26.8%),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의 비율이 높음(찬성 63.5%, 반대 27.6%).
-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찬성 46.3%)의 비율이 약간 높으나 반대의견(41.5%)의 비율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특히, 초·중·고 학부모 집단은 반대의견이 높음(찬성 43.8%, 반대 47.7%).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5.2%), 인성 및 봉사활동(24.0%), 특기·적성(22.7%), 고교 내신 성적(21.8%) 순임. 면접(4.6%)과 글쓰기·논술(1.4%)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임.
- 향후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에 대해서는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42.7%)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고, 다음은 큰 변화 없을 것(34.8%)이라는 예상임.

가. 고교 진학 및 학교유형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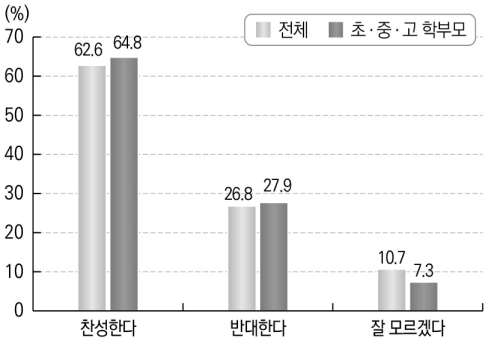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찬반의견이 대립해온 주제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62.6%, 반대한다 26.8%, 잘 모르겠다 10.7%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찬성한다 64.8%, 반대한다 27.9%, 잘 모르겠다 7.3%를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조사는 1차(1999년) 조사부터 빠짐없이 실시되었는데, 모든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2001년)와 4-7차(2008-2012년) 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도 찬성이 반대의견보다 두 배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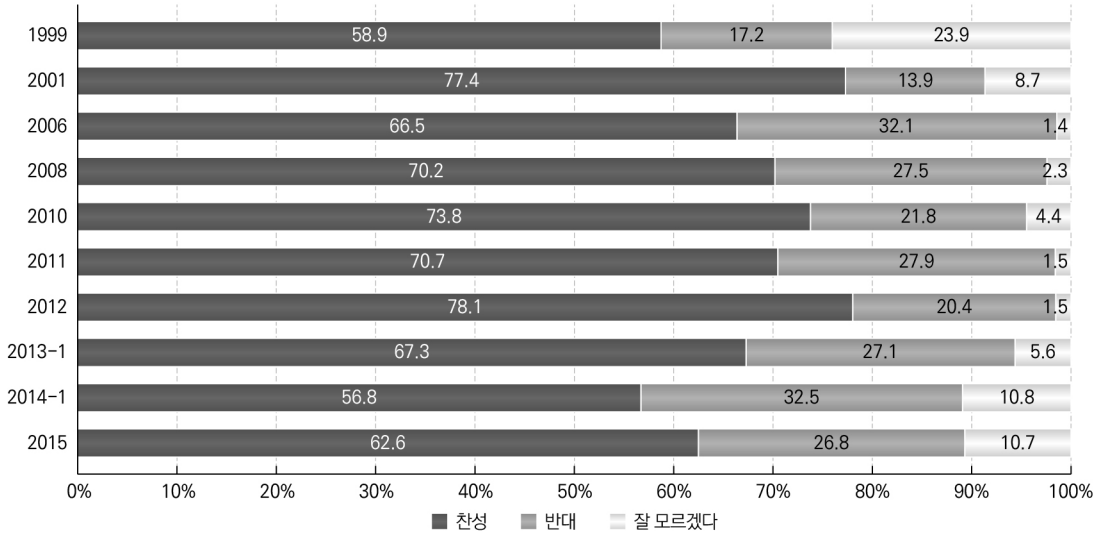
〈표 Ⅲ-2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단위 : 명(%))

고교 평준화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251 (62.6)	321 (64.8)
반대한다	535 (26.8)	138 (27.9)
잘 모르겠다	214 (10.7)	36 (7.3)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44]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그림 Ⅲ-4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1999-2015)

2)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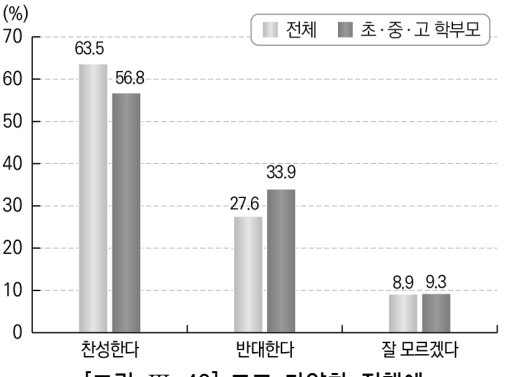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63.5%, 반대한다 27.6%, 잘 모르겠다 8.9%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또한 찬성한다 56.8%, 반대한다 33.9%, 잘 모르겠다 9.3%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응답자보다는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10차(2010-2015년) 조사에서 실시한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가운데 최근에 와서 찬성의견 비율이 조사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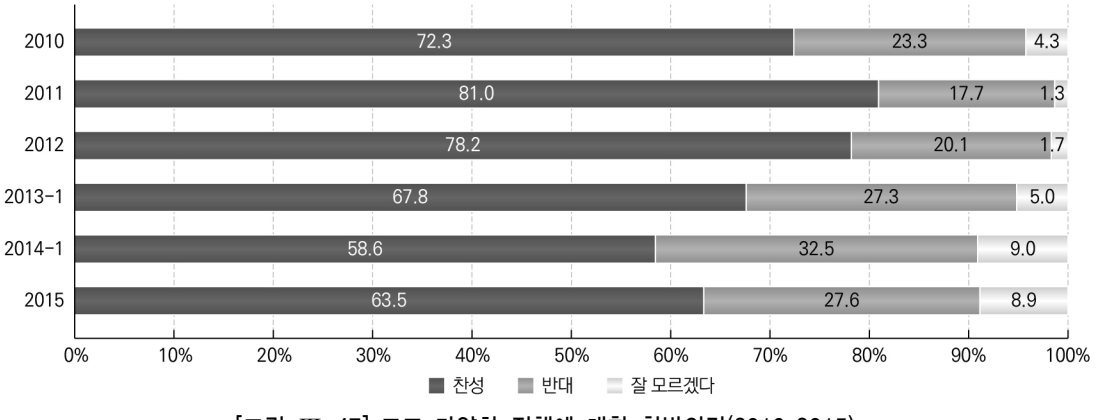
〈표 Ⅲ-2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단위 : 명(%))

고교 다양화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270 (63.5)	281 (56.8)
반대한다	552 (27.6)	168 (33.9)
잘 모르겠다	178 (8.9)	46 (9.3)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4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5)



[그림 Ⅲ-47]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2010-2015)

3)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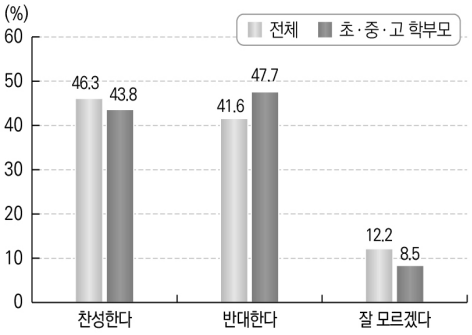
〈질문〉 일부 **고등학교가 지원자의 성적 또는 학업능력에 따라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에 학교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가 지원자의 성적 또는 학업능력에 따라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찬성한다 46.3%, 반대한다 41.6%, 잘 모르겠다 12.2%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으나,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는 찬성한다 43.8%, 반대한다 47.7%, 잘 모르겠다 8.5%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7〉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2015)

(단위 : 명(%))

성적 및 학업능력에 따른 신입생 자체 선발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925 (46.3)**	217 (43.8)
반대한다	831 (41.6)	**236 (47.7)**
잘 모르겠다	244 (12.2)	42 (8.5)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48]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2015)

나. 대학입시

1)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질문〉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5.2%), 인성 및 봉사활동(24.0%), 특기·적성(22.7%), 고교 내신 성적(21.8%), 면접(4.6%), 글쓰기·논술(1.4%), 기타(0.5%)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6.7%), 고교 내신 성적(25.7%), 인성 및 봉사활동(21.4%), 특기·적성(20.4%), 면접(3.8%), 글쓰기·논술(1.8%),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32.2%), 고교 내신 성적(25.9%), 인성 및 봉사활동(20.6%), 특기·적성(18.5%), 면접(1.4%), 글쓰기·논술(1.0%), 기타(0.3%) 순으로 나타나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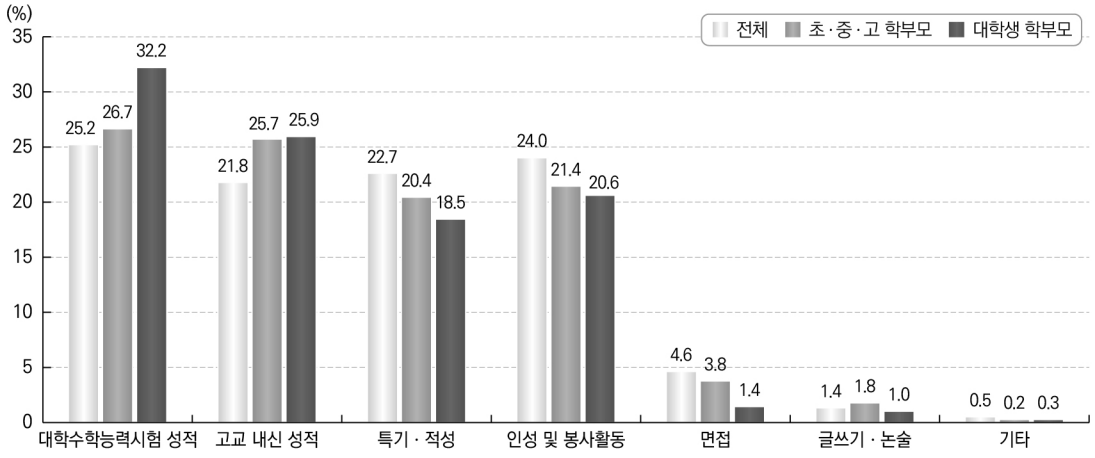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6-7차(2011-2012년) 조사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6차 28.7%, 7차 35.0%)을, 8차(2013년) 조사에서는 인성 및 봉사활동(27.9%)을, 9차(2014년) 조사에서는 특기·적성(32.7%)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차 조사에서는 수능 성적을 선택한 의견이 고교 내신 성적을 미세하게 앞섰다.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교육'이 핵심어로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대입전형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논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부록 5] 참조), 그런 만큼 사교육의 영향이 큰 면접, 글쓰기·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Ⅲ-2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5)

(단위 : 명(%))

대학입학 전형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3 (25.2)**	**132 (26.7)**	**92 (32.2)**	**461 (23.1)**	476 (23.8)	**382 (25.5)**	364 (20.2)
고교 내신 성적	435 (21.8)	**127 (25.7)**	**74 (25.9)**	364 (18.2)	391 (19.6)	**525 (35.0)**	**517 (28.7)**
특기·적성	454 (22.7)	101 (20.4)	53 (18.5)	**654 (32.7)**	**525 (26.3)**	359 (23.9)	**499 (27.7)**
인성 및 봉사활동	**479 (24.0)**	106 (21.4)	59 (20.6)	437 (21.9)	**557 (27.9)**	186 (12.4)	332 (18.4)
면접	92 (4.6)	19 (3.8)	4 (1.4)	71 (3.6)	46 (2.3)	45 (3.0)	79 (4.4)
글쓰기·논술	28 (1.4)	9 (1.8)	3 (1.0)	13 (0.7)	5 (0.3)		
기타	9 (0.5)	1 (0.2)	1 (0.3)	–	–	1 (0.1)	0 (0.0)
모름/무응답	–	–	–	–	–	2 (0.1)	9 (0.5)
계(%)	2,000 (100.0)	495 (100.0)	286 (1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800 (100.0)



[그림 Ⅲ-49]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5)

2)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질문〉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향후 고졸자가 대학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의 전망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5.6%,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42.7%, 큰 변화 없을 것이다 34.8%,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15.2%, 잘 모르겠다 1.7%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경우 집단별 차이를 응답자별 학력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2.9%,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32.4%, 큰 변화 없을 것이다 47.1%,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8.8%, 잘 모르겠다 8.8%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6.4%,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32.3%, 큰 변화 없을 것이다 38.3%,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19.7%), 잘 모르겠다 3.3%로 나타나 두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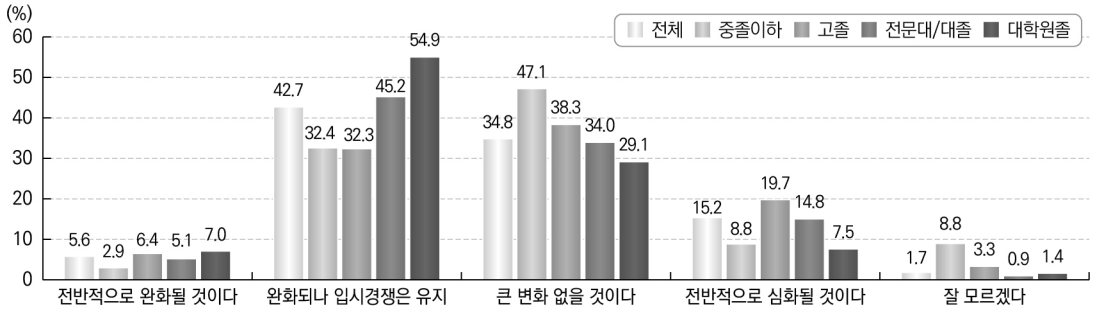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5.1%,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45.2%, 큰 변화 없을 것이다 34.0%,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14.8%, 잘 모르겠다 0.9%이었고, 대학원졸 집단도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7.0%,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54.9%, 큰 변화 없을 것이다 29.1%,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7.5%,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나 전체응답자와 같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대졸미만 학력자와 대졸이상 학력자간의 대입경쟁에 대한 예측이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의 전망에 대해 6-7차(2011-2012년) 조사에서는 큰 변화 없을 것(6차 42.6%, 7차 45.2%)이라는 의견이, 8-9차(2013-2014년) 조사에서는 10차 조사와 동일하게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8차 36.3%, 9차 36.2%)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9차 조사에서는 큰 변화 없을 것(8차 36.0%, 9차 35.3%)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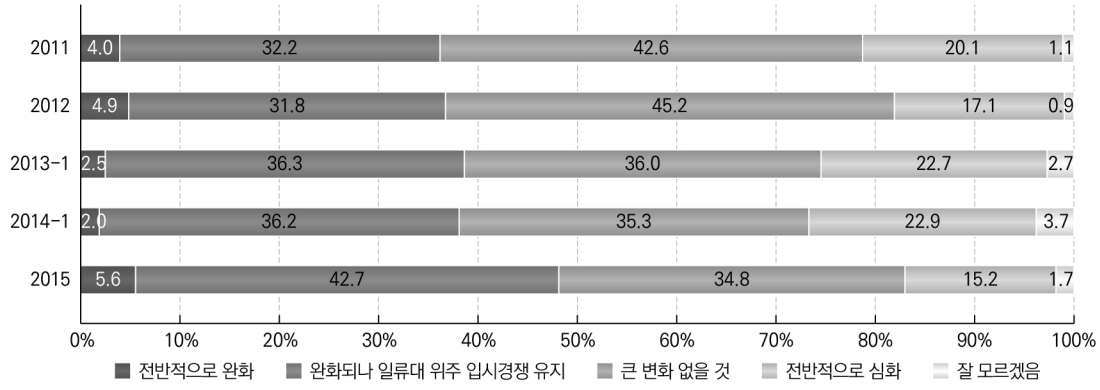
〈표 Ⅲ-29〉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5)

(단위 : 명(%))

입시경쟁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 졸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112 (5.6)	1 (2.9)	33 (6.4)	63 (5.1)	15 (7.0)	39 (2.0)	50 (2.5)	88 (4.9)	60 (4.0)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854 (42.7)**	11 (32.4)	167 (32.3)	**559 (45.2)**	**117 (54.9)**	**724 (36.2)**	**725 (36.3)**	573 (31.8)	483 (32.2)
큰 변화 없을 것이다	696 (34.8)	**16 (47.1)**	**198 (38.3)**	420 (34.0)	62 (29.1)	705 (35.3)	719 (36.0)	**814 (45.2)**	**639 (42.6)**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304 (15.2)	3 (8.8)	102 (19.7)	183 (14.8)	16 (7.5)	458 (22.9)	453 (22.7)	308 (17.1)	301 (20.1)
잘 모르겠다	34 (1.7)	3 (8.8)	17 (3.3)	11 (0.9)	3 (1.4)	74 (3.7)	53 (2.7)	17 (0.9)	17 (1.1)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50]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5)



[그림 Ⅲ-51]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1-2015)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요약

- 영유아 지원방식에 대해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것(37.2%)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초·중·고 모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각 48.6%, 38.8%, 36.0%)이 높으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과 중산층 이하의 학생을 합친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각 48.9%, 58.5%, 60.9%)도 학교급별로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옴.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비(각 44.3%, 43.7%)를,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33.1%)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많음(찬성 58.8%, 반대 30.2%).
-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은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30.2%)이 가장 높음.
- 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36.5%)는 의견이 가장 높음.

가. 교육복지

1)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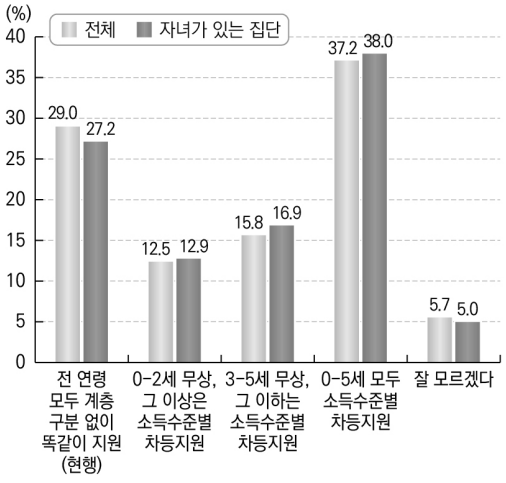
〈질문〉 현재는 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항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여 10차 조사에 처음 포함시켰다.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37.2%),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29.0%),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2.5%), 3-5세는 무상, 그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5.8%), 잘 모르겠다(5.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또한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38.0%),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27.2%),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2.9%), 3-5세는 무상, 그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16.9%), 잘 모르겠다(5.0%) 순이었다.

〈표 Ⅲ-30〉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2015)

(단위 : 명(%))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현행)	579 (29.0)	366 (27.2)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249 (12.5)	174 (12.9)
3-5세는 무상, 그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315 (15.8)	228 (16.9)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744 (37.2)**	**512 (38.0)**
잘 모르겠다	113 (5.7)	68 (5.0)
계(%)	2,000 (100.0)	1,348 (100.0)



[그림 Ⅲ-52]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2015)

2) 무상급식 지원 범위

〈질문〉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무상급식 또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48.6%,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26.9%,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22.0%, 잘 모르겠다 2.7%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63.3%),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19.7%),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15.5%), 잘 모르겠다(1.5%)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38.8%),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30.5%),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28.0%), 잘 모르겠다(2.8%)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50.0%,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25.6%,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 23.9%, 잘 모르겠다 0.6%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36.0%,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34.5%,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26.4%, 잘 모르겠다 3.3%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초·중학교와 비교해서는 그 비율이 낮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도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45.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30.3%,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 21.5%, 잘 모르겠다 3.1% 순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전체 및 해당 학부모 모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에 관한 한 5차(2010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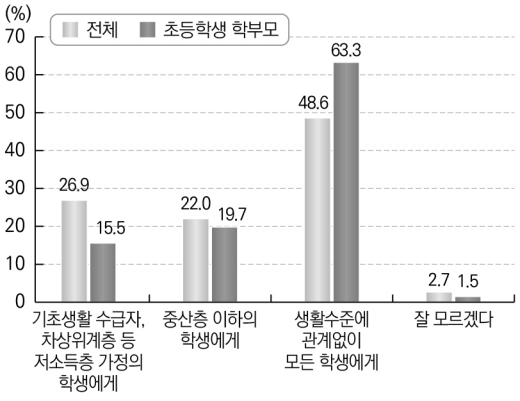
〈표 Ⅲ-31〉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0-201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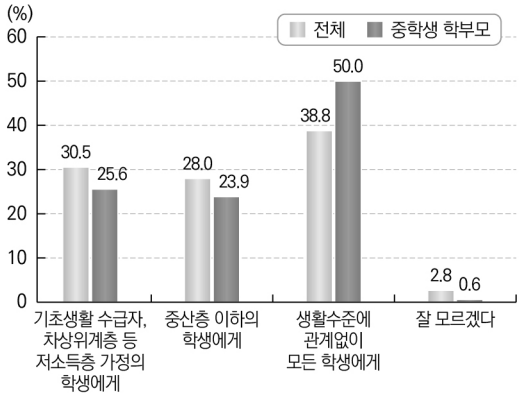
무상급식 지원 범위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537 (26.9)	41 (15.5)	609 (30.5)	45 (25.6)	689 (34.5)	59 (30.3)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439 (22.0)	52 (19.7)	560 (28.0)	42 (23.9)	527 (26.4)	42 (21.5)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971 (48.6)**	**167 (63.3)**	**775 (38.8)**	**88 (50.0)**	**719 (36.0)**	**88 (45.1)**
잘 모르겠다	53 (2.7)	4 (1.5)	56 (2.8)	1 (0.6)	65 (3.3)	6 (3.1)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176 (100.0)	2,000 (100.0)	195 (100.0)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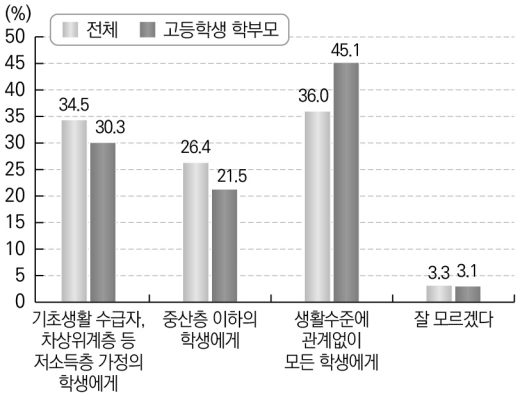
무상급식 지원 범위	2014			2013	2012	2011	201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558 (27.9)	628 (31.4)	**675 (33.8)**	589 (29.5)	572 (31.8)	484 (32.3)	427 (28.5)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542 (27.1)	565 (28.3)	564 (28.2)	675 (33.8)	580 (32.2)	427 (28.5)	317 (21.1)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832 (41.6)**	**744 (37.2)**	**675 (33.8)**	**701 (35.1)**	**638 (35.4)**	**581 (38.7)**	**756 (50.4)**
잘 모르겠다	68 (3.4)	63 (3.2)	86 (4.3)	35 (1.8)	10 (0.6)	8 (0.5)	0 (0.0)
계(%)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1,500 (100.0)



[그림 Ⅲ-53]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그림 Ⅲ-54]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그림 Ⅲ-55]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2015)

3)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질문〉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비(44.3%),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26.5%), 방과후학교 교육비(12.6%),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8.5%),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7.9%),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급식비(45.5%),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19.7%), 방과후 학교 교육비(18.9%),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11.0%),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4.9%), 기타(0.0%) 순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비(43.7%), 방과후학교 교육비(24.5%),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19.0%),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2.7%),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학교급식비(42.6%), 방과후학교 교육비(25.6%),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18.8%),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3.1%), 기타(0.0%) 순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33.1%), 학교급식비(30.4%), 방과후학교 교육비(15.4%),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0.6%),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10.1%), 기타(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학교급식비(35.4%),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30.8%), 방과후학교 교육비(14.4%),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9.7%),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9.7%), 기타(0.0%) 순이었다.

9차(2014년) 조사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교육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재정 내용으로 꼽았는데 10차 조사에서는 학교급식비가 1순위로 꼽혔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10차 조사와 동일하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Ⅲ-32〉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2014-2015)

(단위 : 명(%))

저소득층 재정지원	2015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170 (8.5)	13 (4.9)	253 (12.7)	23 (13.1)	212 (10.6)	19 (9.7)	327 (16.4)	468 (23.4)	208 (10.4)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157 (7.9)	29 (11.0)	379 (19.0)	33 (18.8)	202 (10.1)	19 (9.7)	–	–	–
방과후 학교 교육비 (자유수강권)	252 (12.6)	50 (18.9)	489 (24.5)	45 (25.6)	308 (15.4)	28 (14.4)	**926 (46.3)**	**930 (46.5)**	173 (8.7)
학교급식비	**886 (44.3)**	**120 (45.5)**	**873 (43.7)**	**75 (42.6)**	607 (30.4)	**69 (35.4)**	290 (14.5)	27 (1.4)	579 (29.0)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초등학교만 해당)	529 (26.5)	52 (19.7)	–	–	–	–	21 (1.1)	0 (0.0)	3 (0.2)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고등학교만 해당)	–	–	–	–	**662 (33.1)**	60 (30.8)	435 (21.8)	574 (28.7)	**1,036 (51.8)**
기타	6 (0.3)	0 (0.0)	6 (0.3)	0 (0.0)	9 (0.5)	0 (0.0)	1 (0.1)	1 (0.1)	1 (0.1)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176 (100.0)	2,000 (100.0)	195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4)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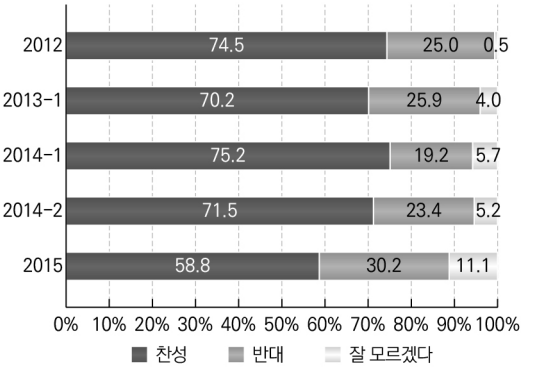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임기 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찬성(58.8%)이 반대(3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이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또한 찬성(59.2%)이 반대(31.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2%이었다.

7차(2012년) 조사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0차 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의 비율이 지난 조사들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단위 : 명(%))

고교 무상교육	2015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찬성	1,176 (58.8)	798 (59.2)
반대	603 (30.2)	426 (31.6)
잘 모르겠다	221 (11.1)	124 (9.2)
계(%)	2,000 (100.0)	1,348 (100.0)



[그림 Ⅲ-56]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2012-2015)

나.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1)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질문〉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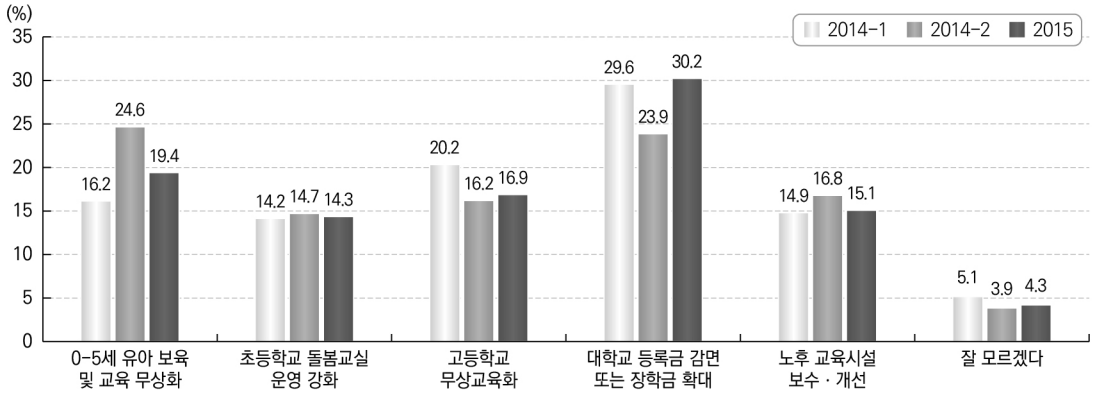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30.2%),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19.4%), 고등학교 무상교육화(16.9%),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15.1%),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4.3%), 잘 모르겠다(4.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도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25.0%),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20.3%), 고등학교 무상교육화(18.7%),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16.8%),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5.0%), 잘 모르겠다(4.2%)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 부담이 일반가계에 그 만큼 큰 부담임을 보여준다.

이 질문에 대해 9차 조사인 2014년의 2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7차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우선적으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2012-2015)

(단위 : 명(%))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2015		2014-2	2014-1	2013-1	2012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387 (19.4)	274 (20.3)	**492 (24.6)**	323 (16.2)	637 (31.9)	437 (24.3)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285 (14.3)	202 (15.0)	294 (14.7)	284 (14.2)	-	-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338 (16.9)	252 (18.7)	323 (16.2)	403 (20.2)	583 (29.2)	601 (33.4)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604 (30.2)**	**337 (25.0)**	478 (23.9)	**592 (29.6)**	**709 (35.5)**	**756 (42.0)**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	301 (15.1)	226 (16.8)	336 (16.8)	297 (14.9)	-	-
잘 모르겠다	85 (4.3)	57 (4.2)	77 (3.9)	101 (5.1)	71 (3.6)	6 (0.3)
계(%)	2,000 (100.0)	1,348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그림 Ⅲ-57]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2014-2015)

2) 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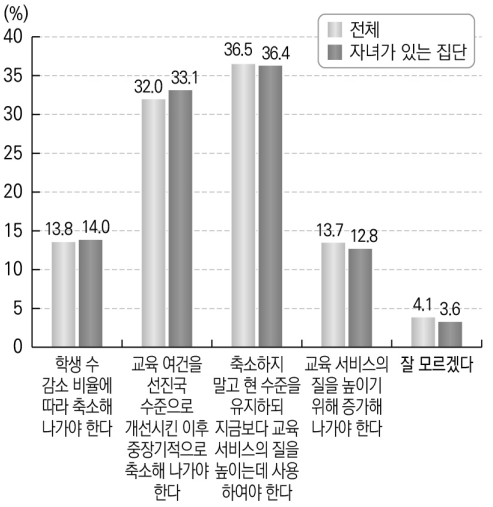
〈질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선진국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하여야한다(36.5%)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32.0%),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13.8%),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13.7%), 잘 모르겠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하여야 한다(36.4%),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33.1%),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 한다(14.0%),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 한다(12.8%), 잘 모르겠다(3.6%) 순이었다.

〈표 Ⅲ-35〉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2015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학생 수 감소 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 한다	275 (13.8)	189 (14.0)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640 (32.0)	446 (33.1)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730 (36.5)**	**491 (36.4)**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 한다	274 (13.7)	173 (12.8)
잘 모르겠다	81 (4.1)	49 (3.6)
계(%)	2,000 (100.0)	1,348 (100.0)



[그림 Ⅲ-58]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2015)

7 대학교육

요약

-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59.7%)이 높았고,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46.4%)는 의견이 다소 높음.
- 대학 교수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각 50.2%, 51.8%)이 많았으며, 8-9차 조사에 비해 약간 개선됨(평균 2.37→2.36→2.75).
-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79.0%)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62.1%)이 높음.
-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61.1%)이 반대의견(23.9%)보다 높음.
-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로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35.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6%), 교수들의 교육 역량(17.7%), 졸업생의 취업률(11.4%) 순임.

1)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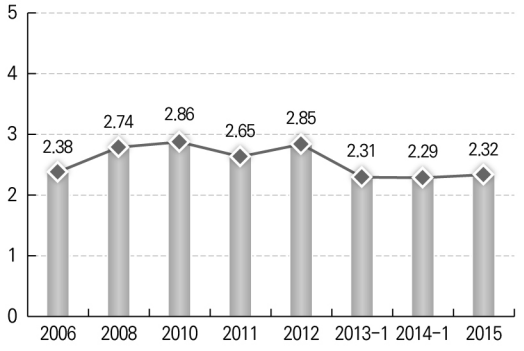
〈질문〉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8.6%, 보통이다 31.7%,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59.7%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평균은 9차 조사인 2014년보다(2.29) 다소 높아진 2.32(5점 만점)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도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9.8%, 보통이다 29.0%,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1.2%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평균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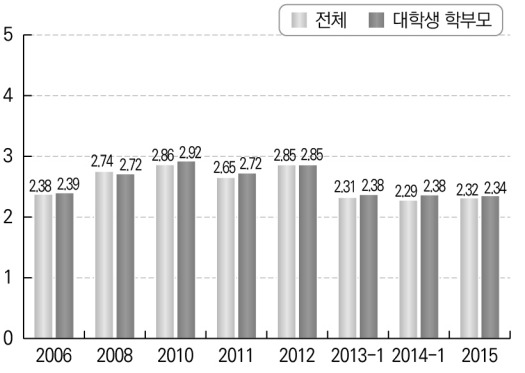
〈표 Ⅲ-36〉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

(단위 : 명(%))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에의 기능	2015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그렇다	21 (1.1)	3 (1.0)
그렇다	151 (7.6)	25 (8.7)
보통이다	634 (31.7)	83 (29.0)
그렇지 못하다	**838 (41.9)**	**129 (45.1)**
전혀 그렇지 못하다	356 (17.8)	46 (16.1)
계(%)	2,000 (100.0)	286 (100.0)
평균 (표준편차)	2.32 (0.89)	2.34 (0.886)



[그림 Ⅲ-59]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전체, 2006-2015)



[그림 Ⅲ-60]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06-2015)

2)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질문〉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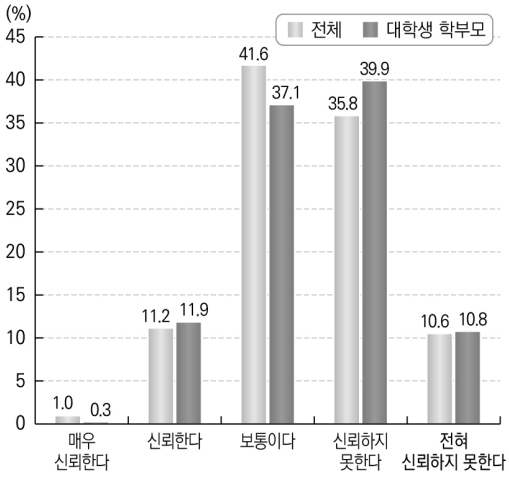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해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12.1%, 보통이다 41.6%, 신뢰하지 못한다(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46.4%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6/5점 만점).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신뢰한다) 12.2%, 보통이다 37.1%, 신뢰하지 못한다(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50.7%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7〉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단위 : 명(%))

대학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2015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신뢰한다	19 (1.0)	1 (0.3)
신뢰한다	223 (11.2)	34 (11.9)
보통이다	**831** **(41.6)**	106 (37.1)
신뢰하지 못한다	715 (35.8)	**114** **(39.9)**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12 (10.6)	31 (10.8)
계(%)	2,000 (100.0)	286 (100.0)
평균 (표준편차)	2.56 (0.859)	2.51 (0.853)



[그림 Ⅲ-61]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2015)

3)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15.5%, 보통이다 50.2%,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34.3%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은 2.75(5점 만점)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15.2%, 보통이다 50.7%,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35.7%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낮았다.

전문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20.2%, 보통이다 51.8%,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28.1%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은 2.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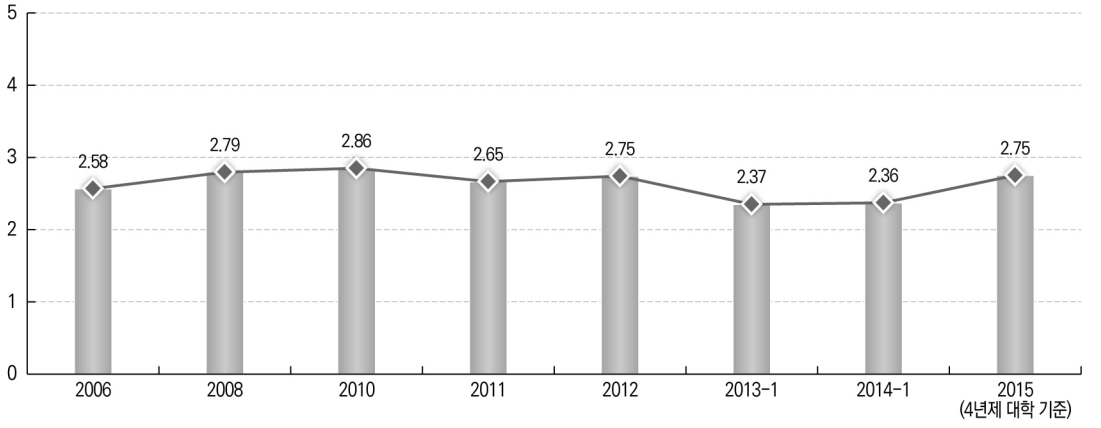
점 만점)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 22.7%, 보통이다 52.8%, 잘 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24.5%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8-9차(2013-2014년) 조사(평균 각 2.37, 2.36)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2015)

(단위 : 명(%))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	2015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잘하고 있다	28 (1.4)	1 (0.3)	19 (1.0)	0 (0.0)
잘하고 있다	282 (14.1)	38 (13.3)	385 (19.3)	65 (22.7)
보통이다	**1,004 (50.2)**	**145 (50.7)**	**1,035 (51.8)**	**151 (52.8)**
못하고 있다	543 (27.2)	84 (29.4)	442 (22.1)	57 (19.9)
전혀 못하고 있다	143 (7.2)	18 (6.3)	119 (6.0)	13 (4.5)
계(%)	2,000 (100.0)	286 (100.0)	2,000 (100.0)	286 (100.0)
평균(표준편차)	2.75 (0.833)	2.72 (0.785)	2.87 (0.821)	2.94 (0.779)



[그림 Ⅲ-62]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전체)(2006-2015)

4) 대학재정의 투명성

〈질문〉 **대학**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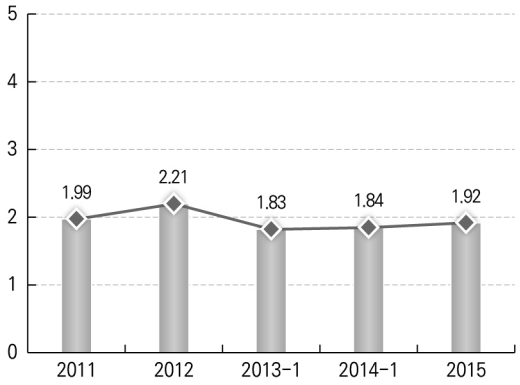
대학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3.9%, 보통이다 17.1%,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79.0%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은 1.92(5점 만점)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0.7%, 보통이다 12.90%, 그렇지 못하다(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86.4%로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가운데서도 온라인 조사로 전환한 8-9차(2013-2014년) 조사(평균 각 1.83, 1.84)보다는 10차 조사에서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대학재정의 투명성(2015)

(단위 : 명(%))

대학재정의 투명성	2015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그렇다	26 (1.3)	1 (0.3)
그렇다	52 (2.6)	1 (0.3)
보통이다	342 (17.1)	37 (12.9)
그렇지 못하다	**895** **(44.8)**	**141** **(49.3)**
전혀 그렇지 못하다	685 (34.3)	106 (37.1
계(%)	2,000 (100.0)	286 (100.0)
평균(표준편차)	1.92 (0.853)	1.78 (0.705)



[그림 Ⅲ-63] 대학재정의 투명성(전체)
(2011-2015)

5)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현재 정부의 공공재정이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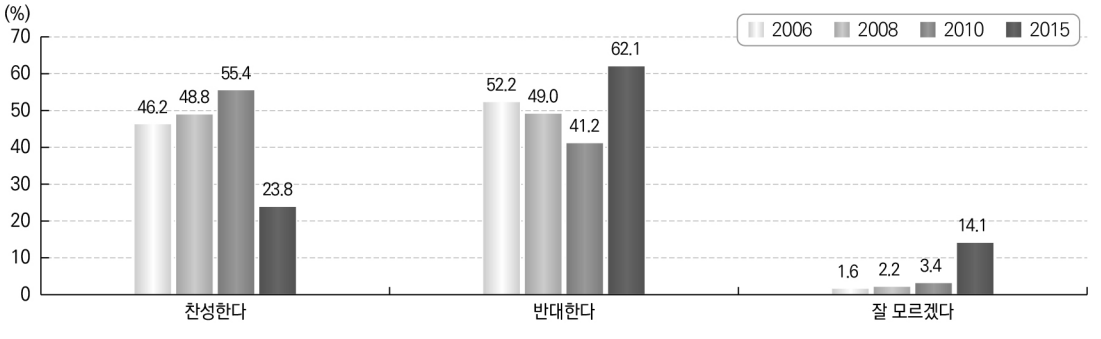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23.8%)보다 반대한다(62.1%)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1%를 차지하였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반대한다(63.8%), 찬성한다(22.8%), 잘 모르겠다(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이 포함되었던 3-4차(2006, 2008년) 조사에서는 10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대의견(각 52.2%, 49.0%)이 높았고, 5차(2010년) 조사에서만 찬성의견(55.4%)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06, 2008, 2010, 2015)

(단위 : 명(%))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	2015		2010	2008	2006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476 (23.8)	113 (22.8)	**831 (55.4)**	586 (48.8)	554 (46.2)
반대한다	**1,242 (62.1)**	**316 (63.8)**	618 (41.2)	**588 (49.0)**	**626 (52.2)**
잘 모르겠다	282 (14.1)	66 (13.3)	51 (3.4)	26 (2.2)	20 (1.6)
계(%)	2,000 (100.0)	495 (100.0)	1,500 (100.0)	1,200 (100.0)	1,200 (100.0)



[그림 Ⅲ-64]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2006, 2008, 2010, 2015)

6)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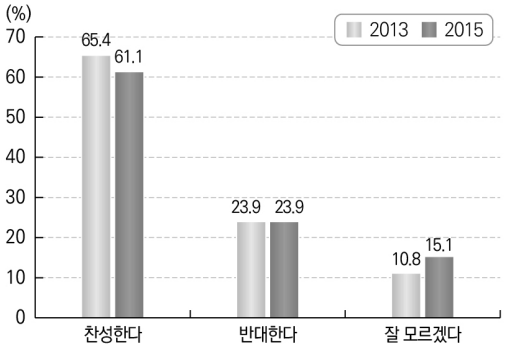
〈질문〉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한다(23.9%)는 의견보다 찬성한다(61.1%)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15.1%이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경우도 찬성한다(65.7%), 반대한다(25.9%), 잘 모르겠다(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지방대학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2013, 2015)

(단위 : 명(%))

지방대학 우선지원	2015		2013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찬성한다	1,221 (61.1)	188 (65.7)	1,307 (65.4)
반대한다	477 (23.9)	74 (25.9)	477 (23.9)
잘 모르겠다	302 (15.1)	24 (8.4)	216 (10.8)
계(%)	2,000 (100.0)	286 (100.0)	2,000 (100.0)



[그림 Ⅲ-65] 지방대학 우선 지원(전체) (2013, 2015)

7)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질문〉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35.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6%), 교수들의 교육 역량(17.7%), 졸업생의 취업률(11.4%), 교수들의 연구 역량(7.2%),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7.0%),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도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34.5%),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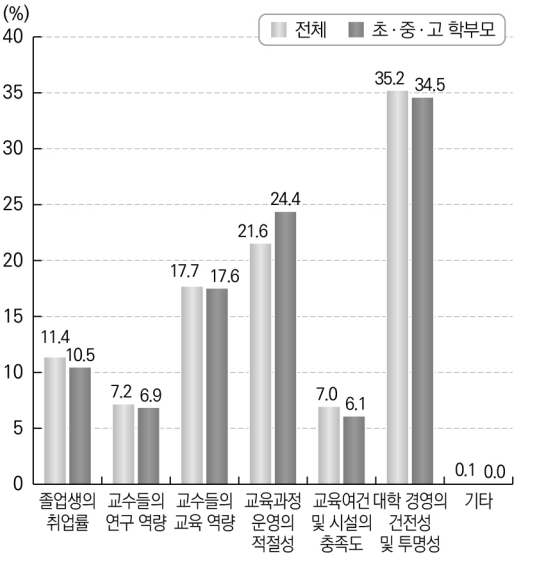
(24.4%), 교수들의 교육 역량(17.6%), 졸업생의 취업률(10.5%), 교수들의 연구 역량(6.9%),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6.1%), 기타(0.0%)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고, 그만큼 대학평가에서 이 점이 제대로 고려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42〉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 되어야 할 지표(2015)

(단위 : 명(%))

대학평가 지표의 중요도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졸업생의 취업률	228 (11.4)	52 (10.5)
교수들의 연구 역량	143 (7.2)	34 (6.9)
교수들의 교육 역량	353 (17.7)	87 (17.6)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431 (21.6)	121 (24.4)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140 (7.0)	30 (6.1)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704 (35.2)**	**171 (34.5)**
기타	1 (0.1)	0 (0.0)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66]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 되어야 할 지표(2015)

8 교육현안

요약

- 현재 정부가 가장 잘하고 교육정책의 1순위만을 집계하면 초등돌봄교실(27.9%), 누리과정 확대(22.2%), 인성교육 활성화(12.6%), 자유학기제(10.2%) 순이었고, 1+2+3순위로 집계하면 초등돌봄교실(18.0%), 인성교육 활성화(13.4%), 누리과정 확대(11.9%), 자유학기제(11.0%) 순임.
-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통합해야한다(64.8%)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47.3%)는 의견이 반대한다(35.0%)는 의견보다 높음.
- 학생들의 9시 등교에 대해 초·중·고 학교급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음(초 75.3%, 중 64.6%, 고 57.3%).

1)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질문〉 다음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결과는 초등돌봄교실(27.9%), 누리과정 확대(22.2%), 인성교육 활성화(12.6%), 자유학기제(10.2%),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5.9%), 대학입시 간소화(4.7%), 지방대학 지원(4.4%), 사교육 부담 경감(4.3%), 대학특성화(4.0%),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4.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순위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18.0%), 인성교육 활성화(13.4%), 누리과정 확대(11.9%), 자유학기제(11.0%),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8.5%), 대학입시 간소화(8.0%), 대학특성화(8.0%), 사교육 부담 경감(7.7%), 지방대학 지원(7.3%),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6.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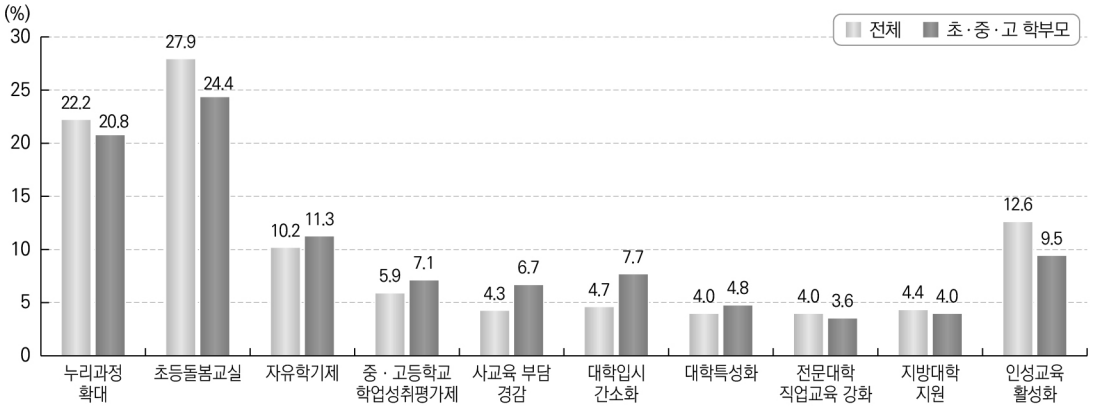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집단의 1순위에 대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24.4%), 누리과정 확대(20.8%), 자유학기제(11.3%), 인성교육 활성화(9.5%), 대학입시 간소화(7.7%),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7.1%), 사교육 부담 경감(6.7%), 대학특성화(4.8%), 지방대학 지원(4.0%),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3.6%)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집단의 1+2+3순위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16.8%), 인성교육 활성화(11.8%), 자유학기제(11.1%), 누리과정 확대(10.5%), 대학입시 간소화(9.1%), 사교육 부담 경감(9.0%), 대학특성화(8.8%),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8.4%),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7.3%), 지방대학 지원(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볼 때 학부모들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확대,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등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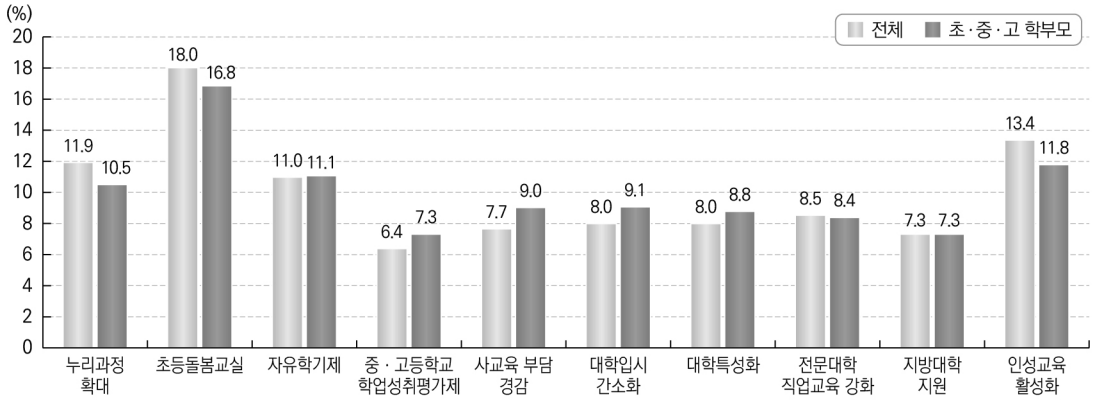
〈표 Ⅲ-43〉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2015)

(단위 : 명(%))

교육정책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누리과정 확대	**444 (22.2)**	712 (11.9)	**103 (20.8)**	156 (10.5)
초등돌봄교실	**558 (27.9)**	**1,077 (18.0)**	**121 (24.4)**	**250 (16.8)**
자유학기제	204 (10.2)	660 (11.0)	56 (11.3)	165 (11.1)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	117 (5.9)	383 (6.4)	35 (7.1)	108 (7.3)
사교육 부담 경감	85 (4.3)	464 (7.7)	33 (6.7)	133 (9.0)
대학입시 간소화	94 (4.7)	477 (8.0)	38 (7.7)	135 (9.1)
대학특성화	80 (4.0)	478 (8.0)	24 (4.8)	130 (8.8)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79 (4.0)	508 (8.5)	18 (3.6)	125 (8.4)
지방대학 지원	88 (4.4)	439 (7.3)	20 (4.0)	108 (7.3)
인성교육 활성화	251 (12.6)	**802 (13.4)**	47 (9.5)	**175 (11.8)**
계(%)	2,000 (100.0)	6,000 (100.0)	495 (100.0)	1,485 (100.0)



[그림 Ⅲ-67]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1순위)(2015)



[그림 Ⅲ-68]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1+2+3순위)(2015)

2)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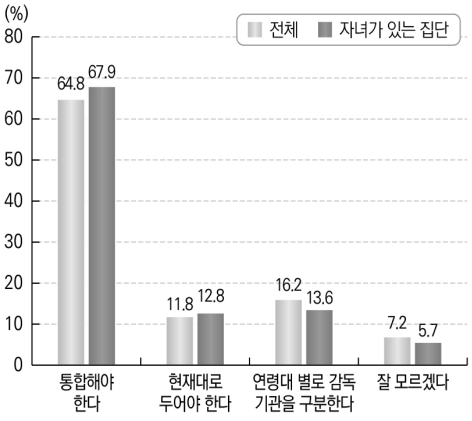
〈질문〉 현재 학령전 아동 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지도 감독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합해야한다 64.8%,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11.8%, 연령대 별로 감독 기관을 구분한다 16.2%, 잘 모르겠다 7.2%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도 통합해야한다 67.9%,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12.8%, 연령대 별로 감독 기관을 구분한다 13.6%, 잘 모르겠다 5.7%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유보 통합	2015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통합해야한다	1,296 (64.8)	915 (67.9)
현재대로 두어야한다	236 (11.8)	172 (12.8)
연령대 별로 감독 기관을 구분 한다	324 (16.2)	184 (13.6)
잘 모르겠다	144 (7.2)	77 (5.7)
계(%)	2,000 (100.0)	1,348 (100.0)



[그림 Ⅲ-69]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2015)

3)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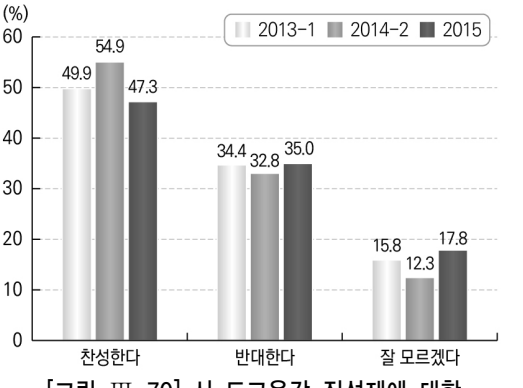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47.3%)가 반대한다(35.0%)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17.8%). 초·중·고 학부모 또한 찬성한다 51.9%, 반대한다 35.2%, 잘 모르겠다 12.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차(2013-2014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45〉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2013-2015)

(단위 : 명(%))

시·도교육감 직선제	2015		2014	2013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체
찬성한다	945 (47.3)	257 (51.9)	1,098 (54.9)	997 (49.9)
반대한다	700 (35.0)	174 (35.2)	656 (32.8)	687 (34.4)
잘 모르겠다	355 (17.8)	64 (12.9)	246 (12.3)	316 (15.8)
계(%)	2,000 (100.0)	495 (100.0)	2,000 (100.0)	2,000 (100.0)



[그림 Ⅲ-70]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2013-2015)

4)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질문〉 일부 시·도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75.3%)가 반대한다(19.5%)보다 높게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5.3%).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찬성한다(73.9%)가 반대한다(2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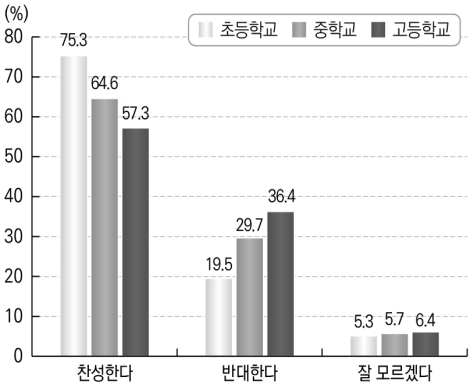
중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64.6%)가 반대한다(29.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잘 모르겠다 5.7%), 중학교 학부모 또한 찬성한다(63.1%)가 반대한다(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3.4%).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는 것 또한 찬성한다(57.3%)가, 반대한다(36.4%)보다 높았으며(잘 모르겠다 6.4%),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도 찬성한다(53.8%)는 의견이 반대한다(3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6.7%). 그러나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찬성의견 비율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2015)

(단위 : 명(%))

9시 등교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 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 학생 학부모
찬성한다	1,506 (75.3)	195 (73.9)	1,292 (64.6)	111 (63.1)	1,146 (57.3)	105 (53.8)
반대한다	389 (19.5)	59 (22.3)	594 (29.7)	59 (33.5)	727 (36.4)	77 (39.5)
잘 모르겠다	105 (5.3)	10 (3.8)	114 (5.7)	6 (3.4)	127 (6.4)	13 (6.7)
계(%)	2,000 (100.0)	264 (100.0)	2,000 (100.0)	176 (100.0)	2,000 (100.0)	195 (100.0)



[그림 Ⅲ-71]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2015)

9 교육관

요약

- 자녀가 학교교육을 거부할 시에 학부모의 태도는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6.8%)는 의견이 정규학교를 꼭 다니게 하겠다(37.3%)는 의견보다 높음.
-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63.3%)이 높음.
-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66.1%)이 높으며,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서도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68.9%)이 높음.
-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60.4%)이 높으며,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57.8%)이 가장 많음.
-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4.3%),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1.9%),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19.1%),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7.7%),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4.5%) 순임.

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질문〉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6.8%),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37.3%), 잘 모르겠다(6.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집단 또한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53.7%),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40.4%), 잘 모르겠다(5.9%)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59.5%,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33.3%, 잘 모르겠다 7.2%를 나타내었고,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59.7%,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37.5%, 잘 모르겠다 2.8%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경우도 초·중학생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56.4%,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37.4%, 잘 모르겠다 6.2%로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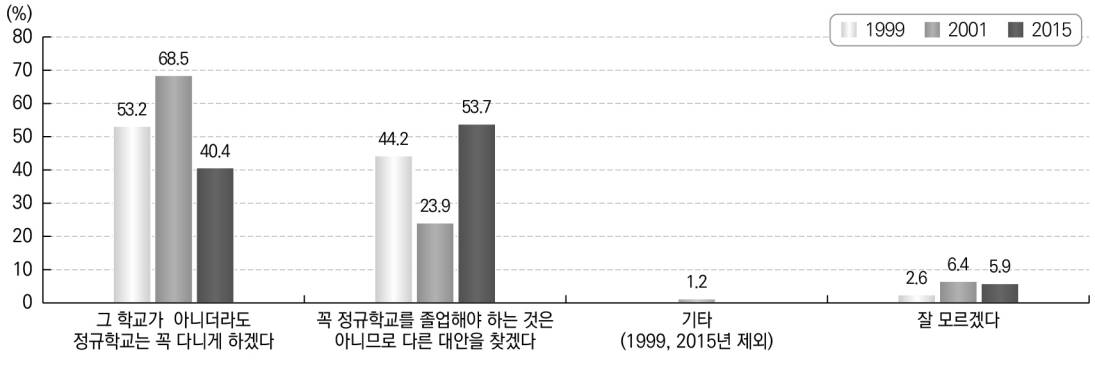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에 대한 조사는 1-2차(1999, 2001년) 조사에서 실시하였는데 1-2차 조사 결과 모두 10차 조사와 달리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는 의견(1차 53.2%, 2차 68.5%)이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정규학교에 대한 집착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1999, 2001, 2015)

(단위 : 명(%))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2015					2001	1999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746 (37.3)	544 (40.4)	88 (33.3)	66 (37.5)	73 (37.4)	**289 (68.5)**	**319 (53.2)**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1,135 (56.8)**	**724 (53.7)**	**157 (59.5)**	**105 (59.7)**	**110 (56.4)**	101 (23.9)	265 (44.2)
기타	-	-	-	-	-	5 (1.2)	-
잘 모르겠다	119 (6.0)	80 (5.9)	19 (7.2)	5 (2.8)	12 (6.2)	27 (6.4)	16 (2.6)
계(%)	2,000 (100.0)	1,348 (100.0)	264 (100.0)	176 (100.0)	195 (100.0)	422 (100.0)	600 (100.0)



[그림 Ⅲ-72]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1999, 2001, 2015)

2)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질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63.3%, 반대 23.6%, 잘 모르겠다 13.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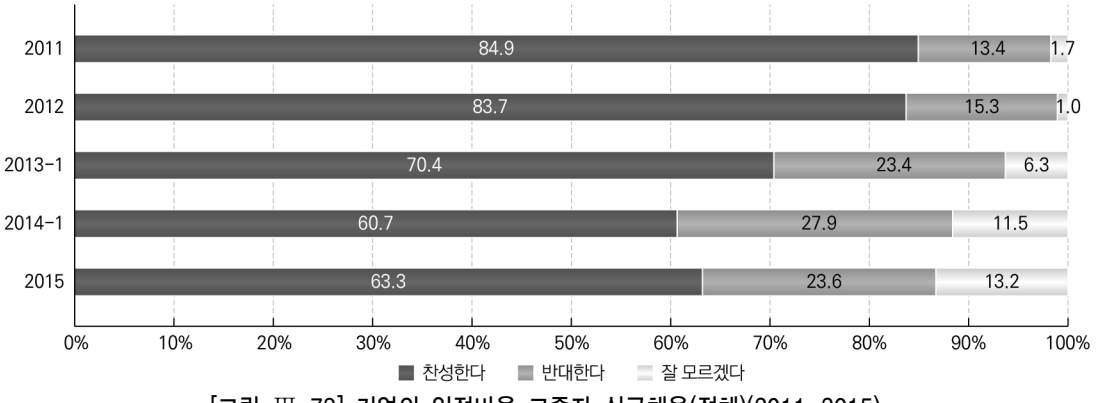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찬성 61.8%, 반대 17.6%, 잘 모르겠다 20.6% 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찬성 68.7%, 반대 18.2%, 잘 모르겠다 13.2%이었으며,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경우는 찬성 61.5%, 반대 25.1%, 잘 모르겠다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도 찬성 60.6%, 반대 29.1%, 잘 모르겠다 10.3%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6-10차(2011-2015년) 조사 모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찬성의견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4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2015)

(단위 : 명(%))

기업의 고졸 신규채용	2015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찬성한다	1,265 (63.3)	21 (61.8)	355 (68.7)	760 (61.5)	129 (60.6)
반대한다	472 (23.6)	6 (17.6)	94 (18.2)	310 (25.1)	62 (29.1)
잘 모르겠다	263 (13.2)	7 (20.6)	68 (13.2)	166 (13.4)	22 (10.3)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그림 Ⅲ-73]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전체)(2011-2015)

3)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6.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7.1%),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3%), 잘 모르겠다(2.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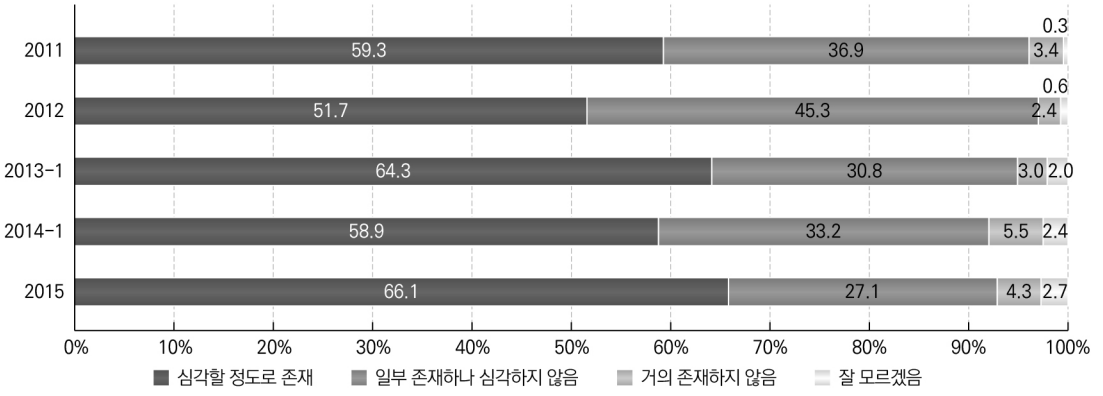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4.7%,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17.6%,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8.8%, 잘 모르겠다 8.8%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70.4%,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0.3%,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2%, 잘 모르겠다 4.1%이었으며,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4.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30.3%,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6%, 잘 모르겠다 1.9%를 나타내었다.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도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5.7%,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6.3%,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2%, 잘 모르겠다 2.8%로 모든 집단에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9차 조사인 2014년보다 10차 조사에서 그 비율이 다소 더 높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58.9%→66.1%).

〈표 Ⅲ-49〉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5)

(단위 : 명(%))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1321 (66.1)**	**22 (64.7)**	**364 (70.4)**	**795 (64.3)**	**140 (65.7)**	**1,178 (58.9)**	**1,285 (64.3)**	**930 (51.7)**	**890 (59.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41 (27.1)	6 (17.6)	105 (20.3)	374 (30.3)	56 (26.3)	664 (33.2)	615 (30.8)	816 (45.3)	554 (36.9)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85 (4.3)	3 (8.8)	27 (5.2)	44 (3.6)	11 (5.2)	110 (5.5)	60 (3.0)	44 (2.4)	51 (3.4)
잘 모르겠다	53 (2.7)	3 (8.8)	21 (4.1)	23 (1.9)	6 (2.8)	48 (2.4)	40 (2.0)	10 (0.6)	5 (0.3)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4]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4)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8.9%,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6.0%,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9%, 잘 모르겠다 2.3%로 심각할 정도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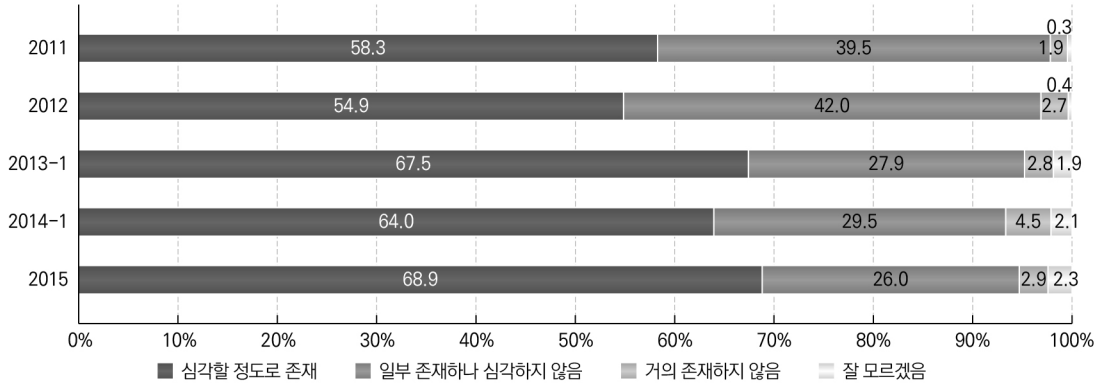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58.8%,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9.4%,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9%, 잘 모르겠다 8.8%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71.2%,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2.2%,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9%, 잘 모르겠다 3.7%이었으며,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8.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7.3%,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0%, 잘 모르겠다 1.6%를 나타내었다.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도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69.0%,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27.2%,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9%, 잘 모르겠다 1.9%로, 모든 집단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서도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Ⅲ-50〉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단위 : 명(%))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1,377 (68.9)**	**20 (58.8)**	**368 (71.2)**	**842 (68.1)**	**147 (69.0)**	**1,279 (64.0)**	**1,349 (67.5)**	**989 (54.9)**	**874 (58.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20 (26.0)	10 (29.4)	115 (22.2)	337 (27.3)	58 (27.2)	590 (29.5)	557 (27.9)	756 (42.0)	593 (39.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7 (2.9)	1 (2.9)	15 (2.9)	37 (3.0)	4 (1.9)	90 (4.5)	56 (2.8)	48 (2.7)	28 (1.9)
잘 모르겠다	46 (2.3)	3 (8.8)	19 (3.7)	20 (1.6)	4 (1.9)	41 (2.1)	38 (1.9)	7 (0.4)	5 (0.3)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5)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질문〉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60.4%, 심화될 것이다 26.1%, 약화될 것이다 11.1%, 잘 모르겠다 2.5%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2.9%, 심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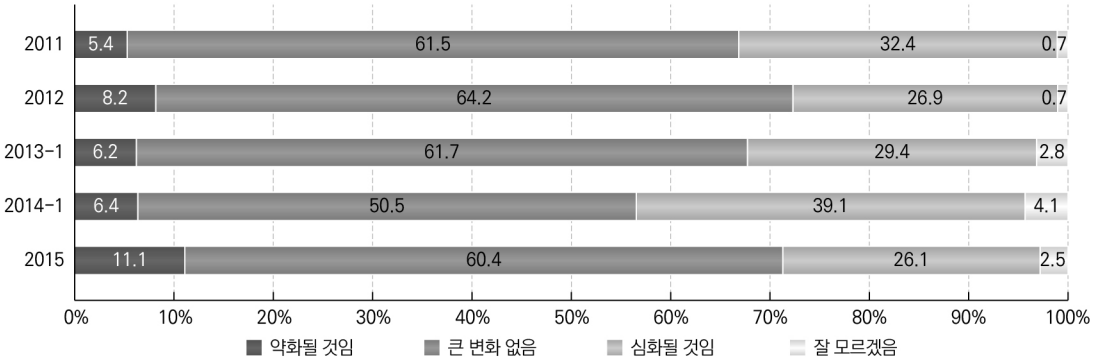
20.6%, 약화될 것이다 17.6%, 잘 모르겠다 8.8%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61.3%, 심화될 것이다 26.9%, 약화될 것이다 8.1%, 잘 모르겠다 3.7%이었으며,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60.9%, 심화될 것이다 26.0%, 약화될 것이다 11.3%, 잘 모르겠다 1.8%를 나타내었다.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5.9%, 심화될 것이다 25.8%, 약화될 것이다 16.0%, 잘 모르겠다 2.3%를 나타내어 모든 집단에서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대해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모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Ⅲ-51〉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5)

(단위 : 명(%))

대학서열화 전망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222 (11.1)	6 (17.6)	42 (8.1)	140 (11.3)	34 (16.0)	128 (6.4)	123 (6.2)	147 (8.2)	81 (5.4)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207 (60.4)**	**18 (52.9)**	**317 (61.3)**	**753 (60.9)**	**119 (55.9)**	**1,010 (50.5)**	**1,340 (61.7)**	**1,156 (64.2)**	**923 (61.5)**
심화될 것이다	522 (26.1)	7 (20.6)	139 (26.9)	321 (26.0)	55 (25.8)	781 (39.1)	587 (29.4)	484 (26.9)	486 (32.4)
잘 모르겠다	49 (2.5)	3 (8.8)	19 (3.7)	22 (1.8)	5 (2.3)	81 (4.1)	56 (2.8)	13 (0.7)	10 (0.7)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6]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1-2015)

6)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질문〉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7.8%, 심화될 것이다 28.8%, 약화될 것이다 11.2%, 잘 모르겠다 2.3%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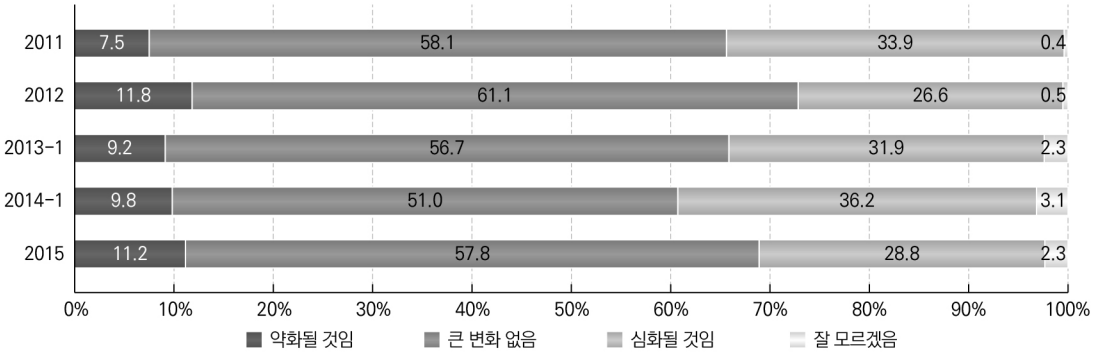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2.9%, 심화될 것이다 23.5%, 약화될 것이다 14.7%, 잘 모르겠다 8.8%이었고, 고졸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6.1%, 심화될 것이다 31.1%, 약화될 것이다 8.5%, 잘 모르겠다 4.3%이었다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의 경우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9.1%, 심화될 것이다 28.7%, 약화될 것이다 10.8%, 잘 모르겠다 1.4%를 나타내었다.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 54.9%, 심화될 것이다 23.9%, 약화될 것이다 19.2%, 잘 모르겠다 1.9%를 나타내어 모든 집단에서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6-10차(2011-2015년) 조사에서 모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Ⅲ-52〉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5)

(단위 : 명(%))

학벌주의 전망	2015					2014	2013	2012	2011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224 (11.2)	5 (14.7)	44 (8.5)	134 (10.8)	41 (19.2)	195 (9.8)	183 (9.2)	213 (11.8)	113 (7.5)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155 (57.8)**	**18 (52.9)**	**290 (56.1)**	**730 (59.1)**	**117 (54.9)**	**1,019 (51.0)**	**1,134 (56.7)**	**1,099 (61.1)**	**872 (58.1)**
심화될 것이다	575 (28.8)	8 (23.5)	161 (31.1)	335 (28.7)	51 (23.9)	724 (36.2)	637 (31.9)	479 (26.6)	509 (33.9)
잘 모르겠다	46 (2.3)	3 (8.8)	22 (4.3)	17 (1.4)	4 (1.9)	62 (3.1)	46 (2.3)	9 (0.5)	6 (0.4)
계(%)	2,000 (100.0)	34 (100.0)	517 (100.0)	1,236 (100.0)	213 (100.0)	2,000 (100.0)	2,000 (100.0)	1,800 (100.0)	1,500 (100.0)



[그림 Ⅲ-77]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5)

7)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질문〉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4.3%),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1.9%),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19.1%),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7.7%),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4.5%),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2.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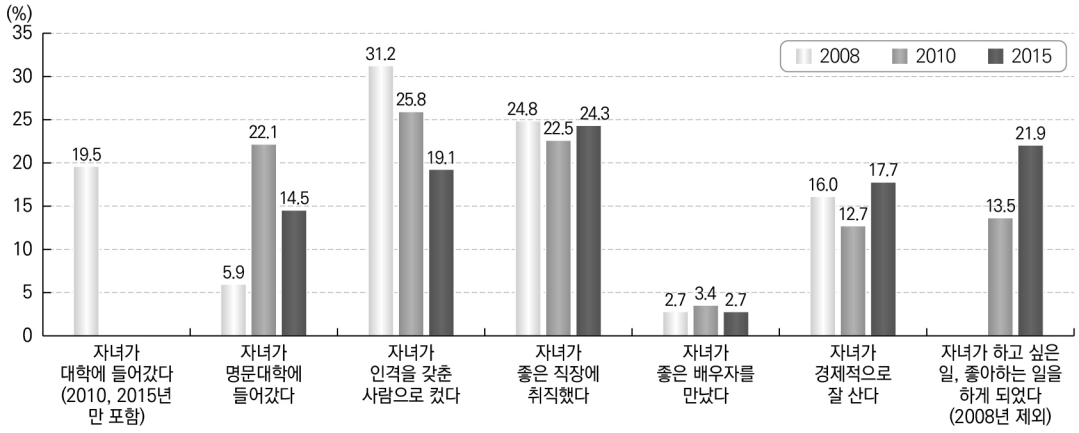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25.3%),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2.4%),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18.0%),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15.6%),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15.6%),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3.2%) 순으로 나타났다.

4-5차 조사(2008, 2010년)에서는 10차 조사와는 달리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는 의견(각 31.2%, 25.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의견(각 24.8%, 22.5%)이 차지하였다. 또한, 6차 조사에서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의견(22.1%)도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좋은 직장 취직을 제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최근의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Ⅲ-53〉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15)

(단위 : 명(%))

자녀교육 성공 의미	2015	
	전체	초·중·고 학부모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290 (14.5)	77 (15.6)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381 (19.1)	89 (18.0)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485 (24.3)**	**125 (25.3)**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54 (2.7)	16 (3.2)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353 (17.7)	77 (15.6)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437 (21.9)	111 (22.4)
계(%)	2,000 (100.0)	495 (100.0)



[그림 Ⅲ-78]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08, 2010, 2015)

KEDI

PART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제언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 판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총 39,273,073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모집단의 0.0051%)을 인구 구성 비율에 비례하도록 표집하였다(95%의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표집오차 ±2.19%p). 일부 직접조사가 병행되었던 8-9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와 달리 2015년 10차 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로만 이루어졌으며, 설문 문항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교육관 등 9개 영역으로,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영역에서는 교육행정의 권한 소재를 4가지 항목에서 묻고,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와 자녀의 학교 선택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당국간 교육행정의 권한 소재에 대해 올해 교육여론 조사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을 알려주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중앙정부가 필수교육과정의 결정과 같은 교육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 실제에 적용할 교육정책의 수립과 학생들의 표준학습 성취기준은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며,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의

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당국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교육행정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책임 하에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등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비단 금년 뿐 아니라 2011년 이후 계속되는 추세이다.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이 못되는 낮은 평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학부모들의 불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문항인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가 1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에 이어 '학생을 위한 맞춤형상담 및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가 2순위로 꼽혔다. 그런 점에서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지도를 탈피하여 학교급별 교육기능과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선택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응답 또한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초등)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1순위로, 통학거리를 2순위로 꼽고 있다. 반면 중학교의 선택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이 1순위로, 교원의 질적 수준이 2순위로 고려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의 질적 수준이 1순위이고, 이어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이 고려된다. 반면 대학을 선택할 때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모든 학교급의 선택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1, 2위) 학교급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다수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진학하게 되는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가 1순위(56.5%)로 꼽혔으며, 명문대 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7.0%)는 예상 외로 낮게 나왔다. 이런 응답결과는 앞서 확인한 학교 선택시 고려사황과 일관된 것으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교육적 지원과 지도를 해 줄 학교를 좋은 학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보적인 집단이 국내에서 계속 교육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확인된 학생

맞춤형 지도 및 상담을 강화하여 교육수요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야할 것이다.

나. 교사

이 영역에서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과 현 시점에서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묻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원의 풀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들을 교사로 초빙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았다(5점 척도의 평균 2.91점).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높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교사들에게 당장 요구되는 능력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능력(1위)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2위)이, 중학교에서는 학습지도능력(1위)과 생활지도능력(2위)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능력(1위)과 학습지도능력(2위)을 원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학교급별로 기대되는 교육적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교원양성기관 및 현직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학교급별 수요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들은 입학당시 성적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선발경쟁을 거쳐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교원자질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것은 현재의 교원양성 및 임용과정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재규정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자격증 없는 전문가의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의견의 비율이 매번 조사에서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찬성 55.8%, 반대 27.9%), 다양한 역량의 보유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다.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성과는 교육과정의 이행을 통해 가시화 되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강조점의 변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와 현재보다 더 강화시켜야할 교육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현재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한국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한국사, 사회 순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사회, 영어 순이었

다. 일반적으로 자녀교육에서 주요 교과위주의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실과는 달리 한국사와 사회과목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체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매스컴에서 수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응답자 전체). 그러나 초등학생 학부모들로 한정해 보면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이 1, 2순위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도 전체 응답자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1, 2순위로 꼽았으며, 중학교 학부모들은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응답자가 진로교육,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진로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순으로 답하였다. 이 같은 응답경향을 볼 때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높으며,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의 개발 및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학생 생활

1) 학생의 건강과 생활

학생의 건강과 생활 영역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관련된 문항(IT 기기중독성, 스트레스, 인성수준, 학교폭력, 학칙제정의 주체, 교육벌)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학생들의 IT 기기 중독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우려를 보였다, 중독성이 높다(매우 높다+높다)는 의견이 85.7%(학부모 집단은 85.3%)로 매우 큰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중독성이 높다는 의견은 77.2%(초등학부모의 경우 74.2%)이며, 중학생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87.5%(중학생 학부모는 90.9%)가 동의하여 특히 높았다. 고등학생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4.1%가 동의하였으며,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본 고교생의 중독성에 대한 동의 비율은 80.5%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IT 기기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중학생들의 중독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경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도 83.5%가 심하다(매우 심하다 포함)고 지적하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53.8%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41.7%는 보통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해당 학부모의 88.1%(전체로는 84.0%)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하여 학업경쟁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부모의 92.8%(전

체로는 91.7%)가 학업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한 바로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른 시기부터 학업과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의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다(매우 낮다 포함)는 의견이 51.5%로 절반을 넘고 있다. 이는 앞서 '현재보다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이 1순위로 꼽힌 맥락과 일관성을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자 전체에서 인성수준이 높다(매우 높다 포함)는 평가는 16.1%인데 비해 낮다는 평가는 40.7%를 보이지만, 초등 학부모에 한정해 보면 인성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26.1%, 낮다는 의견이 24.3%로 일반인의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높다는 의견은 7.7%(중학생 학부모는 13.5%)인데 비해 낮다는 의견은 60.9%(중학생 학부모는 45.5%)를 보여 중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큼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인성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8.8%(해당 학부모는 8.2%), 낮다는 의견은 60.8%(해당 학부모는 59.0%)이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중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우려가 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기대 이하인 상태에서, 인성교육의 일차적 책임소재를 가정에서 찾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83.5%에 달하여 가정의 협력과 지원이 없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인성수준의 향상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넷째, 정부가 그동안 학교폭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과거보다 완화되었다는 의견은 긍정적인 응답이 12.0%(학부모의 경우 14.5%), 부정적인 응답이 60.5%(학부모의 경우 52.9%)로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나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정적 평가가 덜하고, 지난 2년에 비해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가정교육의 부재(36.7%), 대중매체의 폭력성(19.2%), 성적 위주의 입시경쟁풍토(17.5%),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12.8%)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완화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섯째, 학생의 훈육을 위해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0.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벌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과거의 체벌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교육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학생의 학업활동

학업활동 관련 영역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여 분석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첫째, 수준별 수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50.4%, 반대 38.0%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 학부모들에 국한해 보면 찬성 49.3%, 반대 39.4%로 찬·반간의 차이가 더 줄어든다. 지난 몇 년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찬성의견은 계속 줄어들고 반대의견이 늘어나는데,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해 가정과 학교 모두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학생의 성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학부모라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31.9%), 친구(27.3%)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부모의 학업지원 노력과 같은 문화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력의 격차를 낳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셋째, 사교육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한 비율은 19.1%인데 비해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68.6%, 학부모의 교육관이 12.2%로 지적되었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정책이 1순위(22.9%), 그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14.7%), 대입전형 간소화(14.4%) 순이었으며, 선행학습 금지 정책(10.7%), 학원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6.3%),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2,2%) 등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학진학 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당락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높다고 인식된 'EBS 수능 연계 정책'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63.3%는 유지를, 18.4%는 반대의견을 보여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호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 고교 정책 및 대입

1) 고교 진학 및 학교유형

이 영역에서는 일반계 고교 진학방식으로 자리잡아온 평준화 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 일부 고등학교의 자체선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의견은 1999년 이후 교육여론조사(KEDI POLL)에서 계속 확인해 온 문항으로, 찬성이 62.6%, 반대가 26.8%,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이 10.7%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준화 지지 의견이 60% 정도로 반대 의견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던 경향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과 병행해 온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63.5%가 찬성을 27.6%가 반대의견을 보여 앞서 살펴본 평준화 지지 및 반대 여론과 비슷한 비율로 다양화 정책도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부모 집단에 국한하면 찬성이 56.8%, 반대가 33.9%로 찬·반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데, 이는 자체 선발절차를 가진 특정 고등학교 진학기회를 얻기 위한 자녀들의 진학경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교 다양화로 인해 일부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적을 기초로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 46.3%는 찬성, 41.6%는 반대의견을 보여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47.7%가 반대, 43.8%는 찬성의견을 보여 반대의견이 오히려 약간 더 앞섰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2) 대학입시

이 영역에서는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전형요소,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25.2%), 인성 및 봉사활동(24.0%), 특기·적성(22.7%), 고교 내신 성적(21.8%) 순으로 나타나 이들 네 가지 요소가 대입전형의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별 고사로 볼 수 있는 면접(4.6%), 논술(1.4%)은 매우 낮게 나타나 대학 자체 선발 시험에 대한 지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수능과 내신 성적의 중요도에 대해 초·중·고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 비해(25.7%로 2순위), 이미 자녀가 대입관문을 통과한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수능 성적에 대한 지지도가 32.2%로 다른 응답자 군에 비해 더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42.7%는 '입시경쟁이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34.8%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5.6%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는 비율이 47.1%로 높은데 비해 대학원졸의 고학력자들은 54.9%가 '경쟁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 유지'를 전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고학력자들의 이 같은 전망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조만간 대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대입경쟁의 양상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바.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무상급식, 우선 재정 지원 사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재정 우선 투자 요구, 지방교육재정의 축소 논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은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37,2%)인 반면,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초 48.6%, 중 38.8%, 고 36.05)이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만 지원하자는 의견과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만 지원하자는 의견을 합친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초 48.9%, 중 58.5%, 고 60.9%)도 학교급별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교육복지 부문의 교육재정 투자 요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국민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재정 지원을 초·중학교 경우와 고등학교 경우에서 달리 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초 44.3%, 중 43.7%),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33.1%)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비교적 국민들은 무상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단계와 수요자 부담인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재정 투자처를 달리 보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단계는 무상·의무교육이 도입되지 않고 아직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만일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은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계속 찬성(58.8%)하고 있으며, 매년 이에 대한 도입 요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국민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확고하며 또한 다수 국민들이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납입금과 기타 교육경비를 상당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재정 부족으로 그 도입이 난망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보

나, 정부 정책 공약으로 보나, 또는 OECD 선진국들의 12년제 무상(의무)교육 구현 동향으로 보나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문제로 보인다.

넷째, 교육재정 부문에서 국가재원의 우선 투자처로 고등교육단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30.2%),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19.4%), 고등학교 무상교육화(18.9%) 등의 순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보육 무상 지원이나 고교 무상교육 도입 보다 대학 등록금 부담 축소 문제를 더욱 중요한 투자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학단계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입학하는 보편화 교육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실제 그 등록금이나 교육비는 국민들에게 상당 경제적 부담 혹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 단계에 필요한 교육재정으로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 지방에 균등하게 배분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여유 재정을 교육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데 사용 하여야 한다(36.5%)고 생각하고 있어 그 축소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재정이 양적 수준의 교육발전 지표에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의 질을 그리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을 관리하는 예산 당국은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질적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학생수 감소에 의한 교육재정 축소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학생수 감소에 의한 교육재정을 어디에 추가 투자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사. 대학교육

대학교육 영역으로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교수 능력과 자질, 교수의 교육행위, 대학재정의 투명성, 사립대학 및 지방대학 지원, 대학평가 등에 대해 조사해 본 바,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지만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들

은 대학들이 인재 양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5점 척도 평균 2.32),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도(5점 척도 평균 2.56), 그들의 교육행위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4년제 2.75, 전문대 2.87)으로 보여 대학의 교육개혁이 매우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 동안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대학을 직·간접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이 증가하자 고등교육의 실상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 대학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매우 예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대학들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인력양성 기능이나 교수들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다(44.8%)는 반응을 보인 것은 앞에서의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와 더불어 그 운영의 투명성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불신이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불신은 결국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반대(63.8%)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 역시 그리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비교적 우호적(찬성 65.4%)으로 바라보고 있어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의 대학 중 지방대학의 비중이 높고 실제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발전에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방대학에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만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강화는 국민들에게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학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학평가 결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지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 예정자들에게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올바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대학평가 지표는 보다 적정하게 선정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대학평가 시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35.2%)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1.6%), 교수들의 교육 역량(17.7%)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들 지표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대학평가 지표에서 졸업생의 취업률 지표가 중시되어 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이보다 대학경영의 건전성, 투명성 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대학평가 지표들에 대한 우선순

위 혹은 배점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아. 교육현안

교육현안으로 선호하는 교육정책, 유·보 통합, 교육감 직선제, 9시 등교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첫째, 현 정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그들 정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초등돌봄교실'(1순위 29.9%), '누리과정 확대'(1순위 22.2%), '인성교육 활성화'(1순위 12.6%), '자유학기제'(1순위 10.2%) 등의 정책들을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동의하였고, 대학특성화나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대학입시 간소화 등의 정책에는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고등교육관련 정책 보다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고등교육정책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고등교육정책보다 초·중등교육정책에 관련된 국민 당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단계의 정책들을 계속 개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은 초등돌봄교실이나 누리과정처럼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교육지원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고등교육정책들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통합 64.8%)이다. 같은 유아를 상대로 하는 기관이면서도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분리에 의한 비효율 행정의 대표로 인식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이 두 기관은 통합 관리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민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이 이러한 통합에 찬성의견을 보이는 이유는 어린이 집의 보육료 지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어린이 집에 유아를 맡긴 부모들이 한 때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유·보 통합이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선제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직선제 유지 반응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대표성 반영은 여전히 직선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국민들이 갖고 있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은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하거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후보가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의 직선제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제도를 선택하여 혼란을 주기 보다는 직선제를 유지하고 대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 등교시간 9시로의 변경 문제는 올해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국민들이 9시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에 의해 나타나는 장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찬성의견은 고등학교(53.8%)보다는 중학교(64.6%)에, 중학교 보다는 초등학교(75.3%)에 더 많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으로 보면 9시 등교정책에 대한 획일적 반대보다는 선택적 도입을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자. 교육관

교육관 영역으로 학생의 등교 거부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의 교육관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56.8%)이 높은 것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정규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는 종래의 획일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학교를 바라보는 국민 의식이 점차 유연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녀들이 원하면 반드시 정규학교가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여타의 교육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 교육환경 변화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부모들의 교육관이 좀 더 개방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선택보다는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교육관이 상당 변모하고 있음도 반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비율(63.3%)이 높은 것으로 보면 국민들은 대학 진학 위주의 풍토 속에서도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고졸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점은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항상 어디든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대학 진학 위주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자들의 취업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학벌에 대한 국민 의식은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66.1%)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일수록 심한 것으로 보면 학력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들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 역시 심각할 정도로 존재(68.9%)한다고 보고 있고, 대학 서열화 역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60.4%)이며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26.1%)이라는 의견도 많으며, 한국사회에서의 학벌주의 역시 향후에도 큰 변화 없을 것(57.8%)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학벌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실감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학벌에 대한 고착된 국민의식은 범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를 개조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민들의 자녀교육관은 매우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19.1%)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했다(14.5%)는 그 자체만으로 가늠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24.3%)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21.9%)으로 가늠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육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관점으로 교육에 대한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좋은 직장 혹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 보다 좋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 직장이나 일을 갖지 못하면 결국 성공적인 교육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교육정책은 고용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되어야 함을 일깨우게 해준다.

2 정책 제언

지금까지 10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전의 조사 결과들과 비교·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이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9개 영역별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첫째, 최근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권한 소재를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런데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단위학교가 책무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을 비교적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세세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역량을 키우고 행사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교육당국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이양의 기조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해외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물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배우고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못하다. 해외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우리교육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질 자체의 문제 외에도 교육수요자들과의 소통과 참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로 학부모들이 지적한 과제들에 주목하여 학교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서 알 수 있듯이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지도를 탈피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선호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1순위로, 통학거리를 2순위로 꼽고 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통학거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신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교원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나아가 대학을 선택할 때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나름의 특성을 살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 교사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당시 성적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선발경쟁을 거쳐서 임용되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자질에 대한 국민 및 학부모들의 평가가 높지 않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교원들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높지 않은 모순적 현실에는 교원자격을 획득하는 과정과 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원양성방식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십여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양성은 임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중심으로 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학생교사(student teacher)들은 학생지도라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직 입문을 준비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교사지망생들은 임용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학 수업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사 또한 예비교사의 현장적합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교실과 학교라는 구체적 장면에서 교직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양성 및 현직연수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에게 당장 요구되는 능력이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단지 수업을 잘 하는 교사보다 생활지도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과 관련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교원양성기관 및 현직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학교급별 수요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재규정하고 교원의 유입통로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를 일정비율 교사로 초빙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꾸준히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교원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적 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 교사들의 재교육 기회가 확장되어야 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역량보유자를 교육계로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과정 운영

첫째, 교육과정에서 현재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한국사와 사회과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한국사 과목의 수능 도입 및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 등을 통해 이슈화 되어 노출빈도가 많아진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의 한국사 및 사회 교과는 단순한 역사적 지식의 주입식 교육을

넘어 나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 눈으로 이해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높게 나오며 학교급이 오를수록 특기·적성교육과 진로교육의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학교교육은 주요 교과위주의 점수경쟁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초 자질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내실화함으로써, 자유학기 이후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로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 학생 생활

1) 학생의 삶과 건강

먼저, 학생들의 IT 기기 중독성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특히 중학생들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90%를 넘고 있다. 이 시기가 발달심리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래문화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쉽지 않은 시기이다. 또한 중학교부터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중학생들은 질풍노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생들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순탄하게 전환하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학생들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올해 여름부터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발효되었다. 동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교육청과 학교도 5년 단위의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주체가 가정이라는 올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책임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그 실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완화와 관련하여서도 가정의 역할 및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지적이 높았던 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예방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폭력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적 성장도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가 사소한 폭력의 기미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적 의지를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2) 학생의 학업활동

첫째, 수준별 수업은 획일화된 교육의 해결방안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준별 교육이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효과성에는 논란이 있다.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수준별 수업이 안정적인 학력향상 효과도 보이지 않고 학부모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수준별 수업의 운영실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수준별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습의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는 높은 수준반 보다 학습동기도 낮고 이해도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낮은 반 학생들을 위한 정성어린 배려와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업능력이 낮은 반에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를 배정하고 학급규모를 줄여주는 등의 역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을 사회적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생각해 온 우리사회에서 학부모 변수가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학부모 다음으로 교사의 영향력을 꼽고 있는데,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출신성분과 가정 배경을 넘어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소외 지역과 취약집단을 위한 우선적 지원과 더불어 가정배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저성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보다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매우 강하다. 이는 사교육의 해소방안으로 공교육의 질 개선을 요구해 온 언론 등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게 한다. 사교육이 학부모의 가정배경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성적우수자들이 모인 인기학교에서 고액 사교육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공교육의 질 개선 및 정상화는 사교육 완화 여부와는 별개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성행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교육 완화를 교육정책의 제 1순위로 내세우게 되면 공교육의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해소될 수도 있다. 가령 대학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사교육의 팽창을 가져온다는 지적때문에 논술이나 글쓰기를 규제하게 되면 학교는 더욱더 단편적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특정 평가 요소가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거나 학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은 원천적으로 불리하여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는 사교육 자체를 억누르는 방법보다 상급학교 진학시험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당락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 고교 정책 및 대입

첫째, 일부 정치세력이나 언론을 통해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성여론은 반대의견을 배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지만큼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고교 평준화와 다양화는 상호 배척되는 정책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중등단계인 고교 진학에서 성적으로 서열화하는 선발경쟁은 최소화하되 학교별 특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가 제대로 계발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우수 학생의 선발을 통해 입시 명문을 지향하는 일부 고교 유형(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25.2%), 인성 및 봉사활동(24.0%), 특기·적성(22.7%), 고교 내신 성적(22.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별 고사로 볼 수 있는 면접(4.6%), 논술(1.4%)는 매우 낮게 나타나 대학 자체 선발 시험에 대한 지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선발의 자율성을 대학별 고사와 동일시하는 대학 측의 요구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회적 비용의 적정화라는 과제를 공유하면서 수능위주의 선발, 학생부 위주의 선발이라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바.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첫째,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무상지원보다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등을 가미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보육대란을 경험한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일률적 무상지원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5세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의무를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법적 현실과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예산확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생의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의견과 일정 소득이하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자는 의견이 학교급별로 상이한 가운데,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무상급식의 확대 방식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여건의 성숙도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역시 현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그 찬성률이 높은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실제 고교무상교육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도 대부분 이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자 부담 교육인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정책 상황에서 국민 보통교육 단계로 의무교육화 되고 있는 고등학교를 무상교육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 보편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학은 이제 계층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입학하는 교육기관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점차 완화해주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교육비 지출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장학재단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지원정책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어느 가정이든 대학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수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여유 재정은 현재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학생수 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 질적 지표들이 OECD 가입국가들의 상위 수준에 도달할 때로 상정하여 교육 수준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 대학교육

첫째,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절히 양성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적합성과 직업적 실용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대학을 통해 길러지는 인력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실용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이든 사회든 대학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올바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 향상이야말로 대학 발전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교수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강화되고 주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학교수 평가체체가 정교하게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의 직급 승진시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반영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주기적 교육평가 결과 질적 수준이 낮은 교수들에 대한 대책도 대학 스스로 강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전체 교수들의 질이 우수하다는 국민들의 반응을 얻을 때까지 이러한 교수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들은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둘째, 대학경영에서의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 공시에서 대학재정 운영 상황의 구체적 내용들을 게시하도록 재정 지표들을 더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동시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면 학생 감사청구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도 자신이 재학하는 대학의 재정 운영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대학생들의 학교재정 투명성 요구도 적절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14년에 제정 시행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체질을 강화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와 그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활로는 여전히 특성화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워 대학 나름의 특성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대학평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우선 대학평가 지표를 보다 정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대학평가시 대학의 취업률이나 재학률, 정원 확보율, 대학의 교육시설이나

여건 개선 등의 지표보다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수들의 교육 역량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의 실질적 교육역량을 평가지표화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고등교육 지원사업이 있고 각 사업별로 다양한 지표에 의해 대학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각종 대학평가의 통합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를 강화하여 대학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대학평가가 너무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져 대학의 평가 업무 준비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어 교수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좀 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연구와 준비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평가 준비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결국 교수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고등교육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 각종 사업에 적용되는 대학평가 시스템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바로 연계 통합되도록 종합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 교육현안

첫째,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 중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는 정책들은 보다 강화 혹은 지속적인 시행을 전략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이 선호하는 초등돌봄교실 정책과 누리과정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정책도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확대 실행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과 분석 시 국민들의 선호도 혹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드시 포함시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대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누리과정에서의 국민적·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매우 심하였다. 교육감 소관 사업으로 어린이집 관할권이 통합되었다면 당연히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혼선이 재발될 가능성은 소멸되었지만 통합이 되지 않은 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갈등의 씨앗을 계속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해 그 동안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

러나 현 상황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현 제도의 유지 보완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는 여전히 교육자치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법 중 가장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출마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점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자금이 과도하게 집행되어 선거 후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는 점도 역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선거 관리를 엄정 운영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선거비 과도 부담을 막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9시 등교문제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으나 국민 여론은 일단 찬성 쪽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책 문제는 아니며, 현재와 같이 지방의 교육감이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의존하는 결정 보다는 학교 자율경영 중시 관점에서 학교장에게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정책추진으로 판단된다. 학교 등교 시간까지 교육감이 해당 관할 지역 내에 획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시 등교 문제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여건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교육관

첫째, 정규학교뿐만 아니라 비정규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각종 대안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국민들은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는 종래의 관점에서 자녀가 원하면 비정규학교라도 괜찮다는 관점으로 교육관이 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재학 중인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왕따나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선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성과 능력, 또는 다양한 조건과 흥미에 적합한 대안적 학교 개발이나 혹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 학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홈스쿨링과 같은 대안적 교

육 제도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졸자들의 선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도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좀 더 보호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측으로 볼 때도 과잉 학력 시대에 고졸자로 충당해도 좋은 일자리를 굳이 대졸자에게 할당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어 고졸자의 취업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탄력적 운영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지지를 보낼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교육부만으로 시행하기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두어 정부 3.0 차원에서 상호 협력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뿌리 깊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교육관을 점검해 본 결과 여전히 학벌 차별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적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 혹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존재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서열화나 학벌주의 역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관 고착은 지금까지의 학벌위주의 사회를 개혁하고자 진행했던 다양한 조치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학벌 사회의 철폐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각종 노동시장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졸업장 보다는 자격증 위주로 취업 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기도청(2013). 경기 교육정책 설문조사. 경기도청.

교육부(2015).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부.

김양분, 김현진, 박호근(20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8.

김일혁, 김양분(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24.

김정민, 김일혁, 양승실, 이선호(2014a).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24.

김정민, 김일혁, 양승실, 이선호(2014b).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한구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pp2014-16.

김형주, 김영애, 조선하(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9-R02.

남궁지영, 김창환, 우명숙(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24.

남궁지영, 우명숙(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03.

남궁지영, 우명숙(20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23.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20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특별시의회(2014).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ARS 여론조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청(2012).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서울특별시청.

성기선(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199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9-5.

유균상, 남궁지영, 김일혁(200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31.

이강주, 양승실, 차성현(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통계청(2014).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3). 우리나라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3). 대학입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2011.07.28.). 프랑스: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 낮아.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2011.10.31.). 독일: 독일 부모의 교육열과 교육 목표에 관한 연구결과.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2012.02.13.). 핀란드: 학교체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2014.02.24.). 일본: 학제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현영섭(2008). 성과중심의 인재정책 평가모형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OR 2008-06.

William, J. B. & Shane, J. L.(2010). The 42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William, J. B. & Shane, J. L.(2011). The 43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William, J. B. & Shane, J. L.(2012). The 44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William, J. B. & Shane, J. L.(2013). The 45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
William, J. B. & Valerie, J. C.(2014). The 46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William, J. B. & Valerie, J. C.(2015). The 47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웹사이트〉
행정자치부(http://rcps.egov.go.kr)

KEDI POLL 2015

Primary Researcher Sohyun, Im
Co-Researchers Younghae, Kang
Heungjoo, Kim
Okkyung, Cho
Research Assistant Youngeun, A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KEDI POLL, which completes its 10th research in 2015, has surveyed the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he current Korean education to grasp the changing modes and trends of the public opinions. The overarching goals for this research are to collect basic data about the public opinions on pending education issues and utilize the information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ncerned policies.

The detailed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o survey the public opinions about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and its practices, and to compare with the previous survey results since 1999.

second, to find out the public's diverse views and positions about the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the lenses of the media

thir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survey outcomes.

This research surveyed 2000 people sampled from 39,273,073 adults between 19~75 in their ag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five weeks, from July 27th till August 28th, 2015.

Survey Questionnaires consist of 53 items from 9 areas, which include: role the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and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eachers, curriculum management, student life; policies for high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admission; educational welfares and educational finances; higher education; pending educational issues; views on education.

The research outcome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other educational authories, the majority of the survey participants think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basic principles and policy directions for public education; super intendants and local school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developing detailed policies and indicators for standardized student learning outcomes. And finally, the school principals are in charge of basic student learning.

Second, the public's opinions regarding the educational quality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ve not been positive since 2011. Public opinion on policy directions and efforts to improve school quality are different by the levels of school education.

Third, teachers' abilities and their qualifications are not highly evaluated by the survey participants. The survey participants' perceptions about the primary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eachers include: skills for student guidance, study guidance, and career guidance for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respectively.

Fourth, the survey respondents think that Korean History and Social Studies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they are now. And they also list character education for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career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as the primary educational area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Fifth, students' addictive tendency in IT gadgets and stress come from academic competition still remain to be high. And the overall levels of humanity and morality are evaluated as low. In addition, the majority respondents answer that family should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character education and school violence.

Sixth,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 that the primary factor of student environment that affect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s parents. And the ultimate reason of receiving private education is social structure that excessively emphasize academic clique and education, rather than dissatisfaction for public education.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measure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respondents answer that linking EBS courses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Seventh, many survey participants consistently support the policies of standard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s. And they also agree with some high schools select their students based on their academic scores, but responses from the parent group are more negative toward this item.

Eighth, survey respondents list the CSAT scores should be taken most for college admission, and they think that competitions for college admission would be less severe, but competitions for entering prestigious universities would remain intensive.

Ninth, more survey participants answer that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 care and early chil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ased on household's income levels. However, free school meal plans should be applied to all students.

Tenth, regarding budget allocation for educational welfares, more respondents choose school meals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s, entrance fees and school operating expenses for high school education. More than a half of survey respondents continue to agree with free high school education, and they select financial supports for college tuitions and scholarships as the first choice for educational finances. For the item asking reducing local educational finance, respondents answer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but they think that the surplus funding should be expended for quality improvement of educational services.

Eleventh, the respondents perceive that universities do not train talented individuals as well as they are expected, and the faculty members' capability and qualification fail to receive full confidence from the public. Moreover, the respondents negatively perceive about transparency of universities' financial operation, and more respondents are against policy of increasing public funding assistance for private universities. On the contrary, the respondents display relatively amicable attitude toward financial assistance for regional universities, which reflect that the public think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ies is important.

Twelfth, the survey respondents perceive the following policies positively: elementary school-child care program, expa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a, emphasizing character education and implementing free semester system. And overall agreement is given to merg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direct elections system for superintendents.

Thirteenth, the people's educational views are more liberalizing thank before. High

rate of respondents answer that if their children refuse to go to schools they would try to find alternatives because they think that completing regular schooling is not an absolute path for everybody. And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 to introducing quota system to newly employment which allow to secure certain number of seats for high school graduates. In additi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are becoming more practical.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they think that the success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is for their children to find 'good' jobs, or to work followed by their desires. However, despite efforts from all walks of life, the public perception about the academic clique does not seem to be changed much compared to the previous surveys.

The followings ar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s:

First, the roles of educational authorities at different level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and more institutional autonomy needs to be provided for individual schools maintaining policy tone of devolution.

Second, to revive people's trust in public education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ovide differentiated educational services and quality education programs that reflect school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diverse demands for different schools and class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teacher training curricula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Third, rather than focusing on subject-centered education for test preparation, schools should make efforts to provide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services that allow students to find and pursue their interests and strengths.

Fourth,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should explore and seek for measures from all angles that guarantee educational outcomes and accountability of the local community.

Fifth, college admission policy is to continue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trends such as selecting students mainly based on students' CSAT scores and their school records while working on revitalizing the public education and balancing social expenses.

Sixth, budget surplus due to decrease in student numbers should be invested in educational quality improvement efforts. Thus, grant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authorities need to be maintained the current level.

Seventh, higher education reform efforts to improve its quality continue to be pursued in more active manners, and transparency of university operation should be emphasized in implementing such measures as university evaluations.

Finally, efforts and measures are to be made and prepared continuously in order to remove rooted academic-centered social atmosphere.

key words: Education poll, Education policy, Pending education issues, educational views, public opinion trend

KEDI

부 록

부록 1 1–10차 설문 문항별 분류
부록 2 2015년 조사 도구
부록 3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부록 4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부록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부록 1 1-10차 설문 문항별 분류

(문항번호) ● 신규 문항, ○ 기존 문항, ◉ 수정 문항(마지막 수정문항 기준 선택지 및 하위문항 변경, 추가, 삭제)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학교급별 학교교육 만족도	●(1)	◉(1) ◉(24)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2)	◉(5)	○(22)	○(7)	◉(4)	◉(12)	○(21)	○(21)		◉(12)		◉(10)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11)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평가	●(3)	◉(8)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4)	○(9)			◉(5)	◉(4)	○(4)	○(4)		◉(4)		○(4)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5)	◉(10)										◉(47)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6)	◉(12)	◉(15)	○(22)	○(26)	○(16)	○(25)	○(25)		○(20)	○(3)	○(25)
사립 중·고등학교에 선발권 부여	●(7)											
수능반영 비율 축소, 다양한 기준 및 방법 의한 대입제도	●(8) ●(9)	◉(14)										
학교의 5가지 역할 수행 평가	●(10)	◉(2)										
학교평가 정책 찬반 의견	●(11)	○(15)										
학교 수익사업 찬반 의견	●(12)											
학교 등록금 인상 또는 증세 부담 의사	●(13)											
정부의 교육 투자 수준	●(14)	◉(17)										
과외교육 실태 변화	●(15)	◉(18)										
과외를 하는 주요 이유	●(16)	◉(19)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자녀 과외교육 비용 부담정도	●(17)	⦿(21)										
학생체벌	●(18)	⦿(22)	○(6)	○(5)	○(9)							
교사에 대한 태도	●(19)	⦿(3)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정책	●(20)											
촌지 관행	●(21)	⦿(23)										
학생 비행	●(22)	⦿(4)										
교육개혁 추진 평가	●(23)											
교육개혁 정책 평가	●(24)	⦿(11)										
사회(평생)교육 경험	●(25)	⦿(29)	⦿(31)									
사회(평생)교육 참여 못한 이유	●(26)	⦿(31)	⦿(33)									
사회(평생)교육 요구	●(27)											
사회(평생)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의 지원	●(2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평생)교육에 대한 노력	●(29)											
가정의 컴퓨터 보유 여부	●(30)											
컴퓨터 활용 능력	●(31)											
컴퓨터 구입 계획	●(32)											
공교육 내실화 방안		●(6)	⦿(3)	⦿(3)	○(3)							
교육투자 우선순위		●(7)										
자립형 사립고 허용 여부		●(13)										
학교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5가지 방안 의견		●(16)										
학교교육의 개선과 과외교육		●(20)										
대학교육의 중시 할 내용		●(25)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금 정책		●(26)	○(27)	○(30)								
대학 재정 확충 (기여입학, 등록금 인상, 세금인상)		●(27)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학부제 찬반 의견		●(28)										
사회(평생)교육 소요 경비		●(29-2)										
사회(평생)교육 참여 이유		●(30)	○(32)									
정보화 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		●(3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수·우·미·양·가)			●(1)	○(1)	◉(1)	◉(2)	○(2)	○(2)	◉(1) ◉(2)	◉(2)		◉(2)
교사의 역할 수행 평가			●(2)	○(2)	◉(2)	◉(5)	○(8)	○(8)		○(6)		
학교평가 시행 주기 의견			●(4)									
학교폭력 완화 노력			●(5)	○(4)	○(8)	○(14)	○(16)	○(16)		○(19)		◉(16)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세금 인상			●(7)	○(23)	○(30)							
사교육비 변화 예측			●(8)	○(24)	○(31)	○(39)	○(45)	○(45)		○(40)		
사교육비 경감 대책			●(9)									
대학별 본고사			●(10)									
대학별 논술 고사			●(11)									
대입- 고교등급제			●(12)									
사립대학 기여 입학제도			●(13)									
학교생활기록부 50%이상 확대 반영 정책			●(14)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의견 (동일 교과서)			●(16)	○(10)	○(12-1)	○(19)	○(23)	○(23)		○(14)		○(20)
방과후학교 찬반 의견			●(17)	○(13)	○(14)							
영어 공교육 시기			●(18)			◉(20)	○(24)	○(24)		○(1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19)	○(25)	○(34)	○(38)	○(44)	○(44)		○(39)		○(6)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20)	○(20)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21)	○(21)								
주5일 수업 도입 시기			●(23)									
두발 및 복장 자율화			●(24)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5)	○(28)	◉(37)	◉(27)	○(33)	○(33)		○(29)		◉(36)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26)	○(29)	◉(38)	◉(28)	○(34)	○(34)		○(30)		◉(38)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28)	○(31)	○(40)							○(40)
학교법인이사 추천제도			●(29)	○(33)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입학할당제 및 등록금차등제			●(30)	○(34)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			●(34)	○(36)	○(46)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			●(35)	○(37)	○(47)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경제적 부의 증대에 대한 영향)			●(36)	○(38)	○(48-(1))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7)	○(39)	○(48-(2))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			●(38)	○(40)	○(48-(3))							
자녀교육 성공(실패)에 대한 관점			●(39)	◉(41)	◉(49)							◉(53)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6)	○(11)	○(15)	○(17)	○(17)		○(11)		◉(12)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8)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9)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11)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12)								
방과후학교 학원 강사 강의 찬반 의견				●(14)	○(15)							
영어교과 원어수업 (초등학교)				●(15)	○(17)							
영어교과 원어수업 (중·고등학교)				●(16)	○(18)							
영어교과 원어수업 (사교육비 변화)				●(17)	○(19)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18)	○(20)							○(9)
교장 공모제 찬반 의견				●(19)	○(21)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26)	○(35)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				●(27)								
대학 등록금 후불제 또는 미래소득연계 학자금대출				●(32)								
입학사정관제 공정성에 따른 소송문제 의견				●(35)								
교육비리 심각성 (뇌물, 인사비리 포함)					●(6)							
교육비리 원인					●(6-1)							
교육감 선출 방식					●(7)							
교사 언어폭력의 심각성					●(10)							
맞춤식 수업 (수준별 교과서 제작)					●(12-2)							
고교 학점제 도입					●(13)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예측					●(16)							
교장 공모제 효과 예측					●(22)							
교원 평가 결과 활용 (교사 연수)					●(23)							
교원 평가 결과 활용 (인사 반영)					●(24)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25)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7)	○(17)	○(26)	○(26)		○(21)	○(4)	○(26)
무상급식 지원 범위					●(28)	◉(21)	○(29)	○(29)		◉(25)		○(31)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29)	◉(22)	○(30)	○(30)		◉(26)		◉(32)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외고, 국제고, 특목고, 자율고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32)							
EBS 강의 수능 반영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 예측					●(33)							
대학에 대한 전반적 평가					●(36)							
대학 진학률에 대한 인식					●(39)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우선순위					●(41)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 선발 규모 확대					●(42)							
입학사정관 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43)							
입학사정관 제도 기대 효과					●(44)							
입학사정관 제도 문제점					●(45)							
창조성 계발 필요성					●(50) ●(50-1)							
본인 또는 자녀의 창조성 전반적 평가					●(51) ●(51-1)							
본인 또는 자녀의 창조성 항목별 평가					●(52)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창조성 신장					●(53)							
창조성 계발의 학업성취 또는 직무성취 영향					●(54)							
정규학교교육이 창조성 계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55)							
정규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의 실제 활용 비율					●(56) ●(56-1)							
창조성 계발 방안					●(57)							
기존 대입에 필요한 능력					●(58)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					●(59)							
창의성과 수입 관계					●(59-1)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새 대입제도에 따른 필요 능력					●(59-2)							
창조성 계발에 따른 경제성장률					●(59-3)							
교육행정의 권한						●(1)	○(1)	○(1)		◉(1)		◉(1)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3)	◉(3)	○(3)		○(3)		◉(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6)	○(9)	○(9)		○(7)		◉(7)
교사 월급 결정 기준						●(7)	○(10)	○(10)				
학생 성적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8)	○(11)	○(11)				
직업으로서 교사						●(9)	◉(12)	○(12)		○(8)	○(1)	
개인의 성공 요인 (타고난 능력/후천적 노력)						●(10)	○(18)	○(18)				
학생의 학업성취(성적) 영향 요인 (교사/학부모/친구)						●(11)	○(19)	○(19)		○(16)		◉(21)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13)	○(13)	○(13)		○(17)		○(19)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유무						●(18)	○(22)	○(22)		○(15)		
입학사정관제 점수위주 입시제도 보완						●(23)	○(27)	○(27)				
대입 중요 반영 항목						●(24)	○(28)	○(28)		○(23)	○(5)	◉(28)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25)	○(6)	○(6)				◉(23)
우수 교육정책 평가						●(26)	○(7)	○(7)				
대학 재정의 투명성						●(29)	○(35)	○(35)		○(31)		◉(39)
대학 재정지원(장학금 포함)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						●(30)	○(36)	○(36)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 부담 의향						●(31)	○(37)	○(37)		○(32)		
자녀의 대학 졸업 후 구직 성공 가능성						●(32)	○(38)	○(38)		◉(33)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3)	○(39)	○(39)		○(34)		○(49)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4)	○(40)	○(40)		○(35)		○(50)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35)	○(41)	○(41)		○(36)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의견						●(36)	○(42)	○(42)		○(37)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37)	○(43)	○(43)		○(38)		○(48)
입시 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40)	○(46)	○(46)		○(41)		○(29)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41)	○(47)	○(47)		○(42)		○(51)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42)	○(48)	○(48)		○(43)		○(52)
해결이 필요한 교육 문제							●(5)	○(5)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14)	○(14)		○(10)		⊙(13)
학교폭력의 원인							●(15)	○(15)		○(18)	○(2)	⊙(17)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20)	○(20)		○(9)		⊙(14)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의견							●(31)	○(31)		⊙(27)	○(6)	⊙(33)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32)	○(32)		⊙(28)	○(7)	⊙(34)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49)	○(49)		○(44)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50)			○(8)	○(45)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51)				○(41)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52)		○(45)		
초등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3)			
중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4)			
고등학교의 시급한 교육정책									●(5)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성과									●(6)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관심도 및 동의 정도									●(7)			
사회인식 및 교육관									●(8)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5)		⊙(8)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22)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24)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46)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시급성										●(46-1)	○(13-1)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										●(46-2)	○(13-2)	⊙(43)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9-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생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9-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인지 여부											●(10-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인식											●(10-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10-3)	
자녀 성장에 대한 바람											●(11)	
가정교육 역점 사항											●(12)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동의정도(1)											●(1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동의 정도(2)											●(14)	
교육현안 이해도 및 동의정도											●(15)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5)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15)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18)
사교육의 근본 원인												●(22)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24)

문항	1999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	2013-2	2014-1	2014-2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의견												●(27)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												●(30)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35)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37)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42)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44)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견												●(46)

부록 2 2015년 조사 도구

KEDI POLL 2015 설문조사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문제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파악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응답이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연구본부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 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역삼동)

DBID

A. 기초 자료 질문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③ 중소도시(시 지역) ④ 읍·면(군) 지역

3. 연령 (만 세)

4. 혼인 상태
   ① 기혼 (☞5번으로) ② 미혼 (☞1-1영역 1번으로)
   ③ 기타 (☞자녀가 있는 경우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1-1영역 1번으로)

5. 자녀의 수를 아래의 분류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총 수	____명
①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나 아동	____명
②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아동	____명
③ 초등학생	____명
④ 중학생	____명
⑤ 고등학생	____명
⑥ 전문대 학생	____명
⑦ 일반대 학생	____명
⑧ 대학원 학생	____명
⑨ 직장인	____명
⑩ 기타(미취업, 출가 등) : _____	____명

1-2. 학교교육의 질

2.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수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우 (잘하고 있다)
③ 미 (보통이다)
④ 양 (못하고 있다)
⑤ 가 (전혀 못하고 있다)

3.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②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
⑤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⑥ 기타_____

4.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대학교_____

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④ 학교시설 ⑤ 지역 환경 및 여건 ⑥ 통학 거리
⑦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⑧ 졸업생의 취업 실적 ⑨ 교육비
⑩ 기타_____

5. 다음 중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
②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
③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 주는 학교
④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⑤ 기타 _____

6.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보낼 생각이 있다
② 보낼 생각이 없다
⓪ 잘 모르겠다

2. 교사(질/질 관리제도)

7.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8.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 지도 능력
④ 학급 경영 능력
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⑥ 기타_____

9.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3. 교육과정 운영

10.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교과 보기	
① 국어	⑦ 체육
② 수학	⑧ 예술(음악/미술)
③ 영어	⑨ 기술·가정
④ 사회(역사/도덕 포함)	⑩ 제2외국어
⑤ 한국사	⑪ 한문
⑥ 과학	⑫ 교양

11.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할 교육**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교육내용(교육영역) 보기	
① 창의성교육	⑥ 성교육
② 인성교육	⑦ 환경교육
③ 진로교육	⑧ 안전교육
④ 특기·적성교육	⑨ 다문화교육
⑤ 민주시민교육 (예: 타인존중, 공공질서 교육 등)	⑩ 통일교육

4-1. 학생의 삶과 건강

12.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3.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4.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5.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② 학교
③ 사회

16.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17.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② 가정교육의 부재
③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④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⑤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⓪ 잘 모르겠다

18. 초·중·고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장·교감
② 교사
③ 학생
④ 학부모
⑤ 기타 _____

1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훈육을 위해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벌이란 학생들이 학칙을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운동장 뛰기, 교실 뒤 서 있기, 봉사활동하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훈육을 의미합니다.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4-2. 학습성과

20. 학생의 성적에 따라 교과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1.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학교)
② 학부모(가정)
③ 친구(교우)
⓪ 잘 모르겠다

4-3. 사교육

22. 다음 중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②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③ 학부모의 교육관
④ 기타 _____

23.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방과후 학교 운영
②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③ EBS 수능연계(70% 이상)
④ 선행학습 금지 정책
⑤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⑥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
⑦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
⑧ 대입전형 간소화
⑨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⑩ 기타 _____

24.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⓪ 잘 모르겠다

5-1. 고교 진학 및 유형

2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란, 고등학교 진학 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추첨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모든 대도시를 포함하여, 전국 31개의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6.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7. 일부 **고등학교가 지원자의 성적 또는 학업능력에 따라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5-2. 대학입시

28.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특기·적성
④ 인성 및 봉사활동 ⑤ 면접 ⑥ 글쓰기·논술
⑦ 기타_____

29.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④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6-1. 교육복지

30. 현재는 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현행)
②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③ 3-5세는 무상, 그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④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⓪ 잘 모르겠다

31.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무상급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겠다
초등학생	①	②	③	⓪
중학생	①	②	③	⓪
고등학생	①	②	③	⓪

32.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②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④ 학교급식비
⑤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초등학교만 해당)
⑥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⑦ 기타_____

33.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6-2. 교육재정 확보 및 지출

34.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②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③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④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⑤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
⓪ 잘 모르겠다

3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선진국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
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
③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한다
④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
⓪ 잘 모르겠다

7. 대학교육(경쟁력/지원제도)

36.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37.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38.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 교수_____ 전문대학 교수_____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39. **대학**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40. 현재 정부의 공공재정이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41.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42.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① 졸업생의 취업률
② 교수들의 연구 역량
③ 교수들의 교육 역량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⑤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⑥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⑦ 기타 _____

8. 교육현안

43. 다음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이들에게 매월 국·공립 6만원, 사립 22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②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저녁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③ 중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 없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④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로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
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및 후속 조치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⑥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⑦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⑧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⑨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44. 현재 학령전 아동 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지도 감독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합해야 한다
②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③ 연령대별로 감독기관을 구분한다(예: 0-2세는 보건복지부,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
⓪ 잘 모르겠다

45.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46. 일부 시·도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9. 교육관

47.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②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⓪ 잘 모르겠다

48.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49.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⓪ 잘 모르겠다

50. 현재 한국사회에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⓪ 잘 모르겠다

51.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52.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53.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B. 인구통계학적 질문

6. 귀하의 교육수준(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현재 고등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7. [기혼인 경우(사실혼 포함)만 응답]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부부임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님

8. 한 달 평균 가구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9.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 _____, 배우자의 직업 _____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군인	(A1) 군인	
기타	(01) 학생 (03)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05) 기타(_____)	(02) 주부 (04) 무직(실업)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기준

부록 3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1.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table>
<tr><th>2015년 설문 문항</th><th>연도</th><th>하위 문항</th><th>비교 집단</th><th>선택지 변동 사항</th></tr>
<tr><td rowspan="5">1. 다음과 같은 교육행정 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table><tr><th>교육행정 권한</th><th>교육부 장관</th><th>시·도 교육청 교육감</th><th>단위 학교 교장</th><th>잘 모르겠다</th></tr><tr><td>(1)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r><td>(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r><td>(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r><td>(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able></td><td>2011</td><td>(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td>초·중·고 학부모</td><td></td></tr>
<tr><td>2012</td><td>“</td><td>초·중·고 학부모</td><td></td></tr>
<tr><td>2013-1</td><td>“</td><td>초·중·고 학부모</td><td></td></tr>
<tr><td>2014-1</td><td>(변경)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변경)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변경)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 (4) 교육과정의 결정</td><td>초·중·고 학부모</td><td>(변경)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 ‘단위학교 교장’</td></tr>
<tr><td>2015</td><td>(변경) (1) 초·중·고 교육 정책의 결정 → (1) 유·초·중·고 교육 정책의 수립
(변경)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마련 → (2)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변경)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변경) (4) 교육과정의 결정 →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td>초·중·고 학부모</td><td>(추가) ‘잘 모르겠다’</td></tr>
</table>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수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우 (잘하고 있다) ③ 미 (보통이다) ④ 양 (못하고 있다) ⑤ 가 (전혀 못하고 있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1		초·중·고 학부모	**(삭제)**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3-2			**(삭제)** '잘 모르겠다'
		(추가) 학교급(유치원교육 또는 보육,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2014-1	**(변경)**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추가)** '잘 모르겠다'
	2015	"	초·중·고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②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활동 ⑤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⑥ 기타_____	2011	순위(1, 2위)	초·중·고 학부모	
	2012	"	초·중·고 학부모	**(변경)**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활동'→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2013-1	"	초·중·고 학부모	
	2014-1	"	초·중·고 학부모	
	2015	**(삭제)** 순위(1, 2위) **(추가)** 학교급(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변경)**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대학교_____ 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④ 학교시설 ⑤ 지역 환경 및 여건 ⑥ 통학 거리 ⑦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⑧ 졸업생의 취업 실적 ⑨ 교육비 ⑩ 기타_____	1999	***자녀가 있는 대상만 응답** 학교급(초, 중, 고)	학교급별 학부모	
	2001	***자녀가 다니는 학교급만 응답** “	학교급별 학부모	
	201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변경)**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 ‘학교시설’, ‘지역환경 및 여건’분리 **(추가)** ‘기타_____’
	2011	**(추가)** 학교급 중 ‘대학교’ 추가 학교급(초, 중, 고, **대학**)	학교급별 학부모	**(추가)** ‘졸업후 해당 학교의 취업 실적’
	2012	“	학교급별 학부모	
	2013-1	“	학교급별 학부모	
	2014-1	“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졸업후 해당 학교**의 취업실적’ → ‘**졸업생**의 취업 실적’ **(추가)** ‘교육비’
	2015	“	학교급별 학부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5. 다음 중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 ②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 ③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 주는 학교 ④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⑤ 기타 _____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6.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보낼 생각이 있다 ② 보낼 생각이 없다 ⓪ 잘 모르겠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2. 교사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7.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8.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 지도 능력 ④ 학급 경영 능력 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⑥ 기타_____	2014-1	순위(1, 2, 3위)	초·중·고 학부모	
	2015	**(삭제)** 순위(1, 2, 3위) **(추가)** 학교급(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의사소통 능력' →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추가)** '학급 경영 능력'
9.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일정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3. 교육과정 운영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0.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는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교과 보기** ① 국어 ⑦ 체육 ② 수학 ⑧ 예술(음악/미술) ③ 영어 ⑨ 기술·가정 ④ 사회(역사/도덕 포함) ⑩ 제2외국어 ⑤ 한국사 ⑪ 한문 ⑥ 과학 ⑫ 교양	1999	학교급(초, 중, 고)	(없음)	
	2001	“ **(추가)** 순위(1, 2, 3위) 추가	(없음)	**(변경)** ‘예절교육’→ ‘인성교육’ **(추가)** ‘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2006	학교급(초, 중, 고) 순위(1, 2, 3위)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추가)** ‘다문화 교육’, ‘창의성 교육’, ‘교과교육’, ‘예체능교육’, ‘특기적성 교육’, ‘사회성교육’
11.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할 교육은 무엇인지 보기 중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교육내용(교육영역) 보기** ① 창의성교육 ⑥ 성교육 ② 인성교육 ⑦ 환경교육 ③ 진로교육 ⑧ 안전교육 ④ 특기·적성교육 ⑨ 다문화교육 ⑤ 민주시민교육 ⑩ 통일교육 (예: 타인존중, 공공질서 교육 등)	2011	“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교과교육’→ ‘국어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분화 **(변경)**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삭제)** ‘컴퓨터 교육’, ‘통일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성 교육’
	2012	“	학교급별 학부모	
	2013-1	“	학교급별 학부모	
	2014-1	“	학교급별 학부모	**(추가)** ‘다문화 교육’, ‘안전교육’, ‘역사교육’
	2015	학교급(초, 중, 고) **‘교과’와 ‘교육내용’ 2문항으로 분리** **(삭제)** 순위(1, 2, 3위)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역사’→‘한국사’, ‘사회’ **(변경)** ‘예체능’→‘체육’, ‘예술’ **(변경)**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추가)** ‘기술·가정’, ‘교양’, ‘통일교육’

4. 학생 생활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2. **초·중·고 학생들의 IT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13.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4.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전반_____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추가)** 학교급(초중고 전반, 초, 중, 고)	초·중·고 학부모 학교급별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15.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② 학교 ③ 사회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6.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17.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② 가정교육의 부재 ③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④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⑤ 학생 개인의 인성 문제 ⓪ 잘 모르겠다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4-2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변경)**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 **체제**' →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변경)**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변경)** '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 '대중 매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변경)** '학생 개인' → '학생 개인의 **인성**'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18. 초·중·고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장·교감 ② 교사 ③ 학생 ④ 학부모 ⑤ 기타 _____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1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훈육을 위해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벌이란** 학생들이 학칙을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운동장 뛰기, 교실 뒤 서 있기, 봉사활동하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훈육을 의미합니다.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변경)** 교육벌 부가설명 문구수정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 학생의 성적에 따라 교과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21.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학교) ② 학부모(가정) ③ 친구(교우) ⓪ 잘 모르겠다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추가)** '친구(교우)'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2. 다음 중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②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③ 학부모의 교육관 ④ 기타 _____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23. 다음의 교육정책들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방과후 학교 운영 ②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 ③ EBS 수능연계(70% 이상) ④ 선행학습 금지 정책 ⑤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 ⑥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 ⑦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 ⑧ 대입전형 간소화 ⑨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⑩ 기타 _____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변경)** '**특목고 및 자율고**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 도입' →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 도입' **(삭제)** '교원능력개발 평가 도입 '대학 입학 사정관 전형방식 도입',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 **(추가)** 'EBS 수능연계', '선행학습 금지 정책', '대입전형 간소화',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24. **EBS 수능연계(70% 이상)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⓪ 잘 모르겠다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5. 고교 정책 및 대입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란, 고등학교 진학 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추첨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모든 대도시를 포함하여, 전국 31개의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1999		초·중·고 학부모	
	2001		초·중·고 학부모	(변경) '폐지해야 한다' →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변경) 실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대로 유지 해야 한다/실시지역을 축소 해야 한다/완전히 폐지 해야 한다 → **찬성/반대**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고교평준화 부가설명 추가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4-2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고교평준화 부가설명 수정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6.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초·중·고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2014-2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27. 일부 **고등학교가 지원자의 성적 또는 학업능력에 따라 신입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8.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특기·적성 ④ 인성 및 봉사활동 ⑤ 면접 ⑥ 글쓰기·논술 ⑦ 기타_____	2011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012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013-1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014-1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014-2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변경)** '인성 및 **사회봉사**'→ '인성 및 **봉사활동**' **(변경)** '면접 및 글쓰기 성적'→ '면접', '글쓰기·논술'으로 분리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9.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④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table>
<tr><th>2015년 설문 문항</th><th>연도</th><th>하위 문항</th><th>비교 집단</th><th>선택지 변동 사항</th></tr>
<tr><td>30. 현재는 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현행)
②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③ 3-5세는 무상, 그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④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⓪ 잘 모르겠다</td><td>2015
[신규]</td><td></td><td>자녀 있는
집단</td><td></td></tr>
<tr><td rowspan="7">31.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table><tr><th>무상
급식
지원</th><th>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th><th>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th><th>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th><th>잘 모르
겠다</th></tr><tr><td>초등학생</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r><td>중학생</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r><td>고등학생</td><td>①</td><td>②</td><td>③</td><td>⓪</td></tr></table></td><td>2010</td><td></td><td>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td><td></td></tr>
<tr><td>2011</td><td></td><td>초·중·고
학부모</td><td>(추가) ‘잘 모르겠다’</td></tr>
<tr><td>2012</td><td></td><td>초·중·고
학부모</td><td></td></tr>
<tr><td>2013-1</td><td></td><td>초·중·고
학부모</td><td></td></tr>
<tr><td>2014-1</td><td>(추가) 학교급(초, 중, 고)</td><td>학교급별
학부모</td><td></td></tr>
<tr><td>2015</td><td>“</td><td>학교급별
학부모</td><td></td></tr>
</table>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2.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②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④ 학교급식비 ⑤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초등학교만 해당) ⑥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만 해당) ⑦ 기타_____	2010	순위(1, 2위)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1	"	초·중·고 학부모	**(변경)** '**등록금** 및 학교 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삭제)** '학원, 과외비',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
	2012	"	초·중·고 학부모	
	2013-1	"	초·중·고 학부모	
	2014-1	순위(1, 2위) **(추가)** 학교급(초, 중, 고)	학교급별 학부모	
	2015	학교급(초, 중, 고) **(삭제)** 순위(1, 2위)	학교급별 학부모	**(추가)** '현장학습비 및 수련 활동비'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12		자녀 있는 집단	
	2013-1		자녀 있는 집단	
	2014-1		자녀 있는 집단	(변경)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33.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4-2		자녀 있는 집단	①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2015		자녀 있는 집단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변경) 의무교육 내용 제외하고 고교 무상교육 **찬성/반대**로 변경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4.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②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③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④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⑤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 ⑩ 잘 모르겠다	2012		자녀 있는 집단	
	2013-1		자녀 있는 집단	
	2014-1		자녀 있는 집단	**(추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노후시설 보수·개선'
	2014-2		자녀 있는 집단	
	2015		자녀 있는 집단	**(변경)**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변경)** '노후시설 보수·개선' → '노후 **교육** 시설 보수·개선'
3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아직도 선진국들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 ②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 ③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한다 ④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 ⑩ 잘 모르겠다	2015 [신규]		자녀 있는 집단	

7. 대학 교육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6.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1		대학생 학부모	**(삭제)**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2		대학생 학부모	
	2013-1		대학생 학부모	
	2014-1		대학생 학부모	
	2015		대학생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37.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못한다 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015 [신규]		대학생 학부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38.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선택해 주십시오. 4년제 대학 교수_____ 전문대학 교수_____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추가)**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1		대학생 학부모	**(삭제)** 100점 만점 점수 환산
	2012		대학생 학부모	
	2013-1		대학생 학부모	
	2014-1		대학생 학부모	
	2015	**(추가)** 4년제 대학/전문 대학	대학생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39. **대학**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1		대학생 학부모	
	2012		대학생 학부모	
	2013-1		대학생 학부모	
	2014-1		대학생 학부모	
	2015		대학생 학부모	**(삭제)** '잘 모르겠다'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0. 현재 정부의 공공재정이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06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0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41.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3-1		대학생 학부모	
	2015		대학생 학부모	
42. 다음 중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평가지표는 무엇입니까? ① 졸업생의 취업률 ② 교수들의 연구 역량 ③ 교수들의 교육 역량 ④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⑤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⑥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⑦ 기타 _____	2015 [신규]		초·중·고 학부모	

8. 교육현안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3. 다음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이들에게 매월 국·공립 6만원, 사립 22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②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저녁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③ 중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 없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④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로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 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 및 후속 조치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⑥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⑦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⑧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⑨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2014-1	순위(1, 2위)	초·중·고 학부모	
	2014-2	"	초·중·고 학부모	
	2015	**(변경)** 순위(1, 2위) → 순위(1, 2, **3위**) 순위(1, 2, **3위**)	초·중·고 학부모	① ~ ⑩ 선택지 문구 간결하게 수정 **(변경)** '누리과정 **확대**' → '누리과정' **(변경)**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중·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제' **(변경)** '지방대학 지원 **확대**'→'지방대학 지원' **(삭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가)** '인성교육 활성화'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4. 현재 학령전 아동 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지도 감독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합해야 한다 ②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③ 연령대별로 감독기관을 구분한다. (예: 0-2세는 보건복지부,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 ⓪ 잘 모르겠다	2015 [신규]		자녀 있는 집단	
45.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3-1		초·중·고 학부모 자녀 있는 집단	
	2014-2		초·중·고 학부모	
	2015		초·중·고 학부모	
46. 일부 시·도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_____ 중학교_____ 고등학교_____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5 [신규]		학교급별 학부모	

9. 교육관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7. 학교의 여러 문제들(성적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왕따 등),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②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⓪ 잘 모르겠다	1999	*자녀가 있는 대상만 응답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2001	*자녀가 있는 대상만 응답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겠다' →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변경)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 →꼭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쪽으로 소질을 살려보겠다' (추가) '기타_____'
	2015		자녀 있는 집단 학교급별 학부모	(변경)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변경) '꼭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쪽으로 소질을 살려보겠다' → '꼭 **정규**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삭제) '기타_____'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48.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49.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50. 현재 한국사회에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②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③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51.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52.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화될 것이다 ②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③ 심화될 것이다 ⓪ 잘 모르겠다	2011		학력집단	
	2012		학력집단	
	2013-1		학력집단	
	2014-1		학력집단	
	2015		학력집단	

2015년 설문 문항	연도	하위 문항	비교 집단	선택지 변동 사항
	2006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2008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변경)**'부정문 → 긍정문' **(추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53.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2010	"	초·중·고 학부모 기타 학부모	**(변경)**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다' →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변경)** '자녀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컸다' →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삭제)** '자녀가 대학에 들어 갔다' **(추가)**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2015	**(삭제)**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초·중·고 학부모	

A. 기초 자료 질문

2014년 설문 문항	2015년 설문 문항	변동 내역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좌동	변동 없이 사용
2.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세종특별자치시** ③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④ 중소도시(시 지역) ⑤ 읍·면(군) 지역	2.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③ 중소도시(시 지역) ④ 읍·면(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재분류
3. 연령 (만 세)	좌동	변동 없이 사용
4. 혼인 상태 ① 기혼 (☞5번으로) ② 미혼 (☞B영역 1번으로) ③ 기타 (☞자녀가 있는 경우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B영역 1번으로)	4. 혼인 상태 ① 기혼 (☞5번으로) ② 미혼 (☞1-1영역 1번으로) ③ 기타 (☞자녀가 있는 경우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1-1영역 1번으로)	변경된 영역에 따라 수정
5. 자녀의 수를 아래의 분류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총 수 ____명 ① 기관 미이용 영·유아나 아동 ____명 ②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아동 ____명 ③ 초등학생 ____명 ④ 중학생 ____명 ⑤ 고등학생 ____명 ⑥ 전문대 학생 ____명 ⑦ 일반대 학생 ____명 ⑧ 대학원 학생 ____명 ⑨ 직장인 ____명 ⑩ 기타(미취업, 출가 등) : ____명	5. 자녀의 수를 아래의 분류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총 수 ____명 ①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나 아동 ____명 ②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아동 ____명 ③ 초등학생 ____명 ④ 중학생 ____명 ⑤ 고등학생 ____명 ⑥ 전문대 학생 ____명 ⑦ 일반대 학생 ____명 ⑧ 대학원 학생 ____명 ⑨ 직장인 ____명 ⑩ 기타(미취업, 출가 등) : _____ ____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 문구 수정

B. 인구통계학적 질문

2014년 설문 문항	2015년 설문 문항	변동 내역
6. 귀하의 교육수준(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현재 고등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좌동	변동 없이 사용
7. [기혼인 경우(사실혼 포함)만 응답]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부부임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님	좌동	변동 없이 사용
8. 한 달 평균 가구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8. 한 달 평균 가구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2015년 1/4분기) 참조하여 변경

2014년 설문 문항

9.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 _____, 배우자의 직업 _____

전문/기술직	(01) 자연 및 기술관련 엔지니어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5)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7) 종교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1)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02) 대학교수, 연구원 (04) 수의사, 약사, 간호사 (06) 교사 (08) 언론인, 방송인 (10) 항공기/선박 승무원
행정/관리직	(21) 기업체경영주(5인 이상 고용) (23) 고급 공무원(중앙 과장, 지방 국장)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27)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29) 기타 사무직	(22) 대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4) 사회단체 간부 (26) 사무관련 사업체 경영주(5인 미만고용) (28) 소방관, 교정관
판매/서비스직	(31) 소·도매 상인(5인 미만 고용) (33) 부동산 중개인 (35) 행상, 노점상 (4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43) 헤어디자이너, 세탁소, 목욕탕 (45)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32) 판매점원 (33) 판매 대리인 및 외판원 (36) 기타 판매직 주인 (4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44)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46) 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업직	(51) 부농(2정보, 6,000평 이상) (53) 소농(0.5~1정보, 1,500~2,999평)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57) 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59) 기타 농어업직	(52) 중농(1~2정보, 3,000~5,999평) (54) 빈농(0.5정보, 1,500평 미만), 소작농 (5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58) 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생산직	(6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63) 막노동자, 단순 노무자 (65) 광부	(62)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64) 운전기사(자동차, 중장비) (66) 기타 생산직
미취업	(71) 학생 (73) 군인(사병) (7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72) 주부 (74) 무직(실업) (76) 기타 미취업자
기타	(81) 기타 (_____)	

2015년 설문 문항

9.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 _____, 배우자의 직업 _____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군인	(A1) 군인	
기타	(01) 학생 (03)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05) 기타(_____)	(02) 주부 (04) 무직(실업)

변동 내역

통계청 한국표준 직업 분류(6차 개정) 기준 변경

부록 4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4)]

〈표 Ⅴ-1-1〉 교육행정의 권한: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의 권한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 학교 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1.5	45.6	6.7	6.3	100.0	
성별	남성	1,009	44.0	44.9	5.4	5.7	100.0	9.612*
	여성	991	39.0	46.2	8.1	6.8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48.0	40.0	6.4	5.6	100.0	17.130*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38.6	46.4	7.8	7.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40.0	48.1	5.7	6.2	100.0	
	읍·면(군) 지역	147	42.9	42.2	10.2	4.8	100.0	
연령	19 - 29세	374	39.8	44.4	9.6	6.1	100.0	25.968*
	30대	412	36.7	49.5	4.9	9.0	100.0	
	40대	462	39.4	48.3	6.5	5.8	100.0	
	50대	413	46.2	41.6	6.3	5.8	100.0	
	60 - 75세	339	46.3	43.1	6.5	4.1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2.7	45.9	5.8	5.6	100.0	9.899*
	자녀 없음	652	39.0	44.8	8.6	7.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2.9	23.5	5.9	17.6	100.0	30.275***
	고졸	517	38.1	44.5	8.5	8.9	100.0	
	전문대/대졸	1,236	41.5	47.1	6.1	5.3	100.0	
	대학원졸	213	47.9	42.7	6.1	3.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1.9	40.4	7.7	10.0	100.0	24.31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0.2	46.0	5.6	8.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2.0	46.4	6.8	4.8	100.0	
	600만원 이상	415	42.7	46.7	7.7	2.9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44.0	44.8	6.5	4.7	100.0	45.8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43.0	48.6	2.4	5.9	100.0	
	사무 종사자	381	44.4	44.1	6.0	5.5	100.0	
	서비스 종사자	61	32.8	52.5	8.2	6.6	100.0	
	판매 종사자	73	28.8	54.8	5.5	11.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53.3	40.0	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43.1	46.6	5.2	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3.3	51.9	0.0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45.2	38.4	11.0	5.5	100.0	
	군인	5	40.0	20.0	0.0	40.0	100.0	
	기타	789	40.3	44.6	8.6	6.5	100.0	

*p〈0.05, **p〈0.01, ***p〈0.001

4) χ^2검증, t검증/F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Ⅴ-1-2〉 교육행정의 권한: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의 권한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 학교 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20.2	46.2	28.7	5.0	100.0	
연령	19 - 29세	374	20.6	41.2	31.3	7.0	100.0	26.711**
	30대	412	21.6	46.6	24.5	7.3	100.0	
	40대	462	18.8	44.2	33.1	3.9	100.0	
	50대	413	18.6	50.1	27.6	3.6	100.0	
	60 - 75세	339	21.8	49.3	26.0	2.9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1.0	48.4	27.0	3.7	100.0	24.775***
	미혼	648	18.1	42.3	32.1	7.6	100.0	
	기타	41	29.3	39.0	26.8	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21.3	48.1	27.0	3.6	100.0	23.929***
	자녀 없음	652	17.9	42.3	32.1	7.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9.8	45.9	31.9	2.4	100.0	11.001*
	기타	1,505	20.3	46.3	27.6	5.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8.2	48.6	31.5	1.7	100.0	8.926*
	기타	1,714	20.5	45.8	28.2	5.5	100.0	
학력	중졸이하	34	8.8	50.0	23.5	17.6	100.0	44.715***
	고졸	517	17.4	42.9	31.9	7.7	100.0	
	전문대/대졸	1,236	20.1	47.7	28.3	3.9	100.0	
	대학원졸	213	29.6	44.6	23.5	2.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21.2	39.6	29.6	9.6	100.0	31.26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9.7	45.1	28.9	6.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8.6	48.9	28.6	3.8	100.0	
	600만원 이상	415	22.9	47.7	27.7	1.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19.8	47.0	29.7	3.4	100.0	45.3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1.7	46.2	26.9	5.2	100.0	
	사무 종사자	381	21.8	48.0	26.5	3.7	100.0	
	서비스 종사자	61	24.6	31.1	39.3	4.9	100.0	
	판매 종사자	73	11.0	42.5	39.7	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13.3	66.7	2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3.8	39.7	41.4	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7.4	48.1	33.3	11.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23.3	49.3	23.3	4.1	100.0	
	군인	5	0.0	40.0	20.0	40.0	100.0	
	기타	789	20.4	46.4	27.8	5.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3〉 교육행정의 권한: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의 권한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 학교 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7.4	31.9	46.0	4.8	100.0	
연령	19 - 29세	374	23.5	33.4	37.4	5.6	100.0	62.576***
	30대	412	21.8	32.0	37.9	8.3	100.0	
	40대	462	13.4	31.0	50.6	5.0	100.0	
	50대	413	13.3	33.4	50.8	2.4	100.0	
	60 - 75세	339	15.3	29.5	52.8	2.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6.5	32.0	47.8	3.7	100.0	23.533**
	미혼	648	19.1	32.7	41.0	7.1	100.0	
	기타	41	17.1	14.6	63.4	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6.5	31.5	48.3	3.6	100.0	18.366***
	자녀 없음	652	19.0	32.7	41.1	7.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0.8	30.1	56.3	2.8	100.0	10.970**
	기타	1,824	18.0	32.1	45.0	5.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9.2	33.8	53.8	3.1	100.0	12.734*
	기타	1,805	18.2	31.7	45.1	5.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1.2	32.5	54.5	1.7	100.0	19.182***
	기타	1,714	18.4	31.8	44.5	5.3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1.8	32.4	38.2	17.6	100.0	23.903**
	고졸	517	16.6	29.6	46.8	7.0	100.0	
	전문대/대졸	1,236	17.6	32.8	45.6	4.0	100.0	
	대학원졸	213	18.3	32.4	46.9	2.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20.4	26.2	42.7	10.8	100.0	41.76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8.8	31.3	44.2	5.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5.5	35.5	46.2	2.9	100.0	
	600만원 이상	415	16.1	30.8	50.4	2.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15.1	35.8	44.8	4.3	100.0	46.8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7.5	28.7	47.9	5.9	100.0	
	사무 종사자	381	22.8	32.3	41.5	3.4	100.0	
	서비스 종사자	61	13.1	34.4	47.5	4.9	100.0	
	판매 종사자	73	11.0	32.9	47.9	8.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40.0	5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5.5	27.6	50.0	6.9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1.1	22.2	51.9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7.8	35.6	46.6	0.0	100.0	
	군인	5	20.0	20.0	20.0	40.0	100.0	
	기타	789	16.7	31.7	46.9	4.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4〉 교육행정의 권한: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의 권한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 학교 교장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8.7	33.1	13.5	4.9	100.0	
연령	19 - 29세	374	57.2	25.4	11.8	5.6	100.0	61.592***
	30대	412	51.0	29.6	10.9	8.5	100.0	
	40대	462	39.6	37.2	18.6	4.5	100.0	
	50대	413	46.0	38.7	12.3	2.9	100.0	
	60 - 75세	339	51.9	33.0	12.7	2.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5.5	36.4	14.0	4.0	100.0	29.219***
	미혼	648	54.9	26.4	12.0	6.6	100.0	
	기타	41	48.8	31.7	17.1	2.4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5.6	36.2	14.2	4.0	100.0	27.879***
	자녀 없음	652	54.9	26.5	12.0	6.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38.8	39.2	18.2	3.8	100.0	32.998***
	기타	1,505	51.9	31.0	11.9	5.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40.5	35.6	19.3	4.5	100.0	12.568**
	기타	1,736	49.9	32.7	12.6	4.9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34.7	44.3	18.2	2.8	100.0	19.997***
	기타	1,824	50.0	32.0	13.0	5.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35.9	45.1	15.9	3.1	100.0	19.123***
	기타	1,805	50.0	31.7	13.2	5.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2.0	40.6	16.4	1.0	100.0	20.916***
	기타	1,714	49.8	31.8	13.0	5.5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9.4	29.4	29.4	11.8	100.0	34.585***
	고졸	517	46.6	31.1	14.1	8.1	100.0	
	전문대/대졸	1,236	49.0	34.1	13.1	3.8	100.0	
	대학원졸	213	54.5	32.4	11.3	1.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8.5	28.1	13.5	10.0	100.0	31.89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50.2	30.4	13.4	6.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7.1	36.8	13.3	2.7	100.0	
	600만원 이상	415	48.7	34.5	13.7	3.1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1〉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초·중·고등학교 전반

초·중·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수	우	미	양	가	계				
전체		2,000	0.5	14.3	50.6	27.3	7.5	100.0	2.73	0.812		
연령	19 - 29세	374	0.3	11.5	49.5	29.7	9.1	100.0	2.64	0.812	27.207*	
	30대	412	0.0	13.1	53.6	26.0	7.3	100.0	2.73	0.780		
	40대	462	0.6	11.9	50.2	27.7	9.5	100.0	2.66	0.832		
	50대	413	0.7	16.2	49.6	27.1	6.3	100.0	2.78	0.817		
	60 - 75세	339	0.6	19.8	49.6	25.7	4.4	100.0	2.86	0.799		
혼인상태	기혼	1,311	0.5	15.9	50.0	27.1	6.6	100.0	2.77	0.811	15.689*	
	미혼	648	0.5	10.6	52.2	27.3	9.4	100.0	2.65	0.810		
	기타	41	0.0	19.5	43.9	31.7	4.9	100.0	2.78	0.822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0.4	15.9	49.9	27.2	6.5	100.0	2.77	0.810	12.986*	
	자녀 없음	652	0.5	10.9	52.0	27.3	9.4	100.0	2.66	0.812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0.5	13.8	44.6	31.3	9.7	100.0	2.64	0.858		1.343*
	기타	1,805	0.4	14.3	51.2	26.8	7.2	100.0	2.74	0.806		
학력	중졸이하	34	0.0	20.6	64.7	11.8	2.9	100.0	3.03	0.674	26.486**	
	고졸	517	1.0	15.5	53.2	22.6	7.7	100.0	2.79	0.829		
	전문대/대졸	1,236	0.3	13.7	50.5	28.6	6.9	100.0	2.72	0.796		
	대학원졸	213	0.0	14.1	42.3	32.9	10.8	100.0	2.60	0.8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0.2	16.2	48.9	27.6	7.1	100.0	2.75	0.817		2.958*
	맞벌이 부부 아님	820	0.6	16.0	50.4	27.0	6.1	100.0	2.78	0.806		

*p〈0.05, **p〈0.01, ***p〈0.001

〈표 Ⅴ-2-2〉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수	우	미	양	가	계				
전체		2,000	3.0	27.5	46.0	18.7	4.9	100.0	3.05	0.880		
성별	남성	1,009	2.8	25.4	47.0	19.0	5.8	100.0	3.00	0.889		2.869*
	여성	991	3.1	29.7	44.9	18.4	3.9	100.0	3.10	0.868		
연령	19 - 29세	374	1.6	22.5	48.4	21.1	6.4	100.0	2.92	0.867	27.737*	
	30대	412	2.4	26.7	50.0	15.5	5.3	100.0	3.05	0.856		
	40대	462	3.2	27.9	43.3	20.1	5.4	100.0	3.03	0.910		
	50대	413	4.4	28.3	42.6	20.3	4.4	100.0	3.08	0.912		
	60 - 75세	339	2.9	32.4	46.0	15.9	2.7	100.0	3.17	0.825		
혼인 상태	기혼	1,311	3.4	28.9	44.7	18.5	4.5	100.0	3.08	0.886	18.969*	
	미혼	648	2.2	23.9	49.5	18.5	5.9	100.0	2.98	0.864		
	기타	41	0.0	39.0	29.3	29.3	2.4	100.0	3.05	0.89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3.3	29.2	44.3	18.8	4.5	100.0	3.08	0.886	10.426*	
	자녀 없음	652	2.1	24.1	49.4	18.6	5.8	100.0	2.98	0.864		
학력	중졸이하	34	5.9	32.4	50.0	11.8	0.0	100.0	3.32	0.768		2.511*
	고졸	517	3.3	23.6	50.7	18.2	4.3	100.0	3.03	0.848		
	전문대/대졸	1,236	2.6	28.4	45.3	18.9	4.8	100.0	3.05	0.875		
	대학원졸	213	3.8	31.0	37.6	19.7	8.0	100.0	3.03	0.9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4.9	26.3	46.6	18.2	3.9	100.0	3.10	0.889	10.676*	3.523**
	맞벌이 부부 아님	820	2.3	31.1	42.7	19.1	4.8	100.0	3.07	0.884		

*p〈0.05, **p〈0.01, ***p〈0.001

〈표 Ⅴ-2-3〉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수	우	미	양	가	계				
전체		2,000	0.8	16.7	46.2	29.6	6.8	100.0	2.75	0.839		
연령	19 - 29세	374	0.3	13.4	45.5	31.8	9.1	100.0	2.64	0.835	29.126*	
	30대	412	1.5	14.3	48.3	29.1	6.8	100.0	2.75	0.837		
	40대	462	0.6	14.3	47.2	30.1	7.8	100.0	2.70	0.832		
	50대	413	0.7	19.6	44.3	30.0	5.3	100.0	2.80	0.838		
	60 - 75세	339	0.9	22.7	45.4	26.5	4.4	100.0	2.89	0.834		
혼인 상태	기혼	1,311	0.8	18.7	45.2	29.5	5.8	100.0	2.79	0.840	16.281*	
	미혼	648	0.8	12.7	48.0	29.9	8.6	100.0	2.67	0.833		
	기타	41	0.0	14.6	51.2	26.8	7.3	100.0	2.73	0.80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0.8	18.5	45.3	29.5	5.8	100.0	2.67	0.835	15.320**	
	자녀 없음	652	0.8	12.7	48.0	29.8	8.7	100.0	2.75	0.846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0	20.3	40.2	33.6	5.9	100.0	2.75	0.846	9.997*	
	기타	1,714	0.9	16.0	47.2	28.9	6.9	100.0	2.75	0.838		

*p〈0.05, **p〈0.01, ***p〈0.001

〈표 Ⅴ-2-4〉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수	우	미	양	가	계				
전체		2,000	1.0	11.5	36.0	36.6	15.0	100.0	2.47	0.915		
성별	남성	1,009	1.3	11.9	30.9	38.4	17.5	100.0	2.41	0.953	27.536***	4.578*
	여성	991	0.6	11.1	41.1	34.8	12.4	100.0	2.53	0.870		
연령	19 - 29세	374	1.3	8.8	31.6	38.5	19.8	100.0	2.33	0.937	44.632***	
	30대	412	0.2	11.7	36.7	37.6	13.8	100.0	2.47	0.880		
	40대	462	1.5	9.5	33.5	35.3	20.1	100.0	2.37	0.959		
	50대	413	0.7	13.6	39.5	36.1	10.2	100.0	2.59	0.873		
	60 - 75세	339	0.9	14.5	38.9	35.7	10.0	100.0	2.60	0.88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0	12.9	36.4	36.1	13.6	100.0	2.51	0.916	12.599*	
	자녀 없음	652	0.9	8.6	35.1	37.6	17.8	100.0	2.37	0.904		
학력	중졸이하	34	0.0	14.7	58.8	17.6	8.8	100.0	2.79	0.808	27.730**	
	고졸	517	1.9	12.6	38.1	34.0	13.3	100.0	2.56	0.940		
	전문대/대졸	1,236	0.6	11.1	35.6	37.8	15.0	100.0	2.44	0.896		
	대학원졸	213	0.9	10.8	29.1	39.0	20.2	100.0	2.33	0.950		

*p〈0.05, **p〈0.01, ***p〈0.001

〈표 Ⅴ-3-1〉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 수	응답 비율							χ^2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과 환경의 제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기타	계	
전체		2,000	18.2	9.7	26.6	37.7	7.9	0.1	100.0	
성별	남성	1,009	18.6	10.2	26.9	34.8	9.4	0.1	100.0	13.759*
	여성	991	17.7	9.1	26.3	40.6	6.3	0.1	100.0	
연령	19 - 29세	374	13.4	10.7	25.9	44.4	5.3	0.3	100.0	53.613***
	30대	412	15.8	8.0	27.4	41.5	7.3	0.0	100.0	
	40대	462	23.6	10.4	27.1	32.3	6.7	0.0	100.0	
	50대	413	19.1	10.7	25.2	37.3	7.5	0.2	100.0	
	60 - 75세	339	17.7	8.3	27.4	33.3	13.3	0.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8.8	9.8	27.4	34.9	9.0	0.1	100.0	24.907*
	미혼	648	16.4	9.6	25.3	43.4	5.2	0.2	100.0	
	기타	41	26.8	4.9	22.0	34.1	12.2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8.9	9.7	27.2	34.9	9.1	0.1	100.0	21.139**
	자녀 없음	652	16.6	9.5	25.3	43.3	5.2	0.2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16.5	10.5	30.1	36.8	5.8	0.2	100.0	18.864**
	맞벌이 부부 아님	820	20.6	9.1	25.4	33.7	11.2	0.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2〉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중학교

중학교		사례 수	응답 비율							χ^2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과 환경의 제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기타	계	
전체		2,000	27.8	15.3	16.7	36.1	4.0	0.2	100.0	
연령	19 - 29세	374	25.1	10.4	18.7	41.4	4.0	0.3	100.0	50.514**
	30대	412	26.9	15.0	15.5	39.1	3.4	0.0	100.0	
	40대	462	35.5	15.6	16.5	30.7	1.7	0.0	100.0	
	50대	413	23.7	17.7	17.4	34.6	6.1	0.5	100.0	
	60 - 75세	339	26.0	17.7	15.3	35.4	5.3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7.2	17.0	16.7	34.6	4.3	0.2	100.0	32.744**
	미혼	648	28.1	12.2	16.4	40.0	3.2	0.2	100.0	
	기타	41	39.0	9.8	22.0	22.0	4.9	2.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30.9	17.8	18.6	29.5	3.0	0.2	100.0	16.241*
	기타	1,505	26.7	14.5	16.1	38.2	4.3	0.2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35.2	17.8	18.6	25.8	2.7	0.0	100.0	18.932**
	기타	1,736	26.6	14.9	16.4	37.6	4.2	0.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3〉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 수	응답 비율							χ^2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좋은 교육 시설과 환경의 제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강화	기타	계	
전체		2,000	36.6	17.7	11.2	30.7	3.7	0.3	100.0	
연령	19 - 29세	374	36.9	13.1	12.6	32.4	4.0	1.1	100.0	71.799***
	30대	412	32.5	12.9	12.9	35.7	6.1	0.0	100.0	
	40대	462	39.6	19.0	13.0	27.1	1.3	0.0	100.0	
	50대	413	35.8	21.5	10.2	28.6	3.6	0.2	100.0	
	60 - 75세	339	38.1	21.8	6.5	30.1	3.5	0.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36.5	20.1	10.7	29.0	3.6	0.1	100.0	31.011*
	미혼	648	36.7	12.2	12.3	34.3	3.9	0.6	100.0	
	기타	41	36.6	24.4	9.8	26.8	2.4	0.0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36.4	20.3	10.6	29.0	3.6	0.1	100.0	30.599***
	자녀 없음	652	37.0	12.1	12.4	34.0	3.8	0.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0.9	24.5	7.3	26.2	1.0	0.0	100.0	24.088**
	기타	1,714	35.9	16.5	11.8	31.4	4.1	0.3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1〉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계	
전체		2,000	0.9	13.7	31.4	8.5	19.1	23.9	1.5	0.5	0.6	0.2	100.0	
연령	19 - 29세	374	0.5	11.2	27.8	11.2	18.4	26.2	2.1	1.1	0.8	0.5	100.0	85.472***
	30대	412	1.0	13.8	30.6	9.0	18.7	23.8	1.7	0.7	0.7	0.0	100.0	
	40대	462	1.5	16.5	37.2	8.9	13.2	20.6	0.9	0.2	0.9	0.2	100.0	
	50대	413	0.5	12.8	36.3	5.3	20.1	24.0	0.5	0.2	0.2	0.0	100.0	
	60 - 75세	339	0.9	13.6	22.4	8.0	26.8	25.7	2.4	0.0	0.3	0.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0.8	14.2	32.8	7.2	19.5	23.3	1.4	0.4	0.3	0.0	100.0	38.039**
	미혼	648	0.8	12.7	29.2	10.8	17.7	25.2	1.5	0.5	1.2	0.5	100.0	
	기타	41	4.9	14.6	22.0	12.2	24.4	19.5	0.0	2.4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0.9	14.2	32.6	7.3	19.6	23.2	1.4	0.4	0.3	0.0	100.0	22.571*
	자녀 없음	652	0.9	12.6	29.0	10.7	17.9	25.2	1.5	0.5	1.2	0.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4	15.8	36.8	7.7	14.5	21.8	1.4	0.4	0.2	0.0	100.0	21.371*
	기타	1,505	0.7	13.0	29.6	8.7	20.5	24.5	1.5	0.5	0.7	0.2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3	18.8	38.1	9.1	9.1	21.0	1.1	0.6	0.0	0.0	100.0	22.792*
	기타	1,824	0.8	13.2	30.8	8.4	20.0	24.1	1.5	0.4	0.7	0.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0.4	21.2	25.4	8.5	18.8	22.3	0.8	1.2	1.2	0.4	100.0	44.1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7	13.5	30.8	7.8	19.2	24.5	1.4	0.3	0.6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0.6	12.3	34.7	8.9	17.4	22.9	2.1	0.5	0.6	0.0	100.0	
	600만원 이상	415	0.5	11.6	30.8	8.7	21.4	25.3	1.0	0.2	0.2	0.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2〉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계	
전체		2,000	1.6	25.7	35.0	6.1	14.9	9.0	6.5	0.6	0.7	0.1	100.0	
성별	남성	1,009	1.3	24.7	32.6	5.6	16.5	10.7	7.0	0.7	0.8	0.2	100.0	20.649*
	여성	991	1.9	26.6	37.4	6.7	13.2	7.2	6.0	0.5	0.5	0.0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2.0	22.5	35.5	8.6	15.2	7.1	6.9	1.2	0.7	0.2	100.0	47.994*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1.7	23.6	33.3	5.3	16.7	11.8	6.1	0.8	0.8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1.4	27.2	36.1	5.8	14.5	7.8	6.3	0.3	0.5	0.0	100.0	
	읍·면(군) 지역	147	1.4	32.0	32.7	4.1	9.5	10.9	8.2	0.0	0.7	0.7	100.0	
연령	19 - 29세	374	2.1	20.1	29.9	5.3	17.6	14.2	8.3	1.1	1.1	0.3	100.0	63.139*
	30대	412	1.5	24.8	34.7	5.6	14.8	9.0	7.5	1.0	1.2	0.0	100.0	
	40대	462	1.5	27.9	37.7	5.4	12.8	8.0	5.4	0.6	0.4	0.2	100.0	
	50대	413	0.7	30.5	36.1	6.3	14.3	6.8	4.8	0.2	0.2	0.0	100.0	
	60 - 75세	339	2.4	23.9	36.0	8.3	15.3	7.1	6.8	0.0	0.3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3	26.8	35.8	6.5	14.5	7.9	6.5	0.5	0.4	0.0	100.0	22.364*
	자녀 없음	652	2.3	23.3	33.4	5.2	15.6	11.2	6.6	0.8	1.2	0.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1.2	27.7	34.2	8.1	13.5	8.8	3.5	0.4	2.3	0.4	100.0	45.28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4	25.3	33.5	6.6	15.2	8.7	6.9	0.6	0.6	0.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1	25.5	35.5	4.4	14.8	10.8	6.8	0.9	0.3	0.0	100.0	
	600만원 이상	415	1.4	25.3	37.1	6.7	15.2	6.5	7.2	0.2	0.2	0.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3〉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계	
전체		2,000	4.6	30.8	26.6	3.7	6.3	5.7	17.7	3.5	1.1	0.2	100.0	
성별	남성	1,009	5.5	30.8	25.2	4.6	6.0	6.9	16.3	3.7	0.9	0.2	100.0	21.260*
	여성	991	3.7	30.7	28.0	2.8	6.6	4.3	19.2	3.3	1.3	0.1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1	27.2	26.7	4.9	5.9	4.4	22.1	1.5	1.7	0.5	100.0	53.23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9	28.3	26.0	3.2	7.2	8.2	17.3	3.8	1.0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4.2	33.3	26.2	3.6	6.1	5.0	16.2	4.4	1.0	0.0	100.0	
	읍·면(군) 지역	147	4.1	33.3	29.9	2.7	5.4	4.1	16.3	2.7	0.7	0.7	100.0	
연령	19 - 29세	374	4.5	23.5	23.0	5.6	7.5	9.6	18.2	5.3	2.1	0.5	100.0	102.827***
	30대	412	3.6	29.4	27.7	3.6	6.3	6.6	16.0	5.6	1.2	0.0	100.0	
	40대	462	4.5	29.7	31.2	3.9	6.7	4.5	15.2	2.6	1.5	0.2	100.0	
	50대	413	4.1	37.8	28.3	2.4	5.6	3.6	15.7	1.9	0.5	0.0	100.0	
	60 - 75세	339	6.5	33.3	20.6	2.9	5.3	4.1	25.1	2.1	0.0	0.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7	32.4	25.7	3.5	6.2	4.3	19.6	2.9	0.8	0.0	100.0	50.790***
	미혼	648	4.2	27.6	27.6	4.2	6.9	8.2	14.0	4.9	1.9	0.5	100.0	
	기타	41	9.8	26.8	36.6	2.4	0.0	9.8	14.6	0.0	0.0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7	32.2	26.1	3.5	6.0	4.4	19.5	2.8	0.7	0.0	100.0	40.939***
	자녀 없음	652	4.3	27.8	27.5	4.1	6.9	8.3	14.0	4.9	1.8	0.5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4.1	31.4	27.6	4.1	5.6	5.8	16.4	3.6	1.3	0.0	100.0	17.049*
	맞벌이 부부 아님	820	5.2	32.8	25.0	3.0	6.2	3.5	21.5	2.3	0.4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1.9	28.1	31.9	4.2	8.8	7.3	11.5	3.5	2.3	0.4	100.0	51.93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5.1	28.7	26.0	3.0	7.1	5.9	17.7	5.0	1.2	0.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8	32.6	25.8	4.5	5.2	4.4	18.9	2.9	0.9	0.0	100.0	
	600만원 이상	415	5.1	32.8	25.3	3.1	5.3	6.3	19.5	2.2	0.5	0.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4〉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대학교

대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이나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의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계	
전체		2,000	16.3	13.3	18.8	3.6	4.6	3.5	2.2	31.7	5.6	0.6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17.6	11.0	18.6	2.9	4.9	5.1	2.5	31.1	4.7	1.5	100.0	55.67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14.4	12.5	17.1	4.9	5.7	4.6	1.9	32.9	5.5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17.4	14.0	18.9	3.2	3.7	2.4	2.2	31.4	6.5	0.2	100.0	
	읍·면(군) 지역	147	12.2	17.0	24.5	2.7	5.4	1.4	2.0	30.6	2.7	1.4	100.0	
연령	19 - 29세	374	18.4	10.4	16.8	4.5	4.8	5.6	3.7	28.3	5.3	1.9	100.0	107.770***
	30대	412	14.3	14.6	22.3	2.2	4.9	6.8	2.7	25.0	6.8	0.5	100.0	
	40대	462	14.3	15.2	19.3	3.5	6.3	2.4	2.2	29.7	7.1	0.2	100.0	
	50대	413	17.7	12.1	18.4	4.4	3.6	0.7	1.2	37.8	3.9	0.2	100.0	
	60 - 75세	339	17.4	13.6	16.5	3.2	2.9	1.8	0.9	38.9	4.4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5.8	13.3	17.8	3.9	5.0	2.5	2.1	34.5	5.0	0.2	100.0	43.636**
	미혼	648	17.1	12.7	21.1	2.8	4.2	5.2	2.5	26.4	6.6	1.4	100.0	
	기타	41	19.5	19.5	14.6	4.9	0.0	4.9	0.0	26.8	9.8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5.8	13.6	17.7	3.9	4.8	2.6	2.0	34.3	5.1	0.2	100.0	35.977***
	자녀 없음	652	17.3	12.6	21.2	2.8	4.1	5.2	2.5	26.4	6.6	1.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8.9	11.2	18.2	3.8	1.7	0.7	1.4	39.2	4.5	0.3	100.0	23.987**
	기타	1,714	15.9	13.6	18.9	3.5	5.1	3.9	2.3	30.5	5.8	0.6	100.0	

*p〈0.05, **p〈0.01, ***p〈0.001

〈표 Ⅴ-5〉 가장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좋은 고등학교의 기준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오랜 전통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진로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	인성교육에 충실하여 건전하고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기타	계	
전체		2,000	3.6	7.0	56.5	32.9	0.2	100.0	
성별	남성	1,009	3.4	8.4	50.8	37.3	0.2	100.0	31.704***
	여성	991	3.7	5.5	62.3	28.4	0.1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6.9	9.3	55.6	28.2	0.0	100.0	34.13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3.2	6.1	55.5	35.0	0.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2.3	6.7	58.5	32.3	0.2	100.0	
	읍·면(군) 지역	147	3.4	5.4	49.7	41.5	0.0	100.0	
연령	19 - 29세	374	4.8	6.1	66.8	21.9	0.3	100.0	79.717***
	30대	412	5.3	8.7	56.6	29.4	0.0	100.0	
	40대	462	2.6	7.4	60.0	30.1	0.0	100.0	
	50대	413	2.2	4.8	53.8	39.2	0.0	100.0	
	60 - 75세	339	2.9	8.0	43.7	45.1	0.6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3.3	7.6	54.4	34.6	0.1	100.0	12.321*
	자녀 없음	652	4.0	5.8	60.9	29.1	0.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0	7.5	62.2	28.3	0.0	100.0	13.195*
	기타	1,505	4.1	6.8	54.6	34.4	0.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8.8	11.8	41.2	38.2	0.0	100.0	31.306**
	고졸	517	2.7	5.2	65.0	26.9	0.2	100.0	
	전문대/대졸	1,236	3.7	7.7	54.4	34.1	0.2	100.0	
	대학원졸	213	3.8	6.6	50.2	39.4	0.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4.1	9.2	58.6	28.0	0.0	100.0	19.307**
	맞벌이 부부 아님	820	2.8	6.6	51.6	38.9	0.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0.4	41.4	18.3	100.0	
성별	남성	1,009	39.8	44.8	15.4	100.0	15.114**
	여성	991	40.9	37.9	21.2	100.0	
연령	19 - 29세	374	44.7	34.2	21.1	100.0	59.119***
	30대	412	42.2	32.5	25.2	100.0	
	40대	462	44.2	41.6	14.3	100.0	
	50대	413	37.0	46.2	16.7	100.0	
	60 - 75세	339	32.2	54.0	13.9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0.6	44.1	15.3	100.0	30.504***
	미혼	648	41.0	35.3	23.6	100.0	
	기타	41	22.0	51.2	26.8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0.1	44.4	15.6	100.0	25.018***
	자녀 없음	652	41.0	35.3	23.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47.1	39.8	13.1	100.0	17.215***
	기타	1,505	38.1	41.9	19.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49.6	34.8	15.5	100.0	10.865**
	기타	1,736	38.9	42.4	18.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41.5	48.9	9.7	100.0	10.462**
	기타	1,824	40.2	40.7	19.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49.7	39.0	11.3	100.0	10.780**
	기타	1,805	39.3	41.7	19.0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6.5	50.0	23.5	100.0	18.550**
	고졸	517	35.0	44.3	20.7	100.0	
	전문대/대졸	1,236	41.3	41.3	17.5	100.0	
	대학원졸	213	50.2	33.8	16.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45.7	38.5	15.8	100.0	13.627**
	맞벌이 부부 아님	820	36.3	48.0	15.6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3.1	44.6	22.3	100.0	25.05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35.5	44.1	20.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3.9	40.0	16.1	100.0	
	600만원 이상	415	47.0	37.3	15.7	100.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직업군	관리자	232	50.0	39.7	10.3	100.0	49.2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44.1	34.6	21.3	100.0	
	사무 종사자	381	42.0	36.5	21.5	100.0	
	서비스 종사자	61	39.3	39.3	21.3	100.0	
	판매 종사자	73	45.2	45.2	9.6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0.0	33.3	6.7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9.3	58.6	12.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3.3	40.7	25.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28.8	52.1	19.2	100.0	
	군인	5	60.0	20.0	20.0	100.0	
	기타	789	36.6	44.6	18.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7〉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 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 한다	계				
전체		2,000	1.7	19.6	50.6	23.9	4.3	100.0	2.91	0.814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0.5	24.6	38.5	30.3	6.2	100.0	2.83	0.889	16.253**	
	기타	1,805	1.8	19.1	51.9	23.2	4.0	100.0	2.91	0.8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0.8	13.8	53.8	24.2	7.3	100.0	2.77	0.807	38.323***	3.24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2	17.3	56.7	21.7	3.2	100.0	2.92	0.74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1	21.1	48.5	24.5	3.8	100.0	2.93	0.830		
	600만원 이상	415	2.2	24.6	42.2	26.3	4.8	100.0	2.93	0.886		

*p〈0.05, **p〈0.01, ***p〈0.001

〈표 Ⅴ-8-1〉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	계	
전체		2,000	12.6	47.7	8.3	7.9	23.1	0.5	100.0	
연령	19 - 29세	374	8.0	49.2	12.8	7.0	22.2	0.8	100.0	59.714***
	30대	412	11.2	46.8	10.0	9.7	21.8	0.5	100.0	
	40대	462	14.5	45.7	8.0	9.5	21.6	0.6	100.0	
	50대	413	13.3	46.2	6.3	8.2	25.9	0.0	100.0	
	60 - 75세	339	15.9	51.6	4.1	3.8	24.2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3.0	47.0	7.9	8.8	23.1	0.2	100.0	65.645***
	미혼	648	11.4	49.4	9.1	6.3	23.0	0.8	100.0	
	기타	41	17.1	43.9	7.3	2.4	24.4	4.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5.4	43.6	9.5	10.9	20.4	0.2	100.0	18.348*
	기타	1,505	11.7	49.0	7.9	6.8	24.0	0.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5.5	39.4	12.1	10.2	22.3	0.4	100.0	14.395*
	기타	1,736	12.2	49.0	7.7	7.5	23.2	0.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5.0	54.5	2.8	6.6	20.6	0.3	100.0	25.853**
	기타	1,714	12.2	46.6	9.2	8.1	23.5	0.5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11.3	45.3	10.5	11.3	21.2	0.4	100.0	20.823**
	맞벌이 부부 아님	820	14.4	47.9	6.2	6.8	24.4	0.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8-2〉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	계	
전체		2,000	38.2	29.7	14.3	9.8	7.7	0.4	100.0	
연령	19 - 29세	374	28.3	30.5	19.0	10.2	11.2	0.8	100.0	71.523***
	30대	412	37.6	24.8	17.2	10.0	10.2	0.2	100.0	
	40대	462	38.5	30.1	13.9	10.8	6.1	0.6	100.0	
	50대	413	43.1	30.3	12.3	8.7	5.6	0.0	100.0	
	60 - 75세	339	43.1	33.6	8.6	8.8	5.6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1.0	29.4	13.7	9.8	6.0	0.2	100.0	82.762***
	미혼	648	32.9	29.3	16.2	9.9	11.0	0.8	100.0	
	기타	41	31.7	43.9	4.9	7.3	9.8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0.7	29.8	13.4	9.7	6.2	0.2	100.0	28.468***
	자녀 없음	652	32.8	29.4	16.3	9.8	10.9	0.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4.4	33.6	11.2	5.9	4.5	0.3	100.0	23.794**
	기타	1,714	37.1	29.1	14.8	10.4	8.2	0.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8-3〉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 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	계	
전체		2,000	27.9	10.7	47.6	7.1	6.5	0.4	100.0	
연령	19 - 29세	374	16.6	9.4	58.6	6.4	8.6	0.5	100.0	86.316***
	30대	412	25.2	10.9	43.2	9.5	10.9	0.2	100.0	
	40대	462	31.2	11.5	44.8	7.1	4.8	0.6	100.0	
	50대	413	33.2	9.9	45.8	7.3	3.9	0.0	100.0	
	60 - 75세	339	32.7	11.5	46.6	4.4	4.4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30.5	10.4	45.6	7.7	5.6	0.2	100.0	71.921***
	미혼	648	22.8	11.3	51.5	5.6	8.2	0.6	100.0	
	기타	41	24.4	9.8	46.3	9.8	7.3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30.3	10.3	45.6	7.8	5.7	0.2	100.0	23.692**
	자녀 없음	652	22.9	11.3	51.5	5.5	8.1	0.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6.0	9.8	44.1	7.3	2.4	0.3	100.0	24.430**
	기타	1,714	26.5	10.8	48.1	7.0	7.2	0.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교사자격증은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5.6	27.0	17.5	100.0	
성별	남성	1,009	59.1	25.5	15.5	100.0	10.919**
	여성	991	52.0	28.6	19.5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2.7	30.1	17.2	100.0	20.78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50.0	30.6	19.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58.0	24.7	17.3	100.0	
	읍·면(군) 지역	147	68.0	19.7	12.2	100.0	
연령	19 - 29세	374	48.9	29.7	21.4	100.0	18.873*
	30대	412	51.2	29.1	19.7	100.0	
	40대	462	59.3	24.5	16.2	100.0	
	50대	413	59.1	24.7	16.2	100.0	
	60 - 75세	339	58.7	27.7	13.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62.9	25.2	11.9	100.0	9.606**
	기타	1,714	54.3	27.3	18.4	100.0	
학력	중졸이하	34	41.2	32.4	26.5	100.0	27.884***
	고졸	517	49.7	28.0	22.2	100.0	
	전문대/대졸	1,236	58.4	25.2	16.4	100.0	
	대학원졸	213	55.4	34.3	10.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3.1	27.7	19.2	100.0	22.38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53.4	24.5	22.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58.8	26.5	14.7	100.0	
	600만원 이상	415	55.4	31.3	13.3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61.6	25.0	13.4	100.0	33.32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58.0	28.0	14.0	100.0	
	사무 종사자	381	52.2	26.2	21.5	100.0	
	서비스 종사자	61	62.3	19.7	18.0	100.0	
	판매 종사자	73	52.1	31.5	16.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80.0	2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9.0	20.7	10.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55.6	18.5	25.9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57.5	19.2	23.3	100.0	
	군인	5	60.0	0.0	40.0	100.0	
	기타	789	52.6	29.5	17.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0-1〉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 가정	제2 외국어	한문	교양	계	
전체		2,000	13.3	2.2	6.1	20.7	17.7	3.1	14.0	8.6	0.4	0.8	1.8	11.6	100.0	
성별	남성	1,009	12.6	1.8	5.6	22.4	18.7	3.5	13.4	6.8	0.3	0.5	2.1	12.3	100.0	20.090*
	여성	991	14.0	2.6	6.5	19.0	16.6	2.7	14.5	10.3	0.4	1.1	1.4	10.8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15.9	2.7	8.3	14.5	20.1	3.2	13.7	10.0	1.0	1.7	1.7	7.1	100.0	58.342**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12.0	2.7	5.1	22.6	17.5	4.0	14.1	7.8	0.4	0.6	1.3	12.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14.0	1.8	5.8	21.3	16.5	2.5	14.5	8.4	0.1	0.5	2.0	12.5	100.0	
	읍·면(군) 지역	147	6.1	1.4	4.8	27.2	19.0	3.4	10.9	8.2	0.0	0.7	2.0	16.3	100.0	
연령	19 - 29세	374	13.4	2.1	6.7	17.1	17.4	4.5	15.8	9.9	0.0	0.3	0.8	12.0	100.0	102.244***
	30대	412	13.8	1.9	6.8	18.2	20.4	2.2	15.0	6.3	0.7	1.5	1.5	11.7	100.0	
	40대	462	12.8	3.2	7.4	15.4	19.7	2.2	19.3	8.7	0.4	0.4	1.5	9.1	100.0	
	50대	413	10.9	1.7	3.9	24.9	16.5	3.6	10.9	10.7	0.5	1.0	1.9	13.6	100.0	
	60 - 75세	339	16.2	1.8	5.3	29.8	13.6	3.2	7.1	7.1	0.0	0.9	3.2	11.8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3.5	4.4	7.9	17.4	17.8	2.6	15.4	9.5	0.6	0.8	1.4	8.7	100.0	30.662**
	기타	1,505	13.2	1.5	5.4	21.8	17.7	3.3	13.5	8.2	0.3	0.8	1.9	12.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3.6	4.5	13.1	15.9	18.2	1.1	14.2	9.7	0.0	0.0	1.7	8.0	100.0	29.787**
	기타	1,824	13.3	2.0	5.4	21.2	17.7	3.3	13.9	8.4	0.4	0.9	1.8	11.9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6.4	5.6	7.7	18.5	15.4	1.0	12.8	7.7	1.5	1.0	2.6	9.7	100.0	29.010**
	기타	1,805	13.0	1.8	5.9	20.9	18.0	3.3	14.1	8.6	0.2	0.8	1.7	11.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3.5	0.0	5.9	32.4	8.8	5.9	8.8	5.9	0.0	2.9	0.0	5.9	100.0	51.708**
	고졸	517	16.6	2.9	5.6	22.6	12.6	3.5	13.7	9.3	0.2	0.8	0.6	11.6	100.0	
	전문대/대졸	1,236	12.2	2.0	6.6	19.4	19.0	2.8	14.2	8.5	0.3	0.9	2.3	11.8	100.0	
	대학원졸	213	9.9	1.9	3.8	21.6	23.9	3.8	14.1	7.5	0.9	0.0	1.9	10.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0-2〉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중학교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 가정	제2 외국어	한문	교양	계	
전체		2,000	4.2	6.7	10.4	19.6	29.4	4.4	6.5	3.3	1.1	2.3	2.3	10.1	100.0	
성별	남성	1,009	3.8	6.5	9.1	21.7	29.9	5.3	6.3	3.5	1.2	1.4	2.1	9.2	100.0	21.911*
	여성	991	4.5	6.8	11.7	17.4	28.9	3.4	6.6	3.1	1.0	3.1	2.5	11.0	100.0	
연령	19 - 29세	374	4.3	4.8	7.8	18.2	34.2	6.1	8.8	3.2	0.5	1.9	0.3	9.9	100.0	102.181***
	30대	412	3.4	8.0	12.6	18.4	29.1	4.1	6.1	3.4	1.5	2.7	1.7	9.0	100.0	
	40대	462	4.1	8.9	13.6	14.7	26.0	4.1	8.7	5.4	1.3	3.0	2.2	8.0	100.0	
	50대	413	3.9	4.8	9.0	23.5	26.9	4.6	4.1	2.7	1.5	1.7	4.8	12.6	100.0	
	60 - 75세	339	5.3	6.2	8.0	24.2	32.2	2.7	4.1	1.2	0.6	1.8	2.4	11.5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4	7.6	11.8	19.4	26.9	4.1	6.6	2.7	1.0	2.0	3.1	10.4	100.0	48.538**
	미혼	648	3.9	4.8	7.7	19.8	34.0	4.6	6.6	4.5	1.4	2.5	0.8	9.6	100.0	
	기타	41	0.0	7.3	7.3	22.0	36.6	7.3	0.0	2.4	0.0	7.3	0.0	9.8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3	7.5	11.7	19.4	27.2	4.2	6.4	2.7	1.0	2.2	3.0	10.4	100.0	33.435***
	자녀 없음	652	3.8	4.9	7.7	19.9	33.9	4.6	6.6	4.4	1.4	2.5	0.8	9.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4.0	10.9	16.6	15.4	22.8	4.4	8.5	3.0	1.0	3.0	2.2	8.1	100.0	66.478***
	기타	1,505	4.2	5.2	8.4	20.9	31.6	4.3	5.8	3.4	1.1	2.0	2.3	10.8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3.8	11.4	14.4	15.9	23.1	5.7	9.1	3.8	0.8	3.0	2.7	6.4	100.0	31.178**
	기타	1,736	4.2	5.9	9.8	20.1	30.4	4.1	6.0	3.2	1.2	2.1	2.2	10.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6.8	12.5	16.5	10.8	22.7	4.0	7.4	1.1	0.6	3.4	2.8	11.4	100.0	35.844***
	기타	1,824	3.9	6.1	9.8	20.4	30.0	4.4	6.4	3.5	1.2	2.1	2.2	10.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4.6	11.3	17.4	17.4	20.0	4.1	7.2	2.1	1.5	4.6	1.5	8.2	100.0	32.650**
	기타	1,805	4.1	6.1	9.6	19.8	30.4	4.4	6.4	3.4	1.1	2.0	2.4	1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2.1	4.9	14.0	21.0	25.5	3.8	3.5	2.8	1.7	2.4	6.3	11.9	100.0	41.607***
	기타	1,714	4.5	6.9	9.8	19.3	30.0	4.4	6.9	3.4	1.0	2.2	1.6	9.8	100.0	
학력	중졸이하	34	8.8	0.0	14.7	17.6	26.5	8.8	5.9	5.9	2.9	0.0	0.0	8.8	100.0	59.823**
	고졸	517	5.2	7.5	10.4	23.2	24.8	3.9	7.4	3.3	0.6	2.7	1.9	9.1	100.0	
	전문대/대졸	1,236	3.5	6.6	11.1	18.4	31.5	3.8	6.1	3.2	1.3	2.3	1.8	10.4	100.0	
	대학원졸	213	4.7	6.1	5.6	17.4	29.1	8.0	6.1	3.3	0.9	1.4	6.6	10.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0-3〉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 가정	제2 외국어	한문	교양	계	
전체		2,000	3.9	6.7	15.4	14.4	28.3	5.1	5.6	3.0	1.5	5.4	1.5	9.5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4	8.6	16.4	12.5	26.0	5.4	4.9	4.4	2.0	5.4	1.5	7.6	100.0	47.719*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9	4.6	14.6	16.7	27.9	5.7	6.3	4.0	1.7	4.8	1.3	7.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2.7	6.9	16.0	13.6	30.1	4.5	5.2	2.0	0.9	5.4	1.7	11.0	100.0	
	읍·면(군) 지역	147	2.7	7.5	11.6	16.3	24.5	5.4	6.8	2.0	2.7	6.8	0.7	12.9	100.0	
연령	19 - 29세	374	4.8	4.3	15.8	11.2	34.0	5.6	8.8	3.7	1.1	4.5	0.0	6.1	100.0	108272***
	30대	412	2.4	6.3	18.2	12.6	29.1	5.3	4.6	4.1	1.9	5.8	1.5	8.0	100.0	
	40대	462	3.5	10.8	17.1	13.6	23.6	4.3	7.6	3.7	1.9	4.3	1.1	8.4	100.0	
	50대	413	4.1	5.3	11.4	16.7	29.1	4.6	3.4	1.7	0.7	7.0	2.2	13.8	100.0	
	60 - 75세	339	4.7	5.6	14.2	18.3	26.5	5.6	2.9	1.5	1.5	5.0	2.9	11.2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0	8.2	16.2	14.6	25.2	5.5	4.9	2.7	1.4	5.3	1.4	10.5	100.0	55.331***
	미혼	648	3.7	3.7	13.9	13.6	34.4	4.5	7.1	3.7	1.5	5.2	1.2	7.4	100.0	
	기타	41	0.0	4.9	12.2	19.5	31.7	0.0	2.4	2.4	0.0	7.3	7.3	12.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3.9	8.0	16.2	14.7	25.4	5.3	4.8	2.7	1.4	5.4	1.6	10.5	100.0	37.334***
	자녀 없음	652	3.7	3.8	13.8	13.8	34.4	4.4	7.1	3.7	1.5	5.2	1.2	7.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3.8	12.1	19.8	12.9	19.8	4.4	6.1	3.8	1.2	5.5	0.6	9.9	100.0	61.875***
	기타	1,505	3.9	4.9	14.0	14.9	31.1	5.2	5.4	2.7	1.5	5.3	1.8	9.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3.4	12.1	18.6	12.9	20.8	6.1	6.8	5.7	1.1	5.7	0.4	6.4	100.0	36.903***
	기타	1,736	3.9	5.8	14.9	14.6	29.4	4.9	5.4	2.6	1.5	5.3	1.7	10.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6.3	12.5	18.2	11.9	19.9	1.7	6.8	2.3	1.1	5.7	0.6	13.1	100.0	28.482**
	기타	1,824	3.6	6.1	15.1	14.6	29.1	5.4	5.4	3.1	1.5	5.3	1.6	9.2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5.1	13.8	19.0	11.8	16.4	4.6	5.6	2.6	1.5	6.2	1.0	12.3	100.0	33.957***
	기타	1,805	3.7	5.9	15.0	14.7	29.6	5.1	5.5	3.0	1.4	5.3	1.6	9.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9	2.9	20.6	8.8	5.9	14.7	14.7	0.0	0.0	17.6	0.0	8.8	100.0	69.031***
	고졸	517	4.3	6.0	16.4	16.8	25.1	6.4	5.0	2.3	1.4	7.2	0.6	8.5	100.0	
	전문대/대졸	1,236	3.7	7.1	15.7	13.4	29.9	4.0	5.7	3.4	1.4	4.7	1.6	9.4	100.0	
	대학원졸	213	3.3	6.1	10.3	15.0	30.0	6.6	4.7	2.8	2.3	2.8	3.3	12.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1-1〉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성 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계	
전체		2,000	18.3	35.2	1.9	6.1	23.6	6.3	2.0	5.8	0.8	0.3	100.0	
성별	남성	1,009	17.6	32.2	1.9	6.9	25.6	7.5	1.5	5.6	0.9	0.3	100.0	19.835*
	여성	991	18.9	38.2	1.8	5.2	21.6	4.9	2.4	6.1	0.6	0.2	100.0	
연령	19 - 29세	374	21.7	27.5	2.9	8.8	20.1	11.0	1.9	4.5	1.3	0.3	100.0	82.813***
	30대	412	18.9	36.4	2.2	6.6	20.6	7.0	1.9	5.8	0.2	0.2	100.0	
	40대	462	18.6	40.3	2.2	6.3	18.6	5.4	2.2	5.2	1.1	0.2	100.0	
	50대	413	17.9	33.2	1.0	5.1	29.3	4.1	2.2	6.5	0.5	0.2	100.0	
	60 - 75세	339	13.6	37.8	0.9	3.5	31.0	3.8	1.5	7.1	0.6	0.3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22.8	31.5	2.6	6.5	19.8	5.6	1.3	6.9	2.6	0.4	100.0	130.7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6.8	40.2	0.7	7.0	24.5	4.2	3.8	2.8	0.0	0.0	100.0	
	사무 종사자	381	19.4	36.5	1.8	6.0	20.2	7.1	2.1	5.8	0.5	0.5	100.0	
	서비스 종사자	61	26.2	24.6	0.0	8.2	21.3	6.6	3.3	9.8	0.0	0.0	100.0	
	판매 종사자	73	17.8	37.0	0.0	9.6	19.2	6.8	2.7	6.8	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20.0	13.3	0.0	6.7	46.7	6.7	0.0	6.7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0.3	32.8	3.4	3.4	27.6	19.0	0.0	1.7	1.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7.4	22.2	11.1	14.8	25.9	14.8	0.0	3.7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9.2	26.0	2.7	4.1	34.2	5.5	0.0	8.2	0.0	0.0	100.0	
	군인	5	0.0	40.0	0.0	40.0	2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789	17.2	36.4	1.9	5.1	24.8	5.6	1.6	6.3	0.8	0.3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1-2〉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교육: 중학교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성 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계	
전체		2,000	8.8	40.8	3.9	13.6	16.3	12.0	2.2	1.6	0.6	0.4	100.0	
성별	남성	1,009	10.8	39.5	4.1	12.0	18.3	10.2	2.5	1.9	0.5	0.2	100.0	28.187**
	여성	991	6.7	42.1	3.7	15.1	14.2	13.8	1.9	1.3	0.6	0.5	100.0	
연령	19 - 29세	374	8.3	38.2	5.1	12.3	12.3	18.7	1.3	2.9	0.5	0.3	100.0	111.242***
	30대	412	6.3	36.4	3.2	18.2	16.3	14.1	3.4	1.0	1.0	0.2	100.0	
	40대	462	9.7	38.7	6.9	16.0	15.6	8.4	2.2	1.7	0.4	0.2	100.0	
	50대	413	8.5	46.7	1.7	12.8	15.0	10.4	1.7	1.7	0.7	0.7	100.0	
	60 - 75세	339	11.2	44.5	2.1	6.8	23.3	8.8	2.4	0.6	0.0	0.3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9.2	40.9	4.1	13.8	16.8	10.2	2.6	1.4	0.5	0.4	100.0	16.966*
	자녀 없음	652	7.8	40.5	3.5	13.0	15.2	15.6	1.4	2.0	0.6	0.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0.5	38.4	6.1	17.8	12.9	9.5	2.0	1.8	0.8	0.2	100.0	29.334**
	기타	1,505	8.2	41.6	3.2	12.2	17.4	12.8	2.3	1.5	0.5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0.6	32.2	7.2	18.6	14.0	11.7	2.7	2.7	0.4	0.0	100.0	25.429**
	기타	1,736	8.5	42.1	3.4	12.8	16.6	12.0	2.1	1.4	0.6	0.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2.3	44.1	4.6	17.4	11.3	6.7	1.0	0.5	1.5	0.5	100.0	21.806*
	기타	1,805	8.4	40.4	3.8	13.1	16.8	12.6	2.3	1.7	0.4	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9.8	51.7	2.8	12.6	12.2	7.3	1.0	1.0	1.0	0.3	100.0	25.050**
	기타	1,714	8.6	39.0	4.1	13.7	17.0	12.8	2.4	1.7	0.5	0.4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7.3	38.1	3.8	13.8	19.6	12.7	1.5	0.8	1.2	1.2	100.0	44.49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8.6	41.1	3.9	11.0	15.2	15.2	2.7	1.8	0.6	0.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9.5	42.4	4.2	14.8	14.4	10.5	2.3	1.4	0.5	0.0	100.0	
	600만원 이상	415	8.7	39.5	3.4	15.4	19.0	8.9	1.7	2.2	0.2	1.0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9.9	42.2	3.9	11.6	15.5	10.8	3.9	1.7	0.4	0.0	100.0	119.75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7.7	41.6	4.5	16.1	16.8	9.4	1.4	1.4	0.7	0.3	100.0	
	사무 종사자	381	8.4	41.7	5.0	14.2	15.7	11.5	1.6	1.0	0.3	0.5	100.0	
	서비스 종사자	61	3.3	44.3	3.3	16.4	18.0	9.8	3.3	1.6	0.0	0.0	100.0	
	판매 종사자	73	13.7	41.1	1.4	16.4	13.7	9.6	2.7	1.4	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13.3	6.7	13.3	20.0	0.0	6.7	0.0	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7	25.9	3.4	19.0	19.0	27.6	1.7	0.0	1.7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4.8	18.5	7.4	11.1	22.2	14.8	7.4	3.7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8.2	38.4	1.4	16.4	21.9	9.6	1.4	1.4	1.4	0.0	100.0	
	군인	5	0.0	20.0	40.0	0.0	20.0	0.0	20.0	0.0	0.0	0.0	100.0	
	기타	789	8.9	42.1	3.3	11.9	15.7	13.2	1.9	2.0	0.5	0.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1-3〉 현재보다 강화해야 할 교육: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성 교육	환경 교육	안전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계	
전체		2,000	6.6	22.5	28.2	17.2	13.3	7.6	2.1	1.5	0.6	0.7	100.0	
성별	남성	1,009	8.1	22.2	25.6	18.1	15.4	5.9	2.1	1.8	0.5	0.3	100.0	32.631***
	여성	991	5.0	22.7	30.8	16.1	11.2	9.3	2.1	1.1	0.6	1.0	100.0	
연령	19 - 29세	374	4.5	14.7	38.2	17.4	10.2	9.9	3.5	1.1	0.3	0.3	100.0	106.349***
	30대	412	5.6	18.7	28.6	17.5	13.6	11.4	2.2	1.5	0.7	0.2	100.0	
	40대	462	5.6	21.9	27.3	19.7	14.5	6.1	1.5	2.2	0.4	0.9	100.0	
	50대	413	6.8	27.6	24.0	15.7	13.1	7.3	1.9	1.9	0.5	1.2	100.0	
	60 - 75세	339	11.2	30.1	22.7	14.7	15.0	2.9	1.5	0.3	0.9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7.6	24.4	26.5	17.0	12.7	6.7	1.9	1.8	0.5	0.8	100.0	33.955*
	미혼	648	4.8	18.7	31.3	17.4	14.2	9.6	2.5	0.8	0.6	0.2	100.0	
	기타	41	2.4	19.5	31.7	17.1	19.5	4.9	2.4	0.0	0.0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7.5	24.3	26.6	17.0	12.8	6.7	1.9	1.8	0.5	0.9	100.0	27.945**
	자녀 없음	652	4.8	18.6	31.3	17.5	14.4	9.5	2.5	0.8	0.6	0.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8.8	20.6	17.6	11.8	11.8	8.8	11.8	0.0	5.9	2.9	100.0	65.505***
	고졸	517	7.2	20.9	29.4	16.4	13.5	9.7	1.4	1.0	0.4	0.2	100.0	
	전문대/대졸	1,236	6.0	22.5	28.3	18.2	12.4	7.4	2.3	1.7	0.4	0.8	100.0	
	대학원졸	213	8.5	26.3	25.8	13.6	18.3	3.8	0.9	1.4	0.9	0.5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7.1	20.5	29.7	16.9	12.4	7.5	2.4	2.6	0.4	0.4	100.0	17.296*
	맞벌이 부부 아님	820	7.7	26.7	24.6	17.1	13.2	6.1	1.6	1.2	0.6	1.2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3.9	19.8	25.9	19.4	13.4	10.3	4.3	2.6	0.4	0.0	100.0	116.35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6.3	22.0	25.9	22.4	13.3	6.3	2.1	1.0	0.0	0.7	100.0	
	사무 종사자	381	6.3	22.0	28.3	17.3	12.6	8.1	1.3	2.6	0.5	0.8	100.0	
	서비스 종사자	61	9.8	21.3	21.3	13.1	21.3	6.6	4.9	1.6	0.0	0.0	100.0	
	판매 종사자	73	5.5	30.1	30.1	15.1	11.0	5.5	1.4	1.4	0.0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13.3	13.3	0.0	20.0	26.7	0.0	13.3	6.7	0.0	6.7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3.4	13.8	25.9	20.7	20.7	10.3	5.2	0.0	0.0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4.8	14.8	25.9	14.8	7.4	18.5	0.0	3.7	0.0	0.0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8.2	26.0	27.4	12.3	16.4	5.5	4.1	0.0	0.0	0.0	100.0	
	군인	5	20.0	40.0	20.0	0.0	20.0	0.0	0.0	0.0	0.0	0.0	100.0	
	기타	789	7.1	23.6	30.8	15.3	12.3	7.1	1.1	0.8	1.0	0.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2-1〉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초·중·고 전반

초·중·고 전반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37.4	48.3	12.5	1.7	0.1	100.0	4.21	0.729		
성별	남성	1,009	36.0	47.4	14.5	2.0	0.2	100.0	4.17	0.757	10.704*	
	여성	991	38.8	49.2	10.5	1.4	0.0	100.0	4.26	0.697		
연령	19 - 29세	374	35.8	43.6	18.4	2.1	0.0	100.0	4.13	0.783	43.149***	
	30대	412	36.4	44.4	17.0	1.9	0.2	100.0	4.15	0.783		
	40대	462	36.8	50.0	11.5	1.5	0.2	100.0	4.22	0.719		
	50대	413	37.5	52.3	9.0	1.2	0.0	100.0	4.26	0.668		
	60 - 75세	339	41.0	51.0	6.2	1.8	0.0	100.0	4.31	0.66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37.2	49.9	11.2	1.7	0.0	100.0	4.23	0.708	11.800*	
	자녀 없음	652	37.7	45.1	15.2	1.7	0.3	100.0	4.18	0.76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1.6	52.4	5.9	0.0	0.0	100.0	4.36	0.591	20.251***	
	기타	1,714	36.7	47.6	13.6	2.0	0.1	100.0	4.19	0.74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8.1	41.2	19.6	0.8	0.4	100.0	4.16	0.787	28.64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35.3	49.2	13.5	2.0	0.0	100.0	4.18	0.732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36.8	50.0	10.9	2.1	0.2	100.0	4.21	0.729		
	600만원 이상	415	41.2	48.7	8.9	1.2	0.0	100.0	4.30	0.679		

*p〈0.05, **p〈0.01, ***p〈0.001

〈표 Ⅴ-12-2〉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28.2	49.0	20.4	2.4	0.2	100.0	4.03	0.770		
성별	남성	1,009	26.9	48.1	22.6	2.2	0.3	100.0	3.99	0.780	9.543*	
	여성	991	29.5	49.8	18.2	2.5	0.0	100.0	4.06	0.75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08	28.2	49.5	20.3	1.7	0.2	100.0	4.04	0.759	22.855*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26.8	44.3	26.0	2.7	0.2	100.0	3.95	0.807		
	중소도시(시 지역)	919	28.9	50.7	18.1	2.3	0.0	100.0	4.06	0.747		
	읍·면(군) 지역	147	27.9	53.1	15.0	3.4	0.7	100.0	4.04	0.793		
혼인상태	기혼	1,311	27.5	51.3	19.1	2.1	0.0	100.0	4.04	0.742	21.956**	3.387*
	미혼	648	29.6	45.4	21.8	2.8	0.5	100.0	4.01	0.817		
	기타	41	26.8	31.7	39.0	2.4	0.0	100.0	3.83	0.863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27.4	50.6	19.8	2.2	0.0	100.0	4.03	0.747	10.615*	
	자녀 없음	652	29.6	45.6	21.6	2.8	0.5	100.0	4.01	0.815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33.0	48.3	17.6	1.1	0.0	100.0	4.13	0.733		2.682*
	기타	1,824	27.7	49.0	20.7	2.5	0.2	100.0	4.02	0.773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2.5	49.7	17.5	0.3	0.0	100.0	4.14	0.704	9.870*	
	기타	1,714	27.4	48.8	20.9	2.7	0.2	100.0	4.01	0.77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0	27.7	44.2	25.0	2.3	0.8	100.0	3.96	0.830	22.40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6.0	48.9	22.0	3.2	0.0	100.0	3.98	0.77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8.2	51.4	18.6	1.7	0.2	100.0	4.06	0.739		
	600만원 이상	415	31.8	48.2	17.8	2.2	0.0	100.0	4.10	0.758		

*p〈0.05, **p〈0.01, ***p〈0.001

〈표 Ⅴ-12-3〉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43.5	44.0	10.8	1.7	0.2	100.0	4.29	0.733		
성별	남성	1,009	40.4	44.7	12.7	1.9	0.3	100.0	4.23	0.762	15.198**	
	여성	991	46.5	43.3	8.8	1.4	0.0	100.0	4.35	0.699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43.6	44.1	9.6	2.5	0.2	100.0	4.28	0.757	21.14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0.3	44.1	13.5	2.1	0.0	100.0	4.23	0.756		
	중소도시(시 지역)	919	45.7	43.5	9.9	0.8	0.1	100.0	4.34	0.694		
	읍·면(군) 지역	147	40.1	46.3	9.5	3.4	0.7	100.0	4.22	0.807		
연령	19 - 29세	374	39.6	41.4	16.8	2.1	0.0	100.0	4.18	0.786	46.796***	
	30대	412	43.0	40.8	14.3	1.7	0.2	100.0	4.25	0.777		
	40대	462	40.9	48.3	8.0	2.6	0.2	100.0	4.27	0.735		
	50대	413	47.2	43.3	8.7	0.5	0.2	100.0	4.37	0.683		
	60 - 75세	339	47.2	45.7	5.9	1.2	0.0	100.0	4.39	0.65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4.4	44.8	9.2	1.5	0.1	100.0	4.32	0.707	13.071*	
	자녀 없음	652	41.4	42.3	14.0	2.0	0.3	100.0	4.23	0.782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41.7	43.2	10.6	4.2	0.4	100.0	4.22	0.824	13.011*	3.117*
	기타	1,736	43.7	44.1	10.8	1.3	0.1	100.0	4.30	0.71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50.7	44.8	4.5	0.0	0.0	100.0	4.46	0.584	22.037***	
	기타	1,714	42.2	43.9	11.8	1.9	0.2	100.0	4.26	0.752		
학력	중졸이하	34	41.2	35.3	20.6	2.9	0.0	100.0	4.15	0.857	21.333*	
	고졸	517	42.4	42.4	13.9	1.4	0.0	100.0	4.26	0.743		
	전문대/대졸	1,236	42.7	45.3	10.0	1.8	0.2	100.0	4.29	0.729		
	대학원졸	213	50.7	41.8	5.6	1.4	0.5	100.0	4.41	0.70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7.3	41.5	19.6	1.2	0.4	100.0	4.14	0.795	43.65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0.0	47.5	11.0	1.5	0.0	100.0	4.26	0.709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4.4	44.5	8.8	2.0	0.3	100.0	4.31	0.738		
	600만원 이상	415	51.3	39.0	8.0	1.7	0.0	100.0	4.40	0.708		

*p〈0.05, **p〈0.01, ***p〈0.001

〈표 Ⅴ-12-4〉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41.6	42.5	13.9	1.9	0.2	100.0	4.23	0.771		
성별	남성	1,009	39.2	41.0	16.7	2.6	0.4	100.0	4.16	0.821	24.831***	
	여성	991	43.9	44.0	10.9	1.2	0.0	100.0	4.31	0.71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08	40.9	42.9	14.7	1.2	0.2	100.0	4.23	0.759	22.53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0.1	41.1	15.6	3.2	0.0	100.0	4.18	0.809		
	중소도시(시 지역)	919	42.7	42.7	13.1	1.5	0.1	100.0	4.26	0.748		
	읍·면(군) 지역	147	41.5	45.6	10.2	1.4	1.4	100.0	4.24	0.799		
연령	19 - 29세	374	38.0	41.7	17.6	2.7	0.0	100.0	4.15	0.801	40.365**	
	30대	412	43.2	38.1	15.0	3.2	0.5	100.0	4.20	0.844		
	40대	462	39.4	43.5	15.2	1.7	0.2	100.0	4.20	0.771		
	50대	413	38.3	47.7	12.3	1.5	0.2	100.0	4.22	0.733		
	60 - 75세	339	50.4	41.0	8.3	0.3	0.0	100.0	4.42	0.654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41.8	39.2	16.6	2.2	0.2	100.0	4.20	0.807		2.412*
	기타	1,505	41.5	43.6	13.0	1.8	0.2	100.0	4.24	0.758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43.6	36.9	16.9	2.1	0.5	100.0	4.21	0.832		2.956*
	기타	1,805	41.3	43.1	13.5	1.9	0.2	100.0	4.24	0.76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9.9	49.0	10.5	0.7	0.0	100.0	4.28	0.674		2.606*
	기타	1,714	41.8	41.4	14.4	2.1	0.2	100.0	4.23	0.786		
직업군	관리자	232	38.4	38.4	17.7	4.7	0.9	100.0	4.09	0.908	79.54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44.8	43.7	10.1	1.0	0.3	100.0	4.31	0.725		
	사무 종사자	381	38.8	40.4	18.6	2.1	0.0	100.0	4.16	0.797		
	서비스 종사자	61	39.3	47.5	13.1	0.0	0.0	100.0	4.26	0.681		
	판매 종사자	73	47.9	38.4	11.0	2.7	0.0	100.0	4.32	0.78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40.0	13.3	6.7	6.7	100.0	3.87	1.18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43.1	46.6	10.3	0.0	0.0	100.0	4.33	0.65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7.0	55.6	7.4	0.0	0.0	100.0	4.30	0.609		
	단순노무 종사자	73	38.4	42.5	17.8	1.4	0.0	100.0	4.18	0.770		
	군인	5	40.0	40.0	20.0	0.0	0.0	100.0	4.20	0.837		
	기타	789	42.7	43.6	12.2	1.5	0.0	100.0	4.28	0.731		

*p〈0.05, **p〈0.01, ***p〈0.001

〈표 Ⅴ-13-1〉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초·중·고 전반

초·중·고 전반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27.2	56.3	15.3	1.1	0.1	100.0	4.09	0.68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24.9	57.9	15.8	1.3	0.1	100.0	4.06	0.684	12.280*	
	자녀 없음	652	31.9	53.1	14.3	0.8	0.0	100.0	4.16	0.683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26.7	63.1	9.7	0.0	0.5	100.0	4.15	0.623	12.204*	
	기타	1,805	27.3	55.6	15.9	1.2	0.1	100.0	4.09	0.691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0.8	60.8	7.3	1.0	0.0	100.0	4.21	0.616	16.937**	
	기타	1,714	26.6	55.5	16.6	1.1	0.1	100.0	4.07	0.69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1.2	45.4	22.3	1.2	0.0	100.0	4.07	0.761	25.92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6.6	57.4	14.6	1.4	0.0	100.0	4.09	0.67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5.8	58.6	13.9	1.4	0.3	100.0	4.08	0.688		
	600만원 이상	415	28.0	57.6	14.2	0.2	0.0	100.0	4.13	0.644		

*p〈0.05, **p〈0.01, ***p〈0.001

〈표 Ⅴ-13-2〉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13.5	43.0	37.5	5.6	0.5	100.0	3.63	0.802		
혼인 상태	기혼	1,311	11.9	43.6	38.6	5.4	0.5	100.0	3.61	0.782	17.466*	
	미혼	648	16.5	42.9	34.0	6.0	0.6	100.0	3.69	0.839		
	기타	41	14.6	24.4	56.1	4.9	0.0	100.0	3.49	0.81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1.9	43.1	39.1	5.4	0.4	100.0	3.61	0.783	10.474*	
	자녀 없음	652	16.6	42.8	34.0	6.0	0.6	100.0	3.69	0.83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4.0	45.5	38.5	2.1	0.0	100.0	3.71	0.727	9.608*	
	기타	1,714	13.4	42.6	37.3	6.2	0.6	100.0	3.62	0.814		

*p〈0.05, **p〈0.01, ***p〈0.001

〈표 Ⅴ-13-3〉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27.3	56.8	13.9	2.1	0.1	100.0	4.09	0.700		
연령	19 - 29세	374	26.2	55.3	15.8	2.7	0.0	100.0	4.05	0.725	27.817*	3.971**
	30대	412	33.3	48.5	16.3	1.9	0.0	100.0	4.13	0.746		
	40대	462	28.4	58.0	11.3	2.4	0.0	100.0	4.12	0.691		
	50대	413	23.5	61.0	13.8	1.5	0.2	100.0	4.06	0.671		
	60 - 75세	339	24.2	61.4	12.7	1.8	0.0	100.0	4.08	0.659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30.8	57.4	9.2	2.1	0.5	100.0	4.16	0.711	13.645**	
	기타	1,805	26.9	56.7	14.4	2.0	0.0	100.0	4.08	0.699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26.9	63.6	8.7	0.7	0.0	100.0	4.17	0.598	12.328*	
	기타	1,714	27.3	55.6	14.8	2.3	0.1	100.0	4.08	0.715		
직업군	관리자	232	28.9	56.9	11.2	2.6	0.4	100.0	4.11	0.730	59.2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9.0	57.7	12.2	1.0	0.0	100.0	4.15	0.659		
	사무 종사자	381	27.3	52.2	18.1	2.4	0.0	100.0	4.04	0.740		
	서비스 종사자	61	24.6	54.1	18.0	3.3	0.0	100.0	4.00	0.753		
	판매 종사자	73	39.7	49.3	9.6	1.4	0.0	100.0	4.27	0.6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53.3	0.0	13.3	0.0	100.0	4.07	0.9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2.4	60.3	13.8	3.4	0.0	100.0	4.02	0.71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4.8	59.3	25.9	0.0	0.0	100.0	3.89	0.641		
	단순노무 종사자	73	21.9	57.5	13.7	6.8	0.0	100.0	3.95	0.797		
	군인	5	0.0	60.0	40.0	0.0	0.0	100.0	3.60	0.548		
	기타	789	26.5	59.1	13.1	1.4	0.0	100.0	4.11	0.664		

*p〈0.05, **p〈0.01, ***p〈0.001

〈표 Ⅴ-13-4〉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64.1	27.6	7.0	1.3	0.1	100.0	4.54	0.685		
성별	남성	1,009	62.0	27.5	8.9	1.5	0.1	100.0	4.50	0.728	13.977*	
	여성	991	66.2	27.7	5.0	1.0	0.0	100.0	4.59	0.635		
연령	19 - 29세	374	67.9	23.8	6.7	1.6	0.0	100.0	4.58	0.689	26.351*	
	30대	412	59.2	30.1	9.7	1.0	0.0	100.0	4.48	0.709		
	40대	462	65.8	25.8	6.3	2.2	0.0	100.0	4.55	0.710		
	50대	413	64.6	26.9	7.3	1.0	0.2	100.0	4.55	0.694		
	60 - 75세	339	62.8	32.2	4.7	0.3	0.0	100.0	4.58	0.598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67.1	23.4	6.7	2.6	0.2	100.0	4.55	0.751	18.154**	3.651*
	기타	1,505	63.1	29.0	7.1	0.8	0.0	100.0	4.54	0.662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63.3	25.4	6.8	4.2	0.4	100.0	4.47	0.827	27.866***	5.005**
	기타	1,736	64.2	27.9	7.0	0.8	0.0	100.0	4.56	0.66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73.3	19.5	5.6	1.0	0.5	100.0	4.64	0.684	17.940**	
	기타	1,805	63.1	28.5	7.1	1.3	0.0	100.0	4.53	0.68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72.4	25.9	1.4	0.3	0.0	100.0	4.70	0.509	21.217***	2.725*
	기타	1,714	62.7	27.9	7.9	1.4	0.1	100.0	4.52	0.70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6.5	29.6	12.7	1.2	0.0	100.0	4.42	0.754	32.145**	3.036*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1.5	30.5	6.2	1.8	0.0	100.0	4.52	0.694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5.3	26.7	6.7	1.2	0.2	100.0	4.56	0.687		
	600만원 이상	415	71.1	23.1	5.3	0.5	0.0	100.0	4.65	0.603		
직업군	관리자	232	61.2	26.7	10.3	1.3	0.4	100.0	4.47	0.767	80.86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71.3	22.4	5.2	1.0	0.0	100.0	4.64	0.632		
	사무 종사자	381	60.1	29.4	8.9	1.6	0.0	100.0	4.48	0.724		
	서비스 종사자	61	54.1	34.4	8.2	3.3	0.0	100.0	4.39	0.781		
	판매 종사자	73	68.5	31.5	0.0	0.0	0.0	100.0	4.68	0.4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0.0	20.0	20.0	0.0	0.0	100.0	4.40	0.8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5.5	24.1	8.6	1.7	0.0	100.0	4.53	0.73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51.9	29.6	7.4	11.1	0.0	100.0	4.22	1.013		
	단순노무 종사자	73	50.7	35.6	12.3	1.4	0.0	100.0	4.36	0.752		
	군인	5	60.0	0.0	40.0	0.0	0.0	100.0	4.20	1.095		
	기타	789	66.3	27.8	5.2	0.8	0.0	100.0	4.60	0.625		

*p〈0.05, **p〈0.01, ***p〈0.001

〈표 Ⅴ-14-1〉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초·중·고 전반

초·중·고 전반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0.7	7.2	40.7	40.5	11.0	100.0	2.46	0.809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2.0	8.6	41.7	38.5	9.3	100.0	2.55	0.851	25.12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0.4	6.8	42.6	38.6	11.6	100.0	2.46	0.801		
	중소도시(시 지역)	919	0.2	7.1	40.0	40.9	11.8	100.0	2.43	0.797		
	읍·면(군) 지역	147	1.4	4.8	34.7	50.3	8.8	100.0	2.39	0.772		
연령	19 - 29세	374	0.3	7.0	44.7	37.4	10.7	100.0	2.49	0.788	64.686***	3.186*
	30대	412	1.7	7.8	45.1	37.4	8.0	100.0	2.58	0.814		
	40대	462	1.1	9.5	44.2	38.7	6.5	100.0	2.60	0.792		
	50대	413	0.0	6.3	34.4	44.6	14.8	100.0	2.32	0.801		
	60 - 75세	339	0.3	4.4	33.6	45.1	16.5	100.0	2.27	0.797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0.5	7.9	40.1	40.8	10.7	100.0	2.47	0.807		11.603***
	자녀 없음	652	1.1	5.7	41.7	39.9	11.7	100.0	2.45	0.812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0.8	9.7	45.1	34.5	9.9	100.0	2.57	0.829	15.695**	
	기타	1,505	0.7	6.3	39.2	42.5	11.4	100.0	2.42	0.799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1	11.4	50.8	32.2	4.5	100.0	2.72	0.767	32.720***	
	기타	1,736	0.6	6.5	39.1	41.8	12.0	100.0	2.42	0.807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7	8.5	50.0	29.0	10.8	100.0	2.61	0.854	13.775**	
	기타	1,824	0.6	7.0	39.7	41.6	11.0	100.0	2.45	0.803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0	5.9	32.9	45.8	15.4	100.0	2.29	0.798	16.138**	
	기타	1,714	0.8	7.4	41.9	39.6	10.3	100.0	2.49	0.8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0.8	10.3	42.1	37.8	9.0	100.0	2.56	0.825	12.429*	
	맞벌이 부부 아님	820	0.5	6.2	38.8	42.8	11.7	100.0	2.41	0.794		
직업군	관리자	232	1.7	10.3	46.1	32.8	9.1	100.0	2.63	0.853	87.87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0.7	7.0	41.6	40.9	9.8	100.0	2.48	0.793		
	사무 종사자	381	0.5	8.1	41.7	39.1	10.5	100.0	2.49	0.810		
	서비스 종사자	61	0.0	8.2	34.4	47.5	9.8	100.0	2.41	0.783		
	판매 종사자	73	0.0	9.6	37.0	45.2	8.2	100.0	2.48	0.7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13.3	0.0	20.0	66.7	0.0	100.0	2.60	1.0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7	5.2	36.2	50.0	6.9	100.0	2.45	0.77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7	18.5	37.0	37.0	3.7	100.0	2.81	0.921		
	단순노무 종사자	73	0.0	5.5	35.6	41.1	17.8	100.0	2.29	0.825		
	군인	5	0.0	20.0	20.0	60.0	0.0	100.0	2.60	0.894		
	기타	789	0.3	5.4	40.4	41.1	12.8	100.0	2.39	0.787		

*p〈0.05, **p〈0.01, ***p〈0.001

〈표 Ⅴ-14-2〉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1.6	14.5	43.3	31.0	9.7	100.0	2.67	0.894		
연령	19 - 29세	374	0.8	14.7	44.1	31.3	9.1	100.0	2.67	0.865	38.865**	
	30대	412	1.5	15.0	48.3	27.7	7.5	100.0	2.75	0.853		
	40대	462	2.8	17.3	44.2	29.2	6.5	100.0	2.81	0.896		
	50대	413	1.7	12.1	40.0	34.4	11.9	100.0	2.57	0.910		
	60 - 75세	339	0.9	12.4	39.2	32.7	14.7	100.0	2.52	0.921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3.4	16.6	45.7	25.3	9.1	100.0	2.80	0.939	23.866***	
	기타	1,505	1.0	13.8	42.5	32.8	9.9	100.0	2.63	0.875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4.5	21.6	46.6	23.1	4.2	100.0	2.99	0.894	43.632***	
	기타	1,736	1.2	13.4	42.8	32.1	10.5	100.0	2.62	0.884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5.1	14.8	44.9	25.0	10.2	100.0	2.80	0.987	17.279**	
	기타	1,824	1.3	14.4	43.1	31.5	9.6	100.0	2.66	0.884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7	12.2	37.1	37.4	12.6	100.0	2.51	0.889	13.192*	
	기타	1,714	1.8	14.8	44.3	29.9	9.2	100.0	2.70	0.8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3.6	15.6	43.8	28.6	8.5	100.0	2.77	0.934	14.524**	
	맞벌이 부부 아님	820	0.9	14.5	42.9	31.8	9.9	100.0	2.65	0.877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0.8	10.8	40.8	33.8	13.8	100.0	2.51	0.890	22.49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0.9	14.0	42.7	33.8	8.6	100.0	2.65	0.85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4	15.0	45.6	27.4	9.5	100.0	2.73	0.913		
	600만원 이상	415	1.9	16.6	42.2	30.1	9.2	100.0	2.72	0.914		

*p〈0.05, **p〈0.01, ***p〈0.001

〈표 Ⅴ-14-3〉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1.4	6.3	31.5	44.3	16.7	100.0	2.31	0.869		
성별	남성	1,009	1.3	7.3	32.2	43.1	16.1	100.0	2.35	0.879		3.723**
	여성	991	1.4	5.2	30.7	45.4	17.3	100.0	2.28	0.859		
연령	19 - 29세	374	0.8	5.3	30.5	48.7	14.7	100.0	2.29	0.810	46.164***	
	30대	412	2.2	7.5	32.0	45.9	12.4	100.0	2.41	0.879		
	40대	462	2.4	8.9	34.2	39.8	14.7	100.0	2.44	0.929		
	50대	413	0.2	5.6	31.7	41.4	21.1	100.0	2.23	0.851		
	60 - 75세	339	0.9	3.2	27.7	46.9	21.2	100.0	2.16	0.823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8	9.3	33.9	37.0	18.0	100.0	2.40	0.947	20.295***	
	기타	1,505	1.2	5.3	30.6	46.6	16.2	100.0	2.29	0.84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3.0	11.0	34.8	39.4	11.7	100.0	2.54	0.942	24.094***	
	기타	1,736	1.1	5.6	30.9	45.0	17.4	100.0	2.28	0.853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3	10.8	41.5	29.0	16.5	100.0	2.53	0.967	23.753***	
	기타	1,824	1.3	5.9	30.5	45.7	16.7	100.0	2.29	0.857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0	7.7	30.8	34.9	25.6	100.0	2.24	0.956	15.650**	
	기타	1,805	1.4	6.1	31.5	45.3	15.7	100.0	2.32	0.86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3	5.2	24.8	48.6	21.0	100.0	2.15	0.823	12.905*	
	기타	1,714	1.5	6.5	32.6	43.5	15.9	100.0	2.34	0.8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2.1	8.6	33.5	39.5	16.4	100.0	2.41	0.931	10.429*	
	맞벌이 부부 아님	820	1.0	5.2	32.2	44.0	17.6	100.0	2.28	0.847		
직업군	관리자	232	2.6	8.6	37.1	39.2	12.5	100.0	2.50	0.912	86.5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4	5.9	30.4	43.7	18.5	100.0	2.28	0.882		
	사무 종사자	381	1.3	7.6	32.5	42.8	15.7	100.0	2.36	0.882		
	서비스 종사자	61	0.0	6.6	27.9	44.3	21.3	100.0	2.20	0.853		
	판매 종사자	73	0.0	12.3	23.3	46.6	17.8	100.0	2.30	0.9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6.7	20.0	60.0	6.7	100.0	2.47	0.99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7	6.9	27.6	53.4	10.3	100.0	2.36	0.83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7.4	33.3	25.9	25.9	7.4	100.0	3.07	1.107		
	단순노무 종사자	73	0.0	4.1	30.1	43.8	21.9	100.0	2.16	0.817		
	군인	5	0.0	0.0	40.0	60.0	0.0	100.0	2.40	0.548		
	기타	789	1.0	3.8	31.4	46.0	17.7	100.0	2.24	0.823		

*p〈0.05, **p〈0.01, ***p〈0.001

〈표 Ⅴ-14-4〉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계				
전체		2,000	1.0	7.8	30.5	40.7	20.1	100.0	2.29	0.905		
성별	남성	1,009	1.0	8.4	29.4	38.7	22.5	100.0	2.27	0.935	9.909*	3.776**
	여성	991	0.9	7.1	31.6	42.8	17.7	100.0	2.31	0.873		
연령	19 - 29세	374	0.8	8.8	39.6	36.1	14.7	100.0	2.45	0.876	65.127***	4.401**
	30대	412	1.2	9.2	31.8	41.3	16.5	100.0	2.37	0.907		
	40대	462	1.3	9.1	32.5	39.2	18.0	100.0	2.37	0.924		
	50대	413	0.2	5.8	28.1	41.2	24.7	100.0	2.16	0.871		
	60 - 75세	339	1.2	5.3	19.2	46.6	27.7	100.0	2.06	0.887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2	9.9	33.5	36.4	19.0	100.0	2.38	0.942	9.825*	
	기타	1,505	0.9	7.0	29.5	42.1	20.5	100.0	2.26	0.89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9	11.4	35.2	36.0	15.5	100.0	2.48	0.951	15.027**	
	기타	1,736	0.8	7.2	29.8	41.4	20.8	100.0	2.26	0.895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7	11.4	37.5	33.0	16.5	100.0	2.49	0.956	11.613*	
	기타	1,824	0.9	7.4	29.8	41.4	20.4	100.0	2.27	0.89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7	7.0	23.4	44.4	24.5	100.0	2.15	0.895	10.247*	
	기타	1,714	1.0	7.9	31.7	40.1	19.4	100.0	2.31	0.905		
직업군	관리자	232	1.7	9.9	33.6	34.5	20.3	100.0	2.38	0.973	59.2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0.7	7.3	30.4	42.7	18.9	100.0	2.28	0.879		
	사무 종사자	381	0.8	8.1	33.6	38.3	19.2	100.0	2.33	0.904		
	서비스 종사자	61	0.0	8.2	27.9	44.3	19.7	100.0	2.25	0.869		
	판매 종사자	73	0.0	11.0	16.4	52.1	20.5	100.0	2.18	0.8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6.7	20.0	53.3	13.3	100.0	2.40	1.0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0.0	6.9	24.1	44.8	24.1	100.0	2.14	0.86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7.4	25.9	25.9	22.2	18.5	100.0	2.81	1.241		
	단순노무 종사자	73	0.0	6.8	24.7	43.8	24.7	100.0	2.14	0.871		
	군인	5	0.0	20.0	20.0	40.0	20.0	100.0	2.40	1.140		
	기타	789	0.9	6.2	31.1	41.4	20.4	100.0	2.26	0.882		

*p〈0.05, **p〈0.01, ***p〈0.001

〈표 Ⅴ-15〉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가정	학교	사회	계	
전체		2,000	83.5	9.3	7.3	100.0	
성별	남성	1,009	80.8	11.5	7.7	100.0	13.572**
	여성	991	86.3	7.0	6.8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82.1	11.3	6.6	100.0	13.834*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83.3	9.9	6.8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85.3	7.9	6.7	100.0	
	읍·면(군) 지역	147	76.9	9.5	13.6	100.0	
연령	19 - 29세	374	74.9	11.8	13.4	100.0	36.073***
	30대	412	85.4	10.0	4.6	100.0	
	40대	462	84.4	9.5	6.1	100.0	
	50대	413	87.2	6.3	6.5	100.0	
	60 - 75세	339	85.0	8.8	6.2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85.0	8.9	6.1	100.0	9.444**
	자녀 없음	652	80.4	10.0	9.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73.5	23.5	2.9	100.0	13.005*
	고졸	517	81.6	9.7	8.7	100.0	
	전문대/대졸	1,236	83.9	9.1	7.0	100.0	
	대학원졸	213	87.3	7.0	5.6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84.9	9.9	5.2	100.0	35.0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88.8	6.3	4.9	100.0	
	사무 종사자	381	80.1	11.8	8.1	100.0	
	서비스 종사자	61	86.9	8.2	4.9	100.0	
	판매 종사자	73	90.4	5.5	4.1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6.7	13.3	2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86.2	10.3	3.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77.8	18.5	3.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79.5	9.6	11.0	100.0	
	군인	5	40.0	20.0	40.0	100.0	
	기타	789	82.9	8.7	8.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6〉 학교폭력의 완화 노력

학교 폭력의 완화 노력		사례 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t/F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계				
전체		2,000	1.5	10.5	27.6	43.9	16.6	100.0	2.36	0.928		
성별	남성	1,009	1.8	10.4	31.0	42.4	14.4	100.0	2.43	0.921	16.594**	2.414*
	여성	991	1.2	10.5	24.1	45.4	18.8	100.0	2.30	0.932		
연령	19 - 29세	374	1.6	8.6	23.8	45.5	20.6	100.0	2.25	0.933	41.859***	4.342**
	30대	412	1.9	7.0	25.2	43.2	22.6	100.0	2.23	0.941		
	40대	462	1.7	12.8	29.2	41.1	15.2	100.0	2.45	0.955		
	50대	413	0.7	10.7	29.8	46.7	12.1	100.0	2.41	0.862		
	60 - 75세	339	1.5	13.3	29.8	43.4	12.1	100.0	2.49	0.921		
혼인 상태	기혼	1,311	1.4	11.9	29.4	43.3	14.0	100.0	2.44	0.922	32.24***	
	미혼	648	1.7	7.6	24.4	44.3	22.1	100.0	2.23	0.933		
	기타	41	0.0	9.8	22.0	56.1	12.2	100.0	2.29	0.81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4	11.8	29.2	43.8	13.9	100.0	2.43	0.919	28.935***	
	자녀 없음	652	1.7	7.7	24.4	44.2	22.1	100.0	2.23	0.934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0	13.5	32.5	38.2	14.7	100.0	2.48	0.937	19.017**	
	기타	1,505	1.7	9.4	26.0	45.8	17.1	100.0	2.33	0.923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0	15.4	35.4	37.4	10.8	100.0	2.58	0.912	16.522**	3.953**
	기타	1,805	1.6	9.9	26.8	44.6	17.2	100.0	2.34	0.927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3	13.3	30.8	44.1	11.5	100.0	2.47	0.877	11.795*	2.757*
	기타	1,714	1.7	10.0	27.1	43.9	17.4	100.0	2.35	0.93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0.4	6.9	28.1	43.1	21.5	100.0	2.22	0.874	42.95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2	8.7	28.9	45.9	15.3	100.0	2.35	0.884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4	11.7	31.7	40.2	15.2	100.0	2.44	0.930		
	600만원 이상	415	2.9	13.5	18.8	47.2	17.6	100.0	2.37	1.015		

*p〈0.05, **p〈0.01, ***p〈0.001

〈표 Ⅴ-17〉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성적 위주의 입시경쟁 풍토	가정 교육의 부재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	대중매체 (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의 폭력성	학생 개인의 인성문제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7.5	36.7	12.8	19.2	12.0	1.9	100.0	
성별	남성	1,009	18.7	35.6	15.3	15.7	13.4	1.4	100.0	31.543***
	여성	991	16.1	37.7	10.3	22.8	10.6	2.4	100.0	
연령	19 - 29세	374	14.4	38.5	12.8	12.6	19.5	2.1	100.0	65.391***
	30대	412	16.3	38.3	13.6	15.5	13.3	2.9	100.0	
	40대	462	20.3	36.1	12.1	20.8	8.4	2.2	100.0	
	50대	413	20.6	33.2	12.6	24.2	8.0	1.5	100.0	
	60 - 75세	339	14.5	37.5	13.0	22.7	11.8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7.9	35.8	13.3	22.2	9.2	1.6	100.0	56.176***
	미혼	648	16.0	38.9	12.0	12.7	17.9	2.5	100.0	
	기타	41	24.4	29.3	9.8	26.8	7.3	2.4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18.0	35.7	13.2	22.3	9.2	1.6	100.0	51.875***
	자녀 없음	652	16.4	38.7	12.0	12.7	17.8	2.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1.4	31.9	14.9	21.8	7.9	2.0	100.0	24.024***
	기타	1,505	16.1	38.2	12.1	18.3	13.4	1.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0.5	30.7	15.5	21.2	8.7	3.4	100.0	13.327*
	기타	1,736	17.0	37.6	12.4	18.9	12.5	1.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8.2	31.3	15.9	26.1	8.0	0.6	100.0	12.321*
	기타	1,824	17.4	37.2	12.5	18.5	12.4	2.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8.5	33.9	10.8	25.9	10.8	0.0	100.0	16.365**
	기타	1,714	17.3	37.1	13.1	18.1	12.2	2.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6.5	20.6	20.6	23.5	5.9	2.9	100.0	25.176*
	고졸	517	15.1	36.4	11.0	20.3	15.5	1.7	100.0	
	전문대/대졸	1,236	17.9	36.2	14.0	18.7	11.2	2.0	100.0	
	대학원졸	213	19.2	42.7	8.9	18.8	8.9	1.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8〉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학칙 제·개정 시 의견 반영의 우선 주체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장·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기타	계	
전체		2,000	5.4	30.5	41.6	20.8	1.9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7	32.6	36.6	24.5	1.6	100.0	69.409***
	미혼	648	6.6	26.2	51.5	13.1	2.5	100.0	
	기타	41	7.3	29.3	41.5	22.0	0.0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7	32.4	36.9	24.4	1.6	100.0	66.402***
	자녀 없음	652	6.7	26.4	51.2	13.2	2.5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4.7	35.3	26.5	17.6	5.9	100.0	150.817***
	고졸	517	6.4	24.6	49.5	18.4	1.2	100.0	
	전문대/대졸	1,236	4.6	31.7	40.3	21.8	1.6	100.0	
	대학원졸	213	6.1	36.6	31.9	21.1	4.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8.8	24.2	46.2	18.5	2.3	100.0	53.20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2	30.7	44.1	19.1	2.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8	30.9	39.4	23.3	1.5	100.0	
	600만원 이상	415	6.0	33.3	38.1	20.7	1.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19〉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80.7	11.7	7.6	100.0	
성별	남성	1,009	81.6	12.7	5.7	100.0	11.068**
	여성	991	79.8	10.7	9.5	100.0	
연령	19 - 29세	374	70.9	16.3	12.8	100.0	47.609***
	30대	412	77.2	13.8	9.0	100.0	
	40대	462	82.3	11.9	5.8	100.0	
	50대	413	86.7	8.7	4.6	100.0	
	60 - 75세	339	86.4	7.4	6.2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82.8	11.0	6.2	100.0	15.872**
	미혼	648	76.2	13.1	10.6	100.0	
	기타	41	82.9	12.2	4.9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82.9	11.0	6.2	100.0	15.559***
	자녀 없음	652	76.2	13.2	10.6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80.0	14.3	5.7	100.0	7.238*
	기타	1,505	80.9	10.8	8.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87.8	8.7	3.5	100.0	11.953**
	기타	1,714	79.5	12.2	8.3	100.0	
학력	중졸이하	34	70.6	5.9	23.5	100.0	23.859**
	고졸	517	79.3	12.0	8.7	100.0	
	전문대/대졸	1,236	80.8	11.5	7.7	100.0	
	대학원졸	213	85.0	13.1	1.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68.8	18.5	12.7	100.0	34.12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79.8	11.6	8.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85.0	9.8	5.2	100.0	
	600만원 이상	415	82.7	10.6	6.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82.8	13.8	3.4	100.0	41.78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84.3	11.5	4.2	100.0	
	사무 종사자	381	77.7	12.9	9.4	100.0	
	서비스 종사자	61	82.0	13.1	4.9	100.0	
	판매 종사자	73	84.9	12.3	2.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93.3	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79.3	12.1	8.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59.3	18.5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82.2	12.3	5.5	100.0	
	군인	5	60.0	0.0	40.0	100.0	
	기타	789	80.4	10.3	9.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0.4	38.0	11.7	100.0	
성별	남성	1,009	49.0	41.5	9.5	100.0	15.959***
	여성	991	51.8	34.3	13.9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2.9	31.4	15.7	100.0	15.34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8.7	40.1	11.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50.9	38.8	10.2	100.0	
	읍·면(군) 지역	147	45.6	42.9	11.6	100.0	
연령	19 - 29세	374	47.9	37.2	15.0	100.0	19.449*
	30대	412	45.9	39.6	14.6	100.0	
	40대	462	48.7	40.0	11.3	100.0	
	50대	413	54.5	36.1	9.4	100.0	
	60 - 75세	339	55.8	36.3	8.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59.4	34.6	5.9	100.0	15.905***
	기타	1,714	48.8	38.5	12.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38.2	38.2	23.5	100.0	37.372***
	고졸	517	44.7	40.4	14.9	100.0	
	전문대/대졸	1,236	50.3	38.5	11.2	100.0	
	대학원졸	213	66.2	28.6	5.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1.2	43.5	15.4	100.0	32.85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5.4	40.5	14.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53.9	36.1	10.0	100.0	
	600만원 이상	415	58.3	33.5	8.2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50.4	40.9	8.6	100.0	31.96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55.9	33.9	10.1	100.0	
	사무 종사자	381	53.5	32.5	13.9	100.0	
	서비스 종사자	61	41.0	49.2	9.8	100.0	
	판매 종사자	73	42.5	43.8	13.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0.0	4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43.1	50.0	6.9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29.6	48.1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45.2	46.6	8.2	100.0	
	군인	5	60.0	20.0	20.0	100.0	
	기타	789	49.7	37.8	12.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1〉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영향 요인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사 (학교)	학부모 (가정)	친구 (교우)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1.9	37.6	27.3	3.3	100.0	
연령	19 - 29세	374	24.6	35.6	34.5	5.3	100.0	39.068***
	30대	412	27.9	38.3	29.9	3.9	100.0	
	40대	462	32.7	38.7	26.4	2.2	100.0	
	50대	413	37.5	35.8	23.5	3.1	100.0	
	60 - 75세	339	36.9	39.2	21.8	2.1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35.3	37.5	24.7	2.4	100.0	32.925***
	미혼	648	25.0	37.8	32.1	5.1	100.0	
	기타	41	31.7	34.1	31.7	2.4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35.3	37.4	24.9	2.4	100.0	32.938***
	자녀 없음	652	24.8	37.9	32.2	5.1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35.8	38.2	23.8	2.2	100.0	8.264*
	기타	1,505	30.6	37.3	28.4	3.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1.3	36.0	21.3	1.4	100.0	17.323**
	기타	1,714	30.3	37.8	28.2	3.6	100.0	
학력	중졸이하	34	41.2	32.4	14.7	11.8	100.0	17.718*
	고졸	517	31.3	36.8	27.3	4.6	100.0	
	전문대/대졸	1,236	31.1	38.4	27.8	2.7	100.0	
	대학원졸	213	36.2	35.2	26.3	2.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27.7	37.7	28.8	5.8	100.0	22.75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30.2	35.0	31.6	3.2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33.6	37.7	26.1	2.6	100.0	
	600만원 이상	415	34.5	41.2	21.2	3.1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2〉 사교육의 근본 원인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학부모의 교육관	기타	계	
전체		2,000	19.1	68.6	12.2	0.1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23.0	65.9	10.8	0.2	100.0	23.36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17.3	69.8	12.9	0.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18.9	68.9	12.2	0.0	100.0	
	읍·면(군) 지역	147	15.6	70.1	13.6	0.7	100.0	
연령	19 - 29세	374	11.8	76.2	12.0	0.0	100.0	30.473*
	30대	412	20.1	67.5	12.4	0.0	100.0	
	40대	462	22.7	65.6	11.7	0.0	100.0	
	50대	413	17.7	69.7	12.3	0.2	100.0	
	60 - 75세	339	22.7	64.3	12.7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2.1	66.4	11.4	0.2	100.0	25.702**
	미혼	648	13.3	73.3	13.4	0.0	100.0	
	기타	41	14.6	65.9	19.5	0.0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22.0	66.3	11.6	0.1	100.0	23.122***
	자녀 없음	652	13.2	73.3	13.5	0.0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3.8	66.1	9.9	0.2	100.0	14.575**
	기타	1,505	17.5	69.4	13.0	0.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5.8	66.3	8.0	0.0	100.0	12.093*
	기타	1,736	18.1	69.0	12.8	0.1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5.0	63.1	11.4	0.6	100.0	14.949**
	기타	1,824	18.5	69.1	12.3	0.1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21.5	66.7	11.3	0.5	100.0	10.304*
	기타	1,805	18.8	68.8	12.3	0.1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3.5	64.7	11.8	0.0	100.0	50.552***
	고졸	517	11.4	75.4	13.2	0.0	100.0	
	전문대/대졸	1,236	20.7	67.6	11.7	0.0	100.0	
	대학원졸	213	27.7	58.7	12.7	0.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3〉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방과후 학교 운영	EBS 강의 및 영어 교육 방송	EBS 수능 연계 (70% 이상)	선행 학습 금지 정책	중등 학교 절대 평가 도입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 시간 제한	자기 주도 학습 전형 방식 도입	대입 전형 간소화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기타	계	
전체		2,000	14.7	9.6	22.9	8.5	5.2	5.1	14.0	14.4	3.5	2.4	100.0	
연령	19 - 29세	374	10.4	12.8	22.5	5.6	4.5	8.0	14.2	15.5	2.9	3.5	100.0	132.965**
	30대	412	15.3	13.1	25.0	8.3	4.6	6.1	11.4	10.9	2.9	2.4	100.0	
	40대	462	14.5	8.4	23.2	9.5	6.5	5.2	13.0	15.2	2.4	2.2	100.0	
	50대	413	15.0	5.3	20.8	7.5	5.3	3.1	16.5	18.9	5.1	2.4	100.0	
	60 - 75세	339	18.3	8.6	23.0	11.5	4.7	2.7	15.0	10.6	4.1	1.5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6.1	7.6	23.5	9.7	5.9	4.4	13.7	13.6	3.7	1.8	100.0	67.668**
	미혼	648	11.6	13.7	21.5	5.7	3.9	6.3	14.2	16.4	3.2	3.5	100.0	
	기타	41	17.1	7.3	26.8	12.2	2.4	4.9	19.5	7.3	0.0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6.1	7.6	23.6	9.8	5.9	4.5	13.9	13.4	3.6	1.9	100.0	61.353***
	자녀 없음	652	11.7	13.8	21.5	5.7	3.8	6.3	14.1	16.4	3.2	3.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6.8	7.7	22.8	10.7	5.7	6.3	12.3	13.3	2.2	2.2	100.0	35.753*
	기타	1,505	14.0	10.2	22.9	7.7	5.0	4.7	14.5	14.7	3.9	2.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2.6	7.7	21.0	9.4	9.8	3.8	12.6	16.1	4.5	2.4	100.0	45.888**
	기타	1,714	15.0	9.9	23.2	8.3	4.4	5.3	14.2	14.1	3.3	2.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4〉 EBS 수능 연계(70% 이상)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EBS 수능 연계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3.3	18.4	18.4	100.0	
성별	남성	1,009	64.1	19.9	16.0	100.0	9.163*
	여성	991	62.4	16.9	20.8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7.1	20.1	22.8	100.0	13.125*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66.0	19.0	15.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4.7	17.0	18.3	100.0	
	읍·면(군) 지역	147	61.2	20.4	18.4	100.0	
연령	19 - 29세	374	50.3	29.1	20.6	100.0	52.549***
	30대	412	61.9	16.3	21.8	100.0	
	40대	462	66.0	16.5	17.5	100.0	
	50대	413	66.3	16.0	17.7	100.0	
	60 - 75세	339	71.7	14.7	13.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7.4	16.6	16.1	100.0	34.000***
	미혼	648	54.6	22.8	22.5	100.0	
	기타	41	68.3	7.3	24.4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7.4	16.2	16.4	100.0	30.077***
	자녀 없음	652	54.8	22.9	22.4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74.4	12.8	12.8	100.0	11.471**
	기타	1,805	62.0	19.0	18.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71.0	16.4	12.6	100.0	9.893**
	기타	1,714	62.0	18.7	19.3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0.0	29.4	20.6	100.0	15.567*
	고졸	517	58.2	20.3	21.5	100.0	
	전문대/대졸	1,236	65.5	16.7	17.7	100.0	
	대학원졸	213	64.3	21.6	14.1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5.8	22.7	21.5	100.0	16.88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5.1	16.1	18.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3.3	17.1	19.5	100.0	
	600만원 이상	415	64.8	21.4	13.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2.6	26.8	10.7	100.0	
성별	남성	1,009	62.7	28.7	8.5	100.0	12.047**
	여성	991	62.4	24.7	12.9	100.0	
연령	19 - 29세	374	64.7	19.8	15.5	100.0	57.394***
	30대	412	62.9	22.6	14.6	100.0	
	40대	462	68.6	23.6	7.8	100.0	
	50대	413	56.9	34.1	9.0	100.0	
	60 - 75세	339	58.4	34.8	6.8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2.3	29.5	8.2	100.0	36.626***
	미혼	648	63.7	20.8	15.4	100.0	
	기타	41	51.2	31.7	17.1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1.9	29.6	8.5	100.0	32.236***
	자녀 없음	652	63.8	20.9	15.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64.8	27.9	7.3	100.0	8.090*
	기타	1,505	61.8	26.4	11.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64.7	30.1	5.2	100.0	10.900**
	기타	1,714	62.2	26.2	11.6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0.0	23.5	26.5	100.0	40.752***
	고졸	517	63.8	22.8	13.3	100.0	
	전문대/대졸	1,236	63.8	26.1	10.1	100.0	
	대학원졸	213	54.0	40.8	5.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8.5	24.2	17.3	100.0	26.19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3.9	23.8	12.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3.5	28.2	8.3	100.0	
	600만원 이상	415	61.4	30.8	7.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6〉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다양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3.5	27.6	8.9	100.0	
성별	남성	1,009	59.3	31.7	9.0	100.0	18.270***
	여성	991	67.8	23.4	8.8	100.0	
연령	19 - 29세	374	72.5	20.1	7.5	100.0	36.375***
	30대	412	65.8	22.6	11.7	100.0	
	40대	462	58.9	31.6	9.5	100.0	
	50대	413	59.1	31.2	9.7	100.0	
	60 - 75세	339	62.5	32.2	5.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1.2	30.1	8.7	100.0	12.498*
	미혼	648	67.7	22.8	9.4	100.0	
	기타	41	70.7	22.0	7.3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1.5	29.8	8.7	100.0	10.231**
	자녀 없음	652	67.6	23.0	9.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56.8	33.9	9.3	100.0	14.388**
	기타	1,505	65.7	25.5	8.8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55.9	34.9	9.2	100.0	6.133*
	기타	1,805	64.3	26.8	8.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60.1	34.6	5.2	100.0	11.554**
	기타	1,714	64.1	26.4	9.5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5.8	30.0	14.2	100.0	14.78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4.5	26.6	8.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3.8	28.0	8.2	100.0	
	600만원 이상	415	66.3	27.0	6.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7〉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 의견

고등학교의 신입생 자체 선발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6.3	41.6	12.2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49.5	34.3	16.2	100.0	22.84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41.3	47.5	11.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47.4	40.8	11.8	100.0	
	읍·면(군) 지역	147	47.6	44.9	7.5	100.0	
연령	19 - 29세	374	39.8	44.1	16.0	100.0	57.468***
	30대	412	43.0	42.2	14.8	100.0	
	40대	462	38.7	50.6	10.6	100.0	
	50대	413	54.0	34.9	11.1	100.0	
	60 - 75세	339	58.1	33.6	8.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8.8	41.0	10.1	100.0	30.844***
	미혼	648	39.8	43.4	16.8	100.0	
	기타	41	65.9	29.3	4.9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9.3	40.7	10.0	100.0	24.948***
	자녀 없음	652	40.0	43.3	16.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43.8	47.7	8.5	100.0	14.212**
	기타	1,505	47.0	39.5	13.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39.8	51.1	9.1	100.0	11.896**
	기타	1,736	47.2	40.1	12.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54.9	38.5	6.6	100.0	14.605**
	기타	1,714	44.8	42.1	13.1	100.0	
학력	중졸이하	34	44.1	23.5	32.4	100.0	49.842***
	고졸	517	42.4	40.8	16.8	100.0	
	전문대/대졸	1,236	45.4	43.7	10.9	100.0	
	대학원졸	213	61.0	33.8	5.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2.3	38.8	18.8	100.0	21.12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3.2	45.3	11.6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7.3	40.9	11.8	100.0	
	600만원 이상	415	52.0	38.3	9.6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43.1	46.6	10.3	100.0	39.3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49.7	40.6	9.8	100.0	
	사무 종사자	381	45.1	40.2	14.7	100.0	
	서비스 종사자	61	24.6	60.7	14.8	100.0	
	판매 종사자	73	39.7	41.1	19.2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73.3	2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37.9	51.7	10.3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44.4	40.7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43.8	43.8	12.3	100.0	
	군인	5	0.0	60.0	40.0	100.0	
	기타	789	49.4	38.9	11.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28〉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고교 내신 성적	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	면접	글쓰기·논술	기타	계	
전체		2,000	25.2	21.8	22.7	24.0	4.6	1.4	0.5	100.0	
성별	남성	1,009	27.3	19.6	22.5	23.8	5.7	0.7	0.4	100.0	25.325**
	여성	991	23.0	23.9	22.9	24.1	3.4	2.1	0.5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33.6	23.0	18.6	18.6	4.4	1.5	0.2	100.0	59.6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23.8	22.2	22.1	25.9	4.6	1.1	0.4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22.9	21.9	24.6	23.7	4.9	1.6	0.4	100.0	
	읍·면(군) 지역	147	21.1	15.6	24.5	33.3	3.4	0.7	1.4	100.0	
연령	19 - 29세	374	21.1	16.3	27.3	22.7	9.9	1.6	1.1	100.0	99.289***
	30대	412	24.3	21.8	26.5	19.4	6.1	1.5	0.5	100.0	
	40대	462	27.1	22.3	23.2	22.9	3.2	1.3	0.0	100.0	
	50대	413	24.9	26.9	19.1	25.2	1.9	1.5	0.5	100.0	
	60 - 75세	339	28.3	20.6	16.8	30.7	2.1	1.2	0.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5.3	24.1	20.6	24.5	3.9	1.4	0.2	100.0	48.365**
	미혼	648	24.4	17.0	27.9	22.1	6.3	1.4	0.9	100.0	
	기타	41	31.7	22.0	7.3	36.6	0.0	2.4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25.4	24.0	20.3	24.9	3.8	1.4	0.2	100.0	39.389***
	자녀 없음	652	24.7	17.0	27.8	21.9	6.3	1.4	0.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2.2	25.9	18.5	20.6	1.4	1.0	0.3	100.0	24.213*
	기타	1,714	24.0	21.1	23.4	24.5	5.1	1.5	0.5	100.0	
학력	중졸이하	29.4	17.6	14.7	23.5	41.2	2.9	0.0	0.0	100.0	68.051***
	고졸	14.7	19.5	19.0	25.5	29.0	4.8	1.7	0.4	100.0	
	전문대/대졸	14.1	25.6	23.1	22.5	22.2	4.9	1.5	0.3	100.0	
	대학원졸	15.5	37.6	22.1	16.9	19.2	2.3	0.5	1.4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17.1	21.2	26.1	20.7	25.0	5.1	1.7	0.2	100.0	15.290*
	맞벌이 부부 아님	15.5	28.3	22.7	19.9	24.8	2.9	1.2	0.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5.0	18.5	17.3	23.5	31.5	6.2	3.1	0.0	100.0	55.37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2	25.0	19.1	25.1	23.0	5.6	1.5	0.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15.0	26.1	24.2	20.6	23.6	3.9	1.2	0.3	100.0	
	600만원 이상	13.0	28.2	24.8	21.7	21.2	3.1	0.5	0.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 29〉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6	42.7	34.8	15.2	1.7	100.0	
연령	19 - 29세	374	2.7	34.8	37.4	23.8	1.3	100.0	56.430***
	30대	412	7.5	39.6	39.1	12.1	1.7	100.0	
	40대	462	5.4	44.4	34.4	14.3	1.5	100.0	
	50대	413	5.8	47.0	31.7	12.3	3.1	100.0	
	60 - 75세	339	6.5	47.8	31.0	14.2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3	46.8	32.4	12.8	1.8	100.0	43.815***
	미혼	648	4.0	34.4	39.7	20.2	1.7	100.0	
	기타	41	9.8	43.9	34.1	12.2	0.0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4	46.7	32.3	12.8	1.7	100.0	42.661***
	자녀 없음	652	4.0	34.4	39.9	20.1	1.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9	32.4	47.1	8.8	8.8	100.0	70.098***
	고졸	517	6.4	32.3	38.3	19.7	3.3	100.0	
	전문대/대졸	1,236	5.1	45.2	34.0	14.8	0.9	100.0	
	대학원졸	213	7.0	54.9	29.1	7.5	1.4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6	33.5	38.5	18.5	5.0	100.0	41.21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4	41.2	36.7	16.2	1.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4	44.4	34.2	13.8	1.2	100.0	
	600만원 이상	415	7.0	48.2	30.4	13.7	0.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6.9	45.3	34.5	12.1	1.3	100.0	61.4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6.3	49.7	31.5	11.2	1.4	100.0	
	사무 종사자	381	6.0	44.9	31.5	15.5	2.1	100.0	
	서비스 종사자	61	8.2	32.8	49.2	8.2	1.6	100.0	
	판매 종사자	73	2.7	47.9	37.0	12.3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26.7	33.3	3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9	36.2	43.1	13.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0.0	25.9	51.9	14.8	7.4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1.0	37.0	38.4	12.3	1.4	100.0	
	군인	5	0.0	20.0	20.0	60.0	0.0	100.0	
	기타	789	4.4	40.7	35.0	18.0	1.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0〉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 방식

바람직한 영유아 지원 방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전 연령 모두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현행)	0-2세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3-5세는 무상, 그 이상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0-5세 모두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29.0	12.5	15.8	37.2	5.7	100.0	
성별	남성	1,009	31.1	11.4	16.9	35.4	5.2	100.0	9.676*
	여성	991	26.7	13.5	14.5	39.1	6.2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25.2	16.2	16.4	37.7	4.4	100.0	21.826*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26.6	12.0	18.4	37.3	5.7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30.8	12.1	14.1	36.9	6.1	100.0	
	읍·면(군) 지역	147	36.1	6.1	14.3	37.4	6.1	100.0	
연령	19 - 29세	374	31.8	11.5	17.4	33.7	5.6	100.0	27.696*
	30대	412	33.0	11.9	18.4	31.1	5.6	100.0	
	40대	462	30.5	11.9	13.6	38.3	5.6	100.0	
	50대	413	23.5	14.3	13.6	41.9	6.8	100.0	
	60 - 75세	339	25.4	12.7	16.2	41.3	4.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7.7	12.7	17.0	37.7	4.9	100.0	21.541**
	미혼	648	32.7	11.6	13.4	35.3	6.9	100.0	
	기타	41	9.8	17.1	12.2	51.2	9.8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27.2	12.9	16.9	38.0	5.0	100.0	12.238*
	자녀 없음	652	32.7	11.5	13.3	35.6	6.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23.8	13.3	14.0	45.5	3.5	100.0	12.785*
	기타	1,714	29.8	12.3	16.0	35.8	6.0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0.6	8.8	14.7	32.4	23.5	100.0	39.282***
	고졸	517	26.1	12.4	16.4	37.7	7.4	100.0	
	전문대/대졸	1,236	30.4	12.2	16.7	36.0	4.7	100.0	
	대학원졸	213	28.6	14.6	8.9	43.7	4.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27.3	10.0	15.8	35.0	11.9	100.0	35.90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30.5	11.0	15.9	36.5	6.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7.3	13.8	17.0	37.1	4.8	100.0	
	600만원 이상	415	30.1	14.2	13.5	39.8	2.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1-1〉 무상급식 지원 범위: 초등학생

초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26.9	22.0	48.6	2.7	100.0	
성별	남성	1,009	22.0	23.3	52.8	1.9	100.0	31.676***
	여성	991	31.8	20.6	44.2	3.4	100.0	
연령	19 - 29세	374	33.4	27.0	36.1	3.5	100.0	63.592***
	30대	412	20.1	25.0	52.7	2.2	100.0	
	40대	462	22.3	16.0	60.0	1.7	100.0	
	50대	413	30.0	21.8	45.3	2.9	100.0	
	60 - 75세	339	30.1	20.9	45.7	3.2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5.4	20.8	51.6	2.2	100.0	16.061*
	미혼	648	29.3	23.9	43.2	3.5	100.0	
	기타	41	34.1	26.8	36.6	2.4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25.7	21.1	51.0	2.2	100.0	12.510**
	자녀 없음	652	29.1	23.8	43.4	3.7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0.6	18.4	59.2	1.8	100.0	30.425***
	기타	1,505	28.9	23.1	45.0	2.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5.5	19.7	63.3	1.5	100.0	30.247***
	기타	1,736	28.6	22.3	46.3	2.8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3.9	17.6	58.0	0.6	100.0	8.966*
	기타	1,824	27.1	22.4	47.6	2.9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24.6	15.4	56.9	3.1	100.0	7.914*
	기타	1,805	27.1	22.7	47.6	2.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6.0	16.4	45.1	2.4	100.0	15.932**
	기타	1,714	25.3	22.9	49.1	2.7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7.6	17.6	52.9	11.8	100.0	38.069***
	고졸	517	30.8	23.2	43.3	2.7	100.0	
	전문대/대졸	1,236	24.0	22.7	51.1	2.1	100.0	
	대학원졸	213	35.2	15.0	45.5	4.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1.9	23.5	37.7	6.9	100.0	42.415***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3.0	23.3	52.2	1.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26.7	19.7	50.9	2.7	100.0	
	600만원 이상	415	30.1	22.4	45.8	1.7	100.0	

초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겠다	계	
직업군	관리자	232	22.0	23.3	51.3	3.4	100.0	56.3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8.3	20.3	49.7	1.7	100.0	
	사무 종사자	381	24.7	22.0	51.7	1.6	100.0	
	서비스 종사자	61	18.0	29.5	49.2	3.3	100.0	
	판매 종사자	73	15.1	20.5	63.0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26.7	20.0	5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5.9	20.7	51.7	1.7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4.8	22.2	48.1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9.2	30.1	47.9	2.7	100.0	
	군인	5	0.0	60.0	40.0	0.0	100.0	
	기타	789	31.9	20.8	44.2	3.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1-2〉 무상급식 지원 범위: 중학생

중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0.5	28.0	38.8	2.8	100.0	
성별	남성	1,009	25.6	30.0	42.3	2.1	100.0	29.374***
	여성	991	35.4	25.9	35.1	3.5	100.0	
연령	19 - 29세	374	35.3	31.0	29.9	3.7	100.0	73.800***
	30대	412	22.8	28.9	45.9	2.4	100.0	
	40대	462	24.5	22.9	50.6	1.9	100.0	
	50대	413	33.9	28.8	34.4	2.9	100.0	
	60 - 75세	339	38.3	29.5	28.9	3.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3.2	25.3	49.7	1.8	100.0	35.635***
	기타	1,505	32.8	28.9	35.1	3.1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8.9	28.0	51.5	1.5	100.0	27.817***
	기타	1,736	32.2	28.0	36.8	3.0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5.6	23.9	50.0	0.6	100.0	12.426**
	기타	1,824	30.9	28.4	37.7	3.0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27.2	20.0	49.7	3.1	100.0	12.496**
	기타	1,805	30.8	28.9	37.6	2.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0.2	21.7	35.7	2.4	100.0	16.171**
	기타	1,714	28.8	29.1	39.3	2.9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9.4	26.5	32.4	11.8	100.0	27.336**
	고졸	517	33.7	28.2	35.4	2.7	100.0	
	전문대/대졸	1,236	27.8	28.7	41.1	2.3	100.0	
	대학원졸	213	38.0	23.5	34.3	4.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2.7	28.5	31.2	7.7	100.0	48.73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4.8	31.3	42.1	1.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32.0	25.9	39.5	2.6	100.0	
	600만원 이상	415	35.7	25.8	36.9	1.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23.7	27.6	44.8	3.9	100.0	57.2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31.5	26.9	39.5	2.1	100.0	
	사무 종사자	381	28.1	26.8	43.0	2.1	100.0	
	서비스 종사자	61	16.4	39.3	41.0	3.3	100.0	
	판매 종사자	73	21.9	34.2	42.5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33.3	3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7.6	27.6	44.8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25.9	33.3	25.9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24.7	31.5	41.1	2.7	100.0	
	군인	5	0.0	40.0	60.0	0.0	100.0	
	기타	789	36.1	27.0	33.8	3.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1-3〉 무상급식 지원 범위: 고등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4.5	26.4	36.0	3.3	100.0	
성별	남성	1,009	30.0	28.6	38.6	2.8	100.0	20.861***
	여성	991	39.0	24.0	33.3	3.7	100.0	
연령	19 - 29세	374	39.8	29.4	26.7	4.0	100.0	87.678***
	30대	412	26.5	26.5	43.9	3.2	100.0	
	40대	462	26.4	22.5	48.7	2.4	100.0	
	50대	413	38.7	26.6	31.0	3.6	100.0	
	60 - 75세	339	44.0	27.7	25.1	3.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6.3	24.4	47.3	2.0	100.0	40.226***
	기타	1,505	37.1	27.0	32.2	3.7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1.6	26.1	50.4	1.9	100.0	33.938***
	기타	1,736	36.4	26.4	33.8	3.5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27.3	25.0	46.6	1.1	100.0	11.750**
	기타	1,824	35.1	26.5	34.9	3.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30.3	21.5	45.1	3.1	100.0	8.084*
	기타	1,805	34.9	26.9	35.0	3.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3.0	22.7	31.1	3.1	100.0	10.933*
	기타	1,714	33.0	27.0	36.8	3.3	100.0	
학력	중졸이하	34	38.2	26.5	23.5	11.8	100.0	25.644**
	고졸	517	38.1	26.9	31.9	3.1	100.0	
	전문대/대졸	1,236	31.7	26.8	38.7	2.8	100.0	
	대학원졸	213	40.8	22.5	31.9	4.7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31.0	25.4	41.5	2.1	100.0	9.159*
	맞벌이 부부 아님	820	36.3	26.7	33.9	3.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6.5	25.4	29.6	8.5	100.0	45.37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29.0	29.8	38.9	2.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35.5	25.2	36.7	2.7	100.0	
	600만원 이상	415	40.2	23.4	34.0	2.4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25.0	28.0	43.1	3.9	100.0	64.93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37.1	25.5	35.0	2.4	100.0	
	사무 종사자	381	32.0	24.4	40.9	2.6	100.0	
	서비스 종사자	61	18.0	36.1	42.6	3.3	100.0	
	판매 종사자	73	34.2	23.3	41.1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53.3	20.0	2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32.8	24.1	43.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3.3	11.1	40.7	14.8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26.0	30.1	41.1	2.7	100.0	
	군인	5	0.0	40.0	60.0	0.0	100.0	
	기타	789	39.5	27.0	29.7	3.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2-1〉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초등학생

초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현장 학습비 (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학교 급식비	방과후 돌봄 서비스 비용	기타	계	
전체		2,000	8.5	7.9	12.6	44.3	26.5	0.3	100.0	
연령	19 - 29세	374	10.7	9.1	12.3	42.8	24.6	0.5	100.0	58.578***
	30대	412	9.2	10.4	13.3	40.8	25.7	0.5	100.0	
	40대	462	6.9	10.6	15.8	46.1	20.6	0.0	100.0	
	50대	413	7.5	4.6	9.9	46.0	32.0	0.0	100.0	
	60 - 75세	339	8.6	3.5	10.9	45.7	30.7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9	7.3	13.5	46.3	25.9	0.2	100.0	77.636***
	미혼	648	11.6	9.4	10.8	41.0	26.7	0.5	100.0	
	기타	41	12.2	0.0	12.2	31.7	41.5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7.0	7.1	13.5	45.7	26.4	0.2	100.0	19.742**
	자녀 없음	652	11.5	9.4	10.7	41.4	26.5	0.5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5.9	9.9	16.4	46.9	21.0	0.0	100.0	26.625***
	기타	1,505	9.4	7.2	11.4	43.5	28.2	0.4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4.9	11.0	18.9	45.5	19.7	0.0	100.0	24.331***
	기타	1,736	9.0	7.4	11.6	44.1	27.5	0.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8.5	9.1	18.2	48.3	15.9	0.0	100.0	14.532*
	기타	1,824	8.5	7.7	12.1	43.9	27.5	0.3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7.1	8.6	15.4	47.2	21.4	0.2	100.0	14.538*
	맞벌이 부부 아님	820	7.0	6.1	12.2	45.0	29.5	0.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2-2〉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중학생

중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학교급식비	기타	계	
전체		2,000	12.7	19.0	24.5	43.7	0.3	100.0	
성별	남성	1,009	11.8	16.7	24.5	46.7	0.3	100.0	10.668*
	여성	991	13.5	21.2	24.4	40.6	0.3	100.0	
연령	19 - 29세	374	14.4	21.9	23.0	40.1	0.5	100.0	31.633*
	30대	412	16.3	19.7	22.6	41.0	0.5	100.0	
	40대	462	10.4	20.6	21.9	47.2	0.0	100.0	
	50대	413	9.2	16.7	27.4	46.7	0.0	100.0	
	60 - 75세	339	13.6	15.3	28.3	42.2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0.9	18.7	25.6	44.7	0.2	100.0	23.060**
	미혼	648	15.6	19.9	22.7	41.4	0.5	100.0	
	기타	41	22.0	12.2	17.1	46.3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1.3	18.5	25.4	44.6	0.2	100.0	9.616*
	자녀 없음	652	15.5	19.8	22.5	41.7	0.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2-3〉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내용: 고등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현장학습비(수학여행 경비 등) 및 수련 활동비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기타	계	
전체		2,000	10.6	10.1	15.4	30.4	33.1	0.5	100.0	
성별	남성	1,009	9.0	10.6	16.5	32.6	30.7	0.6	100.0	16.617*
	여성	991	12.2	9.6	14.3	28.1	35.5	0.3	100.0	
연령	19 - 29세	374	10.7	9.4	13.6	26.2	39.0	1.1	100.0	49.377*
	30대	412	15.0	9.7	17.7	27.2	29.9	0.5	100.0	
	40대	462	7.4	11.3	15.2	34.2	32.0	0.0	100.0	
	50대	413	9.2	9.9	16.0	34.1	30.8	0.0	100.0	
	60 - 75세	339	11.2	10.0	14.2	28.9	34.8	0.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3〉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8.8	30.2	11.1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2.7	33.3	14.0	100.0	14.429*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58.6	31.9	9.5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1.5	27.3	11.2	100.0	
	읍·면(군) 지역	147	59.9	32.7	7.5	100.0	
연령	19 - 29세	374	55.1	31.6	13.4	100.0	77.148***
	30대	412	63.8	23.1	13.1	100.0	
	40대	462	70.3	19.3	10.4	100.0	
	50대	413	50.6	39.7	9.7	100.0	
	60 - 75세	339	51.0	40.4	8.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59.5	31.5	9.0	100.0	17.801**
	미혼	648	57.9	27.3	14.8	100.0	
	기타	41	51.2	31.7	17.1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59.2	31.6	9.2	100.0	15.828***
	자녀 없음	652	58.0	27.1	14.9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67.7	23.0	9.3	100.0	21.713***
	기타	1,505	55.9	32.5	11.6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70.1	20.5	9.5	100.0	16.747***
	기타	1,736	57.1	31.6	11.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69.9	22.7	7.4	100.0	9.905**
	기타	1,824	57.7	30.9	11.4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58.7	34.6	6.6	100.0	8.072*
	기타	1,714	58.8	29.4	11.8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1.2	35.0	13.8	100.0	19.34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1.1	26.0	12.9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0.5	29.8	9.7	100.0	
	600만원 이상	415	57.3	34.2	8.4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64.7	26.7	8.6	100.0	38.1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61.2	28.3	10.5	100.0	
	사무 종사자	381	59.6	25.7	14.7	100.0	
	서비스 종사자	61	65.6	31.1	3.3	100.0	
	판매 종사자	73	65.8	20.5	13.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53.3	40.0	6.7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7.2	29.3	3.4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44.4	33.3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54.8	34.2	11.0	100.0	
	군인	5	40.0	20.0	40.0	100.0	
	기타	789	55.1	34.2	10.6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4〉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노후 교육시설 보수·개선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9.4	14.3	16.9	30.2	15.1	4.3	100.0	
성별	남성	1,009	20.1	13.0	19.5	29.0	14.6	3.8	100.0	13.558*
	여성	991	18.6	15.5	14.2	31.4	15.5	4.7	100.0	
연령	19 - 29세	374	16.6	8.3	12.0	52.1	8.3	2.7	100.0	187.322***
	30대	412	25.0	17.0	19.4	25.0	9.7	3.9	100.0	
	40대	462	16.2	15.6	25.1	22.5	15.4	5.2	100.0	
	50대	413	16.9	12.6	13.8	29.8	20.6	6.3	100.0	
	60 - 75세	339	22.7	17.7	11.8	23.3	21.8	2.7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0.2	14.9	18.8	25.0	16.8	4.3	100.0	57.583***
	미혼	648	17.3	12.8	13.3	40.9	11.4	4.3	100.0	
	기타	41	24.4	17.1	12.2	26.8	17.1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20.3	15.0	18.7	25.0	16.8	4.2	100.0	56.597***
	자녀 없음	652	17.3	12.7	13.2	41.0	11.5	4.3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12.9	15.4	28.1	24.2	13.9	5.5	100.0	73.751***
	기타	1,505	21.5	13.9	13.2	32.2	15.4	3.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6.7	17.4	29.2	19.7	12.9	4.2	100.0	42.43***
	기타	1,736	19.8	13.8	15.0	31.8	15.4	4.3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8.5	13.6	35.2	27.8	11.4	3.4	100.0	52.517***
	기타	1,824	20.4	14.3	15.1	30.4	15.4	4.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1.8	10.8	24.6	31.3	14.4	7.2	100.0	20.337**
	기타	1,805	20.2	14.6	16.1	30.1	15.1	3.9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4.3	12.6	15.4	30.8	22.4	4.5	100.0	17.448**
	기타	1,714	20.2	14.5	17.2	30.1	13.8	4.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7.6	26.5	17.6	20.6	2.9	14.7	100.0	48.796***
	고졸	517	15.3	14.7	14.3	36.9	13.5	5.2	100.0	
	전문대/대졸	1,236	20.2	14.2	17.6	29.2	15.2	3.6	100.0	
	대학원졸	213	24.4	11.7	18.8	21.1	19.7	4.2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16.8	13.4	23.3	29.3	12.9	4.3	100.0	67.7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2.7	12.6	15.0	30.1	15.0	4.5	100.0	
	사무 종사자	381	19.2	18.4	18.1	26.5	13.9	3.9	100.0	
	서비스 종사자	61	14.8	13.1	21.3	34.4	13.1	3.3	100.0	
	판매 종사자	73	17.8	12.3	19.2	37.0	11.0	2.7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26.7	13.3	13.3	20.0	2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0.7	19.0	22.4	27.6	10.3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22.2	14.8	11.1	29.6	3.7	18.5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23.3	17.8	19.2	20.5	12.3	6.8	100.0	
	군인	5	0.0	0.0	20.0	80.0	0.0	0.0	100.0	
	기타	789	18.9	12.8	14.2	32.3	17.6	4.2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5〉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지방교육재정의 축소·확대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축소해 나가야한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킨 이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한다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아용하여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가해 나가야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3.8	32.0	36.5	13.7	4.1	100.0	
성별	남성	1,009	12.4	34.6	34.8	14.9	3.4	100.0	12.996*
	여성	991	15.1	29.4	38.2	12.5	4.7	100.0	
연령	19 - 29세	374	13.1	30.7	39.6	11.5	5.1	100.0	41.389***
	30대	412	11.7	32.0	34.2	16.7	5.3	100.0	
	40대	462	9.7	31.0	40.0	16.0	3.2	100.0	
	50대	413	16.7	31.5	33.2	14.5	4.1	100.0	
	60 - 75세	339	18.9	35.4	35.1	8.3	2.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9.5	32.9	37.8	16.4	3.4	100.0	13.156*
	기타	1,505	15.1	31.7	36.1	12.8	4.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7.6	34.5	37.5	17.4	3.0	100.0	12.955*
	기타	1,736	14.7	31.6	36.3	13.1	4.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4.7	14.7	41.2	5.9	23.5	100.0	61.659***
	고졸	517	14.5	27.7	40.6	11.0	6.2	100.0	
	전문대/대졸	1,236	13.3	34.1	35.1	14.5	2.9	100.0	
	대학원졸	213	14.1	32.9	33.8	16.9	2.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16.2	26.2	35.8	13.8	8.1	100.0	26.27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2.5	33.2	35.6	13.7	5.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4.4	33.6	37.1	12.4	2.4	100.0	
	600만원 이상	415	13.3	31.1	37.3	15.7	2.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10.3	35.8	35.3	14.7	3.9	100.0	64.6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1.5	36.7	31.5	17.1	3.1	100.0	
	사무 종사자	381	15.5	31.8	38.3	11.8	2.6	100.0	
	서비스 종사자	61	8.2	42.6	36.1	6.6	6.6	100.0	
	판매 종사자	73	12.3	17.8	45.2	19.2	5.5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46.7	20.0	2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0.7	24.1	34.5	15.5	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1.1	22.2	37.0	11.1	18.5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2.3	37.0	31.5	12.3	6.8	100.0	
	군인	5	40.0	0.0	60.0	0.0	0.0	100.0	
	기타	789	15.0	30.2	37.8	13.1	4.1	100.0	

*p〈0.05, **p〈0.01, ***p〈0.001

〈표 Ⅴ-36〉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계				
전체		2,000	1.1	7.6	31.7	41.9	17.8	100.0	2.32	0.888		
성별	남성	1,009	1.3	8.3	31.4	38.9	20.0	100.0	2.32	0.929	12.642*	
	여성	991	0.8	6.8	32.0	44.9	15.5	100.0	2.32	0.84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08	2.2	9.3	33.6	36.5	18.4	100.0	2.40	0.964	23.565*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1.1	7.8	33.1	39.0	19.0	100.0	2.33	0.910		
	중소도시(시 지역)	919	0.7	6.4	31.0	44.6	17.3	100.0	2.29	0.847		
	읍·면(군) 지역	147	0.0	8.8	25.9	50.3	15.0	100.0	2.29	0.828		
연령	19 - 29세	374	1.1	3.7	29.7	42.5	23.0	100.0	2.17	0.863	49.263***	2.472*
	30대	412	1.5	6.8	35.2	36.2	20.4	100.0	2.33	0.924		
	40대	462	1.9	9.1	31.0	39.6	18.4	100.0	2.37	0.949		
	50대	413	0.5	7.0	32.4	46.2	13.8	100.0	2.34	0.820		
	60 - 75세	339	0.0	11.2	29.8	46.0	13.0	100.0	2.39	0.851		
혼인상태	기혼	1,311	1.0	9.7	32.9	40.9	15.6	100.0	2.40	0.897	44.256***	2.908*
	미혼	648	1.2	3.4	29.8	42.7	22.8	100.0	2.17	0.862		
	기타	41	0.0	4.9	24.4	61.0	9.8	100.0	2.24	0.699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1.0	9.6	32.6	41.4	15.4	100.0	2.39	0.893	37.082***	
	자녀 없음	652	1.2	3.4	29.8	42.9	22.7	100.0	2.17	0.861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9	8.7	35.2	34.1	20.1	100.0	2.38	0.964		2.687*
	기타	1,736	0.9	7.4	31.2	43.1	17.5	100.0	2.31	0.876		
학력	중졸이하	34	2.9	8.8	61.8	23.5	2.9	100.0	2.85	0.744	30.014**	
	고졸	517	0.4	7.5	35.0	39.8	17.2	100.0	2.34	0.863		
	전문대/대졸	1,236	1.1	7.7	30.3	43.0	18.0	100.0	2.31	0.889		
	대학원졸	213	2.3	6.6	26.8	43.7	20.7	100.0	2.26	0.940		

*p〈0.05, **p〈0.01, ***p〈0.001

〈표 Ⅴ-37〉 대학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대학 교수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계				
전체		2,000	1.0	11.2	41.6	35.8	10.6	100.0	2.56	0.859		
성별	남성	1,009	1.1	11.4	42.5	33.9	11.1	100.0	2.57	0.872		2.414*
	여성	991	0.8	10.9	40.6	37.6	10.1	100.0	2.55	0.847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0.9	14.3	36.8	37.6	10.3	100.0	2.58	0.891	10.417*	
	맞벌이 부부 아님	820	0.7	10.4	44.9	34.6	9.4	100.0	2.58	0.826		

*p〈0.05, **p〈0.01, ***p〈0.001

〈표 Ⅴ-38-1〉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계				
전체		2,000	1.4	14.1	50.2	27.2	7.2	100.0	2.75	0.833		
학력	중졸이하	34	2.9	8.8	70.6	14.7	2.9	100.0	2.94	0.694	23.144*	
	고졸	517	1.4	17.8	51.8	23.2	5.8	100.0	2.86	0.823		
	전문대/대졸	1,236	1.4	12.9	49.6	28.9	7.3	100.0	2.72	0.829		
	대학원졸	213	1.4	13.1	46.5	28.6	10.3	100.0	2.67	0.88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3.5	11.2	50.8	27.3	7.3	100.0	2.76	0.873	25.73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1	15.0	53.1	22.6	8.3	100.0	2.78	0.83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5	13.8	48.5	29.5	6.7	100.0	2.74	0.833		
	600만원 이상	415	0.5	14.9	48.0	30.6	6.0	100.0	2.73	0.804		

*p〈0.05, **p〈0.01, ***p〈0.001

〈표 Ⅴ-38-2〉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전문대학

전문대학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 하고 있다	전혀 못 하고 있다	계				
전체		2,000	1.0	19.3	51.8	22.1	6.0	100.0	2.87	0.821		
혼인 상태	기혼	1,311	1.0	20.9	51.9	21.0	5.3	100.0	2.91	0.814	18.311*	
	미혼	648	0.8	15.6	51.1	25.0	7.6	100.0	2.77	0.829		
	기타	41	2.4	24.4	58.5	12.2	2.4	100.0	3.12	0.74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0	21.0	52.2	20.6	5.2	100.0	2.92	0.812	15.069**	
	자녀 없음	652	0.8	15.6	50.9	25.2	7.5	100.0	2.77	0.829		
초등 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7	19.7	53.0	19.7	4.9	100.0	2.95	0.835	10.729*	
	기타	1,736	0.7	19.2	51.6	22.5	6.1	100.0	2.86	0.818		

*p〈0.05, **p〈0.01, ***p〈0.001

〈표 Ⅴ-39〉 대학 재정의 투명성

대학 재정의 투명성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F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계				
전체		2,000	1.3	2.6	17.1	44.8	34.3	100.0	1.92	0.853		
성별	남성	1,009	1.3	2.6	17.3	42.5	36.3	100.0	1.90	0.864		3.029*
	여성	991	1.3	2.6	16.9	47.0	32.2	100.0	1.94	0.843		
연령	19 - 29세	374	1.6	3.7	18.7	41.7	34.2	100.0	1.97	0.908	37.791**	4.453**
	30대	412	1.0	3.6	19.4	38.3	37.6	100.0	1.92	0.894		
	40대	462	1.9	3.2	18.2	42.0	34.6	100.0	1.96	0.913		
	50대	413	1.0	1.0	12.3	51.8	33.9	100.0	1.83	0.750		
	60 - 75세	339	0.9	1.2	16.8	51.0	30.1	100.0	1.92	0.76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1	2.6	16.7	46.7	32.9	100.0	1.92	0.833		5.993***
	자녀 없음	652	1.7	2.6	17.9	40.6	37.1	100.0	1.91	0.894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0.6	2.8	20.4	42.0	34.1	100.0	1.94	0.843		2.499*
	기타	1,505	1.5	2.5	16.0	45.6	34.3	100.0	1.91	0.857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0.6	5.1	22.7	38.6	33.0	100.0	2.02	0.904	10.765*	3.579**
	기타	1,824	1.4	2.4	16.6	45.3	34.4	100.0	1.91	0.848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0.3	0.3	12.9	49.3	37.1	100.0	1.78	0.705	14.516**	
	기타	1,714	1.5	3.0	17.8	44.0	33.8	100.0	1.94	0.874		
학력	중졸이하	34	2.9	2.9	26.5	44.1	23.5	100.0	2.18	0.936	23.990*	
	고졸	517	0.8	2.5	21.7	43.9	31.1	100.0	1.98	0.836		
	전문대/대졸	1,236	1.1	2.6	15.5	44.7	36.1	100.0	1.88	0.841		
	대학원졸	213	3.3	2.8	14.1	46.9	32.9	100.0	1.97	0.9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1.5	4.9	17.5	41.0	35.2	100.0	1.97	0.926	26.700***	4.474**
	맞벌이 부부 아님	820	1.0	1.1	16.1	50.5	31.3	100.0	1.90	0.77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1.5	1.5	26.5	39.6	30.8	100.0	2.03	0.880	30.41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2	2.6	18.0	44.4	33.8	100.0	1.93	0.852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5	2.6	13.5	48.9	33.5	100.0	1.90	0.836		
	600만원 이상	415	1.0	3.4	15.4	41.9	38.3	100.0	1.87	0.862		
직업군	관리자	232	1.7	3.9	14.7	43.1	36.6	100.0	1.91	0.905	67.3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4	2.8	15.4	43.7	36.7	100.0	1.88	0.865		
	사무 종사자	381	1.3	4.5	17.8	42.3	34.1	100.0	1.97	0.904		
	서비스 종사자	61	0.0	4.9	19.7	37.7	37.7	100.0	1.92	0.881		
	판매 종사자	73	0.0	0.0	17.8	43.8	38.4	100.0	1.79	0.72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6.7	0.0	6.7	60.0	26.7	100.0	2.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3.4	0.0	19.0	50.0	27.6	100.0	2.02	0.88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7	0.0	25.9	48.1	22.2	100.0	2.15	0.907		
	단순노무 종사자	73	1.4	1.4	17.8	41.1	38.4	100.0	1.86	0.855		
	군인	5	0.0	40.0	20.0	0.0	40.0	100.0	2.60	1.517		
	기타	789	1.0	1.5	17.5	47.3	32.7	100.0	1.91	0.804		

*p〈0.05, **p〈0.01, ***p〈0.001

〈표 Ⅴ-40〉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23.8	62.1	14.1	100.0	
성별	남성	1,009	23.6	64.9	11.5	100.0	12.427**
	여성	991	24.0	59.2	16.8	100.0	
연령	19 - 29세	374	34.0	48.1	17.9	100.0	56.504***
	30대	412	20.1	62.6	17.2	100.0	
	40대	462	24.7	61.0	14.3	100.0	
	50대	413	21.8	68.3	9.9	100.0	
	60 - 75세	339	18.3	70.8	10.9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22.3	65.1	12.7	100.0	20.662***
	미혼	648	27.6	55.4	17.0	100.0	
	기타	41	12.2	73.2	14.6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22.0	65.4	12.7	100.0	18.819***
	자녀 없음	652	27.6	55.4	17.0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17.8	67.8	14.4	100.0	6.207*
	기타	1,736	24.7	61.2	14.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31.8	60.8	7.3	100.0	19.908***
	기타	1,714	22.5	62.3	15.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20.6	52.9	26.5	100.0	32.569***
	고졸	517	27.7	54.0	18.4	100.0	
	전문대/대졸	1,236	23.2	63.9	12.9	100.0	
	대학원졸	213	18.3	72.8	8.9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23.7	64.2	12.1	100.0	35.9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26.9	65.7	7.3	100.0	
	사무 종사자	381	22.8	62.2	15.0	100.0	
	서비스 종사자	61	27.9	57.4	14.8	100.0	
	판매 종사자	73	19.2	65.8	15.1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6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25.9	62.1	12.1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18.5	59.3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19.2	69.9	11.0	100.0	
	군인	5	40.0	0.0	60.0	100.0	
	기타	789	23.4	59.8	16.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1〉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지방대학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1.1	23.9	15.1	100.0	
성별	남성	1,009	63.1	25.1	11.8	100.0	17.466***
	여성	991	58.9	22.6	18.5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44.4	37.5	18.1	100.0	85.222***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71.3	16.7	12.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0.8	23.0	16.2	100.0	
	읍·면(군) 지역	147	72.1	17.0	10.9	100.0	
연령	19 - 29세	374	51.9	24.9	23.3	100.0	41.472***
	30대	412	57.0	25.7	17.2	100.0	
	40대	462	62.6	24.7	12.8	100.0	
	50대	413	65.9	23.7	10.4	100.0	
	60 - 75세	339	68.1	19.5	12.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3.3	23.8	12.9	100.0	17.986***
	미혼	648	57.3	23.3	19.4	100.0	
	기타	41	48.8	34.1	17.1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3.0	24.0	13.0	100.0	14.87**
	자녀 없음	652	57.1	23.5	19.5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63.6	28.2	8.2	100.0	8.749*
	기타	1,805	60.8	23.4	15.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65.7	25.9	8.4	100.0	11.719**
	기타	1,714	60.3	23.5	16.2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8.8	14.7	26.5	100.0	37.107***
	고졸	517	59.4	20.3	20.3	100.0	
	전문대/대졸	1,236	62.9	23.5	13.5	100.0	
	대학원졸	213	54.5	35.7	9.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6.2	24.2	19.6	100.0	28.423***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2.1	19.8	18.0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4.2	23.6	12.1	100.0	
	600만원 이상	415	57.3	30.4	12.3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65.1	25.4	9.5	100.0	35.35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59.8	27.6	12.6	100.0	
	사무 종사자	381	60.1	24.7	15.2	100.0	
	서비스 종사자	61	70.5	18.0	11.5	100.0	
	판매 종사자	73	69.9	19.2	11.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80.0	2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5.5	25.9	8.6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40.7	37.0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64.4	21.9	13.7	100.0	
	군인	5	60.0	0.0	40.0	100.0	
	기타	789	58.9	22.3	18.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2〉 대학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지표

대학평가 지표의 중요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졸업생의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 역량	교수들의 교육 역량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여건 및 시설의 충족도	대학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기타	계	
전체		2,000	11.4	7.2	17.7	21.6	7.0	35.2	0.1	100.0	
성별	남성	1,009	9.2	8.1	17.2	21.0	7.3	37.0	0.1	100.0	14.807*
	여성	991	13.6	6.2	18.1	22.1	6.7	33.4	0.0	100.0	
연령	19 - 29세	374	13.4	5.1	21.1	26.7	6.7	26.7	0.3	100.0	48.886**
	30대	412	10.7	8.5	17.5	23.8	8.3	31.3	0.0	100.0	
	40대	462	9.3	7.8	18.0	22.7	6.9	35.3	0.0	100.0	
	50대	413	11.4	7.7	16.2	16.5	6.5	41.6	0.0	100.0	
	60 - 75세	339	13.0	6.2	15.3	17.7	6.5	41.3	0.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1.1	7.7	17.6	20.7	6.4	36.5	0.0	100.0	21.433*
	미혼	648	12.3	6.3	18.5	23.0	8.3	31.3	0.2	100.0	
	기타	41	7.3	2.4	4.9	26.8	4.9	53.7	0.0	100.0	
학력	중졸이하	34	35.3	8.8	2.9	20.6	2.9	29.4	0.0	100.0	48.139***
	고졸	517	14.3	5.4	18.0	20.3	5.8	36.0	0.2	100.0	
	전문대/대졸	1,236	9.9	7.0	17.7	22.9	7.4	35.2	0.0	100.0	
	대학원졸	213	9.4	12.2	18.8	16.9	8.5	34.3	0.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3-1〉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1순위)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 (1순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중·고등학교 학업성취 평가제	인성교육 활성화	사교육 부담경감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지방대학 지원	계	
전체		2,000	22.2	27.9	10.2	5.9	12.6	4.3	4.7	4.0	4.0	4.4	100.0	
성별	남성	1,009	24.0	23.5	10.5	6.9	12.7	4.4	4.2	5.1	3.9	5.0	100.0	29.893***
	여성	991	20.4	32.4	9.9	4.7	12.4	4.1	5.2	2.9	4.0	3.8	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08	21.3	33.1	8.6	7.4	10.3	3.7	6.1	3.7	3.2	2.7	100.0	50.032**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23.8	23.8	11.0	5.9	12.2	3.2	4.4	5.5	3.0	7.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22.3	28.4	10.2	5.3	12.7	5.1	4.0	3.2	5.0	3.7	100.0	
	읍·면(군) 지역	147	18.4	25.2	11.6	4.8	19.0	4.1	6.1	4.8	2.7	3.4	100.0	
연령	19 - 29세	374	16.3	23.5	16.8	5.6	12.0	4.8	6.4	6.1	2.9	5.3	100.0	111.374***
	30대	412	31.8	27.7	8.3	6.6	9.2	3.2	4.1	2.2	3.9	3.2	100.0	
	40대	462	24.2	25.3	9.7	5.6	9.7	6.7	6.1	4.1	3.7	4.8	100.0	
	50대	413	16.7	29.3	9.7	6.8	16.9	3.4	3.9	4.1	5.1	4.1	100.0	
	60 - 75세	339	20.9	34.8	6.5	4.4	15.6	2.7	2.7	3.5	4.1	4.7	100.0	
혼인상태	기혼	1,311	23.3	28.5	8.7	6.4	12.3	4.4	4.6	3.9	3.4	4.6	100.0	38.717**
	미혼	648	20.5	26.5	13.6	4.9	12.3	3.9	5.1	4.5	4.5	4.2	100.0	
	기타	41	14.6	29.3	4.9	2.4	24.4	4.9	2.4	0.0	14.6	2.4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20.8	24.4	11.3	7.1	9.5	6.7	7.7	4.8	3.6	4.0	100.0	33.739***
	기타	1,505	22.7	29.0	9.8	5.4	13.6	3.5	3.7	3.7	4.1	4.5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6.1	23.9	11.4	4.2	10.2	6.1	7.6	4.5	3.8	2.3	100.0	18.156*
	기타	1,736	21.6	28.5	10.0	6.1	12.9	4.0	4.3	3.9	4.0	4.7	100.0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학부모	176	16.5	26.7	11.4	8.0	6.8	6.8	9.7	6.3	2.8	5.1	100.0	26.074**
	기타	1,824	22.8	28.0	10.1	5.6	13.1	4.0	4.2	3.8	4.1	4.3	100.0	
고등학생 학부모	고등학생 학부모	195	13.8	24.1	11.8	9.2	11.3	8.7	8.2	3.6	3.6	5.6	100.0	29.661**
	기타	1,805	23.1	28.3	10.0	5.5	12.7	3.8	4.3	4.0	4.0	4.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11.5	30.8	8.0	8.0	15.4	7.7	3.5	4.5	3.1	7.3	100.0	42.167***
	기타	1,714	24.0	27.4	10.6	5.5	12.1	3.7	4.9	3.9	4.1	3.9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25.9	26.3	9.6	7.7	9.8	5.1	5.6	3.0	2.8	4.1	100.0	21.137*
	맞벌이 부부 아님	820	21.1	30.0	7.9	5.4	14.5	4.0	3.8	4.3	4.3	4.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3-2〉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2순위)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2순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자유 학기제	중·고등 학교 학업 성취 평가제	인성 교육 활성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전문 대학 직업 교육 강화	지방 대학 지원	계	
전체		2,000	8.3	17.4	12.2	6.3	14.4	9.1	9.4	8.7	8.4	5.9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8.3	14.7	12.5	6.6	13.7	8.1	10.3	10.8	10.8	4.2	100.0	48.301**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9.7	16.0	12.4	4.6	13.5	9.9	8.2	8.6	10.3	7.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7.9	19.0	13.1	6.3	13.9	9.4	9.7	7.6	6.7	6.3	100.0	
	읍·면(군) 지역	147	5.4	19.7	5.4	10.9	22.4	6.8	9.5	10.2	5.4	4.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5	15.0	11.2	4.2	17.5	10.8	10.1	11.5	9.8	5.2	100.0	16.952*
	기타	1,714	8.9	17.8	12.4	6.6	13.9	8.8	9.3	8.2	8.2	6.0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3-3〉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3순위)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3순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자유 학기제	중·고등 학교 학업 성취 평가제	인성 교육 활성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전문 대학 직업 교육 강화	지방 대학 지원	계	
전체		2,000	5.1	8.6	10.6	7.1	13.2	9.9	9.8	11.2	13.1	11.7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4.2	6.4	10.8	8.6	14.7	7.6	8.1	14.0	16.7	9.1	100.0	50.078**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3.4	11.4	10.1	6.5	12.2	11.0	9.5	10.6	10.3	15.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3	8.3	11.1	6.9	13.6	10.3	10.3	10.4	12.0	10.8	100.0	
	읍·면(군) 지역	147	6.1	6.1	8.8	6.1	9.5	9.5	11.6	10.2	19.7	12.2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0	8.0	9.2	7.5	14.3	11.5	9.4	11.4	13.0	11.6	100.0	41.444**
	미혼	648	7.3	9.6	13.0	5.7	11.1	7.1	10.6	10.5	13.6	11.6	100.0	
	기타	41	4.9	9.8	17.1	14.6	7.3	2.4	7.3	14.6	7.3	14.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4.1	8.1	9.4	7.6	14.2	11.3	9.3	11.4	12.8	11.7	100.0	29.155**
	자녀 없음	652	7.2	9.5	13.0	5.8	11.0	7.1	10.6	10.7	13.5	11.5	100.0	
초등 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2.7	10.6	11.7	9.5	11.7	12.9	8.0	13.3	8.7	11.0	100.0	17.820*
	기타	1,736	5.5	8.2	10.4	6.7	13.4	9.4	10.0	10.9	13.7	11.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4〉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통합해야 한다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연령대별로 감독기관을 구분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4.8	11.8	16.2	7.2	100.0	
성별	남성	1,009	68.3	12.4	14.2	5.2	100.0	21.426***
	여성	991	61.3	11.2	18.3	9.3	100.0	
연령	19 - 29세	374	53.5	13.1	23.3	10.2	100.0	56.593***
	30대	412	60.2	12.1	20.9	6.8	100.0	
	40대	462	67.3	11.7	13.6	7.4	100.0	
	50대	413	69.5	10.7	11.9	8.0	100.0	
	60 - 75세	339	73.7	11.5	11.5	3.2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8.1	12.6	13.6	5.7	100.0	39.957***
	미혼	648	58.3	9.9	21.5	10.3	100.0	
	기타	41	61.0	17.1	17.1	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67.9	12.8	13.6	5.7	100.0	38.586**
	자녀 없음	652	58.4	9.8	21.5	10.3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70.6	14.0	9.8	5.6	100.0	12.760**
	기타	1,714	63.8	11.4	17.3	7.5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63.0	14.5	17.1	5.5	100.0	12.853**
	맞벌이 부부 아님	820	71.1	11.6	11.5	5.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5〉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 의견

시·도교육감 직선제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7.3	35.0	17.8	100.0	
성별	남성	1,009	49.2	38.5	12.4	100.0	41.487***
	여성	991	45.3	31.5	23.2	100.0	
연령	19 - 29세	374	46.3	21.7	32.1	100.0	166.014***
	30대	412	52.2	26.5	21.4	100.0	
	40대	462	55.2	29.7	15.2	100.0	
	50대	413	40.4	48.7	10.9	100.0	
	60 - 75세	339	39.8	50.7	9.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5.3	41.3	13.4	100.0	87.832***
	미혼	648	51.1	22.5	26.4	100.0	
	기타	41	48.8	31.7	19.5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5.3	41.0	13.6	100.0	85.269***
	자녀 없음	652	51.2	22.5	26.2	100.0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495	51.9	35.2	12.9	100.0	11.652**
	기타	1,505	45.7	35.0	19.3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57.2	31.4	11.4	100.0	14.459**
	기타	1,736	45.7	35.5	18.7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1.6	49.0	9.4	100.0	33.788***
	기타	1,714	48.2	32.7	19.1	100.0	
학력	중졸이하	34	44.1	23.5	32.4	100.0	70.143***
	고졸	517	41.2	31.9	26.9	100.0	
	전문대/대졸	1,236	50.2	34.2	15.6	100.0	
	대학원졸	213	45.5	48.8	5.6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532	48.7	36.7	14.7	100.0	6.778*
	맞벌이 부부 아님	820	43.3	43.8	12.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40.0	35.0	25.0	100.0	31.35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46.9	32.3	20.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8.8	34.8	16.4	100.0	
	600만원 이상	415	49.9	39.5	10.6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48.3	38.8	12.9	100.0	45.78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51.7	35.0	13.3	100.0	
	사무 종사자	381	50.4	31.5	18.1	100.0	
	서비스 종사자	61	37.7	44.3	18.0	100.0	
	판매 종사자	73	60.3	24.7	15.1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33.3	66.7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53.4	31.0	15.5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40.7	25.9	33.3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41.1	32.9	26.0	100.0	
	군인	5	40.0	0.0	60.0	100.0	
	기타	789	44.0	36.2	19.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6-1〉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75.3	19.5	5.3	100.0	
성별	남성	1,009	78.9	16.5	4.7	100.0	14.255**
	여성	991	71.6	22.5	5.9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69.4	23.0	7.6	100.0	15.827*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76.8	19.0	4.2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76.1	19.3	4.7	100.0	
	읍·면(군) 지역	147	81.6	12.2	6.1	100.0	
연령	19 - 29세	374	80.5	14.4	5.1	100.0	22.767**
	30대	412	75.7	16.7	7.5	100.0	
	40대	462	76.4	19.0	4.5	100.0	
	50대	413	72.6	22.3	5.1	100.0	
	60 - 75세	339	70.8	25.4	3.8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73.2	22.3	4.6	100.0	22.152***
	미혼	648	79.8	13.7	6.5	100.0	
	기타	41	73.2	19.5	7.3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73.1	22.3	4.7	100.0	22.074***
	자녀 없음	652	79.9	13.7	6.4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69.6	22.3	8.1	100.0	23.844**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78.3	15.2	6.5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73.5	22.9	3.6	100.0	
	600만원 이상	415	76.9	19.0	4.1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6-2〉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 중학교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4.6	29.7	5.7	100.0	
성별	남성	1,009	68.4	26.6	5.1	100.0	12.759**
	여성	991	60.7	32.9	6.4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8.3	31.9	9.8	100.0	25.096***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66.0	30.0	4.0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5.4	29.9	4.7	100.0	
	읍·면(군) 지역	147	72.1	21.1	6.8	100.0	
연령	19 - 29세	374	75.4	19.5	5.1	100.0	51.101***
	30대	412	66.7	25.0	8.3	100.0	
	40대	462	65.6	30.3	4.1	100.0	
	50대	413	58.1	35.6	6.3	100.0	
	60 - 75세	339	56.6	38.6	4.7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59.9	34.5	5.6	100.0	48.087***
	미혼	648	74.4	19.6	6.0	100.0	
	기타	41	61.0	36.6	2.4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59.8	34.6	5.6	100.0	48.959***
	자녀 없음	652	74.5	19.5	6.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63.1	28.5	8.5	100.0	4.789***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9.2	24.1	6.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1.1	34.2	4.7	100.0	
	600만원 이상	415	63.9	32.3	3.9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6-3〉 9시 등교에 대한 찬반 의견: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7.3	36.4	6.4	100.0	
성별	남성	1,009	61.3	33.4	5.3	100.0	14.561**
	여성	991	53.2	39.4	7.5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0.5	38.0	11.5	100.0	28.684***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60.6	34.4	4.9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57.9	37.3	4.8	100.0	
	읍·면(군) 지역	147	60.5	32.7	6.8	100.0	
연령	19 - 29세	374	67.6	25.7	6.7	100.0	65.979***
	30대	412	60.7	29.9	9.5	100.0	
	40대	462	60.0	34.6	5.4	100.0	
	50대	413	47.9	46.0	6.1	100.0	
	60 - 75세	339	49.6	46.6	3.8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52.3	41.6	6.1	100.0	51.102***
	미혼	648	67.7	25.3	6.9	100.0	
	기타	41	51.2	43.9	4.9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52.2	41.8	6.0	100.0	52.702***
	자녀 없음	652	67.8	25.2	7.1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54.5	42.3	3.1	100.0	9.093*
	기타	1,714	57.8	35.4	6.9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5.9	26.5	17.6	100.0	14.015*
	고졸	517	58.0	36.0	6.0	100.0	
	전문대/대졸	1,236	58.2	35.4	6.4	100.0	
	대학원졸	213	50.7	44.1	5.2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5.0	35.8	9.2	100.0	18.921**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2.0	31.0	7.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55.5	39.4	5.2	100.0	
	600만원 이상	415	54.2	40.5	5.3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	꼭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7.3	56.8	6.0	100.0	
성별	남성	1,009	35.5	59.7	4.9	100.0	8.946*
	여성	991	39.2	53.8	7.1	100.0	
연령	19 - 29세	374	31.6	61.8	6.7	100.0	23.280**
	30대	412	33.7	60.4	5.8	100.0	
	40대	462	35.9	57.6	6.5	100.0	
	50대	413	39.5	55.0	5.6	100.0	
	60 - 75세	339	47.2	47.8	5.0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40.2	53.9	5.9	100.0	16.939**
	미혼	648	31.0	63.0	6.0	100.0	
	기타	41	43.9	51.2	4.9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40.4	53.7	5.9	100.0	17.093***
	자녀 없음	652	31.0	63.0	6.0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45.1	52.1	2.8	100.0	12.298**
	기타	1,714	36.0	57.5	6.5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29.6	61.2	9.2	100.0	17.91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35.9	57.0	7.1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40.3	55.2	4.5	100.0	
	600만원 이상	415	39.5	56.1	4.3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29.7	66.4	3.9	100.0	41.33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38.5	57.0	4.5	100.0	
	사무 종사자	381	36.2	56.4	7.3	100.0	
	서비스 종사자	61	31.1	60.7	8.2	100.0	
	판매 종사자	73	45.2	54.8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26.7	7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39.7	55.2	5.2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25.9	51.9	22.2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35.6	58.9	5.5	100.0	
	군인	5	0.0	100.0	0.0	100.0	
	기타	789	40.2	53.4	6.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3.3	23.6	13.2	100.0	
성별	남성	1,009	61.7	26.4	11.9	100.0	9.763**
	여성	991	64.8	20.8	14.4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408	56.9	26.7	16.4	100.0	19.654**
	광역시·특별자치시	526	61.8	26.6	11.6	100.0	
	중소도시(시 지역)	919	65.3	21.5	13.2	100.0	
	읍·면(군) 지역	147	73.5	17.0	9.5	100.0	
연령	19 - 29세	374	48.1	32.4	19.5	100.0	92.865***
	30대	412	54.4	28.6	17.0	100.0	
	40대	462	66.7	23.4	10.0	100.0	
	50대	413	70.9	18.2	10.9	100.0	
	60 - 75세	339	76.7	14.7	8.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8.3	22.0	9.8	100.0	63.099***
	미혼	648	52.3	27.9	19.8	100.0	
	기타	41	75.6	7.3	17.1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8.5	21.5	10.0	100.0	56.363***
	자녀 없음	652	52.5	27.9	19.6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68.5	23.1	8.4	100.0	7.257*
	기타	1,714	62.4	23.7	13.9	100.0	
학력	중졸이하	34	61.8	17.6	20.6	100.0	16.880*
	고졸	517	68.7	18.2	13.2	100.0	
	전문대/대졸	1,236	61.5	25.1	13.4	100.0	
	대학원졸	213	60.6	29.1	10.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58.8	25.8	15.4	100.0	20.34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3.8	20.5	15.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6.7	22.4	10.9	100.0	
	600만원 이상	415	59.8	29.2	11.1	100.0	

*p〈0.05, **p〈0.01, ***p〈0.001

〈표 Ⅴ-49〉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6.1	27.1	4.3	2.7	100.0	
성별	남성	1,009	64.1	28.9	5.1	1.9	100.0	11.454*
	여성	991	68.0	25.1	3.4	3.4	100.0	
연령	19 - 29세	374	57.8	30.5	7.8	4.0	100.0	34.582**
	30대	412	63.1	28.6	5.1	3.2	100.0	
	40대	462	68.2	25.3	3.9	2.6	100.0	
	50대	413	70.2	26.2	1.9	1.7	100.0	
	60 - 75세	339	70.8	24.8	2.7	1.8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67.2	27.3	3.4	2.1	100.0	16.490*
	미혼	648	63.1	26.9	6.2	3.9	100.0	
	기타	41	75.6	22.0	2.4	0.0	100.0	
자녀유무	자녀 있음	1,348	67.5	27.1	3.3	2.1	100.0	14.539**
	자녀 없음	652	63.0	27.0	6.1	3.8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72.7	24.8	1.7	0.7	100.0	12.570**
	기타	1,714	64.9	27.4	4.7	3.0	100.0	
학력	중졸이하	34	64.7	17.6	8.8	8.8	100.0	32.937***
	고졸	517	70.4	20.3	5.2	4.1	100.0	
	전문대/대졸	1,236	64.3	30.3	3.6	1.9	100.0	
	대학원졸	213	65.7	26.3	5.2	2.8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62.7	24.6	6.2	6.5	100.0	24.407**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67.2	25.9	4.2	2.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5.8	28.9	3.5	1.8	100.0	
	600만원 이상	415	66.7	27.5	4.3	1.4	100.0	

*p〈0.05, **p〈0.01, ***p〈0.001

〈표 Ⅴ-50〉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8.9	26.0	2.9	2.3	100.0	
성별	남성	1,009	67.6	27.0	3.8	1.7	100.0	10.533*
	여성	991	70.1	25.0	1.9	2.9	100.0	
초등학생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264	63.6	28.4	5.3	2.7	100.0	8.465*
	기타	1,736	69.6	25.6	2.5	2.2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74.5	24.1	1.0	0.3	100.0	11.302*
	기타	1,714	67.9	26.3	3.2	2.6	100.0	
학력	중졸이하	34	58.8	29.4	2.9	8.8	100.0	18.849*
	고졸	517	71.2	22.2	2.9	3.7	100.0	
	전문대/대졸	1,236	68.1	27.3	3.0	1.6	100.0	
	대학원졸	213	69.0	27.2	1.9	1.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65.0	24.2	4.6	6.2	100.0	31.66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72.0	23.2	3.0	1.8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67.0	28.6	2.9	1.5	100.0	
	600만원 이상	415	69.2	27.5	1.4	1.9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63.8	29.7	4.3	2.2	100.0	56.4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68.9	28.0	2.4	0.7	100.0	
	사무 종사자	381	66.1	29.9	1.6	2.4	100.0	
	서비스 종사자	61	68.9	27.9	0.0	3.3	100.0	
	판매 종사자	73	75.3	21.9	2.7	0.0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73.3	26.7	0.0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82.8	13.8	1.7	1.7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59.3	14.8	14.8	11.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65.8	27.4	4.1	2.7	100.0	
	군인	5	60.0	20.0	20.0	0.0	100.0	
	기타	789	70.6	23.7	2.9	2.8	100.0	

*p〈0.05, **p〈0.01, ***p〈0.001

〈표 Ⅴ-51〉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약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1.1	60.4	26.1	2.5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2.4	60.3	25.0	2.3	100.0	16.338*
	미혼	648	8.3	59.7	29.3	2.6	100.0	
	기타	41	12.2	73.2	9.8	4.9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2.4	60.7	24.6	2.4	100.0	10.143*
	자녀 없음	652	8.4	59.7	29.3	2.6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7.6	52.9	20.6	8.8	100.0	22.809**
	고졸	517	8.1	61.3	26.9	3.7	100.0	
	전문대/대졸	1,236	11.3	60.9	26.0	1.8	100.0	
	대학원졸	213	16.0	55.9	25.8	2.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11.2	56.2	25.4	7.3	100.0	32.118***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0.5	60.0	27.2	2.3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1.4	61.8	25.6	1.2	100.0	
	600만원 이상	415	11.6	61.2	25.5	1.7	100.0	

*p〈0.05, **p〈0.01, ***p〈0.001

〈표 Ⅴ-52〉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약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1.2	57.8	28.8	2.3	100.0	
연령	19 - 29세	374	5.9	53.7	36.6	3.7	100.0	39.899***
	30대	412	9.5	59.7	27.9	2.9	100.0	
	40대	462	12.3	56.9	28.8	1.9	100.0	
	50대	413	12.3	60.3	25.4	1.9	100.0	
	60 - 75세	339	16.2	57.8	25.1	0.9	100.0	
혼인 상태	기혼	1,311	13.4	58.0	26.5	2.1	100.0	35.655***
	미혼	648	6.3	56.6	34.1	2.9	100.0	
	기타	41	17.1	68.3	14.6	0.0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48	13.5	58.3	26.2	2.0	100.0	30.813***
	자녀 없음	652	6.4	56.6	34.0	2.9	100.0	
학력	중졸이하	34	14.7	52.9	23.5	8.8	100.0	39.924***
	고졸	517	8.5	56.1	31.1	4.3	100.0	
	전문대/대졸	1,236	10.8	59.1	28.7	1.4	100.0	
	대학원졸	213	19.2	54.9	23.9	1.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60	9.2	56.5	27.3	6.9	100.0	34.06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65	10.8	56.4	31.1	1.7	100.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60	11.4	57.9	29.2	1.5	100.0	
	600만원 이상	415	12.8	60.5	25.1	1.7	100.0	
직업군	관리자	232	15.1	56.5	27.2	1.3	100.0	44.2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6	14.0	60.5	24.1	1.4	100.0	
	사무 종사자	381	10.2	57.7	29.7	2.4	100.0	
	서비스 종사자	61	6.6	57.4	29.5	6.6	100.0	
	판매 종사자	73	8.2	46.6	43.8	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	20.0	46.7	33.3	0.0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15.5	60.3	24.1	0.0	10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3.7	51.9	33.3	11.1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3	5.5	64.4	27.4	2.7	100.0	
	군인	5	0.0	60.0	40.0	0.0	100.0	
	기타	789	10.5	57.8	29.2	2.5	100.0	

*p〈0.05, **p〈0.01, ***p〈0.001

〈표 Ⅴ-53〉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자녀가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계	
전체		2,000	14.5	19.1	24.3	2.7	17.7	21.9	100.0	
연령	19 - 29세	374	11.0	19.3	23.0	3.7	20.1	23.0	100.0	43.512**
	30대	412	11.4	21.6	22.6	3.6	20.9	19.9	100.0	
	40대	462	18.4	15.4	23.4	2.6	17.7	22.5	100.0	
	50대	413	18.9	17.2	25.9	1.9	13.8	22.3	100.0	
	60 - 75세	339	11.5	23.0	26.8	1.5	15.6	21.5	100.0	
대학생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286	20.6	17.1	27.3	1.4	13.3	20.3	100.0	16.618**
	기타	1,714	13.5	19.4	23.7	2.9	18.4	22.1	100.0	

*p〈0.05, **p〈0.01, ***p〈0.001

부록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언론사 칼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1 분석 목적 및 대상

교육여론조사의 9개 영역(사교육비 경감,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직업교육, 방과후학교, 전문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대입전형, 교원)에 대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논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이하 TNA)을 실시하였다. TNA는 텍스트 안에서 각 단어들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의미를 수량화하고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박수정, 박선주, 2013: 135; 박한우, Leydesdorff, 2004: 1378).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6개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사설, 오피니언, 칼럼이다. 일반 기사가 아닌 사설, 오피니언, 칼럼(이하 텍스트)을 분석 범주로 설정한 것은 일반 기사와 달리 각 교육 주제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가치판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언론사별 논조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준성 외, 2013: 175).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2014년 10월 1월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신문지면 및 온라인에 게재된 것이다. 분석대상의 조사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 및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여론조사의 9개 영역에 대한 각 언론사별 분석대상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수집된 분석대상 텍스트 수는 총 139편이다. 각 언론사별로 보면 중앙일보에 게재된 텍스트가 33편(2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25편(18.12%), 경향신문 24편(17.39%), 조선일보에서 23편(16.67%), 한국일보 8편(5.80%)의 순이었다. 분석 주제 별로는 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김규식(중앙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전문연구원) 연구팀의 용역으로 수행하였음.

입전형에 대한 텍스트가 총 84편(60.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성교육(17편, 12.32%), 교원(11편, 7.97%), 직업교육(7편, 5.07%), 자유학기제(6편, 4.35%), 사교육비 경감(5편, 3.62%), 전문대학 활성화(4편, 3.62%), 방과후학교(2편, 1.45%), 지방대학(2편, 1.45%)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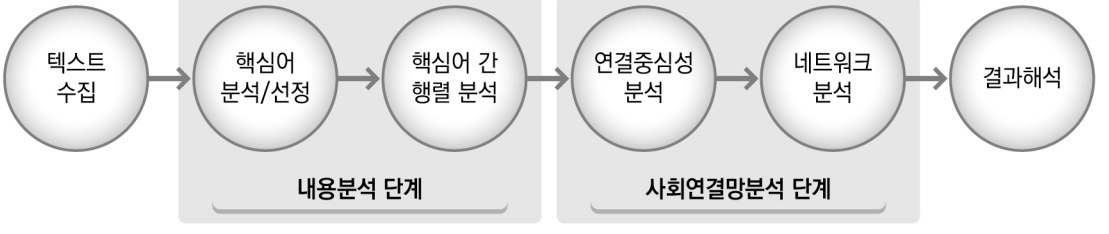
대입전형과 관련한 텍스트가 전체의 60.87%로 편중되어 있어 조사 기간 내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 활성화 관련 텍스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2편씩이었고, 반대로 분석 대상이 되는 지방대학 관련 텍스트는 한겨레신문에서는 2편으로 조사되어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 관심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각 언론사별 분석 대상 수

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계
사교육비 경감	–	1	2	1	1	–	5
인성교육	2	1	6	2	3	3	17
자유학기제	1	3	–	–	–	2	6
직업교육	1	2	1	1	1	1	7
방과후학교	–	1	–	–	1	–	2
전문대학 활성화	2	2	–	–	–	–	4
지방대학	–	–	–	–	–	2	2
대입전형	16	13	22	–	17	16	84
교원	1	2	2	4	1	1	11
계	23	25	33	8	24	25	139

2 분석 절차

TNA는 텍스트 안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분석의 수행 절차는 크게 1) 내용분석 단계와 2) 사회연결망분석 단계로 구분된다(최영출, 박수정, 2011: 125). TNA의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그림 1] TNA 분석 절차

가. 내용분석 단계

내용분석 단계의 목적은 주제에 속한 여러 텍스트 안에서 핵심어를 선정하고, 핵심어 간의 공출현 관계를 행렬정보로 나타내는 데 있다. 각 조사 영역별 핵심어와 공출현빈도 행렬(co-occurrence matrix)은 박한우와 Leydesdorff(2004)가 한국어 텍스트의 핵심어 분석을 위해 개발한 krwords를, 핵심어가 텍스트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출현빈도 행렬을 분석하기 위해 krtext를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단계에서 산출된 데이터 중 핵심어와 핵심어 사이의 공출현빈도 행렬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각 핵심어가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 안에서 동시에 출현한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1381).

구체적인 내용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주제에 따라 수집한 텍스트의 본문을 'text.txt'이라는 이름을 갖는 하나의 파일로 합친다.

둘째, 'text.txt' 파일을 krwords 프로그램을 통해 단어의 출현빈도를 분석한다.

셋째, 출현빈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어의 정제 작업을 실시한다. 내용분석 단계에서의 단어 정제는 단어 교정작업, 통제작업,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상, 2014: 55). 먼저, 교정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조사의 삭제, 띄어쓰기 통일, 품사형태 등을 수정·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출현빈도 분석에서 '방과후'와 '학교'로 나눠지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통제작업은 동의어,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등을 적절한 단어로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 '수능' 등의 동의어를 '수능'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거작업은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일지라도 너무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핵심어 선정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제', '교육' 등과 같은 단어는 출현빈도는 매우 높으나 특정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단어 교정작업을 거친 텍스트를 다시 krword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단어의 출현빈도를 재산출한 후, 빈도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단어의 빈도는 단순한 기계적 산출물이므로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핵심어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핵심어로 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출현빈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해당 분석 주제의 텍스트의 총 수와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대체로 본문에서 3~4회 이상 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정리된 핵심어가 텍스트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에 대한 행렬을 산출하기 위하여 krtext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나. 사회연결망분석 단계

사회연결망분석은 내용분석 단계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본 분석에서는 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핵심어간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공출현 행렬 데이터를 NetMiner로 불러들인 후,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확인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와 연결되어 함께 출현하는 정도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노드(node)로서의 핵심어가 갖는 파워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로 활용된다(곽기영, 2014: 185). 즉,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인 연관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핵심어 간의 응집적 하위 그룹(cohesive subgroup)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핵심어를 하위 그룹으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각 하위 그룹에 속한 핵심어의 행위 또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곽기영, 2014: 282). 즉, 응집적 하위 그룹 분석의 방법은 하위 그룹 간의 하위 그룹의 내부 및 외부 핵심어 간의 상대적 연결 정도를 확인하여 그들의 보여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곽기영, 2014: 282). 본 연구에서는 Clauset, Newman과 Moore가 제시한 알고리즘에 기초한 NetMiner 소프트웨어의 커뮤니티 모듈성(Community modularity)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연결 관계의 강도에 의한 해석이 아닌, 유의미한 그룹을 파악하여 언론의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분석 및 결과 해석의 제한점

본 연구 수행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제영역별 텍스트의 수와 해당 언론사의 편차가 많아 도출된 핵심어가 일부 언론사가 제시하는 논점에 편중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각 주제영역에 속하는 하위 주제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아 다수의 하위주제가 존재할 경우 그 중 텍스트 수가 많은 하위 주제의 내용이 핵심어로 도출되고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핵심어의 선정에 있어 출현 빈도와 단어의 유의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긍정 또는 부정적 어휘나 감정적 어휘의 사용과 같이 해당 주제에 대한 관점을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에서 찬·반 의견의 대립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하위 그룹이 모두 완벽한 의미단위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없으며, 실제 분석 사례에서도 일부 핵심어들이 텍스트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르게 맥락적 관련성이 낮은 핵심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도출된 하위 그룹 중에서도 일부의 것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조사 영역별 분석 결과

가.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을 주제로 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총 5개의 텍스트에서 도출한 핵심어는 총 18개이다(〈표 2〉 참고). 이를 나열하면 '교육방송, 수능, 사교육비, 연계정책, 정부, 지역, 오류, 사교육, 출제, 대책, 공교육, 해소, 학생, 정책, 평가, 학부모, 자녀, 교육비'와 같다.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핵심어는 '교육방송(30회)'였으며, '수능(26회)', '사교육비(25회)'의 빈도가 높았다. 한편 출현빈도가 가장 낮은 핵심어는 '출제', '평가', '해소'였다.

〈표 2〉 사교육비 경감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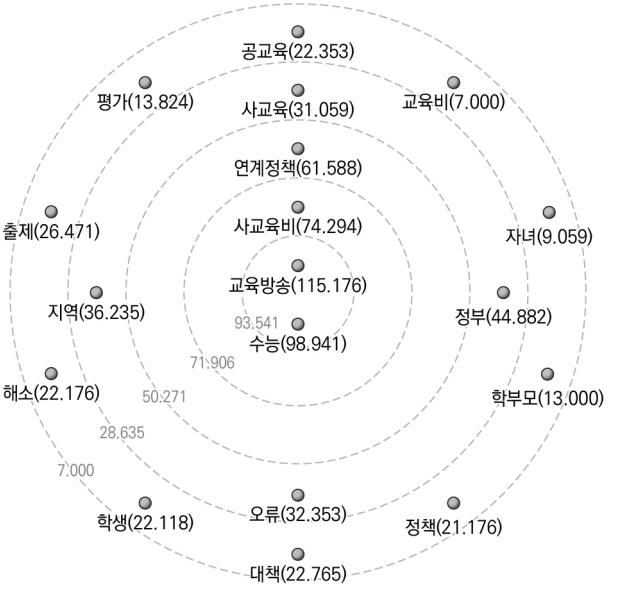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30	교육방송	8	9	교육비
2	26	수능	9	8	자녀, 학부모
3	25	사교육비	11	7	오류, 정책, 지역
4	17	사교육	14	6	대책, 학생
5	16	정부	16	5	출제, 평가, 해소
6	12	공교육, 연계정책			

사회연결망분석을 위해 이상의 핵심어 간 연결정도를 분석하는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출현빈도 순위와 유사하게 '교육방송', '수능', '사교육비'의 연결중심성이 다른 핵심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출현빈도 순위에서 8위에 위치했던 '교육비'의 경우 가장 낮은 연결중심성을 보여 출현 빈도에 비해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류'의 연결중심성 순위가 출현빈도의 순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주제에서 '오류'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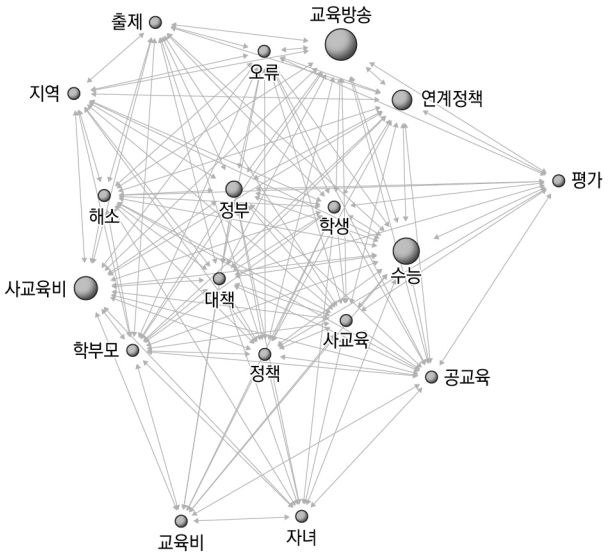
졌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표 3〉 사교육비 경감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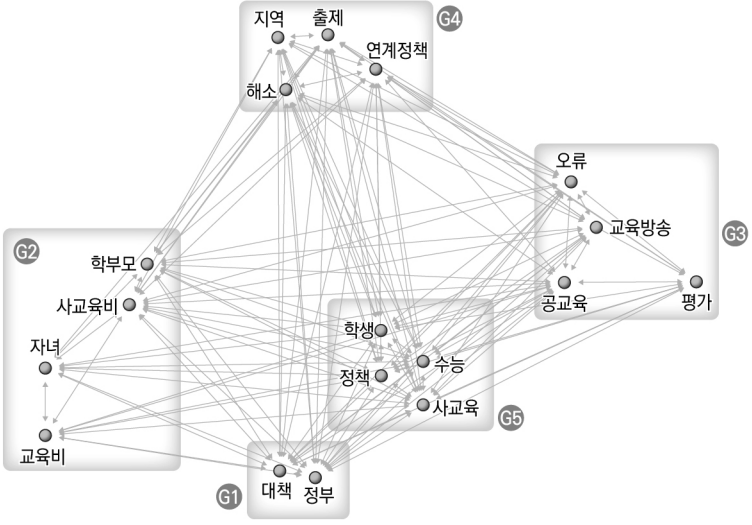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교육방송	115.176
2	수능	98.941
3	사교육비	74.294
4	연계정책	61.588
5	정부	44.882
6	지역	36.235
7	오류	32.353
8	사교육	31.059
9	출제	26.471
10	대책	22.765
11	공교육	22.353
12	해소	22.176
13	학생	22.118
14	정책	21.176
15	평가	13.824
16	학부모	13.000
17	자녀	9.059
18	교육비	7.000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그림 2]와 같이 네트워크 진도를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지도상에서의 노드(원)는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도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드가 근접해 있을수록 각 핵심어가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방송', '수능', '연계정책', '사교육비', '정부', '지역' 등이 연결중심성이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노드 간 근접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교육비'와 '학부모', '해소'가 근접하여 있고, '교육방송'과 '오류', '연계정책'이 서로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자녀', '평가' 등의 노드는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사교육비 경감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3] 사교육비 경감 핵심어의 모듈 지도

마지막으로 [그림 3]과 같이 네트워크에 포함된 핵심어의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을 통해 하위 그룹을 도출하여 핵심어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핵심어는 5개의 하위 그룹으로 응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먼저, '대책'과 '정부'의 두 개의 핵심어가 하나의 그룹으로 도출되었다(G1). '자녀', '교육비', '사교육

비', '학부모'가 하나의 그룹으로(G2), '공교육', '교육방송', '오류', '평가'가 또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G3)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지역', '출제', '연계정책', '해소'가(G4), '학생', '사교육', '수능', '정책'이 동일 그룹(G5)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듈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주제로 한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교육방송(EBS)은 관련하여 수능 오류 이슈와 연관되어 있었다. 텍스트에서는 교육방송 교재와의 수능 연계정책이 수능 오류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방송 교재와 수능 오류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담겨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에서의 영어 절대평가 이슈를 언급한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른 핵심어와의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방송과의 연계정책을 통한 수능 문제의 출제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셋째, 사교육은 수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여기에 학생이 관련되면서 대학입학을 위하여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다는 논조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교육비 문제가 자녀보다 오히려 학부모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학생의 대학 입학의 문제를 넘어 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텍스트의 내용이 네트워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이상의 모든 의미 그룹이 정부와 대책이 속한 그룹으로 묶여 있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주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인성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텍스트 분석 건수는 총 17편이었으며, 이 중 인성교육 관련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핵심어 15개를 도출하여 이들의 빈도, 연결중심성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성교육과 관련한 핵심어로 '인성교육, 인성, 인성교육진흥법, 대학, 학교, 수학, 사회, 교사, 사교육, 학원, 대입, 가치,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성명접' 등이 전체 텍스트 안에서 설명력을 갖는 중심 단어로 선정되었다(〈표 4〉 참고). 전체 17편의 텍스트 내에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핵심어는 분석 주제인 인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인성교육', '인성', '인성교육진흥법'이었다. 이들 핵심어는 동일한 단어로 취급 될 수도 있으나, 텍스트 안에서 다른 단어와의 연결 관

계에서 지칭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어 중 '사교육'과 '학원' 역시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텍스트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사교육'은 '학원'을 포함하고 '공교육'에 대비되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두 단어 역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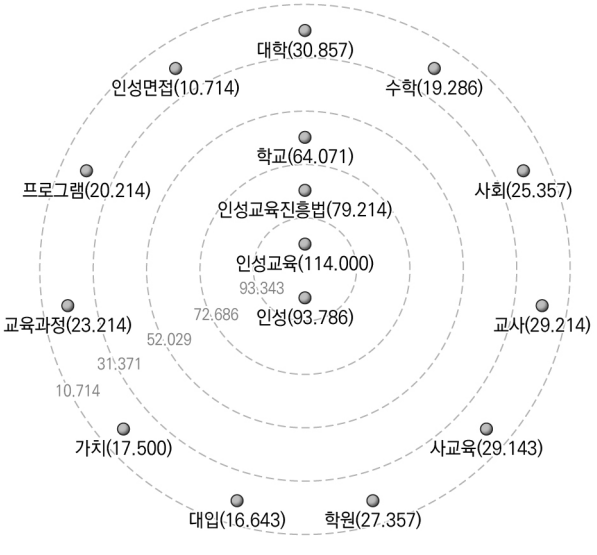
〈표 4〉 인성교육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68	인성교육	8	16	교사, 사교육
2	67	인성	10	13	학원
3	42	인성교육진흥법	11	10	대입
4	35	대학, 학교	12	9	가치, 교육과정, 프로그램
6	18	수학	15	6	인성면접
7	17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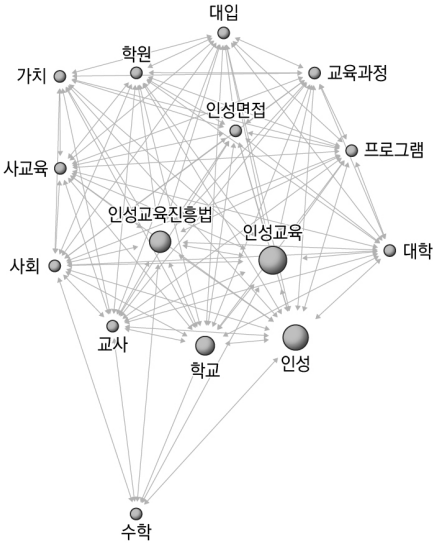
이들 핵심어의 연결중심성 역시 단어의 출현빈도와 유사한 순위로 도출되었다. 출현 빈도와 동일하게 '인성교육', '인성', '인성교육진흥법', '학교', '대학'의 순으로 연결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핵심어는 '인성면접', '대입', '가치', '수학'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고).

〈표 5〉 인성교육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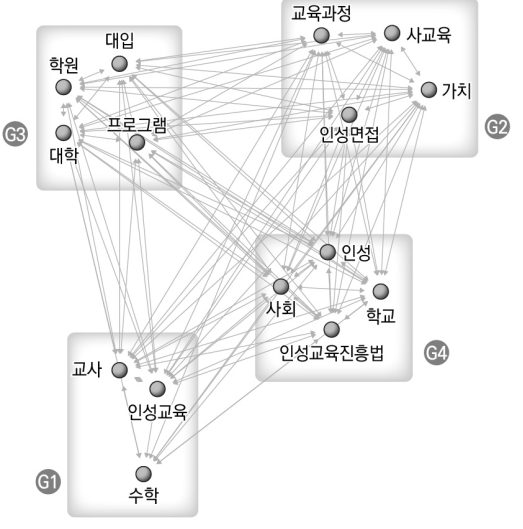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인성교육	114.000
2	인성	93.786
3	인성교육진흥법	79.214
4	학교	64.071
5	대학	30.857
6	교사	29.214
7	사교육	29.143
8	학원	27.357
9	사회	25.357
10	교육과정	23.214
11	프로그램	20.214
12	수학	19.286
13	가치	17.500
14	대입	16.643
15	인성면접	10.714



다음으로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관계를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한 결과, ‘인성교육’, ‘인성’, ‘학교’, ‘인성교육진흥법’, ‘교사’ 등의 핵심어가 근접하여 도출되었다. 또한 ‘인성면접’,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이 상대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핵심어가 텍스트 안에서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수학’은 네트워크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타 핵심어와의 연관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4] 참고).



[그림 4] 인성교육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5] 인성교육 핵심어의 모듈 지도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인성교육 핵심어의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나타난 주요 논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네트워크의 하위 그룹은 총 4개로 도출되었다. 먼저, '교사', '인성교육', '수학'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1). 또한 '교육과정', '사교육', '인성면접', '가치' 등의 핵심어가 다른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2). '학원', '대입', '대학', '프로그램'의 핵심어가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고(G3), 마지막으로 '사회', '인성', '학교', '인성교육진흥법'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4).

각 그룹의 핵심어 간 관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언론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단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학생의 인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인성교육, 인성면접을 위한 학원이 생겨나는 등 사교육을 통해 인성을 기르는 풍조, 그리고 그것이 대입에 점수화 되어 반영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상황맥락이 핵심어 관계 속에서 그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 교사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네트워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론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중핵을 담당할 학교구성원으로 교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교사의 역할과 자질 확보에 대한 이슈가 언급됨을 알 수 있으며, 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입시를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주요 논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한 총 6편의 텍스트에서 도출한 핵심어는 '자유학기제, 학생, 학교, 수업, 교사, 활동, 미래, 진로탐색, 현장, 꿈, 사회, 직업, 체험, 여행, 체험활동, 입시, 학부모, 학업' 등의 총 18개이다. 전체 텍스트 내 핵심어의 출현빈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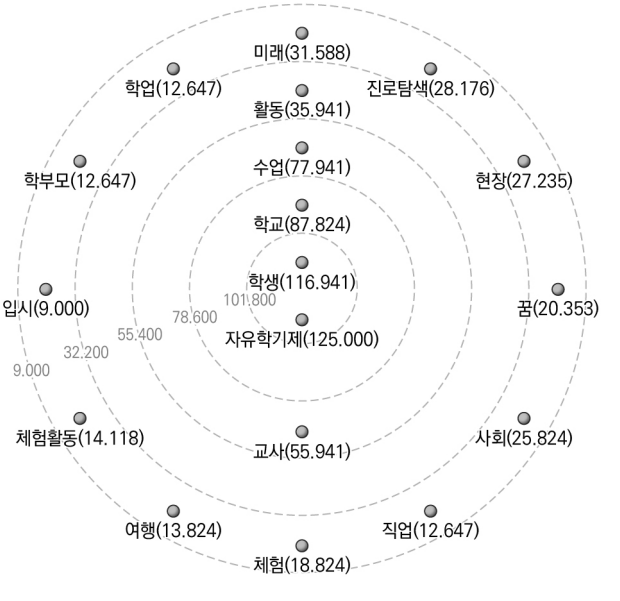
〈표 6〉 자유학기제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55	자유학기제	7	10	미래, 진로탐색, 현장
2	48	학생	10	9	사회
3	36	학교	11	7	꿈
4	29	수업	12	6	직업, 체험
5	23	교사	14	5	여행, 체험활동
6	11	활동	16	4	입시, 학부모,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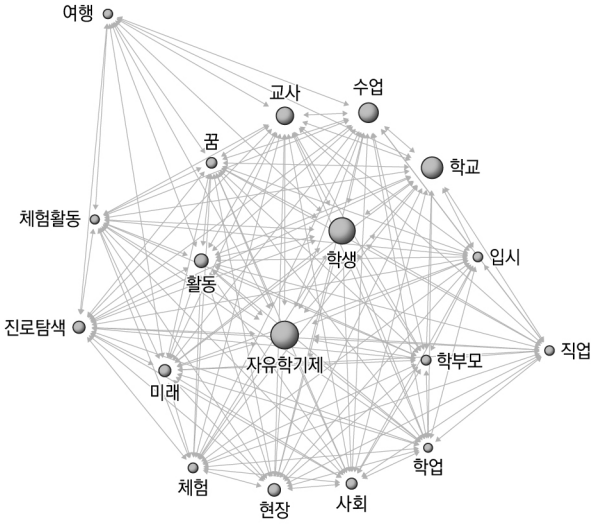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관련 핵심어의 연결중심성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3개 핵심어는 '자유학기제', '학생', '학교'이며, 하위 3개 핵심어는 '입시', '학업', '학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결중심성의 순위는 대체로 출현 빈도 순위와 유사하였다.

〈표 7〉 자유학기제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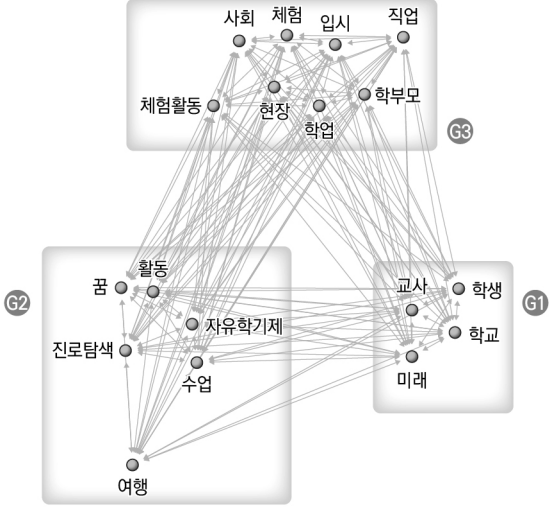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자유학기제	125.000
2	학생	116.941
3	학교	87.824
4	수업	77.941
5	교사	55.941
6	활동	35.941
7	미래	31.588
8	진로탐색	28.176
9	현장	27.235
10	사회	25.824
11	꿈	20.353
12	체험	18.824
13	체험활동	14.118
14	여행	13.824
15	직업	12.647
16	학부모	12.647
17	학업	12.647
18	입시	9.000



[그림 6]의 네트워크 지도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다른 핵심어와 가장 많은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여행'의 경우 네트쿼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나머지 16개 핵심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자유학기제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7] 자유학기제 핵심어의 모듈 지도

자유학기제 핵심어의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을 통해 하위 그룹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모두 3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사', '미래', '학교', '학생' 등의 핵심어가 하나의 하위 그룹을 이루었다(G1). 또한 '꿈', '진로탐색', '수업', '자유학기제', '활동', '진로탐색'과 같은 핵심어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G2). 마지막으로 '직업', '입시', '체험', '사회', '체험활동', '현장', '학업', '학부모'가 하나의 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G3).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론의 주요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꿈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여행과 같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와 현장의 도움이 필요한데, 텍스트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의 수도 한정적이며, 사회와 현장의 협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러한 주장이 네트워크에서도 도출되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과 관련하여 입시정책과 학생의 학업 수행, 그리고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지지 여부가 연관되어 있어, 정책 수행의 외적 환경으로서 이들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미래, 학교, 학생, 교사의 키워드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학교로의 변화에 대한 일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를 우성하는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 관계의 핵심 의미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 직업교육

직업교육과 관련한 언론의 주요 논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7편의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대학, 창업, 기업, 근로자, 노동, 사회적, 정부, 고졸, 직업, 취업, 권리, 능력, 경험, 중소기업, 채용, 공공기관,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등의 18개 핵심어 선정하여 그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표 9〉와 같이 각 핵심어의 연결중심성도 분석하여 이들이 갖는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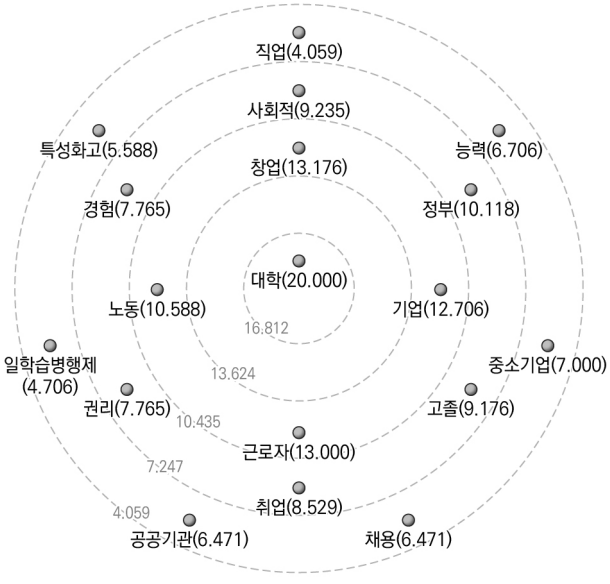
〈표 8〉 직업교육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28	대학	7	8	정부, 고졸
2	16	창업	9	7	직업, 취업
3	12	기업	11	6	권리, 능력
4	11	근로자	13	5	경험, 중소기업, 채용, 공공기관
5	10	노동	17	4	일학습병행제
6	9	사회적	18	3	특성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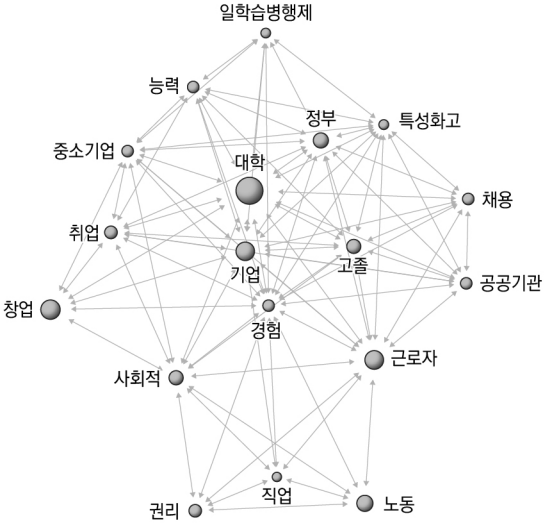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핵심어는 '대학'이었다. '창업', '기업', '근로자', '노동' 등의 핵심어 역시 빈도와 연결중심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출현 빈도에서 낮은 순위에 위치한 '특성화고', '일학습병행제' 등의 핵심어는 연결중심성도 낮아 다른 핵심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 직업교육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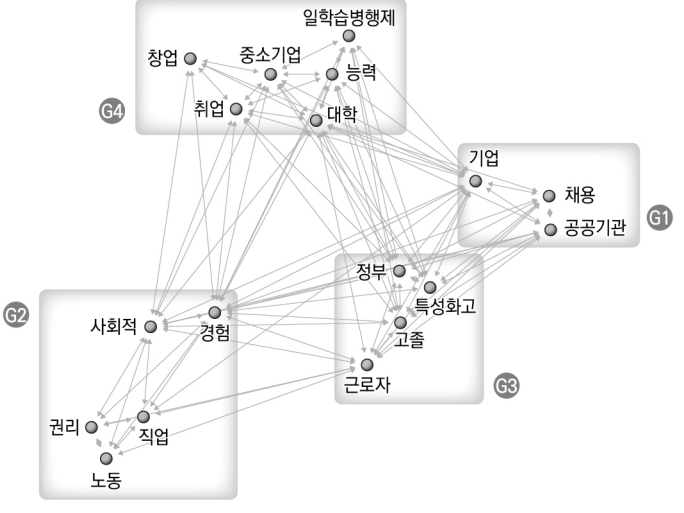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대학	20.000
2	창업	13.176
3	근로자	13.000
4	기업	12.706
5	노동	10.588
6	정부	10.118
7	사회적	9.235
8	고졸	9.176
9	취업	8.529
10	권리	7.765
11	경험	7.765
12	중소기업	7.000
13	능력	6.706
14	채용	6.471
15	공공기관	6.471
16	특성화고	5.588
17	일학습병행제	4.706
18	직업	4.059



이상의 핵심어가 보이는 관계성을 네트워크로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대학의 노드가 가장 큰 원을 그렸으며, 기업이 대학과 인접하여 도출된 것을 통해 텍스트 상에서 이 둘 간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나 '창업'과 같이 연결중심성이 큰 핵심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중심 그룹에서 다소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상호 대비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직업교육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9] 직업교육 핵심어의 모듈 지도

핵심어의 응집적 관계를 살펴본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에서는 총 4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다([그림 9] 참고). 먼저, '기업', '채용', '공공기관'이 하나의 그룹을(G1), '경험', '사회적', '권리', '직업', '노동'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2). 또한 '특성화고', '정부', '고졸', '근로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도출되었다(G3). 마지막으로 '창업', '중소기업', '취업', '능력', '대학', '일학습병행제'가 동일 그룹에 속한 핵심어로 도출되었다(G4).

이상의 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 관련 언론 텍스트의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성화고와 졸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직업교육 텍스트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도출되었다. 텍스트에서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 진학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등을 통해 보았을 때,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일학습병행제의 시행과 이에 참여하는 인원의 증가로 인해 대학 진학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네트워크 지도에서도 각 핵심어가 근접되어 도출되어 주요 논의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 논지 중 하나로 도출되었다. 고졸자 채용의 문제는 특성화고와 연계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관련 이슈가 직업교육 관련 텍스트의 주된 관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노동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텍스트 내용이 네트워크에서 그룹을 이루어 도출되었다. 그러나 네 번째 하위 그룹(G4)에 속한 핵심어 간의 연결 관계는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아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핵심이 되는 논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텍스트는 단 2편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므로 이하 핵심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텍스트에서 도출된 핵심어가 많을수록 의견이 편향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관련 텍스트에서 도출한 핵심어는 총 17개로 '학교, 선행학습, 학생, 교육부, 사교육, 학교교육, 선행학습금지법, 공교육, 개정안, 규제, 평가, 학원, 교사, 수능, 일반고, 정상화, 금지'이다. 이들의 출현빈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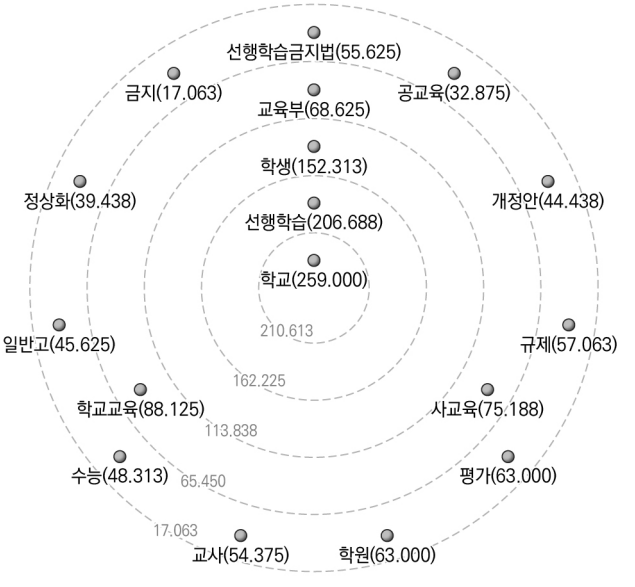
〈표 10〉 방과후학교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36	학교	8	8	공교육
2	34	선행학습	9	7	개정안, 규제, 평가, 학원
3	19	학생	13	6	교사, 수능
4	12	교육부, 사교육	15	5	일반고, 정상화
6	10	학교교육	17	4	금지
7	9	선행학습금지법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핵심어는 '학교'였으며 '선행학습', '학생', '교육부', '사교육' 순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핵심어는 '금지'이다.

〈표 11〉 방과후학교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학교	259.000
2	선행학습	206.688
3	학생	152.313
4	학교교육	88.125
5	사교육	75.188
6	교육부	68.625
7	평가	63.000
8	학원	63.000
9	규제	57.063
10	선행학습금지법	55.625
11	교사	54.375
12	수능	48.313
13	일반고	45.625
14	개정안	44.438
15	정상화	39.438
16	공교육	32.875
17	금지	17.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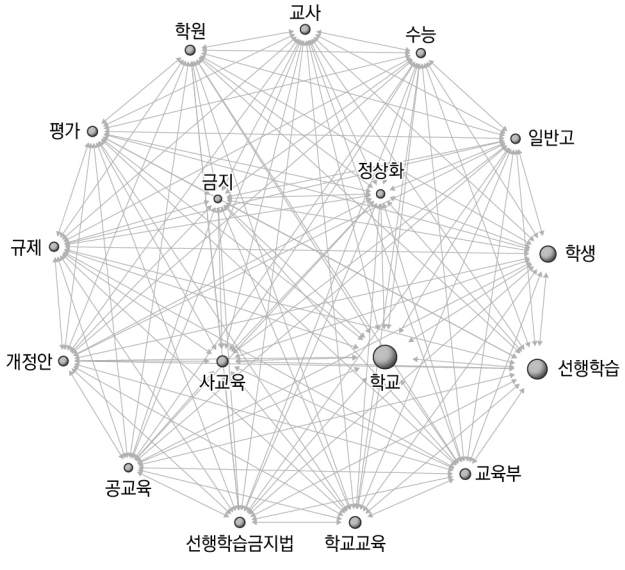


〈표 11〉과 같이 방과후학교 관련 핵심어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학교'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크게 도출되었으며, 그 외 핵심어의 열결중심성 순위도 대체로 출현 빈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출현 빈도 8순위였던 '공교육'의 경우 연결중심성에서는 16위로 나타나 출현 빈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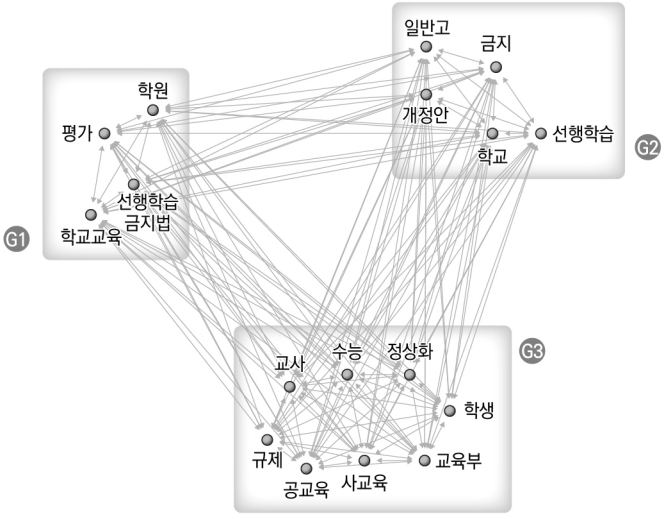
비해 다른 핵심어와의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핵심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핵심어 간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 ‘사교육’, ‘금지’, ‘정상화’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핵심어가 그 주변에 위치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 관련 핵심어의 하위 그룹은 총 3개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1] 참고). 각 그룹에 속한 핵심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학원’, ‘선행학습금지법’, ‘학교교육’이 하나의 그룹을(G1), ‘일반고’, ‘개정안’, ‘금지’, ‘학교’, ‘선행학습’이 다른 하나의 그룹(G2)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수능’, ‘정상화’, ‘학생’, ‘규제’, ‘공교육’, ‘사교육’, ‘교육부’ 등의 핵심어가 동일 그룹에 속하였다(G3).



[그림 10] 방과후학교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11] 방과후학교 핵심어의 모듈 지도

방과후학교 관련 핵심어의 하위 그룹과 핵심어 사이의 근접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이 주된 논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과 사교육, 정상화와 규제 같이 대비되는 핵심어가 동일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핵심어는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텍스트 속에서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기존의 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게 해주는 것은 학교를 사교육과 경쟁하는 곳으로 만드는 잘 못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담겨있었다. 반대의 의견은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에서 금지되었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선행학습이 금지되었던 동안 일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겼었다는 주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의 선행학습금지법이 학원이 아닌 학교교육을 규제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 네트워크게 드러났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관련 텍스트의 수가 적어 일부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은 본 주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바. 전문대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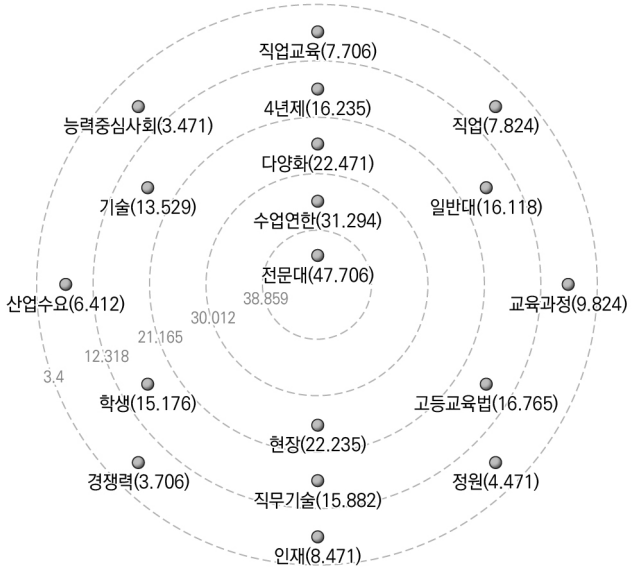
전문대학 활성화와 관련한 분석 텍스트는 4편이며, 유사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의 텍스트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핵심어는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4년제, 현장, 일반대, 직업교육, 고등교육법, 직무기술, 학생, 기술, 직업, 교육과정, 정원, 인재, 경쟁력, 산업수요, 능력중심사회'의 총 18개이다.

〈표 12〉 전문대학 활성화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28	전문대	9	6	직무기술, 학생
2	16	수업연한	11	5	기술
3	12	다양화	12	4	직업, 교육과정
4	9	4년제, 현장	14	3	정원, 인재, 경쟁력, 산업수요
6	8	일반대	18	2	능력중심사회
7	7	직업교육, 고등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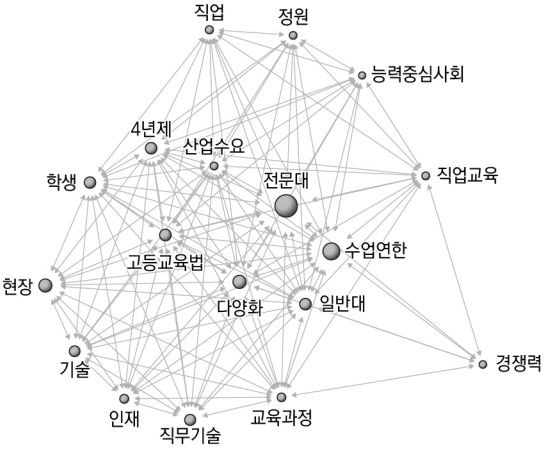
〈표 13〉 전문대학 활성화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전문대	47.706
2	수업연한	31.294
3	다양화	22.471
4	현장	22.235
5	고등교육법	16.765
6	4년제	16.235
7	일반대	16.118
8	직무기술	15.882
9	학생	15.176
10	기술	13.529
11	교육과정	9.824
12	인재	8.471
13	직업	7.824
14	직업교육	7.706
15	산업수요	6.412
16	정원	4.471
17	경쟁력	3.706
18	능력중심사회	3.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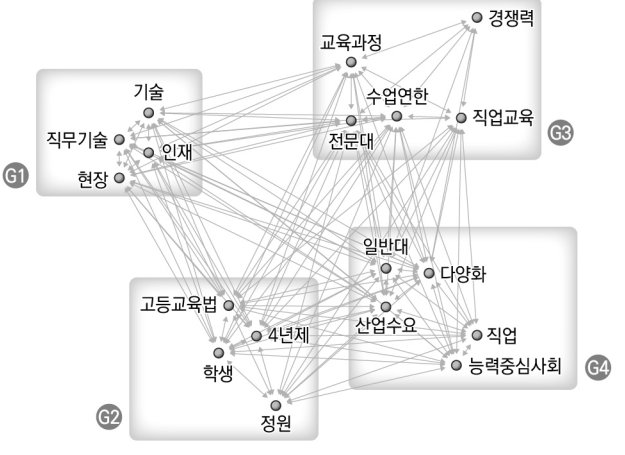


핵심어의 출현 빈도는 〈표 12〉와 같고,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핵심어와 연결중심성 모두에서 '전문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고, '수업연한', '다양화', '현장' 등이 상위 순위로 나타난 것이 동일하다. '능력중심사회', '경쟁력', '정원', '산업수요' 등의 핵심어는 출현빈도 순위와 연결중심성 모두 낮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보면 '전문대'와 '수업연한'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고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참고). 그 주변으로 '다양화', '일반대', '고등교육법', '산업수요'와 같은 핵심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경쟁력'의 경우 네트워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고 노드의 크기도 작어 다른 핵심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전문대학 활성화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13] 전문대학 활성화 핵심어의 모듈 지도

핵심어의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 결과에서는 핵심어가 총 4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현장', '인재', '직무기술', '기술'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1). '고등교육법', '학생', '정원', '4년제'의 핵심어가 응집되어 있었으며(G2), '전문대', '수업연한', '교육과정', '직업교육', '경쟁력'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G3). 마지막으로 '능력중심사회', '직업', '산업수요', '일반대', '다양화'가 동일 그룹에 속한 핵심어로 도출되었다(G4).

이러한 그룹 구성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문대학 활성화에서 주요 논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기술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 있음이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전문대의 수업연한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주요 논점은 전문대학이 일반대와 설립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연한 및 교육과정 다양화가 일반대와의 비교 논리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셋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에 4년제 과정을 두는 것이 대학 정원에 대한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는 정원 확대가 대학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전문대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넷째, 학사과정의 다양화는 일반대 및 산업수요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의 학사과정 다양화를 통해 전문대가 일반대와 대등한 관계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능력중심사회의 구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지방대학

지방대학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언론사에서 2편의 텍스트가 선정되어, 해당 언론사의 논조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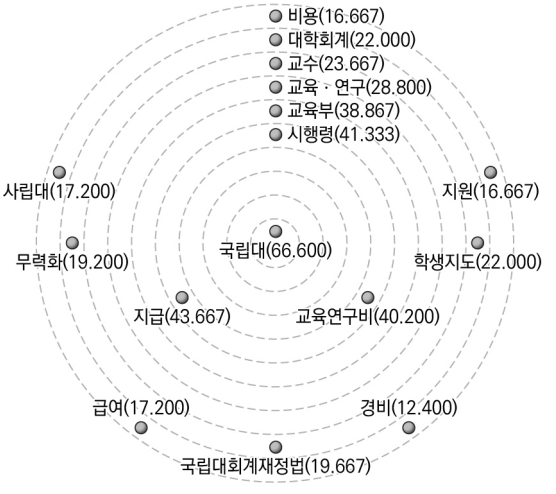
지방대학과 관련한 텍스트에서는 '국립대, 지급, 시행령, 교육연구비, 교육부, 교육·연구, 교수, 대학회계, 학생지도, 국립대회계재정법, 무력화, 급여, 사립대, 비용, 지원, 경비' 등의 16개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핵심어의 출현 빈도는 〈표 14〉와 같으며 이들의 연결중심성 정도는 〈표 15〉와 같다.

〈표 14〉 지방대학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19	국립대	7	6	대학회계, 비용, 지원, 학생지도
2	10	시행령	11	5	교수, 국립대회계재정법
3	9	교육부, 교육연구비, 지급	13	4	경비, 급여, 무력화, 사립대
6	8	교육·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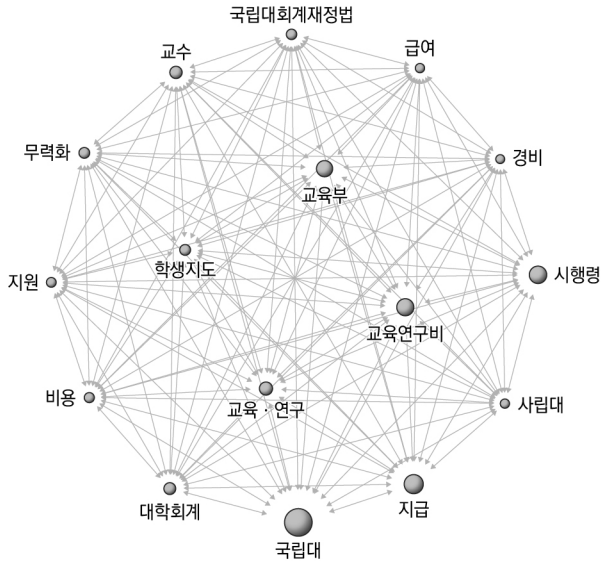
〈표 15〉 지방대학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국립대	66.600
2	지급	43.667
3	시행령	41.333
4	교육연구비	40.200
5	교육부	38.867
6	교육·연구	28.800
7	교수	23.667
8	대학회계	22.000
9	학생지도	22.000
10	국립대회계재정법	19.667
11	무력화	19.200
12	급여	17.200
13	사립대	17.200
14	비용	16.667
15	지원	16.667
16	경비	1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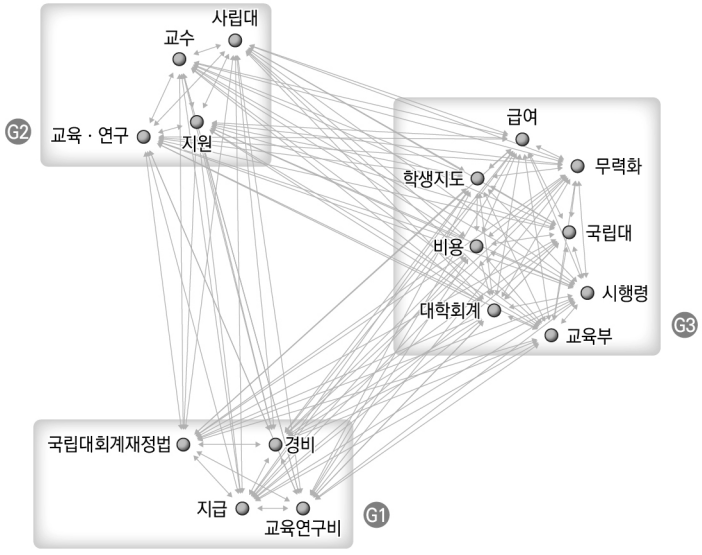


먼저, 핵심어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은 '국립대'였으며 '시행령', '교육부', '교육연구비', '지급', '교육·연구'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핵심어는 '경비', '급여', '무력화', '사립대' 등이었으나, 텍스트가 2개로 한정되어있어 주요 핵심어 간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결중심성 순위도 출현 빈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핵심어는 '국립대'이고, 연결중심성이 가장 낮은 핵심어는 '경비'였다.

핵심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교육연구비', '교육부', '학생지도', '교육·연구' 등의 핵심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관련 핵심어들이 인접하여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4] 참고).



[그림 14] 지방대학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15] 지방대학 핵심어의 모듈 지도

핵심어의 하위 그룹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핵심어가 3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5] 참고). 첫째, '국립대회계재정법', '경비', '지급', '교육연구비'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G1). '교육·연구', '지원', '교수', '사립대'가 다른 하나의 그룹(G2) 형성하였고, 마

지막으로 '급여', '학생지도', '비용', '대학회계', '교육부', '시행령', '국립대', '무력화' 등의 핵심어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G3).

지방대학 관련 텍스트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회계재정법이 교육연구비 또는 경비의 지급과 연관되어 이슈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립대회계재정법 시행령이 교육부, 국립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교육·연구 활동과 같은 교수 업무에 대한 지원이 사립대와 비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러한 주요 내용은 모두 사립대보다 국립대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텍스트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핵회계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통상적업무에 대하여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제한한 것에 대한 찬반 주장이 각각 제기되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사립대와 비교하였을 때 더 적은 지원을 받는 것이며 결국 국립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 내용은 단일 언론사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TNA를 통해 객관화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아. 대입전형

대입전형과 관련된 텍스트는 총 84개였다. 분석 대상인 9가지 주제영역 중 상대적인 관심이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대입전형 관련 이슈가 가장 많았던 것은 수능 출제 오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과 관련된 텍스트 역시 수능 출제 이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핵심어는 총 24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출제, 대학, 문제, 오류, 평가원, 영어, 수험생, 교육부, 사교육, 입시, 난이도, 학교, 교재, 교사, 능력, 세계지리, 성적, 혼란, 절대평가, 정답, 만점자, 학부모, 입시제도'와 같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핵심어 간 빈도수의 편차가 심한 것은 특정 주제의 텍스트가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점은 소수의 주장이 네트워크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입전형 관련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점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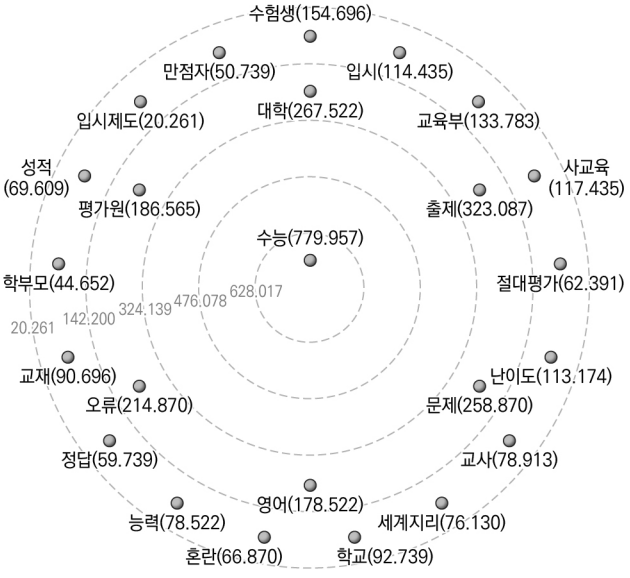
〈표 16〉 대입전형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627	수능	12	74	난이도
2	223	출제	13	61	교재
3	201	대학	14	57	학교
4	183	문제	15	54	절대평가
5	151	영어	16	49	교사, 세계지리
6	141	오류	18	47	혼란
7	127	평가원	19	46	정답
8	109	수험생	20	44	능력, 성적
9	97	교육부	22	32	만점자
10	85	입시	23	28	학부모
11	80	사교육	24	18	입시제도

대입전형 관련 핵심어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 순위를 보인 것은 '수능'이었으며, '출제', '대학', '문제', '영어' 등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한편 '입시제도'는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핵심어의 연결중심성 순위도 출현 빈도 순위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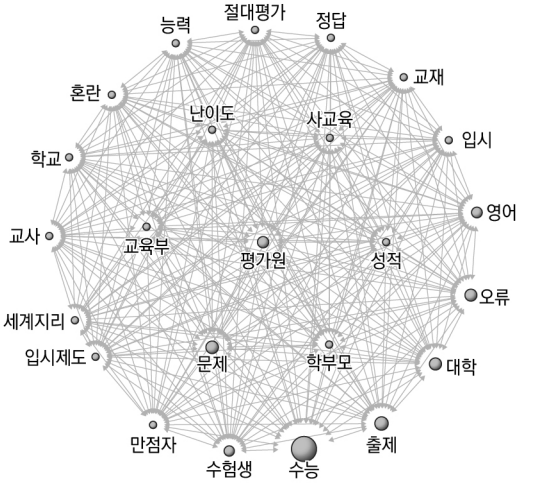
〈표 17〉 대입전형 활성화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수능	779.957
2	출제	323.087
3	대학	267.522
4	문제	258.870
5	오류	214.870
6	평가원	186.565
7	영어	178.522
8	수험생	154.696
9	교육부	133.783
10	사교육	117.435
11	입시	114.435
12	난이도	113.174
13	학교	92.739
14	교재	90.696
15	교사	78.913
16	능력	78.522
17	세계지리	76.130
18	성적	69.609
19	혼란	66.870
20	절대평가	62.391
21	정답	59.739
22	만점자	50.739
23	학부모	44.652
24	입시제도	2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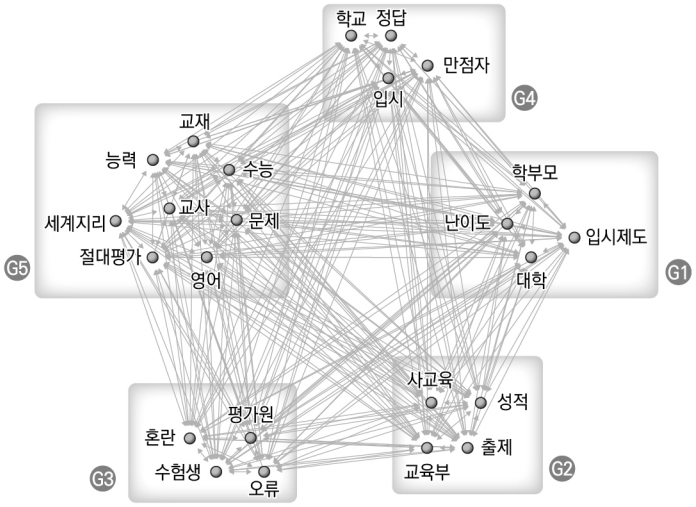


[그림 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입전형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중심에 '평가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난이도', '교육부', '사교육', '성적', '학부모' 등이 평가원과 가장 근접하는 핵심어로 나타났다. 전체 핵심어들은 네트워크에서 특별히 고립되지 않고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입전형 관련 핵심어의 하위 그룹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총 5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 '난이도', '대학', '입시제도'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G1). '사교육', '성적', '교육부', '출제'는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G2). 또한 '평가원', '혼란', '수험생', '오류'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G3). 또한 '학교', '입시', '만점자', '정답'이 응집되어 나타났고(G4), '세계지리', '절대평가', '영어', '문제', '교사', '교재', '수능', '능력'이 나머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G5).



[그림 16] 대입전형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17] 대입전형 핵심어의 모듈 지도

이상에서 파악되는 대입전형 관련 텍스트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의 문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논쟁 등이 주로 다루어진 관련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능은 교육방송 교재 연계정책과도 계속 관련이 되어 대입전형 관련 텍스트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능의 문제 오류로 인하여 수험행이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원이 수능 문제의 출제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논란에 직접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원과 동일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교육부 역시 혼란이라는 핵심어와 관련되어 교육당국과 평가원이 오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대입과 관련하여 여전히 사교육이 핵심어로 연결되고 있는 바, 텍스트 내에서는 교육당국 또는 정부가 대학 입학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력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논조가 다수 등장하고 있었다.

대입전형 관련 텍스트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수능 오류와 관련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그 밖의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을 네트워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본 분석의 제한점이다.

자. 교원

총 11개의 텍스트에서 도출한 교원 관련 핵심어는 '교사, 사학연금, 전교조, 공무원연금, 소프트웨어교육, 조합원, 개정, 교원노조법, 성범죄, 정부, 기간제, 헌재, 개혁, 결정, 법외노조, 교원노조, 징계'의 17개이다. 전체 텍스트를 보면, 크게 교원노조와 관련된 이슈와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로 분류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이상 주제영역에서 도출된 핵심어의 출현 빈도는 〈표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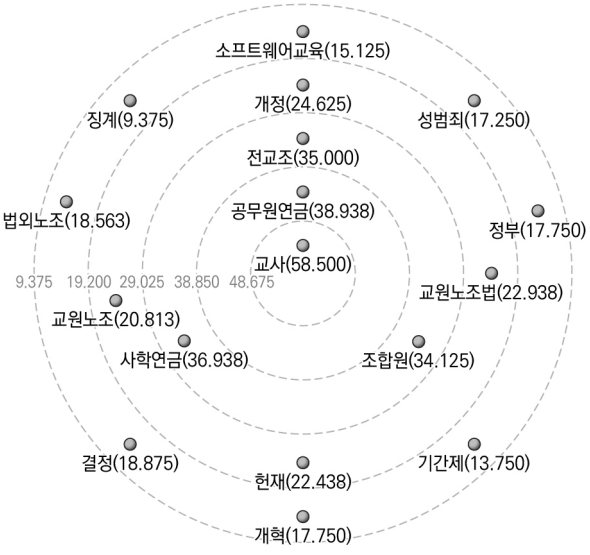
〈표 18〉 교원 관련 분석 대상 핵심어 및 출현 빈도

순위	빈도	핵심어	순위	빈도	핵심어
1	73	교사	7	12	개정, 교원노조법, 성범죄, 정부
2	27	사학연금	11	11	기간제, 헌제
3	24	전교조, 공무원연금	13	10	개혁, 결정, 법외노조
5	22	소프트웨어교육	16	9	교원노조
6	18	조합원	17	5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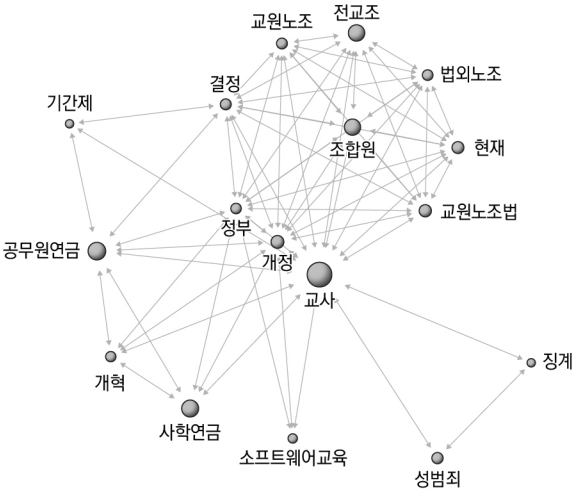
교원 관련 핵심어의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인 〈표 19〉에서 '교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핵심어는 출현 빈도와 유사하게 연결중심성도 높게 나타나 다른 핵심어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출현빈도가 5위였던 '소프트웨어교육'과 출현 빈도 순위에서 11위였던 '기간제'는 연결중심성 순위에서 각각 15위와 16위로 나타났다. 이에 '소프트웨어교육'과 '기간제'와 같은 핵심어는 일부 텍스트에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9〉 교원 관련 핵심어 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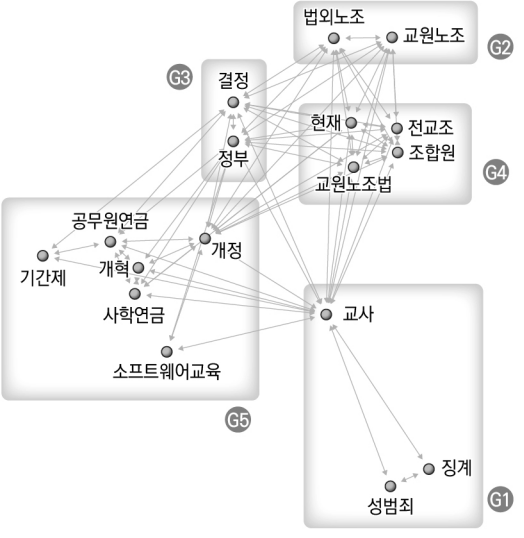
순서	핵심어	연결중심성
1	교사	58.500
2	공무원연금	38.938
3	사학연금	36.938
4	전교조	35.000
5	조합원	34.125
6	개정	24.625
7	교원노조법	22.938
8	헌재	22.438
9	교원노조	20.813
10	결정	18.875
11	법외노조	18.563
12	정부	17.750
13	개혁	17.750
14	성범죄	17.250
15	소프트웨어교육	15.125
16	기간제	13.750
17	징계	9.375



이상의 연결중심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그 결과, ‘교사’의 노드가 가장 큰 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정부’가 가장 근접하여 관계하고 있어 이들 간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헌재’, ‘교원노조’,‘ 교원노조법’ 등 교원노조 관련 핵심어가 자리하고 있어 교원 관련 텍스트 안에서 이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교원 핵심어의 네트워크 지도



[그림 19] 교원 핵심어의 모듈 지도

교원 관련 핵심어의 커뮤니티 모듈성 분석을 통해 총 5개의 하위 그룹이 도출되었다. 먼저, ‘교사’, ‘성범죄’, ‘징계’가 하나의 하위 그룹을 이루었다(G1), ‘법외노조’, ‘교원노조’의 그룹(G2)과 ‘헌재’, ‘전교조’, ‘조합원’, ‘교원노조법’의 그룹(G4)은 유사한 핵심어가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정부’와 ‘결정’이 하나의 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G3). 마지막으로 ‘기간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역’, ‘개정’, ‘소프트웨어교육’의 핵심어가 하나의 그룹에 속하였다(G5).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해 교원과 관련하여 핵심어가 네트워크에서 보여주는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이슈가 다루어졌다. 텍스트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처벌과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조를 확인하였다.

둘째, 교원노조와 관련된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찬반의 논조가 있었다. 텍스트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와 관련하여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월호와 관련되어 발발한 이슈로,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교원과 관련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된 점이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그 밖에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과 정책 추진을 교원 관련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결정’이라는 핵심어는 네트워크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교원노조 관련 이슈의 여러 핵심어는 ‘결정’이라는 핵심어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 연금 관련 이슈와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관련 이슈는 정부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성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곽기영(2014). 소셜네트워크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박수정, 박선주(2013).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2), 129-155.

박한우, Loet Leydesdorff(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8.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최영출, 박수정(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황준성, 김흥주, 임소현, 김성기, 이덕난, 김규식, 윤나리(2013).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영역별 분석 대상 텍스트

가. 사교육비 경감(총 5편)

경향신문(2014.12.05.). “EBS 수능 연계는 교육 복지”

경향신문(2015.04.27.). “신도시 중산층과 사교육”

동아일보(2014.11.27.). “거대한 사교육이 되어버린 EBS”

중앙일보(2015.02.27.). “자녀 교육비는 못 줄인다는 학부모님께”

한국일보(2014.10.09.). “저출산 극복하려면 사교육비 잡아야”

나. 인성교육(총 17편)

경향신문(2015.01.31.). “인성교육“

경향신문(2015.03.02.). “수학의 둥글둥글 인성교육?”

경향신문(2015.07.24.). “인성, 교육 그리고 법”

동아일보(2015.02.22.). “‘이달의 스승’ 행사, 인성교육 본보기로”

조선일보(2015.07.14.). “人性교육법 시행, 공정한 평가가 관건”

조선일보(2015.07.18.).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人性 교육”

중앙일보(2015.02.09.). “어, 인성평가는 또 뭐지?”

중앙일보(2015.02.27.). “인성 평가를 점수화할 수 있나?”
중앙일보(2015.05.18.). “인성교육 점수 매기면 사교육에 휘말릴 수도”
중앙일보(2015.07.09.). “외모보다 성격, 성격보다 인성”
중앙일보(2015.07.20.). “인성교육은 사교육 변질 없이 제대로 진행되길”
중앙일보(2015.07.21.). “인성교육, 어른들 먼저 달라져야”
한겨레신문(2015.07.15.). “인성교육 왜곡할 우려 큰 인성평가”
한겨레신문(2015.07.23.).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
한겨레신문(2015.07.29.). “인성교육의 외주화”
한국일보(2015.02.02.). “인성 배양 교육”
한국일보(2015.07.2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다. 자유학기제(총 6편)

조선일보(2015.01.21.). “자유학기제, 現場 학습 부작용도 대비하자”
중앙일보(2014.12.12.). “자유학기제 성공은 학교 밖에 달렸다”
중앙일보(2014.12.26.). “죽어가는 공교육 자유학기제로 살리자”
중앙일보(2015.06.03.). “나 홀로 여행과 자유학기제”
한겨레신문(2015.07.08.). “자유학기제 학교혁신의 기회다”
한겨레신문(2015.07.21.). “자유학기에서 자유학교로”

라. 직업교육(총 7편)

경향신문(2014.11.03.). “청년 창업, 대학의 역할”
동아일보(2014.11.15.). ““공부 적성 아니면 배관공 하라”는 미국, 대학에 목매는 한국”
동아일보(2014.11.18.). “대학보다 취업 택하는 청년들을 도우려면”
조선일보(2014.12.29.). “高卒者 채용, 정권 바뀌면 부도 내도 된다는 건가”
중앙일보(2014.10.23.). “학벌보다는 능력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한겨레신문(2015.03.18.).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국일보(2015.04.24.). “청소년 노동 교육의 필요성”

마. 방과후학교(총 2편)

경향신문(2015.03.19.). “공교육 포기한 방과후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동아일보(2015.03.27.). “방과 후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

바. 전문대학 활성화(총 4편)

동아일보(2015.01.19.). “2015년이 전문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이어야”
동아일보(2015.04.03.).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는 인재 양성의 길”
조선일보(2015.01.13.). “전문대학 수업 연한 多樣化하자”
조선일보(2015.04.20.).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시대적 필연이다”

사. 지방대학(총 2편)

한겨레신문(2015.06.12.). “법 취지 무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안”
한겨레신문(2015.06.25.).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회계 운영 방향”

아. 대입전형(총 84편)

경향신문(2014.10.03.). “쉬운 수능 논란”
경향신문(2014.10.09.). “허점투성이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시급하다”
경향신문(2014.10.17.).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오류 인정하라”
경향신문(2014.10.17.). “교육당국은 수능 출제 오류 인정하라”
경향신문(2014.10.21.). “수능 세계지리 8번의 교훈“
경향신문(2014.11.01.). “수능 오류 인정한 교육당국, 책임 통감해야”
경향신문(2014.11.17.) “재연된 수능 혼란 교육당국은 도대체 뭘 했나”
경향신문(2014.11.21.). “수능 오류, 피해학생 구제로 끝낼 일 아니다”
경향신문(2014.11.25.). “수능제도 개편 필요성 보여준 출제오류 파문”
경향신문(2014.11.25.). “출제 오류 대책보다 더 절박한 것”
경향신문(2014.11.26.). “창의력 가둔 5지선다형 수능”
경향신문(2014.11.29.). “교육체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경향신문(2014.12.26.). “수능 영어 절대평가 환영하나 보완책 필요”
경향신문(2015.01.03.). “임계점 다다른 입시정책”
경향신문(2015.01.21.). “영어 절대평가, 수능 전체로 확대해야”
경향신문(2015.04.02.). “수능, 쉽게 출제하는 원칙은 맞지만”
경향신문(2015.06.25.). “만점 받아야 1등급 되는 수능 모의평가 언제까지”
동아일보(2014.10.14.) “김수환 추기경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동아일보(2014.11.01.). “최악의 출제 오류사건 키운 무능 교육부 –수능 마피아”
동아일보(2014.11.18.). “%와 %포인트 구별 못하는 평가원에 수능 맡길 수 있나”
동아일보(2014.11.18.). “논설위원이 수능 문제 풀어보니”
동아일보(2014.11.19.). “학생 평가방식 바꿔야 창의적 인재 배출”

동아일보(2014.11.25.). “‘인생 등급’ 결정짓는 수능 괴담”
동아일보(2014.11.25.). “2년 연속 출제 오류 낸 수능, 혁신할 마지막 기회다”
동아일보(2014.11.27.). “미국에선 수능 오류가 없다고요?”
동아일보(2014.12.09.). “입시 규제 먼저 단두대로 보내라”
동아일보(2014.12.26.). “수능 영어 절대평가, 사교육도 못 잡고 세계화도 역행할 판”
동아일보(2015.03.18.). “수능 구조적 문제 덮어두고 ‘물수능’만 잡으면 되나”
동아일보(2015.03.19.). “백약이 무효”
동아일보(2015.04.07.). “‘쉬운 수능’ 위해 대학에 자율권 준다는 건 본말전도다”
조선일보(2014.10.10.). “大入 경력 조작 다 하는데 왜 나만…”
조선일보(2014.10.29.). “베끼고 속인 大入 자기소개서·추천서 얼마나 더 많을까”
조선일보(2014.11.01.) “이런 교육부에 大入 수능 계속 맡겨야 하나”
조선일보(2014.11.15.). “수험생들의 鐵人 경기”
조선일보(2014.11.18.). “잇단 수능 출제 실패 全 국민 스트레스 쌓인다”
조선일보(2014.11.20.). “영어 절대평가, 국가 경쟁력 떨어뜨린다”
조선일보(2014.11.25.). “무능한 교육부에 엉터리 수능 수술 맡길 순 없다”
조선일보(2014.11.28.). “수능 영어 절대평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조선일보(2014.12.04.). “大入, 수능 비중 줄이고 대학들 자율·책임 갖고 선발을”
조선일보(2014.12.10.). “과도한 科目 쪼개기가 수능 不信 불렀다”
조선일보(2014.12.27.). “수능 英語 절대평가, 과연 다음 정권이 이어받을까”
조선일보(2015.03.13.). “創意 인재 전형”
조선일보(2015.03.19.). “朴 정부도 私교육 잡으려다 망치는 길 들어섰나”
조선일보(2015.03.19.). “수술대에 올릴 건 수능 영어 가 아니라 교육부”
조선일보(2015.04.08.). “大入 바꿔보겠다는 말 섣불리 하지 말라”
조선일보(2015.04.30.). “학년마다 다른 入試 누가 책임지나”
중앙일보(2014.10.29.). “대한민국 수능 마피아, 진실을 조롱했다”
중앙일보(2014.11.01.) “1년 만의 사과 … 진실 조롱한 수능 마피아 해체하라”
중앙일보(2014.11.15.). “이런 식의 수능 계속해야 하나”
중앙일보(2014.11.17.). “수능에 순응할까”
중앙일보(2014.11.19.). “수능·EBS 연계, 대학입시를 완전히 망쳤다”
중앙일보(2014.11.21.). “올해도 반복된 수능 대혼란, 어쩌자는 것인가”
중앙일보(2014.11.22.). “학맥으로 얽힌 수능 마피아 가차없이 해체하라”
중앙일보(2014.11.24.). “350억원짜리 수능의 운명”

중앙일보(2014.11.25.). “수능 개편의 목표는 오류 최소화에 맞춰야”
중앙일보(2014.11.25.).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중앙일보(2014.11.27.). “좋은 대학이 똑똑한 학생 고르는 법”
중앙일보(2014.11.29.). “이젠 야만적 수능을 폐지하자”
중앙일보(2014.12.03.). “대입 수능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중앙일보(2014.12.08.).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능이라면”
중앙일보(2014.12.26.). “수능영어 절대평가, 변별력 확보 못하면 혼란 온다”
중앙일보(2014.12.30.). “수능 영어 절대평가, 공염불 안 되려면”
중앙일보(2015.03.10.). “교재 오류 지적에 적반하장의 EBS”
중앙일보(2015.03.18.). “탈 많은 수능, 뭘 개선했다고?”
중앙일보(2015.03.19.). “해마다 수능제도, 학생을 ‘모르모트’로 아는가”
중앙일보(2015.03.23.). “올 수능 난이도 실제 채점해봐야 압니다”
중앙일보(2015.04.01.). “입시제도를 장수상품으로 만들자”
중앙일보(2015.07.23.). “한국의 미래는 수능제도에서 해방돼야”
한겨레신문(2014.10.10.). “‘스펙 입시’가 낳은 ‘입학사정관제 사기극’”
한겨레신문(2014.10.17.). “‘수능 오류’ 파문,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한겨레신문(2014.11.15.). “매년 수험생 울리는 ‘널뛰기 난이도’ 수능”
한겨레신문(2014.11.18.). “수능 또 출제 오류, 신속한 수정과 엄중한 책임을”
한겨레신문(2014.11.25.). “공감대 커지는 근본적 수능·입시 개혁”
한겨레신문(2014.11.26.). “대학입시라는 덫”
한겨레신문(2014.11.27.). “수능 출제 방식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한겨레신문(2015.07.23.). “물수능”이라고?”
한국일보(2014.10.17.). “수능출제 오류 뭉개다 혼란 더 키운 교육당국”
한국일보(2014.11.01.). “수능제도 변별력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일보(2014.11.17.). “수능 시험과 교육개혁”
한국일보(2014.11.18.). “출제 오류·난이도 실패, 수능체제 개편 검토해야”
한국일보(2014.11.25.). “수능 출제오류 장·단기 대책 함께 마련해야”
한국일보(2014.12.01.). “이런 수능을 내는 당국의 야만스러움”
한국일보(2014.12.26.). “영어 절대평가는 수능체제 전반적 개편의 출발”
한국일보(2015.03.13.). “고 1,2,3이 다 다른 수능, 해도 너무한 대입정책”

자. 교원(총 11편)

경향신문(2015.07.15.).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 양성 시급”

동아일보(2015.05.29.). “헌재에서 두 번 퇴짜 맞은 전교조, 이젠 법 지키라”

동아일보(2015.07.14.). “교육 위해 사는 교사, 교육 의존해 사는 교사”

조선일보(2015.07.07.). “사학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처럼 국민 속 끓이지 말라”

중앙일보(2015.05.29.). “전교조, 법 존중하고 교사 본연의 자세 찾아라”

중앙일보(2015.07.22.). “교사도 없이 소프트웨어 가르치겠다는 정신 나간 정부”

한겨레신문(2015.07.31.). “근본 대책 요구되는 ‘교사 성범죄’”

한국일보(2015.05.29.). “합헌 결정 관계없이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 때”

한국일보(2015.06.23.).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형평 맞춰 신속 처리해야”

한국일보(2015.07.01.). “교사는 사표(師表)다”

한국일보(2015.07.13.). “죽어서도 차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이대로 안 돼”

연구보고 RR 2015-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5)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윤종혁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화:02)3460-0114
FAX:02)3461-0121
http://www.kedi.re.kr
등 록 :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979-11-5666-184-9 93370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